

고학력화의 사회경제적 성과와 한계

김안국 · 임 언 · 최지희 · 유한구 · 김기현

머 리 말

한국은 청년층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비중이 세계 2위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IMD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등교육이 사회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최저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의 팽창에 따른 고학력화와 그것이 가져온 성과와 한계를 분석할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본 연구는 고학력화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성과와 그 한계점을, 주요하게 사회적 함의를 갖는다고 보이는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측면에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고학력화의 원인 분석 및 고학력화가 가져온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각각 측면에서의 성과를 분석하는 거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아울러, 분석에 필요한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고 고용노동부, 통계청, 진학사(수능 자료) 등 최선의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도 내세울 만하다.

이 연구는 기초 연구과제로 이루어졌지만, 연구 결과가 정책적으로 함의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 첫째, 고등교육이 팽창되면서 점차 소외되는 청년 고졸자에 대한 관심의 필요, 둘째, 사립학교 위주의 고등교육 팽창으로 야기되는 고등교육비의 급증에 따른 고등교육 기회의 불균등성에 대한 해소 정책 필요, 셋째, 고등교육 팽창이 거의 전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뒤의 진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선취업 후 재고등교육 제도의 도입 필요, 넷째, 대학교육의 질 강화와 이를 통한 대학 평판 형성의 구조를 이루기 위한 정책 방안 필요, 다섯째, 고등

교육이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되지 않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교육 개혁(평가를 위한 공부의 아님, 인성교육과 “참다운 학업성취”를 이루기 위한 근본적 개혁)의 필요, 이상의 개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중장기의 계획 및 로드맵과 방법론(사회 각 주체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한 결정)이 구축 필요 등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수행은 김안국 박사가 연구 책임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고등교육 팽창의 원인 분석은 유한구 박사, 고학력화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 분석은 김안국 박사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김기현 박사, 고학력화와 사회적 자본 관계 분석은 최지희 박사, 고학력화와 고등교육 서열화에 대한 분석은 임언 박사가 맡아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윤수 위촉연구원이 자료 수집 및 가공, 그리고 편집에서 꼼꼼하게 연구를 지원하였다.

본 연구의 완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신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조사팀과 광업제조업조사팀, 진학사의 수능점수DB 담당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 도움을 준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견해들은 연구진의 것이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박 영 범

제목 차례

요 약

제1장 서 론_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8

제2장 고학력화의 지표와 그 추이_23

- 제1절 고학력화의 개념과 지표 25
- 제2절 고학력화의 추이 29

제3장 고등교육팽창 현상의 이해_45

- 제1절 학교교육 팽창에 대한 이론 47
- 제2절 한국의 고등교육 팽창 57
- 제3절 고등교육팽창요인의 시계열분석 71
- 제4절 소결 85

제4장 고학력화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_91

- 제1절 고학력화의 진전과 인적자본 추계 94
- 제2절 고학력화의 경제성장 기여 109
- 제3절 고학력화의 부정적 영향 116
- 제4절 소결 130

제5장 고학력화와 경제적 보상: 임금 및 자산분포 추이_135	
제1절 서론	137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분석내용	139
제3절 분석방법	145
제4절 분석결과	146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165
제6장 고학력화와 사회적 자본_167	
제1절 서론	169
제2절 교육과 사회적 자본	171
제3절 고학력화가 사회적 자본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	183
제4절 결론 및 논의	215
제7장 고학력화와 대학서열화_221	
제1절 문제의 제기	223
제2절 고학력화와 서열화에 관한 선행 논의	226
제3절 한국 대학의 서열화	237
제4절 결론 및 논의	250
제8장 결론_259	
제1절 요약 및 논점들	261
제2절 정책적 함의	268

Summary_273

참고문헌_281

부 록_297

1.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자료의 조사 기준 변화 299
2. 표준산업분류의 개정 추이 300
3. OECD 각국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공공/민간의 비중) .. 301
4. 취업자중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 추이 302

표 차례

<표 1-1> 고등교육 이수 비율 높은 국가들의 고등교육 성적	5
<표 2-1> 고등교육 등록률의 추이(1970~1995)	31
<표 2-2> OECD 각국별 고등교육이수자 비중 추이(1980~2008)	34
<표 2-3> OECD 각국별 학력 수준별 비중의 증가율(1998~2008)	35
<표 2-4> OECD 각국의 연령대별 고등교육학력자 비중의 추이(1999~2008)	37
<표 2-5> OECD 각국별 25~34세대와 45~54세대 고등교육학력비중 차이의 추이(1999~2008)	39
<표 2-6> OECD 각국별 25~34세대와 45~54세대 성별 고등교육학력 비중 차이의 추이(2003~2008)	41
<표 3-1> 4년제 대학 학교 수 변화 추이(1955~2010)	58
<표 3-2> 4년제 대학 학생 수 변화 추이(1955~2010)	59
<표 3-3> 전문대학 학교 수 변화 추이(1965~2010)	60
<표 3-4> 전문대학 학생 수 변화 추이(1965~2010)	60
<표 3-5> 한국과 미국의 고등교육 설립주체별 취학률	62
<표 3-6> 정부의 대학정원 정책의 변화	70
<표 3-7> 설명 변수 목록	80
<표 3-8> 고등교육팽창 기본모형	81
<표 3-9> 고등교육 팽창에 대한 시계열 분석 결과	82

<표 4-1> 인적자본 증가율 추이(1981~2009)	102
<표 4-2> 부문별 투입 변화에 따른 인적자본 증가율(1981~2009) ·	104
<표 4-3> OECD국가의 고등교육 사적수익률 추이(1999~2004) ·	107
<표 4-4> 한국의 대학교육 투자수익률	108
<표 4-5> 성장회계모형 추정(OLS) (1982~2006)	113
<표 4-6> 성장회계모형 추정(Panel fixed effect model)	115
<표 4-7> 기존 연구에 나타난 대졸 청년의 하향취업	118
<표 4-8> 고등교육 서비스의 팽창	121
<표 4-9> 사교육비의 변화 추이(2003~2010)	123
<표 4-10> 사교육비 변화의 추이(2003~2010)	124
<표 4-11> 학생 1인당 사교육비의 추이(2007~2010)	125
<표 4-12> 기존 연구에 나타난 사교육의 효과	126
<표 4-13>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수의 증가 추이(1993~2009)	128
<표 4-14>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의 평균임금 추이(1993~2009) ···	129
<표 5-1> 학력별 임금격차 추이	147
<표 5-2> 대졸 이상 대비 고졸 임금의 상대적 분포 변화(1980~2009) ·	149
<표 5-3> 300인 이상 기업 학력별 신규채용 추이(2002~2009) ··	150
<표 5-4> 학력별 임금격차 추정 결과(1980~1989)	153
<표 5-5> 학력별 임금격차 추정 결과(1990~1999)	154
<표 5-6> 학력별 임금격차 추정 결과(2000~2009)	155
<표 5-7> 교육수준 범주별 임금격차 추정 결과(1980~1989)	157
<표 5-8> 교육수준 범주별 임금격차 추정 결과(1990~1999)	158
<표 5-9> 교육수준 범주별 임금격차 추정 결과(2000~2009)	159

<표 5-10> 학력별 순자산 격차 추이(1999~2008)	160
<표 5-11> 대졸 이상 대비 고졸 순자산의 상대적 분포 변화(1999~2008)	163
<표 5-12> 학력별 순자산 격차에 관한 분위회귀분석 결과 (가구주 기준)	164
<표 6-1> ‘고학력화와 사회적 성과’ 측정에 사용될 주요 변수들 ·	185
<표 6-2> 분석에 사용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주요문항 소개 ·	187
<표 6-3>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결과 ·	188
<표 6-4>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학력수준별 사회적 성과 비교 ·	190
<표 6-5> 유럽사회조사(ESS) 2008~2009 사회적 성과 변수 문항들 ·	191
<표 6-6> 유럽사회조사(ESS)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결과	192
<표 6-7> 유럽사회조사(ESS) 2008~2009 집계데이터 구축 방법 및 변수설명	194
<표 6-8>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7 상관분석 결과	195
<표 6-9> 유럽사회조사(ESS) 2008~2009 상관분석 결과	196
<표 6-10> 유럽사회조사(ESS) 2008~2009 집계 데이터 상관분석 결과 ·	198
<표 6-11>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회귀분석 변수 설명	199
<표 6-12> 유럽사회조사(ESS) 마이크로 데이터 회귀분석 변수설명 ·	201
<표 6-13>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회귀분석 결과	212
<표 6-14> 유럽사회조사(ESS) 회귀분석 결과	213
<표 6-15> 유럽사회조사(ESS) 2008~2009 집계 데이터 회귀분석 결과 ·	214
<표 7-1> 연도별 대학 수능 점수 평균 서열 상관계수	240

그림 차례

[그림 1-1] 한국 학생들의 기대 교육 수준	4
[그림 1-2] 고학력화의 사회경제적 성과 분석의 틀	16
[그림 2-1] 고등교육 등록률의 추이(1970~1995) - 대륙별	29
[그림 2-2] 고등교육 등록률의 추이(1999~2008) - 유사국가별	30
[그림 2-3] OECD 국가의 학력수준별 비중 추이(1997~2008)	33
[그림 2-4] 고등학교 졸업자 수 대비 대학 입학생 수의 비중 추이(1970~2010)	43
[그림 2-5] 고등교육기관 학생 중 여성과 26세 이상의 비중 추이(1977~2010)	44
[그림 3-1] 각급학교 취학률 증가 추세(1965~2005)	48
[그림 3-2]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학생 수 추이(1955~2010)	61
[그림 3-3] 학교팽창의 이론적 모형	73
[그림 4-1] 대졸과 고졸의 고용률 차이의 추이 (전체/남성/여성)(1991~2007)	117
[그림 5-1] 관리직 및 전문직의 대졸이상 비율(1983~2007)	151
[그림 5-2] 교육투자수익률의 변화(1980~2009)	152
[그림 5-3] 고졸 및 대졸이상 간 투자수익률의 변화(1980~2009) ·	156

[그림 5-4] 자산유형별 고졸 및 대졸이상 간 격차(1999~2008) ...	161
[그림 5-5] 부동산 가격 추세(1995~2011)	162
[그림 6-1] 교육이 시민사회 참여(CSE)에 미치는 영향	180
[그림 6-2] 교육이 건강(health)에 미치는 영향	182
[그림 6-3] 학력과 신뢰와의 관계	207
[그림 6-4] 학력과 정치적 관심과의 관계	207
[그림 6-5] 학력과 투표참여와의 관계	208
[그림 6-6] 학력과 사회봉사와의 관계	208
[그림 6-7] 학력과 사회적 네트워크와의 관계	209
[그림 6-8] 학력과 건강과의 관계	209
[그림 6-9] 학력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210
[그림 7-1] 고학력화, 서열화와 다양화	224
[그림 7-2] 대학 입학생 수능 성적 서열의 유지 양상	239
[그림 7-3] 상위 10개 종합대학 수능 백분위 평균	241
[그림 7-4] 교육대학 수능 백분위 평균(상위 10개 종합대학과 비교)	242
[그림 7-5] 의학 및 공학 대학 수능 백분위 평균(상위 10개 종합대학과 비교)	243
[그림 7-6]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 서열 변화	244
[그림 7-7] 지방대의 수능 백분위 평균 변화	245
[그림 7-8] 대학순위별 전공별 수능 평균 분포(1998년)	246
[그림 7-9] 대학순위별 전공별 수능 평균 분포(2003년)	246
[그림 7-10] 대학순위별 전공별 수능 평균 분포(2006년)	247

[그림 7-11] 대학순위별 전공별 수능 평균 분포(2009년)	247
[그림 7-12] 경영학과와 컴퓨터 공학과 대학별 순위(2006년)	249
[그림 7-13] 경영학과와 컴퓨터 공학과 대학별 순위(2007년)	249
[그림 7-14] 경영학과와 컴퓨터 공학과 대학별 순위(2009년)	250

요약

한국은 청년층에서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이 세계 2위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고등교육이 사회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최저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의 팽창에 따른 고학력화와 그것이 가져온 사회경제적 성과와 그 한계점을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고학력화의 원인 분석 및 고학력화가 가져온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각각 측면에서의 성과를 분석하는 거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아울러, 분석에 필요한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고 최선의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도 특기할 만하다.

제1장 서론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틀과 내용, 연구의 방법을 정리하였다.

고등교육이 팽창하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렇지만 고학력화는 매우 복잡한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교육,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복지 등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입각한 연구의 틀이 작성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자료와 시간의 제약상 고학력화가 교육, 사회, 경제에 미친 영향을 주로 분석하였다. 고학력화가 가져온 사회경제적 성과와 한계로 교육측면에서는 고등교육기

관의 다양화와 대학 서열화, 사회 측면에서는 사회적 자본 증가와 사회복지, 경제 측면의 효과에서는 인적자본증가와 경제성장 기여, 소득 분포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방법은 경험적 연구 방법론을 취하였다. 먼저 고학력화와 그 사회경제적 성과에 관한 제반 이론들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그러한 이론을 실증하기 위해 적합한 추정 모형을 선택하고, 최선의 통계 자료들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하였다.

제2장 고학력화의 지표와 그 추이

본 장에서는 고학력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고학력화를 측정하는 지표를 소개하고, 지표에 따라서 고학력화의 추이를 개관하였다. 고학력화는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의 증가로 정의할 수 있다.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의 증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따라서 고등교육의 단계를 구분한 Trow(1977)에 따르면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 15%와 50%를 기준으로 두고 있다. 그는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이 15% 이하인 사회는 엘리트주의 고등교육 체제, 15~50% 사이인 사회는 고등교육 대중화 체제, 50% 이상인 사회는 고등교육 보편화 체제로 정의하였다.

고학력화를 측정하는 직접적 지표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것은 학교 등록률, 학교교육 투자비용, 학교교육연수가 있다. 이 밖에 임금 등 노동시장의 성과를 가지고 학교교육연수를 질적으로 보완하는 지표도 있다. 그러나 고학력화의 정도를 보는 지표로는 전체 인구 중의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중이 적합하다. 이 지표도 인구 구성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 집단별로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의 변화를 보

는 것이 고학력화의 추세를 보는 데 가장 적당하다.

고학력화를 측정하는 여러 지표들을 가지고 고학력화의 추세를 살펴본 결과 전 세계적으로 고학력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고등교육 기관 등록률, 지역별, 국가별로 추이를 보면 고학력화의 추세가 일반적인데, 남성의 고등교육 등록률보다 여성의 고등교육 등록률이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인구 중 고등교육 학력자의 비중으로 보아도 고학력화의 추세는 분명하다. 특히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중이 적었던 나라에서 고학력화의 추세가 두드러지며, 한국도 거기에 속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학력자 비중이 45~54세 인구의 고등교육 학력자 비중보다 높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추세적으로 두 연령 집단의 고등교육 학력자 비중의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청년 세대에서 고학력화가 크게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한국의 경우는 1995년의 대학설립 준칙주의 이후에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에 2000년대 후반에는 일반계고와 직업계고의 졸업자 대비 대학 입학자 수의 비중 차이는 약 10% 정도로 줄어든다. 고등교육 학생 중 여성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 2010년 40% 가까이 늘어났다.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이 대학에 가는 경우는 1980년대 5%에서 그렇게 늘지 않아 2000년대 후반에도 10% 정도이다. 이에 한국 고등교육 팽창의 주된 원인은 고등학교 졸업 뒤 바로 진학하는 여성과 직업계고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사회는 이제 고등교육 보편화의 시대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제3장 고등교육 팽창 현상의 이해

제3장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나타난 학교 교육의 대중화 현상을 ‘학교팽창’(school expansion)으로 개념화하고, 학교팽창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학교팽창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고등교육 팽창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구성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팽창은 1930년~1960년, 중학교 팽창은 1955년~1975년, 고등학교 팽창은 1960년~1993년, 고등교육 팽창은 198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팽창 과정은 급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고등교육 정원 정책에 의해 조정되면서 팽창하였다. 고등교육의 확대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 다른 특징은 사립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2010년 현재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생 가운데 95% 이상이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다.

교육 팽창에 대한 이론은 초기의 발전 교육론(인적자본론, 근대화론)에서 시작되었지만, 1970년대 이후 학교 교육 팽창 현상 자체를 보려는 시도에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기술 기능이론은 기술수준의 발달이 교육 수요를 촉진한다는 가설 하에 출발하였으나, 산업의 필요수준 이상으로 고등교육이 팽창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이 자본주의적 사회관계 유지에 필수적인 규범적 통합 기능을 한다는 계급통제론과 권력과 지위를 획득하려는 집단 간의 경쟁으로 교육이 팽창한다는 지위 집단 경쟁 이론이 나타났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국가권력의 팽창과 시민정신을 제도화하는 데 교육이 수행한 역할을 강조하는 정치 통합 이론

이 제기되었다. 또한 기존의 구조적 설명 방식과 미시적인 설명 방식을 통합하여, ‘행위자’의 관점에서 팽창을 설명하는 역사 사회적 설명 방식이 등장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고등교육의 팽창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구조적 요인의 영향과 제도적 행위자의 영향, 그리고 개인 행위자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제도적 행위자의 정책적 행위(정원 정책)가 어떤 사회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고, 그 결정이 고등교육의 팽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시계열 분석을 위해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산업 및 직업 구조의 변화, 경제 성장, 노동 시장 요인을 구안하였으며, 제도적 행위자 요인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사학에 대한 의존도,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요인을 구안하였다. 또한 개인 행위자 요인으로 가구 소득 증가와 가계 소득의 교육비 비중의 증가를 통해 개인의 교육 투자 요인을 파악하였다.

Rubinson and Ralph(1984)에 의해 구안되어, 여러 국가의 학교 팽창 현상의 분석에 사용된 시계열 모형은 자기 상관의 문제를 해결하는 추정 방법(Paris-Winsten 추정법)을 사용하여 재적 학생 수를 종속 변수로 하고, 고등학교 학생 수와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고등학교학생 수를 통제변수로 하는 모형이다. 시계열 분석 결과, 고등교육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는 경제 성장과 사회 구조의 변화(산업 및 직업구조 변화)에 의해 실제로 실현된다. 고등교육 팽창이 실현되는 과정은 정부의 고등교육 정원 정책에 의해 팽창의 속도가 조절되며, 이 과정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 사립학교의 고등교육에 대한 비중은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고등교육을 팽창시켰다.

종합하면 한국의 고등교육 팽창은 교육에 대한 강한 교육열과 이를 실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성장과 사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고등교육비와 정부의 정원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제4장 고학력화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

본 장은 한국 사회의 고학력화가 인적자본을 증가시켰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는가를 보기 위해 인적자본 추계, 성장 회계 모형으로 실증 분석해 보았다. 아울러, 고학력화와 함께 나타난 부정적 결과들을 대졸자 고용률의 저하, 사교육 증가, 교육서비스산업의 질적 저하 등의 지표로 살펴보았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1980~2009) 자료를 가지고, 이종화·김선빈(1995)의 방법에 따라서 1980년부터의 인적자본을 추계하고 그 증가율을 계산해 보았다. 인적자본 추계의 결과 한국 인적자본의 연도별 증가율은 평균 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증가율을 10년 단위로 묶어 평균을 내어보면 1980년대 인적자본 증가율은 1.51%, 1990년대 인적자본 증가율은 1.02%, 2000년대 인적자본 증가율은 0.95%로 인적자본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이 관찰된다. 노동투입의 부분 지수의 추계를 보면 교육의 변화에 따른 인적자본 증가율이 연평균 1.24%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교육의 변화에 따른 인적자본 증가율은 1980년대에 1.51%로 가장 높았고,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1.05%로 줄어들었다. 인적자본 추계의 결과가 대졸자가 크게 늘어났던 시기에 인적자본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어 인상적이

다. 이러한 인적자본 증가율의 저하는 고학력화의 진전과 함께 나타나는 고등교육의 투자 수익률의 저하와도 관련된다고 보인다.

고학력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광업제조업조사」(1982~2006)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가지고 성장회계모형을 추정해 보았다. 성장회계모형은 김진영(2003)의 모형을 활용하였다. 추정의 결과 인적자본을 결정하는 교육 연수는 산업생산에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0.22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연수는 1980년대에는 유의하지 않다가 1990년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성장에 대한 기여가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장 회계 모형의 결과는 최근에 들어서서 단순 노동의 성장에 대한 기여는 없게 되었으며, 기술이 자본에 체화되어 자본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거나, 교육의 중요성이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학력화는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률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는 대졸자와 고졸자의 고용률의 차이가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률 저하는 하향취업으로 나타났고, 2000년대 후반에는 대졸자의 하향취업은 40%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고등교육의 팽창과 교육 서비스업의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종사자수로 보았을 때 교육 서비스업은 1993년 2.86%에서 2008년 5.45%로 비중이 높아졌고, 교육 서비스업 중에서도 입시와 관련된 학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996년에서 2005년 사이 일반 교습 학원의 사업체 수의 증가는 17배, 종사자 수는 24배로 증가하여 폭발적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교육비도 2010년 GDP의 1.8%로 크며, 여러 가지 사교육 대책이 있었지만 줄지 않고 있다. 교육 서비스업 종사

자는 늘어났지만, 임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교육 서비스가 질적으로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고학력화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고등교육 팽창으로 인한 고학력화는 인적자본의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다. 다만, 2000년대 이후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 축적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기여도도 정체 내지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된다.

고등교육의 팽창과 함께 사교육도 팽창하였는데, 사교육은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도 민간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며, 지하경제를 온양하는 부작용이 많다. 그리고 사교육은 부모의 재력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사교육 감축을 위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

제5장 고학력화와 경제적 보상: 임금 및 자산 분포 추이

제5장에서는 고학력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보상을 임금 및 자산 분포의 추이를 통해 살펴보았다. 고학력화의 원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설명들이 존재하지만 교육 수준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보상의 차이가 고등교육 진학에 대한 가장 큰 동기 부여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을 중심으로 고학력화의 진행과 소득 분포의 전개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학력에 따른 경제적 보상의 차이를 주로 임금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졸자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졸자의 상대적 임금 수준이 몇 % 높아졌으며, 이는 대졸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 증가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임금 소득을 중심

으로 고학력의 경제적 보상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자산과 같은 부(wealth)의 변수를 통한 접근이 사회 구성원의 삶을 보다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1980년부터 현재까지의 대학 진학의 경제적 보상을 임금과 자산의 두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임금 분석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자산 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였다. 학력 간 임금 격차에 대한 분석은 개인을 단위로 OLS 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자산에 대한 분석은 가구를 단위로 분위 회귀 분석(quantile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고졸자들의 대기업 진입 감소와 괜찮은 일자리 진입 감소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졸 이상의 교육투자수익률은 1980년 8%에서 1993년 5%로 하락하였다가 2003년에 다시 8%로 상승하였고, 2008년에는 10%까지 상승하였다. 그리고 1980년 고졸자의 투자 수익률은 약 8%임에 비해 대졸 이상의 투자 수익률은 15%로 큰 차이가 났지만, 1997년 고졸자와 대졸 이상의 수익률이 약 7%로 차이가 없어졌다가 2009년에는 고졸자 7%, 대졸 이상 11%로 차이가 벌어졌다.

교육 수준별 자산 분포의 추이를 보면 1999년에서 2001년까지 고졸과 대졸 이상 간 자산 격차는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2003년까지 크게 증가하였고 다시 2006년까지 감소하다 2007년 증가, 2008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교육 수준별 자산 격차의 변동은 주로 부동산 자산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렇지만 금융 자산과 부채는 그 격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추세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고졸과 대졸 이상 간 부동산 자산 격차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고졸 가구주는 대졸 이상 가구주의

하위 30%에서 60% 사이에 몰려 있지만, 순자산이 상위 그룹으로 올라갈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뚜렷해진다.

종합하면 경제적 보상에 소득이든지 자산이든지 학력 간 격차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으며, 소득에서는 2000년 이후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자산에서도 학력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자산의 변동에 따라 자산 격차의 추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고학력화 현상이 일정부분 교육수준에 따른 경제적 보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이에 고학력화 추세가 지속될 개연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6장 고학력화와 사회적 자본

제6장에서는 고학력화가 가져온 사회적 성과를 시민 사회의 성장을 가져오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과 건강 등 복지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즉, 고학력화의 진전과 함께 사회가 바람직한 시민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고학력화와 사회적 자본형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고학력화의 사회적 성과를 보기 위한 측정 지표로 OECD의 『사회적 성과의 이해』에서 논의된 사회적 성과변수들을 중심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지표들은 보건 및 건강, 시민 및 사회적 참여 등의 사회적 자본 변수들과 복지 변수를 나타내는 성과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시민 사회의 참여 부분은 신뢰와 정치적 관심, 투표 참여, 사회봉사활동, 사회적 네트워크 등의 변수들로 구성되며, 사회 복지 부분은 건강, 삶의 만족도 변수로 구성되었다.

먼저, 개인 수준의 고학력화가 사회적 자본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한국의 「한국사회종합조사(KGSS)」(2007)자료와 유럽 29개국의 「유럽사회조사(ESS)」(2008~2009) 자료를 사용하여 상관관계 및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한국의 경우 고학력화는 신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유럽의 경우 신뢰, 정치적 관심, 사회봉사 참여, 건강, 그리고 만족도 등 5개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가 사회적 자본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유럽사회조사(ESS)」(2008~2009) 데이터를 기초로 국가별로 고학력화 수준, 그리고 5개의 사회적 자본 수준과 2개의 복지 지표 수준을 포함한 집계 데이터(aggregate data)를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면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는 신뢰와 정치적 관심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투표참여와, 사회봉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나 건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부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처럼 고학력화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가 개인과 사회 전체 수준에서 다른 점, 그리고 같은 개인 수준에서도 한국과 유럽 등 문화권에 따라 다른 점은 고학력화의 사회적 성과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특히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의 사회적 성과가 개인의 고학력화의 사회적 성과에 비해 제한적인 점은 향후 교육 정책의 방향이 교육의 양적 측면과 함께

질적 측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한국과 유럽에서의 개인의 고학력화가 사회적 자본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영역별로 다른 점은 교육의 내용과 틀에서 문화적 격차의 차이가 있음을 암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향후 교육 및 사회 정책의 수립에 주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고학력화에 제한적으로 초점을 두고 분석한 점, 그리고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고학력화의 조작적 정의를 자료가 가용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설정한 점 등은 연구의 한계로 남으며, 고학력화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논의는 실증과 이론 연구 등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제7장 고학력화와 대학 서열화

이 장에서는 고학력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대학 서열화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고등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지면 고등교육 기관의 분화가 나타나고, 이러한 고등교육기관의 분화와 다양화로 인해 고등교육의 확장이 계속된다. 다른 나라의 고등교육 확산도 그러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특히 세밀한 서열화가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다. 고등교육에서 서열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서열화를 수용하든지 완화하든지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에 수능성적자료로 1994년에서 2009년까지 대학 입학생 수능 성적 분포의 추이를 분석하여 서열이 형성, 유지되는 상태를 분석하였다.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고등교육 기관의 종류와 전공의 다양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그렇게 형성된 기관들 간에 계층 또는 서

열이 형성된다.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새롭게 편입되는 고등교육 기관들이 특성화라고 판단되는 반면, 계층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고등교육 수요 확대에 따른 기관 간 경쟁의 결과가 고등교육의 확대라고 판단되며, 그 결과 고등교육기관의 위계적 계층화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학력주의 입장에서 보면, 고학력화에 따른 서열화는 많은 사회 집단의 교육적 성취가 증대되지만 낮은 사회 계층의 교육적 성취가 증대되는 것 이상으로 지위가 높은 계층의 교육 성취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고학력화를 통하여 학력의 패스트푸드화, 표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집단들에 의해 추가적인 분화와 확대가 이루어진다. 석사, 박사, 박사 후 과정의 증가가 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교육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계급 간 교육 격차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급 효과를 연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전에는 고등교육이 아니었던 예술, 신문방송, 체육, 사회복지, 각종 기술훈련 등이 고등교육 과정에 편입되어 고등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해졌지만, 이러한 다양화는 고등교육 과정 내에서 새로운 위계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능 점수로 대학군을 나누고 1994년부터 2009년까지 그 추이를 보았을 때 거의 순위의 변동이 없었다. 2005년과 2006년에 입시 제도의 변경으로 변동이 극심한 시기에도 약간의 순위 변동밖에는 없었고, 이후 다시 서열이 자리를 잡아 갔다. 최상위권 종합 대학의 서열은 더욱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반면에 지방 명문 대학의 서열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공 별로 보면 대학 서열과 무관하게 전공 백분위 평균이 높거나 낮은 경

우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의학, 한의학, 약학, 사범계열은 대학서열이 낮아도 전공 평균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상위권 대학의 일부 학과는 대학 서열과 전공 서열이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고학력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열의 폭이 커졌으며, 상위권 내에서의 서열이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고학력화와 서열화의 인과 관계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두 현상이 병존했음을 밝혔으며 두 현상 간의 관계를 주로 학력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한국은 대학 졸업 학위 취득을 위한 질적 기준이 느슨한 것이 서열의 유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고학력화로 인하여 학위가 나타내는 능력 수준의 폭이 확대되어 노동 시장 및 사회에서의 대학 학위가 가졌던 상징적 가치를 상실하여 고등교육 기관들 내에서의 서열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고등교육 학력의 독점적 의미가 희석됨에 따라서 고등교육 내에서 정교한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며, 더 부가적인 문화자본 획득을 위한 노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학력주의 관점에서의 서열화를 해석하는 것은 서열화를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오류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우리 사회의 독특한 학벌주의가 작용하여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공고하고 촘촘한 서열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대학 서열화가 초중등교육에서의 과대한 경쟁의 원인이 되고, 대학 교육 기관의 특성화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이러한 현상의 개선 필요성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제8장 결론

본고는 고등교육 팽창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하여 시론적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처음 시도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동시에 분석 대상 및 자료 사용의 측면에서 새롭거나 선행 연구보다 진일보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위에서 각 장별 요약이 있기 때문에 고학력화 연구에서 나타난 논점들과 향후의 연구 과제에 대해서 서술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의 요약을 대신한다.

급속하게 전개된 한국의 고학력화 추세와 관련하여 한국의 고학력화의 사회적 성과가 외국의 고학력화의 성과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교육 팽창이 주로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개인들의 부담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고등교육의 부담 주체, 고등교육 시장화와 국가의 역할 문제 등에 논쟁이 있으며, 이는 향후 연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토론의 주제가 된다.

한국 고학력화가 인적자본 형성 및 경제 성장에 기여가 있었고, 반면에 고등교육 이수자 고용률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 투자 수익률에 대한 연구주제와 하향취업에 대한 연구주제는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교육의 팽창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산업 자체에 대한 연구 및 사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등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많아지면 소득 분포가 전반적으로 상향이동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고등교육 팽창의 각 시기별로 소득 계층별 고등교육의 기회와 소득 분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고학력화의 진전이 거의 사회적 자본의 신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추후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 전반적인 교육이 사회적 자본의 신장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교육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를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학력화의 진전과 함께 대학서열의 공고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대학서열이 대학교육의 질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문제 제기이다. 아울러, 대학서열의 공고화가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전인 교육의 상실, 대학 교육 기관 획일화 등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학력화의 사회 경제적 성과와 한계를 연구한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갑’이 아니라 ‘을’이 권위를 지니는 교육서비스의 특성상 특히 고등교육정책의 개혁은 쉽지 않고, 고등교육이 팽창하면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어 왔다. 고등교육이 팽창하면서 소수화되고 취약계층화된 고졸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사립학교 중심의 고등교육 팽창에서 고졸자 취약계층은 대물림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사회의 극빈층을 형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등교육 정책의 시장주의적 지향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사립 고등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비용이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고등교육 역시 공공재 투자라는 관점에서 장학금을 늘리고, 학자금 대출의 조건과 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동시에 대학에 대한 공인 회계 감사 제도를 통해 방만한 대학 경영을 시정하도록 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여 등록금을 대폭 낮추도록 해야 한다.

대학이 많이 늘어났지만 전문화된 특성 기관으로의 분화 정도는 미미하여, 노동 시장 진입 이후 다시 교육으로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기술변화가 극심한 환경에서 노동 시장 진입 후 고등교육 이수 용이하도록 적합한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업계고 대상의 ‘선취업 후 진학제도’를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서열의 공고화와 관련하여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일정한 수준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졸업시키지 않는 것은 대학 교육의 심리적 비용을 높여 고등교육 선택을 감소시키게 하는 좋은 수단이다. 동시에 대학교육에 대한 평판이 노동 시장에서 신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보 공시제, 인증 평가제 등을 도입하고 이를 대학 재정 지원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고학력화가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Dore가 지적한 바와 같은 학력병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즉, 오로지 선발 지향의 학습과 평가에서 탈피하여 ‘참다운 학업성취’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수·학습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공교육의 회복과도 관련되는 진정한 교육 개혁의 목표이며, 이에 각 사회 주체들이 중장기의 계획과 실행 목표를 세워 차분하게 개혁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1장 | 서론

김안국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대학진학률은 이미 90%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리고 그러한 고학력화의 진전은 향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특히 이제는 대학의 졸업이 아니라 대학원 졸업의 증가를 중심으로 고학력화의 고도화가 진전되리라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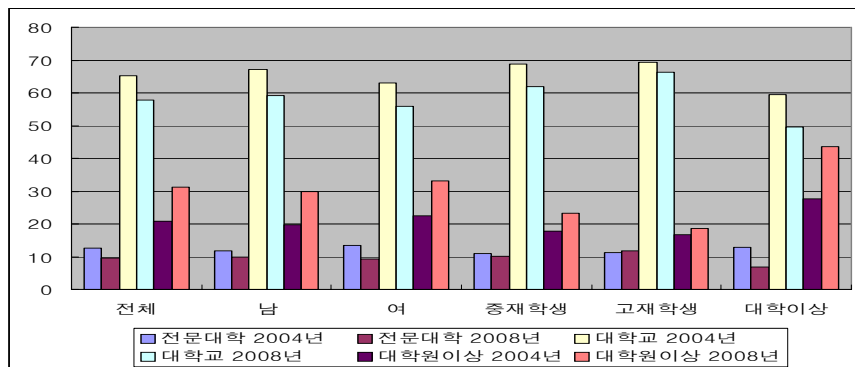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 2004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학생들의 기 교육 수준은 전문대학까지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줄어들고, 대학원 교육까지 받았다는 학생들의 비율은 크게 늘고 있다.

그런데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는 학생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보다 많았다. 이는 미래로 갈수록 청년들의 대학원 이상 진학의 고학력화가 더욱 진행될 것이며, 그러한 양상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4 고학력화의 사회경제적 성과와 한계

더욱이 현재 중고등학생들보다는 대학생인 경우에 대학원을 가겠다는 학생들의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2004년보다 2008년에 크게 늘어났다. 이는 일단 대학을 진학하면 더욱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게 되며, 이에 향후 더 많은 대학원 진학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견하게 한다.

[그림 1-1] 한국 학생들의 기대 교육 수준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2009), p. 277 표에서 재구성

대학 진학률의 증가와 함께 사회 전체의 고학력화의 진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 성취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2010 IMD 보고서에 나타난 한국 교육의 성취를 보면, 한국 교육은 25~34세 고등교육 이수 비율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학교육의 팽창을 보였다.

그렇지만 고학력화의 진전과 함께 고등교육 이수가 국가 경쟁력, 기업에 부응하는 정도, 숙련 노동력, 경영능력 등의 양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이수 비율이 높은 5개국을

추출하여 고등교육이 경제 경쟁력에 부응하는 정도, 경영교육이 기업에 부응하는 정도, 가용 숙련노동력, 유능한 시니어 경영인 등의 지표로 비교한 것이 <표 1-1>이다.

표의 결과를 보면 고등교육의 이수는 2위 수준이지만 대학교육이 경제적 경쟁력에 부응하는 정도는 58개국 중 46위이며, 경영교육이 고등교육의 주요 교육과정임을 감안하면 경영교육이 기업체의 요구에 맞추는 정도는 43위로 하위 수준이고, 고등교육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숙련 노동력, 시니어 관리자의 정도도 각각 50위, 49위로 지극히 낮은 상황이다.

<표 1-1> 고등교육 이수 비율 높은 국가들의 고등교육 성적

	25-34세 고등교육 이수비율	고등교육이 경제 경쟁력에 부응하는 정도	경영교육이 기업에 부응하는 정도	가용 숙련 노동력	유능한 시니어 경영인
싱가포르	1위(58.7%)	1위	2위	18위	14위
한국	2위(56.0%)	46위	43위	50위	49위
캐나다	3위(55.0%)	5위	6위	15위	17위
일본	4위(54.0%)	36위	40위	10위	33위
대만	5위(53.0%)	20위	16위	12위	21위

자료: IMD(2010).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이렇게 고등교육의 성적표는 좋지 않지만,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 팽창이 사회와 경제의 성장에서 기여한 바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고학력화의 진전은 경제 발전과 사회 평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른바 ‘발전주의적’ 고등교육 확대 정책하에서 이루어졌거나 (장수명, 2002;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2010), 한국의 압축 성장

6 고학력화의 사회경제적 성과와 한계

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고학력화에 기인한다(이효수, 1991)는 시각이 많았다.

즉, 현재의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통상적으로 교육을 잘 받은 노동력은 경제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지식이 부의 주요한 원천이 되는 이른바 ‘지식경제’가 출현하면서 인적자본의 축적과 고등교육의 보급이 경제성장의 핵심 변영으로 가는 열쇠가 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Bergheim(2005)은 인적자본의 수준 차이가 구조 변화를 가능케 하여 경제적 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보고, 고학력화를 향한 교육개혁을 강조하였다. 더욱이 현대와 같은 기술 급변의 시기에 고등교육은 급격한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적응시키는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더욱 중요하며, Trow(1977)은 보편화된 고등교육 기능이 거기에 있다고 보았다.

고등교육의 거시 경제적 효과를 고용과 경제 성장, 소득분배에서 찾는 정진화(1996)는 고등교육이 개인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대한 대비를 시켜 주고 적응력을 키워 줌으로써 고용 증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노동력의 질적 제고를 통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국민소득을 증대시킨다고 본다. 또한 근로자 소득의 상당 부분이 임금이기 때문에 교육 수준의 상승은 생산력을 높여 소득을 늘리고 빈곤을 줄인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확장과 그 사회 경제적 기여에 대한 찬성의 의견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장하준(2010)은 고등교육이 경제성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 나라의 경제적 번영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교육 수준이 아니라 생산성 높은 산업 활동에 개인들을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사회의 능

력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가장 소득이 높은 스위스의 대학 진학률은 2007년 현재 47%로 높지 않다는 예시를 들어, 대학 교육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이루어진 대학 진학률 제고가 문제라고 파악하였다.

고학력화가 진행되면서 적정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으면 고학력자 실업이 늘거나 고학력자가 저학력자의 일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고학력화가 문제라는 인식은 이미 20세기 초부터 있어 왔고, 1950년대 직전 슈페터는 대졸 인력의 과잉 및 몰락과 반발을 예견하였다(渡邊行郎, 1982).

교육 자체에 대해서 교육이 경제적 가치, 정치적 가치, 사회적 지위 등에 종속되어 왔기 때문에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교육이 독자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고등교육은 지적, 인격적 성숙을 통해 기존 사회의 모순과 불합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개혁하도록 자극해 왔으며, 그것이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이다(김신일, 1989). 이러한 입장에서 과잉 교육의 문제는 학교가 교육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학력만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상 고등교육의 확장이 현대사회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일치된 합의점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고등교육의 확장이 어떠한 사회적 혹은 경제적 성과를 가져왔고, 그것이 갖는 한계점은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기록적인 고등교육 팽창을 경험하였고, 그 시기가 경제 발전의 시기와 맞물려 있는 한국 사회에서 고학력화가 가져온 사회 경제적 성과가 무엇이며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한 점검은 고등교육 팽창이 가

저은 문제점을 찾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고등교육의 팽창으로 나타난 급격한 한국 사회의 고학력화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대학교육 그 자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선행 연구의 정리

고등교육의 팽창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연구성과가 있었다. 고등교육 자체와 함께, 그것이 관련되는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고학력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고등교육의 팽창으로 인한 고학력화를 교육 이론을 토대로 연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ore(1997)은 고학력화의 진전과 함께 학습이 학습 그 자체를 위한 학습 혹은 직무를 위한 학습이 아니라, 직업을 얻기 위한 학습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는 학습의 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간파하고, 이를 학력병(Diploma disease)이라고 명명하였다. 한국에서도 김신일(1989)은 고학력화에 대한 이론을 기술기능이론적 설명, 갈등이론적 설명, 이념통합 이론적 설명, 교육구조 내 상호작용 이론 설명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한국적 대학교육 팽창에 대해 우리의 공업화 속도가 빨라서 학교의 확대가 빨랐으며,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이데올로기 통합 기능이 강하게 요구되었음

에 비해, 제도권 밖의 교육은 육성되지 않아서 대학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그리고 학교 교육의 가치를 비판적 인식과 개혁에 두고, 대학 교육이 그러한 교육가치를 실현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종재(1989)는 고학력화의 현상을 제도적 측면에서 학력병(Diploma disease)모형과 교육체제 내재율(Logic and behavioral principle of education system)모형, 개인의 주관적 선택모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학력병 모형으로 고학력화의 부정적 결과를 설명하고, 교육체제내 재율의 입장에서 평생교육체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력 간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점(50%) 수준으로 대학교육을 유지하고 선발전형을 개혁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이론을 토대로 고학력화를 다룬 연구를 보자. 渡邊行郎(1982)는 고등교육의 편익과 비용을 정리하고, 이를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의 형태적 구분, 그리고 사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의 대상적 구분으로 나누어 고학력화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인적자본론에 입각하여 내부수익률과 주관적 할인율의 변수를 교육수요와 공급의 함수로 두고, 그 균형점에서 사적인 적정 교육연수의 결정을 설명하고, 대졸자의 사회적 한계생산력과 고졸자의 사회적 한계생산력으로 사회적 적정 진학률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 검증하고 있다.

고등교육과 노동시장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Fields(1995)는 대졸자의 노동시장과 고졸자의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이론적 모형을 균형과 비균형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비균형 모형에서 대졸자의 경우 대졸자 일자리와 고졸자 일자리를 모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졸자 일자리

의 절대적 감축과 임금감소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실증적 차원에서 고학력화를 연구한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자. 박세일(1983)은 1960~1970년대 직종의 학력구성의 변화, 학력별 상대임금 및 임금 불평등도를 살펴보고, 1960년대 대졸자의 과잉공급과 1970년대 대졸자의 학력 디플레 현상을 실증하였다. 이효수(1991)는 교육 과열화의 원인을 한국사회의 단층노동시장구조에서 찾고, 상위 단층으로의 진입을 위해 대학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 고학력화가 진행되었다고 진단하였다. 아울러 산업 내에서의 고학력화를 분석하고, 그러한 고학력화의 진전이 여성에게서 현저히 높게 나타났음을 보였다. 이주호(1994)는 인력수급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양적 전망을 수행하고, 지식집약경제로의 이행에서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정진화(1996)는 교육의 경제적 효과에 치중하여, 한국의 교육 팽창을 정리하였다. 시기별로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의 교육팽창을 추적하고, 계열별 교육팽창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고등교육 수요는 주로 4년제 대학에 집중되어 있어, 선진국의 다양화·특성화된 고등교육 수요와 대조적임을 보였다. 대학 교육의 투자수익률을 추정하여, 1980년대에는 20%대, 1990년대에는 10%로 투자수익률이 줄어들었음을 보이고, 90년대 현재 교육의 사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의 괴리가 커져있음을 지적하였다. 정권택 외(2003)는 고등교육의 투입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성장회계모형(growth accounting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고등교육의 인적자본 축적 기여에 문제가 있고, 인적자본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하락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외국에서의 실증연구로 Rubinson and Browne(1994)는 경제와 고등

교육의 거시적 수준의 관련을 교육의 경제성장 효과, 경제성장의 교육 팽창 효과로 나누어 실증하였다. World Bank(2002)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고등교육의 역할을 정리하고 각국에서의 고등교육 변화를 위한 시장화 과정의 의미와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Bergheim(2005) 역시 인적자본의 증가가 구조변화를 촉진하며, 이에 성장촉진을 위한 교육개혁을 강조하였다. 교육수준의 차이가 국가 내 개인 간의 소득차이, 국가 간 임금격차의 원인이라 파악하고, 스페인과 한국의 인적자본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 성공사례를 들고 있다.

반면에 Pritchett(2001)은 1960~1987년 사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수준 상승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의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Wolf(2002)도 교육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은 하나의 신화이며, 교육과 경제성장의 관련성이 없음을 영국 사례로 실증하고 있다.

이상 외국 연구에서 고학력화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합의된 일치점을 찾을 수 없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앞서 소개한 연구들과는 달리 고학력화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보이는 연구들이 많았고, 이들은 특히 과잉학력과 관련한 2000년대 이후의 연구들에서 전개되었다. 김홍균·김지혜(2008)는 과잉교육의 교육투자수익률을 추정하고, 과잉교육이 교육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음으로 나타났음을 보였다. 그러나 과잉교육의 교육투자수익률은 학력이 높을수록 크며, 대학원의 과잉교육이 임금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을 보였다. 전근하(2004)는 『한국직업고용조사(OES)』 자료를 활용하여 OES에 나타난 평균 학력과 『한국직업사전』의 GED(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 수준)와 비교하여 학력

과잉을 실증분석하였고,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학력과잉의 현상이 두드러짐을 보였다. 김주섭(2005)과 박천수(2005)는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의 실태를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여 중퇴자, 비정규직, 제3차 산업 종사자에 학력과잉이 많았으며, 과잉학력자는 직무만족도도 낮고 임금손실 등으로 인적자본 형성에 장애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채창균 외(2005)는 「대졸자졸업생이동조사」 자료를 가지고 대졸 청년층의 노동이동을 과잉학력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과잉학력이 직장이동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임금효과는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과잉학력에 따른 인적자원 투자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고학력화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들도 적지 않았는데, 조상식(2010)은 한국교육의 병리적 원인을 압축 근대화로 교육이 사회경제적 지위 경쟁에서 도구화되었으며, 학교교육 외에 대안적 생애경로가 없고, 장기적인 비전에 입각한 교육정책이 없는데서 찾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학교공동체의 규범적 기준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구(2010)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형성에서 고등교육 정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고등교육 정책이 경제정책, 사회정책, 복지정책에 모두 관계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한국 고등교육의 지나친 사유화를 문제로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김진영(2010)도 한국 고등교육의 수준이 경제력에 상응하는지를 살피고, 대학 단위에서 경쟁력에 세계 최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재정과 개방성의 부족 때문임을 보였다. 재정 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개방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 방안이며, 연구와 교육의 기본에 충

실하고, 학자들의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강조하였다.

포괄적으로 교육의 진전과 국가발전(경제발전, 정치발전, 사회발전)에 관한 제이론을 실증자료로 분석을 한 김영화 외(1997)는 경제성장에 대한 교육 확대 효과, 교육의 민주주의 발전에의 기여와 정치·행정 엘리트 양성 배출 기여, 교육이 확대되었지만 아버지의 교육이 자식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경향으로 내적 불평등 재생산 구조 강화 등을 분석하였다. 류한구(2002)는 중등교육의 팽창을 사회구조적 요인, 교육체제적 요인, 개인행위자 요인 및 세계체제적 요인의 효과로 실증분석하고 가정의 교육에 대한 투자 요인과 중학교 평준화 정책이 중학교의 팽창에 영향을 미쳤고,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 정부의 사학육성 정책, 가정의 교육 투자, 생활여건의 개선 등이 고등교육의 팽창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였다.

이상에서 기존 연구들은 고학력화와 관련하여 일정한 측면을 주로 개인 수준에서 연구하였고, 고학력화가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성과를 사회적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김영화 외(1997)가 유일하다. 그러나 김영화 외(1997)는 고학력화는 아닌 교육의 팽창에 대한 연구였으며, 교육 팽창에 따른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을 다 다루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학력화의 사회경제적 성과와 관련하여,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그리고 교육 자체의 측면에 범위를 한정하여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분석틀과 주요 연구 내용

고학력화는 매우 복잡한 사회 현상이며, 특히 한국의 경우는 고등교

육의 팽창이 1980년대 이후 급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학력화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학력화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많지 않았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고학력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학력화의 의미, 그것이 가져온 성과가 무엇인지, 특히 우리 사회에서 고학력화가 갖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고학력화의 성과를 이전에는 주로 경제적인 요인만으로 고찰하였지만, 고학력화의 성과는 사회 전체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교육 특히 고등교육은 정책으로서도 매우 포괄적이다. 고등교육 정책은 그 자체로 중요한 교육정책이다. 고등교육기회의 증가와 함께 교육체제가 변화한다. 즉, 고등교육기관에 변화가 나타나 기능 분화와 다양화가 이루어지며(Trow, 1977), 이전의 엘리트교육의 기능을 일부의 대학이 담보하게 되어 대학의 서열화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고등교육기회의 증가는 평생교육의 발전 및 대학문화의 변화를 아울러 수반한다.

고등교육정책은 사회문화정책은 물론 정치의 민주화, 산업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먼저 고학력화의 진전은 고등교육 기회의 확산으로 한 사회의 사회적 발전에 기여한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정책은 직접적 사회적 효과를 가지며, 계층 이동, 성별 불평등의 완화, 사회의 개방성 강화, 사회통합, 사회의 국제화 역량(세계시민 역량)을 제고한다. 교육의 확산은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특히 고등교육의 확산은 사회적 자본을 양성하여 시민사회의 성장 및 사회기능의 효율적 제고를 촉진한다. 동시에 교육의 증진은 건강 등 미래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이에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삶의 만족도를 제고한다.

고등교육의 확산은 가치관과 문화의 다원화를 가져와,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능력을 키워 문화 창조에 기여한다. 동시에 고등교육 기회의 확산은 정치적 리더의 양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관심과 사회제도의 민주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정치사회 전반의 민주화를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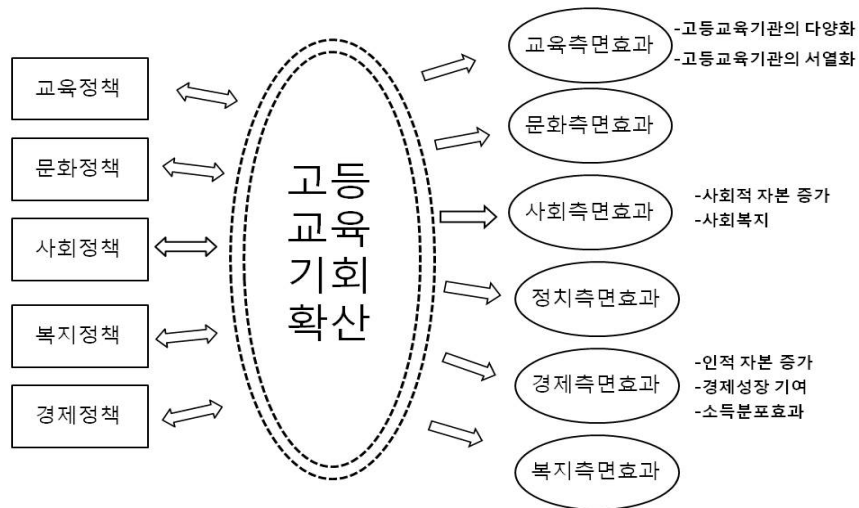
고학력화는 고용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련되며, 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대학교육, 적절한 재교육 및 Work-to-School의 지원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노동의 유연화 등과 관련된다. 고학력화는 그 자체로 교육산업의 팽창과도 관련된다. 보건·교육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7.4로 여타 산업에 비해 가장 높으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정부부문 0.95와 민간부문 0.87로 여타부문보다 훨씬 높다(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8). 고등교육의 팽창은 학교산업을 비롯한 사교육산업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학력화는 경제정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본축적의 효율화를 위해서 R&D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서 고급 인적자원의 양성은 매우 중요하다.

고학력과 관련하여 교육의 제공은 그 자체로 복지 혜택이 되며(학습복지),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여 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고등교육과 관련한 사교육의 불균형 문제, 대학 등록금의 국가 지원 제도 등도 복지 정책과 관련된다. 다양한 계층으로의 고등교육 기회 확산은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전반의 소득분포의 상향 조정을 통하여 사회 통합 및 복지비용의 감소에 기여한다.

이에 고학력화의 진전 및 그에 따른 정책도 교육정책, 사회문화정책, 복지정책, 고용정책 등 경제정책 등 제반 사회정책과 연계하여 파

악해야 한다. 고학력화의 성과를 사회적 수준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연구의 분석 틀이 필요하다.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의 [그림 1-2]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2] 고학력화의 사회경제적 성과 분석의 틀



위와 같이 고학력화의 전체적인 분석 모형이 세워질 수 있지만, 가능한 연구 자료와 연구 역량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기회의 확산으로 인한 고학력화의 성과에서 교육측면의 효과(교육기관의 다양화, 대학의 서열화), 사회측면의 효과(사회적 자본 증가, 사회복지), 경제측면의 효과(인적자본증가, 경제성장기여, 소득분포효과)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고학력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고학력화의 추이를 개관할 것이다. 고학력화의 원인으로서는 세계체제를 검증하는데, 구조적 수준의 변인으로 세계체제에 대한 통합효과와 경제사회 구조적 변동을 고려하고, 행위자 수준의 변인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을 사용하고, 개인행위자의 요인으로서는 가정의 교육에 대한 투자 변인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고학력화의 성과를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과, 사회적 측면에서의 성과, 교육적 측면에서의 성과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먼저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정리·검토하고, 그에 맞는 지표를 추출하여 실증적으로 고학력화의 각 부문별 성과를 측정할 것이다. 그리고 고학력화가 가져온 한계점을 보기 위해 고등교육 팽창과 가구의 소득 분포의 추이를 살펴보고, 아울러 교육산업의 팽창과 그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고학력화의 개념을 Trow(1977) 등의 논의에 따라 고등교육 이수자의 증가로 파악하고, 이를 교육기간, 진학률, 등록률, 이수율 등으로 파악한다. 한국의 교육통계, OECD의 교육통계, UNESCO의 교육통계 등으로 한국과 세계 각국의 고등교육 팽창의 추세를 개관한다.

제3장에서는 고학력화 원인의 이론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한다. 고학력화의 제이론으로 기술-기능이론, 계급통제론, 지위경쟁이론, 세계체제론을 설명하고, 고등교육 팽창의 이론적 모형화를 시도한다. 즉, 세계체제 내에서 제도적 행위자와 개인행위자가 서로 작용하는 사회구조가 고등교육팽창을 가져오는 모형 제시한다. 이러한 모형을 실증하기 위해 구조적 수준 변수로 세계체제에 대한 통합효과와 경제사회 구조적 변동을 변인으로 하고, 행위자 수준의 변인으로 제도적 행위자(정부의 교육정책)와 개인적 행위자(가정의 교육 투자)의 변인으로

로 고등교육 팽창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고학력화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를 보기 위해 고학력화의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 및 지표를 검토한다. 여러 방법 중에서 고학력화가 한국의 인적자본 축적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인적자본추계를 통하여 실증한다. 그리고 그러한 고학력화로 인한 인적자본 형성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실증분석한다. 고학력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교육산업의 팽창 및 고용유발을 실증한다. 고학력화로 인한 성과의 한계로 고등교육의 사적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의 격차를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고학력화가 진전되면, 사람들의 인적자본이 축적되고 소득이 높은 일자리를 갖게 되어 사회적으로 소득의 불평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다. 한국 사회에서 고학력화가 진전되면서 가구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기 위해 학력별 임금격차의 추이를 역사적 시간에 따라서 살펴보고, 학력별 임금 및 자산 형성의 추이를 개인적 시간에 따라서 분석한다. 대학 진학이 주는 경제적 보상을 임금과 자산이라는 두 가지 지표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어떤 양상과 추이를 보여주는지를 실증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고학력화와 사회적 자본이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보기 위해 교육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유형 및 측정지표를 검토한 뒤, 사회적 자본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측정하고 상관관계를 내어 분석한다. 교육수준과 사회적 자본의 상관관계, 즉, 교육수준이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가를 사회적 자본의 유형별, 국가별로 비교한다. 고학력화가 사회적 성과로 연결되는가에 대해 국가별 거시적 비교나 주

요 변인을 통제하는 회귀분석으로 분석한다.

제7장에서는 고학력화의 진전과 대학교육의 질적 변화를 보기 위해 고등교육 팽창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등교육기관들의 수평적 분화인 다양화와 수직적 분화인 서열화를 고찰한다. 고학력화와 다양화, 서열화 등을 선행 연구로부터 정리하고 한국고등교육의 팽창과 다양화를 기관유형의 다양화, 전공의 다양화, 특수(전문)대학원의 증가 지표로 살펴보았다. 한국 대학의 서열화를 입학생의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제8장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고 요약·정리한다. 그리고 고등교육 기회의 확산에 따르는 제반 정책의 의의를 정리한다.

이상의 연구 내용은 선행 연구와는 다른 차별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2장은 각종 고학력화 지표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고학력화 현상과 한국의 고학력화의 정도를 심도 있게 파악하였다. 3장에서는 그러한 고학력화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팽창 이론을 가설로 세우고 구체 자료로 모형을 실증 분석하였는데, 이는 한국에서는 처음 이루어진 연구이다. 4장의 인적자본추계도 이종화·김선빈(1995) 연구 이후 유일한 것이며, 보다 더 완비된 자료로 추계 작업이 이루어졌다. 교육서비스업의 추이와 팽창에 대한 분석도 새로운 것이다. 5장에서는 다수의 연구가 임금을 사용하여 학력 간 소득 격차를 분석한 것과는 달리 임금 외에 자산 정보를 가지고 학력 간 소득분포를 처음으로 분석하였다. 6장의 고학력화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의 관련성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분석이 시도되었으며, 한국의 자료와 유럽의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 특징적이다. 7장은 그동안의 연구가 주로 서열화만을 다룬데 비해 고학력화의 현상과 고등교

육기관의 다양화와 서열화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자료로 1994~2003년, 2005~2009년도의 대학 학과별 수능점수를 활용하였는데, 2005년 이후의 수능점수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비교가능하도록 정교하게 가공된 것이다.

3. 연구의 방법

본고의 분석은 주로 경험적 연구방법론을 취한다. 고학력화의 추이와 개념 및 측정을 위해서 기존 연구 문헌을 정리하고, 「교육통계연보」, Education at a Glance 등 OECD 자료, UNESCO 자료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팽창을 개관한다.

고학력화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실증하기 위해서 주요 이론을 검토하고, 「교육통계연보」,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Rubinson and Ralph (1986)의 모형을 활용하여 시계열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고학력화의 경제적 성과를 보기 위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통해 인적자본의 시계열적 추계를 수행하고, 인적자본 증가가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보기 위해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가지고 성장회계모형(Growth Accounting Model)을 실증한다. 고학력화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를 「산업총조사」, 「사교육비조사」 등의 자료를 가지고 고등교육 산업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고학력화의 진전에 따른 소득 및 자산 분포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학력별 임금격차의 추이를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의 방법

으로 실증하고, 학력에 따른 소득과 자산 추이를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분위회귀분석의 방법으로 실증한다.

고학력화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보기 위해 사회적 자본의 개념 및 측정에 대한 이론 및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ESS (European Social Survey; 유럽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고학력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실증한다. 다음으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분석하여 교육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다.

고학력화와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 서열화 등에 대한 이론과 기존의 연구를 검토한다.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하여 한국 고등교육의 팽창과 다양화를 테이블로 분석한다. 대학 입학생의 수능성적을 활용하여 입학생의 성적 분포의 추이를 분석한다. 수능점수는 1994년부터 2009년까지의 대학 학과별 점수로, 2005년 이후의 수능 자료는 일관되지 않아 일정한 기준으로 비교 가능하게 자료화하였다.

제 2 장

고학력화의 지표와 그 추이

제1절 고학력화의 개념과 지표

제2절 고학력화의 추이

제2장 | 고학력화의 지표와 그 추이

김안국

제1절 고학력화의 개념과 지표

고학력화라는 용어는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니다. 고등교육 기회의 확산에 따라서 고등교육 이수자가 증가하여 사회 전반에 고등교육이수자가 많아진 상황을 이야기한다. 즉, 고학력화는 고등교육 팽창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한다.

고등교육 팽창에는 사회 구성원의 교육연수의 증가라는 개념과 사회구성원 중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의 증가라는 의미가 겹쳐져 있다. 교육연수의 증가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다. 초등교육이 대부분이고 중등교육이 일부인 사회에서는 교육연수의 증가는 중등교육의 증가를 의미하며, 그것이 고학력화이다. 중등교육이 대부분인 사회에서 교육연수의 증가는 고등교육 이수자의 증가를 의미하며, 본고에서 고학력화는 바로 고등교육이수자 비중의 증가로 정의된다. 그렇지만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의 증가는 특정한 정도가 표시되어야 파악이 되는 개념이다. 예컨대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이 사회구성원의 몇 퍼센트가 넘어야 고학력화라고 부를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다.

고학력화를 고등교육 이수자의 팽창으로 정의하였을 때, 고학력화의 진전 정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고학력화의 진전과 관련한 Trow(1977)의 연구에서 고학력화의 진전을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고등교육 등록률을 지표로 15%, 50%를 기준으로 고등교육 등록률 15% 이하는 엘리트주의 고등교육체제, 고등교육 등록률 15~50%는 고등교육대중화체제, 고등교육 등록률 50% 이상은 고등교육보편화체제로 구분한다. 이러한 그의 연구는 Weber의 이념형적인 것으로 후세의 연구에 기준을 제공한다. 한국의 경우는 그의 기준에 따르면 이제 고등교육보편화체제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고학력화를 측정하는 지표에 대해서 연구된 선행 연구는 없다. 다만 경제학에서의 선행 연구는 고등교육이 아닌 전반적인 교육 진전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교육연수나 교육수준별 등록률, 교육비용 등에서 찾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로 인적자본 추계 연구에서 나타난 측정 방법을 개관한다.

먼저 학교등록률(school enrollment rate)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각급 학교의 등록률을 교육수준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일정시점에서 각급 학교의 취학 연령계층 중에서 학교에 등록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을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Barro(1991)나 Mankiw, Romer and Weil(1992)은 학교 등록률을 이용해 인적자본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학교등록률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나타내는 유량변수이며, 교육을 받고 실제 생산활동에 참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인적자본의 투자비용을 누적적으로 합계하여 인적자본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최초의 인적자본량에 교육비용(기회비용 포함), 양육비용, 직업훈련비용 등 인적자본을 위해 사용된 투자비용을 누적하여 더해감으로써 인적자본의 양을 구하는 것이다(Kendrik, 1976). 이 방법은 최초 인적자본량의 크기와 감가상각률의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한 투자비용이 크면 항상 비례적으로 인적자본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 문제이다.

인적자본의 수준을 한 사회구성원들이 평균적으로 이수한 교육연수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 Psacharopoulos and Ariagada(1986)는 5개의 학력에 따라 구분하여 각국의 평균교육연수를 계산하였고, Barro and Lee(1993)는 유네스코 센서스 자료와 학교등록률을 이용하여 1960년부터 5년 간격으로 129개국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를 계산하였다. 이들은 뒤에 조정된 등록률을 활용하고, 학교급별 교육연수의 변화를 고려하여 107개국의 평균 교육연수를 계산하였다. 이 방법은 노동자의 생산성이 교육연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동시에 1년간 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같은 크기의 인적자본 축적을 가져오는 것으로 가정하여 국가 간 혹은 시점간의 비교에서 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상의 방법은 개인들이 획득한 숙련, 경험과 학교 간 질적 편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시험성적이나 성인들의 문해력, 시험성적 등으로 개인들의 숙련획득에 따른 질적 편차를 고려하여 인적자본을 측정하거나 학교 간 질적 차이를 고려한 인적자본 측정을 하고 있다(Hanushek and Kimko, 2000; OECD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1998).

또 다른 교육지표에 대한 접근은 임금이나 고용 등 노동시장의 성과를 가지고 학교교육연수를 질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이다. 이는 교육 수준에 따른 소득비율로 노동력의 각각의 구성부분에 대해 가중치를 두어 인적자본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Collins and Bosworth (1996)은 교육성취에 대한 측정 방법을 구축하였고, Gollop and Jorgenson (1980)은 미국의 인적자본추계를 추정하였다. 이 방법 역시 교육연수에 따라 인적자본의 일정한 양이 추가된다고 하는 비현실적 가정이 문제이다.

인적자본을 추계하는 방법에서 학교등록률 및 교육연수 등이 지표로 활용되었지만, 고학력화의 정도를 보는 지표로서는 전체 인구 중의 고등교육이수자의 비중이 적합하다.¹⁾ 전체 인구 중의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중 증가는 고학력화의 진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 중의 고등교육이수자의 비중 변화는 고등교육이수자의 비중뿐만 아니라 인구구성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즉, 청년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면 청년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이 늘더라도 전체 고등교육이수자 비중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연령집단별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이 고학력화를 보는 데는 더욱 적합하다. 특히 장년층에 비교하여 젊은 세대의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중 변화를 보는 것은 고학력화의 추세를 보는데 가장 적합하다. 젊은 세대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을 1세대 위의 연령집단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과 비교하면 고학력화 정도의 속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별 구분에 따른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중 변화도 고학력화의 진전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1) 이 지표가 인적자본 추계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은 이 이수비중이 회귀분석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Bergheim,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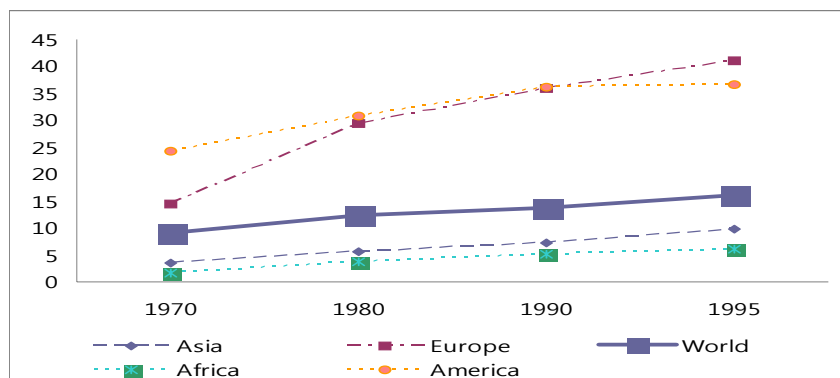
특히 교육의 획득의 지위에서 남성보다 떨어져 있던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의 추이는 고학력화 진전의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

제2절 고학력화의 추이

이 절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고학력화 측정의 지표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학력화의 추세를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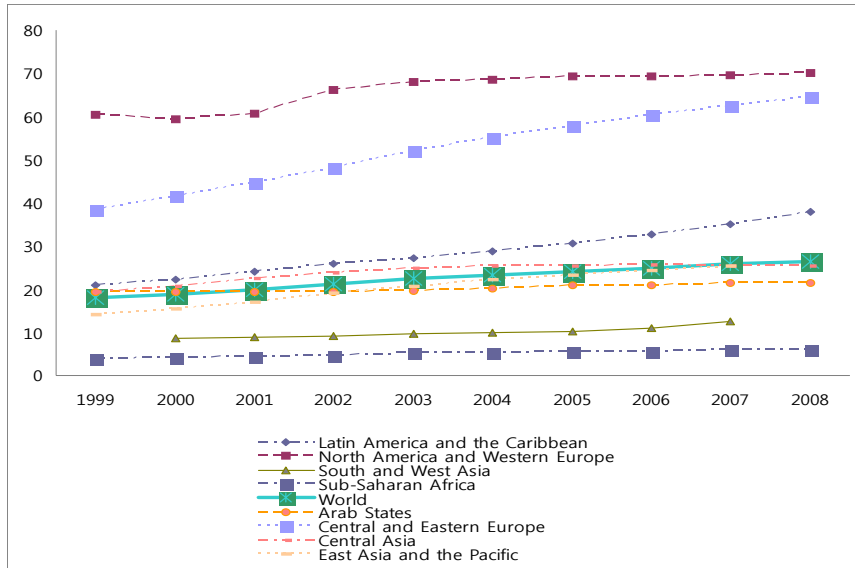
먼저 통상적으로 고학력화의 추세를 보는 지표는 고등교육기관 등록률이다. 등록률의 개념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할 적정 연령대(예컨대 20~23세)의 인구에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인구의 비중을 보는 것이다. UNESCO 자료에서 고등교육기관 등록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2-1]과 [그림 2-2]이다. 그래프를 보면 전세계적으로 고학력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 고등교육 등록률의 추이(1970~1995) - 대륙별



자료: UNESCO(1999). Unesco Statistical Yearbook.

[그림 2-2] 고등교육 등록률의 추이(1999~2008) - 유사국가별



자료: UNESCO Statistics (<http://www.unesco.org>).

각 지역별로 고등교육 등록률에 편차가 있어, 1970년에는 아메리카가 가장 높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순서로 나타난다. 등록률의 지역별 편차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 고등교육 등록률의 증가폭이 큰 지역은 유럽으로 나타나며, 이는 특히 중부 및 동부유럽의 고등교육 팽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메리카의 고등교육 등록률은 북아메리카는 정체되어 있지만, 남아메리카의 등록률은 2000년대에 그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유네스코 자료에서 1970년대부터 1995년 동안 주요국의 고등교육 등록률을 살펴본 것이 <표 2-1>이다. 1970년 단계에서 고등교육 등록률에는 편차가 있지만,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고등교육 등록률은 증가하고 있다. 등록률은 증가폭은 오스트레일리아나 핀란드처럼 거의 57%p

증가한 나라도 있고 멕시코(10%p 증가)나 헝가리(15%p 증가)처럼 조금 증가한 나라도 있어 역시 편차가 크다. 그리고 또 하나 고등교육 등록률의 증가는 특히 1990년대에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1990년과 1995년의 고등교육 등록률의 증가폭이 그 이전 시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 자료는 남성과 여성의 고등교육 등록률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남성의 고등교육 등록률의 증가폭보다 여성의 증가폭이 더 큰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여성들의 고등교육 등록률 역시 1990년대 이후에 그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특징적이다. 이는 고등교육 팽창이 주로 여성들에게서 많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1995년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고등교육 등록률에는 별 차이가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나라에서 여성의 고등교육 등록률이 남성보다 초과하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표 2-1〉 고등교육 등록률의 추이(1970~1995)

	Total				Males				Females			
	1970	1980	1990	1995	1970	1980	1990	1995	1970	1980	1990	1995
Australia	16	25	35	73	21	27	33	71	11	24	38	75
Austria	12	22	35	47	17	25	37	47	7	19	33	47
Belgium	17	26	40	56	21	29	41	55	13	23	40	57
Canada	53	57	95	88	63	56	85	81	43	58	104	95
Chile	9	12	m	28	11	14	m	30	7	11	m	26
Czech Republic	m	17	16	22	m	20	18	23	m	14	14	21
Denmark	19	28	36	48	23	28	34	43	14	28	39	53
Finland	13	32	49	70	13	33	46	65	13	32	52	76
France	19	25	40	51	m	27	37	45	m	24	43	57
Germany	m	m	34	46	m	m	m	50	m	m	m	42
Greece	13	17	36	42	17	20	36	42	9	14	36	42

<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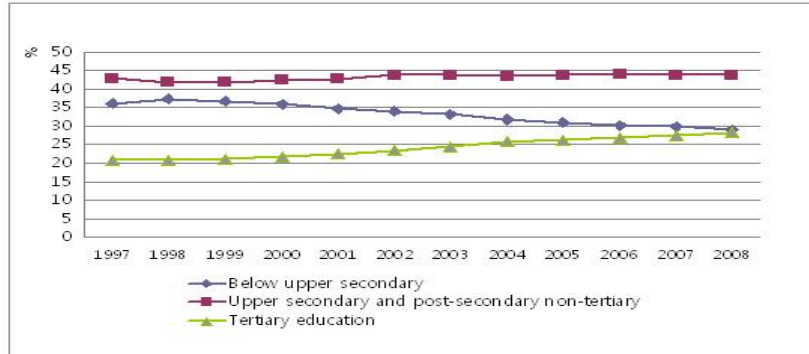
32 고학력화의 사회경제적 성과와 한계

	Total				Males				Females			
Hungary	9	14	14	24	11	14	14	22	8	14	14	26
Iceland	10	20	25	35	14	20	21	29	5	21	29	43
Ireland	12	18	29	40	15	21	31	38	8	15	28	41
Italy	17	27	32	42	21	31	33	39	13	23	31	46
Japan	18	31	30	m	25	40	36	m	10	20	23	m
Korea	7	15	39	52	11	21	51	66	4	8	25	38
Luxembourg	m	m	m	9	m	m	m	12	m	m	m	6
Mexico	5	14	15	15	9	19	17	16	2	9	12	14
Netherlands	20	29	40	48	28	35	43	50	11	24	36	46
New Zealand	16	27	40	60	19	31	38	53	13	22	42	66
Norway	16	25	42	59	22	26	39	51	10	25	46	66
Poland	13	18	22	25	14	16	19	21	13	21	25	28
Portugal	7	11	23	39	7	11	20	33	6	11	26	44
Slovak Republic	m	m	m	20	m	m	m	20	m	m	m	20
Spain	9	23	37	48	13	26	35	44	5	21	38	52
Sweden	22	31	32	47	25	m	29	41	19	m	35	53
Switzerland	m	18	26	33	m	26	33	40	m	11	18	25
Turkey	m	5	13	19	m	8	17	24	m	3	9	15
United Kingdom	14	19	30	50	19	24	31	47	10	14	29	52
United States	47	56	75	81	56	53	67	71	38	58	84	92

자료: UNESCO(1999). Unesco Statistical Yearbook.

OECD국가들에만 한정해서 보면 고학력화의 진전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고학력화의 추세를 보기 위해 OECD 국가의 25-64세 인구의 학력수준별 비중 추이를 본 것이 [그림 2-3]이다. 이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고등교육학력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중학교 이하의 학력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고등학교 학력자 비중은 극소하게 늘었지만 2002년 이후는 정체 상태이다.

[그림 2-3] OECD 국가의 학력수준별 비중 추이(1997~2008)



자료: OECD(2010). Education at a Glance.

위의 그림은 1990년대 후반부터의 추이를 본 것이라 그 앞서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의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각국별로 전체 인구(25세 이상 혹은 25~64세) 중에서 고등교육 이수자만의 비중 추이를 본 것이 <표 2-2>이다.

각 나라별로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중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고등교육 이수자가 증가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그리고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이 적었던 나라에서 그 비중의 증가폭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2-2〉 OECD 각국별 고등교육이수자 비중 추이(1980~2008)

	1980	199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Austria	3	6	11	14	14	14	14	15	15	18	18	18	18	18
Canada	37	21	37	38	39	40	42	43	44	45	46	47	48	49
Chile	7	12	m	m	m	m	m	m	m	m	m	m	21	22
Czech Republic	6	9	11	10	11	11	11	12	12	12	13	14	14	14
Greece	8	9	16	17	17	18	18	19	19	21	21	22	23	23
Hungary	7	10	12	13	14	14	14	14	15	17	17	18	18	19
Ireland	8	13	23	21	20	19	24	25	26	28	29	31	32	34
Italy	4	4	m	9	9	9	10	10	10	12	12	13	14	14
Japan	14	21	31	31	32	34	34	37	37	39	40	40	41	43
Korea	9	13	20	22	23	24	25	26	29	30	32	33	35	37
Mexico	5	9	13	13	13	15	15	15	16	17	13	14	16	16
Netherlands		9	m	24	23	23	23	25	28	30	30	30	31	32
New Zealand	31	39	27	28	28	29	29	30	32	35	39	38	41	40
Norway	12	18	26	27	28	28	30	31	31	32	33	33	34	36
Portugal	4	8	m	8	9	9	9	9	11	13	13	13	14	14
Slovak Republic	6	10	10	10	10	10	11	11	12	13	14	15	14	15
Sweden	15	16	28	28	29	30	32	33	33	35	30	31	31	32
United States	32	45	34	35	36	36	37	38	38	39	39	39	40	41
OECD average			21	21	21	22	23	23	24	26	26	27	27	28

주: 1. 1980년, 1990년은 UNESCO 자료에서 추출. 나머지 연도는 OECD 자료에서 추출
 2. UNESCO 자료는 25세 이상 인구중 고등교육이수자 비중, OECD 자료는 25~64세 인구 중 고등교육이수자 비중
 3. 1980년 Austria, Canada,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New Zealand, Portugal 수치는 1981년의 통계치, Chile는 1982년 통계치
 4. 1990년 Austria, Canada, Greece, Ireland, Italy, Luxembourg, New Zealand, Solvak Republic 는 1991년의 통계치
 자료: UNESCO(1990~1999). Statistical Yearbook, OECD(2010). Education at a Glance.

좀 더 구체적으로 OECD 각 국가별로 1998년에서 2008년까지의 각 학력별 비중의 증가율을 본 것이 <표 2-3>이다. 나라별로 차이는 있

지만,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중학교 이하 학력자의 비중은 음의 증가율을 보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학력자의 비중과 고등교육학력자의 비중은 양의 증가율을 보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력자 비중의 증가율은 0.9%인데 비해 고등교육학력자의 비중 증가율은 3.4%로 크게 높아 저학력자 비중의 감소율을 상쇄하고 있다.

고등교육 학력자 비중의 증가율은 폴란드가 가장 커서 6.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다음으로 포르투갈, 이탈리아, 한국의 순서이며 모두 5%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다. 고등교육 학력자의 비중 증가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독일, 스웨덴 등이며 이들 나라에서는 각각 약 1%,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25~64세 인구 중의 학력별 비중의 변화는 각 연령대별 인구 비중의 변화도 반영하여 순수하게 고학력화의 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각 연령대별 인구의 변화가 큰 경우 학력별 비중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연령대별 고등교육 이수학력의 비중의 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

<표 2-3> OECD 각국별 학력 수준별 비중의 증가율(1998~2008)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고등교육
Australia	-3.7	1.1	3.4
Austria	-3.0	0.4	2.8
Belgium	-3.5	1.7	2.5
Canada	-4.9	-0.6	2.5
Czech Republic	-4.7	0.2	3.4
Denmark	1.7	-2.2	2.4
Finland	-4.8	1.4	2.0

<표 계속>

36 고학력화의 사회경제적 성과와 한계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고등교육
France	-2.6	0.6	2.9
Germany	-1.0	-0.1	1.0
Greece	-3.2	2.5	3.4
Hungary	-5.8	1.9	3.8
Iceland	-2.2	-0.5	4.1
Ireland	-4.6	1.6	4.9
Italy	-2.4	1.9	5.3
Japan		1.5	3.4
Korea	-4.7	-0.3	5.0
Luxemburg	-3.5	0.8	4.7
Mexico	-0.8	1.9	1.8
Netherlands	-2.9	0.3	2.9
New Zealand	-3.2	-0.5	3.8
Norway			2.8
Poland	-5.1	0.0	6.1
Portugal	-1.3	3.9	5.6
Slovak Republic	-6.5	0.7	3.7
Spain	-3.1	5.2	4.0
Sweden	-4.6	1.0	1.3
Switzerland	-2.1	-1.3	3.9
Turkey	-1.1	2.4	4.9
United Kingdom	-2.7	0.2	3.2
United States	-1.8	-0.8	1.7
OECD average	-3.1	0.9	3.4

자료: OECD(2010). Education at a Glance.

<표 2-4>는 1999년, 2002년, 2005년, 2008년의 각국별, 연령대별 고등교육학력자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25~34세와 그보다 한 세대 위라고 볼 수 있는 45~54세를 추출하였다. 즉, 한 세대 차이로 고등교육학력자 비중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25~34세대의 고등교육학력자 비율이 45~54세대 고등교육학력자 비율보다 높다. 1999년과 2002년에 독일, 뉴질랜드, 미국, 그리고 2002년 덴마크에서 25~34세대보다 45~54세대의 고등교육학력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밖에는 전부 25~34세대의 고등교육학력자 비율이 45~54세대보다 더 높다. 그리고 2005년과 2008년에는 모든 나라에서 25~34세대의 고등교육학력자 비율이 45~54세대보다 더 높다. 이는 고학력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4> OECD 각국의 연령대별 고등교육학력자 비중의 추이(1999~2008)

Age Group	1999		2002		2005		2008	
	25~34	45~54	25~34	45~54	25~34	45~54	25~34	45~54
Australia	29	28	36	31	38	31	42	33
Austria	13	10	15	15	20	17	19	18
Belgium	34	24	38	25	41	27	42	29
Canada	47	38	51	40	54	43	56	44
Chile	m	m	m	m	m	m	34	20
Czech Republic	11	10	12	11	14	13	18	15
Denmark	29	27	29	30	40	32	43	32
Finland	37	29	39	30	38	34	38	37
France	31	18	36	19	39	18	41	20
Germany	22	25	22	25	22	26	24	26
Greece	25	15	24	16	25	19	28	22
Hungary	14	14	15	14	20	16	24	17
Iceland	28	20	29	26	36	29	33	30
Ireland	29	16	36	20	41	22	45	27
Italy	10	10	12	10	16	11	20	12
Japan	45	25	50	31	53	38	55	43

<표 계속>

	1999		2002		2005		2008	
Korea	35	13	41	14	51	18	58	23
Luxemburg	21	20	23	16	37	22	39	22
Mexico	16	9	11	4	18	14	20	15
Netherlands	25	21	28	24	35	30	40	31
New Zealand	26	29	29	32	31	27	48	38
Norway	33	25	40	28	41	30	46	32
Poland	12	11	16	11	26	12	32	13
Portugal	12	9	15	7	19	10	23	10
Slovak Republic	m	m	12	12	16	14	18	14
Spain	33	15	37	17	40	22	39	24
Sweden	32	30	39	32	37	28	41	28
Switzerland	26	23	26	25	31	29	38	31
Turkey	8	8	11	9	12	9	15	10
United Kingdom	27	24	31	25	35	28	38	30
United States	37	38	39	40	39	39	42	40

자료: OECD(2001), (2004), (2007), (2010). Education at a Glance.

고학력화가 진행되지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는지, 각국별로 그 차이는 어떤지를 위의 표에서는 알기가 어렵다. 이에 25~34세 고학력자 비중에서 45~54세 고학력자 비중을 뺀 것을 동일한 양식으로 표로 만든 것이 <표 2-5>이다.

25~34세대 고학력자 비중이 45~54세 고학력자 비중보다 훨씬 더 크다면 그만큼 빠르게 고학력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비중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진다면 고학력화가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5>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25~34세 고학력자의 비중과 45~54세 고학력자의 비중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리스, 아이슬란드, 일본, 스페인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에서 25~34세 고학력자 비중과 45~54세 고학력자 비중의 차이는 커지고

있다. 그러한 차이의 증가에서 한국은 1999년 22%p의 차이에서 2008년 35%p의 차이로 벌어지고 있어, 폴란드와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격차의 증가폭이 크며, 이에 청년세대에서 고학력화가 매우 급속하게 전개되었음을 나타낸다.

〈표 2-5〉 OECD 각국별 25~34세대와 45~54세대 고등교육학력비중 차이의 추이(1999~2008)

	1999	2002	2005	2008
Australia	1	5	7	8
Austria	2	0	2	2
Belgium	10	13	14	14
Canada	9	11	11	11
Czech Republic	1	1	1	3
Denmark	1	-1	8	11
Finland	8	10	4	2
France	13	17	21	20
Germany	-3	-3	-3	-2
Greece	10	8	6	7
Hungary	-1	0	3	7
Iceland	8	3	7	3
Ireland	13	17	19	18
Italy	0	2	5	8
Japan	20	19	15	12
Korea	22	27	33	35
Luxemburg	1	7	15	17
Mexico	7	8	5	4
Netherlands	4	4	6	9
New Zealand	-3	-3	3	10
Norway	8	12	11	14
Poland	1	5	13	19
Portugal	4	8	9	13

<표 계속>

40 고학력화의 사회경제적 성과와 한계

	1999	2002	2005	2008
Slovak Republic	m	0	2	4
Spain	18	19	18	15
Sweden	2	7	9	12
Switzerland	3	2	2	7
Turkey	0	1	3	6
United Kingdom	3	6	7	9
United States	-1	0	0	2

자료: OECD(2001), (2004), (2007), (2010). Education at a Glance.

Education at a Glance 2005년 자료부터는 연령대별 고등교육 학력자 비중이 남녀별로도 조사되어 있어 고학력화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표 2-6>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남녀별로 25~34세 고등교육학력자비중과 45~54세 고등교육학력자비중의 차이를 내어 본 것이다.

일견하여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서 25~34세 고등교육학력자 비중과 45~54세 고등교육학력자 비중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학력화가 남성보다는 여성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25~34세 고등교육학력자비중과 45~54세 고등교육학력자비중의 차이가 해가 갈수록 여성의 경우 더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OECD 평균을 보면 남성의 경우 그 차이가 4에서 6으로 2만큼 증가하였지만, 여성의 경우 11에서 15로 늘어 4만큼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의 경우 고학력화가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현재의 고학력화 진행은 이전에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어 있던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고등교육을 이수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표 2-6〉 OECD 각국별 25~34세대와 45~54세대 성별 고등교육학력비중
차이의 추이(2003~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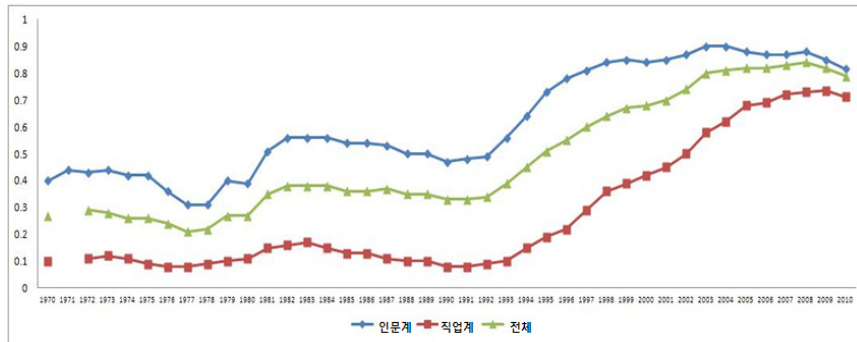
	남성						여성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Australia	1	2	4	6	4	6	10	9	11	8	13	10
Austria	-2	-1	-2	-2	-2	-3	5	7	7	5	5	6
Belgium	10	10	8	9	7	7	19	21	19	21	19	20
Canada	8	8	7	7	7	7	16	16	15	16	16	16
Czech Republic	0	-2	-1	0	-2	-1	2	3	4	5	5	7
Denmark	2	0	7	6	9	15	4	4	9	9	11	21
Finland	3	0	-2	0	0	-3	14	11	10	9	7	7
France	15	17	18	18	17	18	23	23	24	26	26	23
Germany	-8	-8	-8	-8	-7	-7	1	1	1	2	2	3
Greece	1	-1	-1	0	1	-1	14	12	12	12	14	14
Hungary	0	1	1	1	3	5	5	6	5	7	10	10
Iceland	3	-1	3	4	2	-1	4	13	11	1	5	6
Ireland	13	15	14	12	13	12	20	23	23	24	24	25
Italy	0	1	2	2	3	3	5	6	8	10	12	13
Japan	13	13	8	9	5	6	25	25	21	21	19	18
Korea	26	26	26	24	24	24	36	39	41	43	45	45
Luxemburg	1	5	10	10	6	8	10	15	21	19	21	26
Mexico	3	1	1	0	1	1	9	8	8	7	8	7
Netherlands	-2	0	0	1	1	3	10	11	11	12	13	15
New Zealand	0	3	3	4	6	9	1	2	4	7	9	10
Norway	7	4	5	7	6	8	17	16	18	17	18	21
Poland	6	8	9	11	13	15	13	15	18	20	22	24
Portugal	4	5	5	5	6	8	12	13	13	14	17	19
Slovak Republic	-1	0	1	0	1	1	3	3	3	5	6	8
Spain	13	13	11	10	10	9	26	25	26	25	23	21
Sweden	8	8	9	10	11	12	9	11	9	11	12	12
Switzerland	2	0	-1	-1	0	2	5	5	6	7	10	13
Turkey	1	1	3	4	4	5	3	4	4	5	6	7
United Kingdom	6	6	5	6	4	7	6	8	9	9	9	10
United States	-5	-4	-3	-4	-2	-1	2	1	3	3	4	5
OECD average	4	4	5	5	5	6	11	12	12	13	14	15

자료: OECD(2005~2010). Education at a Glance.

한국에서는 지난 30년간 눈에 띄게 대학 등록률이 늘어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대학 입학생 수의 자료를 가지고 1970년부터 2010년까지의 추이를 본 것이 [그림 2-4]이다. 일반계와 직업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일반계나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입학자 비율 추이는 몇 차례 굴곡을 보인다. 먼저 1970년대 후반의 경우, 특히 1976~1978년 사이 고등학교 졸업자 중의 대학입학자 비중이 줄어들었다가 1980년대 초 늘어나고 있다. 이후 1981년에서 1983년 사이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대학입학자의 비중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1981년의 졸업정원제 실시의 여파라 간주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고졸자 대비 대학입학자 비중은 1990년대 초반까지 정체(일반계) 혹은 감소(직업계)의 모습을 보인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다시 고졸자 대비 대학입학자 비중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흐름이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다. 1995년의 대학 설립준칙주의는 이렇게 1990년대 초반부터 일반계와 직업계 졸업자의 대학 입학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중에 실시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는 직업계 졸업자 중 대학입학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결국 2000년대 후반에 가면 일반계고와 직업계고의 졸업자 대비 입학자 수의 비중 차이는 약 10% 정도로 줄어든다. 일반계고 졸업자중 대학 입학자 수의 비중은 2003년에 정점을 맞이하였고, 직업계고 졸업자 중 대학 입학자 수의 비중은 2009년에 정점을 맞고 이후 정체 혹은 줄어들고 있다.

[그림 2-4] 고등학교 졸업자 수 대비 대학 입학생 수의
비중 추이(197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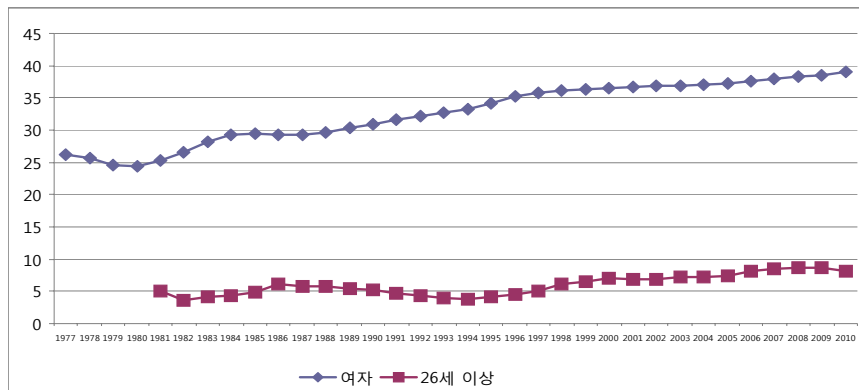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월보」, 각 연도.

다음으로 고등교육기관 학생 중 여성의 비중과 26세 이상의 비중을 본 것이 [그림 2-5]이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까지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중 여성의 비중은 1970년대 후반에 감소하여 1980년까지 25% 이하로 줄어들었다가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2010년 대학입학자 중 여성의 비중은 약 40%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1980년대 이후 고등교육 팽창의 주요 원인의 하나는 여성들의 고등교육기관 입학이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고등교육의 팽창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고등교육의 필요를 느껴 다시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연령으로 26세 이상 학생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대학입학자 중 26세 이상의 비중은 1981년 이후 약 5% 내외의 수준을 보이다가 1995년 대학 설립준칙주의 이후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 팽창은 거의 전적으로 고졸자의 대학 진학의 증가로써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²⁾

[그림 2-5] 고등교육기관 학생 중 여성과 26세 이상의 비중 추이(1977~201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월보」, 각 연도.

결론적으로 다수의 선진국 사회에서 이미 대학교육은 보편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이들 나라에서 고등교육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적인 것으로 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을 포함하여 이러한 나라들은 Trow(1977)이 간파하였듯이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능력 분포도의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이 되어 정신적 혹은 특성적 결함의 지표로 간주되는 사회로 이행한 것이다.³⁾

2) 대중 고등교육단계에서부터 직업세계 경험 후의 대학 진학이 늘어나고,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서는 성인 직업 경험자의 입학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Trow(1977)의 예견은 한국의 현실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

3) 이를 Wolf(2002)는 숫자의 독재(the tyranny of numbers)라 표현하였다.

제 3 장

고등교육팽창 현상의 이해

제1절 학교교육의 팽창에 대한 이론

제2절 한국의 고등교육 팽창

제3절 고등교육 팽창요인의 시계열 분석

제4절 소결

제3장 | 고등교육팽창 현상의 이해

유한구

제1절 학교교육 팽창에 대한 이론

1. 고학력화와 학교교육 팽창

고학력화는 주로 고등교육이수자 수의 증가로 설명된다. 고학력화는 엄격한 의미에서 학문적인 용어는 아니다. 학문적인 용어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학교팽창’(school expansion)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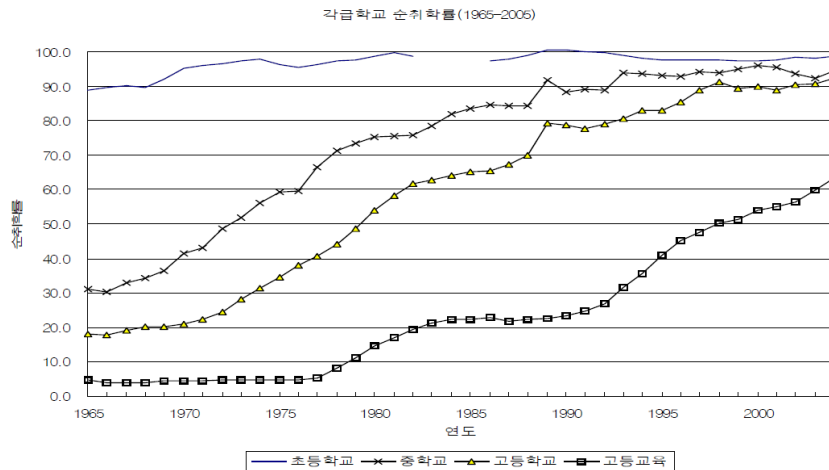
학교팽창현상은 제2차 세계 대전을 전후하여 나타난 학교교육의 급속한 대중화를 의미한다. 이 시기에 이미 초등교육이 보편화되었던 서구 선진국에서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서 대중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신생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초등교육의 대중화를 시작으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급속한 양적 팽창현상이 일어났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다른 개발도상 국가들보다 더 급속한 학교팽창현상을 보였다. 20세기에 초중등교육의 팽창이 마무리되면서, 고등교육의 팽창현상이 급속도로 나타나게 된다.

한국의 학교팽창은 학교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

였다. 즉, 초등교육 인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 중등교육 인구의 증가가 나타나고, 중등교육 인구의 증가가 일정 수준에 다다른 후에 고등교육 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그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김영화 외, 1997).

[그림 3-1] 각급학교 취학률 증가 추세(1965~2005)



자료: 이종재 외(2009), 한국교육 60년, p.62 재인용.

초등교육의 팽창은 광복 이전인 1930년대부터 진행되어(오성철, 1996), 광복 당시에 이미 취학률이 47%에 달했으며, 1960년에는 이미 취학률이 90%에 달해 거의 완전 취학에 이르렀다. 중학교의 취학률은 196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중반에 가면 거의 완전 취학에 이르며, 고등학교의 취학률도 196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3년에는 약 90%의 취학률을 나타내어 완전 취학에 이르게

된다. 고등교육은 198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약 54%의 취학률로 보편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학교교육의 팽창은 단순히 학교 수의 증가나 학생 수의 증가 등과 같은 양적인 팽창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학교교육의 양적인 팽창은 필연적으로 질적인 변화를 동반한다. 한 예로 미국의 중등교육은 처음에는 소수를 대상으로 대학준비를 위한 전통적인 인문중심의 교양교육에서 시작하여, 점차 취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과 생활 중심의 완성교육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고등교육이 점차 대중화됨에 따라, 중등교육은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으로 그 성격이 변화한다(Trow, 1977). 한국의 경우에도 베이비 붐 세대에 의한 학생 수의 급속한 증가가 중학교 무시험 전형과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으며(김기석, 1987), 초등학교 교육이 질적인 향상보다는 양적인 확대에 치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학교교육의 팽창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 세계체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어느 한 이론이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2. 학교교육 팽창 이론

학교교육의 팽창이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⁴⁾과 근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⁵⁾에서 학교교육이 국가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

을 밝히면서부터이다.

인적자본론은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 노동과 자본을 경제 발전의 투입 요인으로 보았던 전통적인 경제발전론을 비판하고 등장한 이론으로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훈련, 학교교육, 보건 등 이른바 인적자본에의 투자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김영화 외, 1997). 즉, 인적자본론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며,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교육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다.

근대화 이론은 대중매체의 발달, 도시화, 정치적 참여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가 개인의 의식을 전통적인 형태에서 근대적인 형태로 변화시키고, 이러한 변화된 의식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에 개인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경제의 발전을 이끈다고 본다(Lee, 1990). 인적자본론이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둔 반면, 근대화 이론은 경제발전이나 국가발전의 원인을 변화된 개인의 근대화된 의식에서 찾고 있다. 근대화 이론에서 개인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학교를 들고 있다.

인적자본론이나 근대화 이론은 국가 발전이나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로 학교교육을 들고 있으며, 학교교육이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국가발전과 교육과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서 발전 교육

4) 인적자본론에서 인간 자본에 대한 투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Denison, 1964).

- ① 기술, 효율성, 생산 지식의 향상을 통한 노동력의 질적 향상
- ② 노동 동기의 향상, 노동문화의 진전, 노동력의 적용의 향상
- ③ 기술적 진보를 이끄는 발명과 발견, 신속한 적용 등을 통한 과학적 기술적 지식의 향상
- ④ 생산요소의 조직과 경영을 발전시키는 기업가적 능력의 향상

5) 근대화이론은 근대화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Inkeles & Smith, 1974).

- 근대화 기관 → 근대적 가치 → 근대적 행위 → 근대적 사회 → 경제적 발전

(development education)이 정립된다. 발전 교육은 교육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 등 국가 발전과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발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교육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중요시한다(김영화 외, 1997).

인적자본론이나 근대화 이론이 국가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학교교육을 상정한 반면에 발전교육론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국가나 경제의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있다. 즉, 발전교육은 교육을 사회 및 국가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식하고 발전을 위해 교육의 양과 질을 조절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발전교육에 대한 비판⁶⁾이 제기되면서, 관심은 학교교육의 확대를 통해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학교교육의 팽창 현상 자체에 대하여 설명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한다(Craig, 1981). 학교교육의 급속한 확대를 산업화, 도시화, 현대국가의 형성과정 등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조명하기 시작하였으며, 마침내 교육의 급속한 팽창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었다(장동현, 1996).

초기의 학교교육의 팽창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주로 산업화의 진전이나 기술 수준의 발달, 산업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학교교육의 팽창을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술 기능이론이다. 기술 기능이론은 학교교육의 팽창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적자본론의 가설을 유추한다. 인

6) 발전교육에 대한 비판은 ① 경제성장 일반도라는 점, ② 경험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 ③ 발전교육의 본질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난다(김신일, 1999). 여기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두 번째 점이다. 초등교육은 경제성장과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중등 및 고등교육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Fagerlind and Saha, 1984). 또한 종속이론은 발전교육이 대외 종속적인 발전과정을 밟는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한다.

적자본론의 가설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의 수익의 증가를 예상하여 이루어지는데, 산업화의 진전, 즉, 기술 기능의 발달은 기능인력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 교육에 대한 투자 예상 수익률을 높이게 되고, 그 결과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학교교육이 팽창한다고 본다(김기석, 1994).

기술 기능이론의 설명 방식은 기술수준의 발달과 교육수준의 발달이 일치하며, 그에 따라 기술수준의 발달이 학교교육의 팽창을 이끄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기능이론은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의 수준에 비해 학교교육의 수준이 높은 과잉학력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Collins, 1979). 기술기능이론이 실증적인 자료와 잘 맞지 않자 이를 대신하여, 계급통제론과 지위집단경쟁이론이 등장한다(김기석, 1994).

계급통제론(Bowles & Gintis, 1976)에 의하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특정 기술, 기능 훈련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유지에 필수적인 규범적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교육팽창은 경제구조와 교육구조 사이의 역동의 결과이다(김기석, 1994). 즉, 계급통제론은 학교팽창의 원인을 산업화에서 찾는다는 점에서는 기술 기능이론과 같다. 그러나 기술 기능이론이 직업구조의 변동에 따른 기술 수준의 변화에서 팽창의 원인을 찾는 것과는 달리, 계급통제론은 학교팽창의 원인을 순치된 노동력의 계속적 공급과 지배계급의 지적, 도덕적 우위를 유지하여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계급적 통제의 산물로 본다.

지위집단경쟁이론(Collins, 1979)은 교육이 팽창하는 것은 권력과 지위를 획득하려는 집단 간의 경쟁 때문으로 본다. 교육은 권력 지위

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지위집단은 자녀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지위를 향상시키려고 한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교육수준이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교육수준보다 훨씬 높아지게 된다. 지위집단경쟁이론은 실제 집단 간의 갈등이 학교교육의 팽창으로 이어지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한 경우는 드물다(김기석, 1994).

경제적 요인으로 교육팽창 현상을 구명하려는 초기의 노력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경제적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교육팽창을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제기된다. 특히 국가의 형성과 국민의 정치적 통합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교육이 팽창하였다고 보는 정치통합이론⁷⁾은 국가권력의 팽창과 시민정신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수행한 역할을 강조한다(이혜영, 1992).

정치통합이론은 교육팽창에 관한 종래의 설명들이 경제적 측면에만 치중하였던 것에 비하여, 정치 단위인 국가의 이데올로기 통합과정에서 교육제도가 수행하고 있는 정치적 기능을 새롭게 지적하였다(이혜영, 1992). 그러나 이 이론은 현대 국가 건설 초기의 초등교육의 의무화와 중등교육의 확대에 일정한 설명력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등교육의 팽창과 특히 과잉교육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에는 난점이 있다(김신일, 1989).

교육팽창에 대한 정치적 통합이론은 1950년에서 1970년 사이에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육이 공통적으로 크게 팽창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Meyer, 1977). 이 이론은 국가 권력의 팽창과 시민정신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 교육이 수행한 역할을 강조한다. 즉, 학교팽창 현상이

7) Bendix (1964)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교육의 팽창과 교육에 대한 정치적 통제는 근대 국가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나는 것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회발전과 사회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와 인간의 자기발전을 추구하는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는 국민국가의 형성에 따라 시민의식이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통합되어야 했다. 즉, 세계적인 학교팽창은 국민국가의 형성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통합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Ramirez & Boli-Bennett, 1982).

교육팽창에 대한 세계체제론적 설명 방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세계적인 수준의 학교팽창을 한 국가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힘에 의해서는 파악할 수 없으며, 새로운 통합적이고 초국가적인 사회구조, 즉, 세계체제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학교팽창에 대한 다변량 패널분석(multivariate panel analysis)을 통해, 학교팽창의 대부분은 국가 내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구조와는 독립적으로 발생했음을 밝혔다. 즉, 학교의 팽창은 국가 내부에 미리 ‘주어진’ 팽창의 힘이 존재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팽창이 세계체제 자체에서 국가로 작용하는 힘에 의한다고 가정했다(Ramirez and Boli-Bennett, 1982).

교육팽창에 대한 세계체제론적 접근방식은 교육이 저절로 팽창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갖고,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요인과 같은 학교 외적 요인이 학교팽창을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며, 교육팽창 현상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세계체제적 관점을 제시한다. 하지만 세계체제론은 학교교육의 팽창을 국가 내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지 않을 경우, 학교내적 특징에 의해 팽창이 주도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김기석, 1994). 이미 밝혀진 대로 전 단계의 학교팽창은 다음 단계의 학교팽창에 상당한 정

도로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교팽창에 대한 연구에서 시간의 변수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김기석, 1994). 즉, 교육팽창 현상은 나라마다 사회마다 특징적인 사회구조적 속성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며, 또한 동일한 사회라 할지라도 역사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 간의 비교연구와 역사적 연구의 시각에서 더 잘 파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 사회학적 접근 방식이 등장한다(장동현, 1996).

Archer(1984)는 학교팽창의 기본적인 동인이 교육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들 간의 경쟁과 타협에 의한다고 보고 있으며, 학교팽창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팽창하는가는 구조적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그리고 교육팽창의 단계를 출발(take-off), 성장(growth), 인플레이션(inflation)으로 나누었다. 출발단계는 국가교육체제가 형성되는 시기로, 일반 대중들은 교육에 관심이 적고 이해집단에 의한 교육의 공급이 학교를 팽창시킨다. 성장단계는 국가교육체제가 형성된 후의 시기로, 집단적 행위자와 개인적 행위자의 상호작용 교육 기회의 제공과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에 의해 학교는 급격히 팽창한다. 인플레이션 단계는 거대국가 교육체제가 형성된 단계로, 교육체제가 거대화됨에 따라 자체의 생명력을 갖게 된다. 즉, 학교교육의 출발단계에서는 집단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학교교육이 형성되지만, 일정 단계에 이르면 학교자체의 내적 원인에 의하여 학교가 급속도로 팽창한다.

교육 팽창에 대한 역사 사회적 접근 방식은 학교가 일정한 정도로 팽창한 후에는 자체의 관성에 의해 팽창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이후의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교육의 팽창을 학교외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은 반면에, 교육의 자체의 내적 요인이 학교팽창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론적 동향을 살펴볼 경우, 교육팽창에 대해 어느 한가지의 접근 방식이 절대적으로 설명적 우위를 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육팽창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흐름은 대체적으로 경제적 요인에 설명적 우위를 두는 기술기능이론과 계급통제론적 설명방식에서 지위 집단의 경쟁에서 팽창의 원인을 찾거나, 국민국가의 형성이나 정치적 통합을 통한 공교육제도의 형성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즉, 경제적 요인으로 교육팽창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경제외적 요인으로 교육의 팽창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경제적 요인과 마찬가지로 경제외적 요인에 의한 설명 방식도 경험적 자료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한다. 이후의 교육팽창 현상에 대한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는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세계체제적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와 역사사회학적 탐구 방식으로 교육팽창현상을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제기된다. 최근에는 학교 내적 요인에 의해 팽창이 진행된다는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3. 국내의 고등교육 팽창 연구

한편 한국의 경우에는 교육인구의 양적인 성장을 제도사나 정책사 연구에서 기술하는 경우와 발전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이 경제발전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가 초기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으며(Bae, 1969; 김영봉 외 1980; 송위섭, 1981; 이영기, 1971), 이후의 연구도 발전교육의 연장선상에서 과잉학력 현상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강무섭, 1984; 윤정일, 1979).

본격적으로 학교교육의 팽창현상을 연구주제로 하여 수행한 연구는 김기석(1989)의 “유상중등교육의 팽창”에서부터이다. 이후의 연구는 중등교육 팽창을 연구 주제로 한 경우와 고등교육 팽창현상을 연구 주제로 하는 경우로 크게 나뉜다. 다만 이견만(Lee, 1990)의 경우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의 팽창과 산업화와의 관련성을 다루고 있다.

고등교육 팽창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정규(2001)는 기존의 연구를 고등교육 인구의 적정 규모 및 배분에 관한 연구, 대학 정원정책의 변천 과정이나 배경 및 추진 결과를 분석한 연구, 대학 정원정책의 평가 및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로 구분한다.

고등교육 팽창연구 가운데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기존의 이론적 관점을 적용하여, 한국의 고등교육 팽창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경제적 요인에 의한 팽창의 효과가 있으며, 사회적 요구-교육열-가 팽창의 보다 본질적인 요인으로 결론짓고 있다(이혜영, 1992; 김영화, 1993; 장동현, 1996).

제2절 한국의 고등교육 팽창

1. 고등교육 팽창 현상

한국의 학교팽창은 베이비붐 세대에 의한 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취학인구의 증가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취학가능 인구의 증가와 함께 한국인 특유의 강한 교육열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학교 확대

정책이 궤를 같이하면서 학교교육의 팽창을 이끌었다.

대체로 초등교육이 1960년대에 완전취학에 이르고, 중등교육이 1980년에 완전취학에 다다르고, 2000년 이후에 고등교육이 대중화하는 추세에 있다. 다음은 1955년 이래로 고등교육의 팽창을 제시한 것이다.

〈표 3-1〉 4년제 대학 학교 수 변화 추이(1955~2010)

연도	학교 수	국·공립	비율	사립	비율
1955	44				
1960	52				
1965	70	14	20.0%	56	80.0%
1970	71	15	21.1%	56	78.9%
1975	72	15	20.8%	57	79.2%
1980	85	20	23.5%	65	76.5%
1985	100	22	22.0%	78	78.0%
1990	107	24	22.4%	83	77.6%
1995	131	26	19.8%	105	80.2%
2000	161	26	16.1%	135	83.9%
2005	173	26	15.0%	147	85.0%
2010	179	27	15.1%	152	84.9%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월보」, 각 연도.

4년제 대학은 1960년에 52개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에는 179개로 4배 가까이 증가한다. 대학의 설립별 분포를 보면 국공립대학이 1965년 20%에서 15%로 약간 줄어든 반면 사립대학은 80%에서 85%로 약간 증가한다. 4년제 대학의 학생 수 변화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 4년제 대학 학생 수 변화 추이(1955~2010)

연도	총계		국공립		사립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1955	78,649					
1960	92,930		61,212			
1965	105,643	23,761	25,964	2,218	79,679	21,543
1970	146,414	32,641	36,038	4,132	110,376	28,509
1975	208,986	55,439	56,830	8,660	152,156	46,779
1980	402,979	90,634	114,686	19,588	288,293	71,046
1985	931,884	250,088	243,378	64,286	688,506	185,802
1990	1,040,166	296,129	254,748	69,902	785,418	226,227
1995	1,187,735	378,418	295,941	87,852	891,794	290,566
2000	1,665,398	596,389	372,078	124,608	1,293,320	471,781
2005	1,886,639	684,238	400,668	134,351	1,485,971	549,887
2010	2,028,841	778,186	428,173	141,747	1,600,668	636,439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월보」, 각 연도.

4년제 대학의 학생 수는 1960년에 92,930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에는 2,028,841명으로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여학생 수의 비율은 1965년 22.5%이던 것이 2010년에는 38.4%로 증가한다. 국공립 학교 학생의 비율은 1965년 24.6%에서 21.1%로 약간 줄어들었고, 사립대학의 학생 수 비율은 75.4%에서 78.9%로 증가한다.

4년제 대학의 경우 학교 수와 학생 수를 통해 볼 때 사립학교의 비율이 8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한국의 고등교육 팽창에 사립학교의 역할이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에 이르는 시기에 여학생 수가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남녀 간의 교육불평등이 해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전문대학의 팽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3〉 전문대학 학교 수 변화 추이(1965~2010)

연도	학교 수	국·공립	비율	사립	비율
1965	48	12	25.0%	36	75.0%
1970	65	26	40.0%	39	60.0%
1975	101	36	35.6%	65	64.4%
1980	128	36	28.1%	92	71.9%
1985	120	17	14.2%	103	85.8%
1990	117	16	13.7%	101	86.3%
1995	145	8	5.5%	137	94.5%
2000	158	16	10.1%	142	89.9%
2005	158	14	8.9%	144	91.1%
2010	145	9	6.2%	136	95.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월보」, 각 연도.

전문대학은 1965년에 48개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에는 145개로 4배 가까이 증가한다. 대학의 설립별 분포를 보면 국공립대학이 1965년 25%에서 6.2%로 감소한 반면 사립대학은 75%에서 95.8%로 대폭 증가한다. 전문대학의 학생 수 변화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 전문대학 학생 수 변화 추이(1965~2010)

연도	총계		국공립		사립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1965	23,159	6,800	4,699	43	18,460	6,757
1970	33,483	8,316	14,383	2,864	19,100	5,452
1975	62,866	17,761	18,998	4,394	43,868	13,367
1980	165,051	42,724	26,881	5,997	138,170	36,727
1985	242,117	87,123	22,956	3,368	219,161	83,755
1990	323,825	119,345	26,959	4,846	296,866	114,499
1995	569,820	214,310	21,473	6,059	548,347	208,251
2000	913,273	339,233	37,331	12,509	875,942	326,724
2005	853,089	316,326	36,153	10,111	816,936	306,215
2010	767,087	304,846	21,473	5,672	745,614	299,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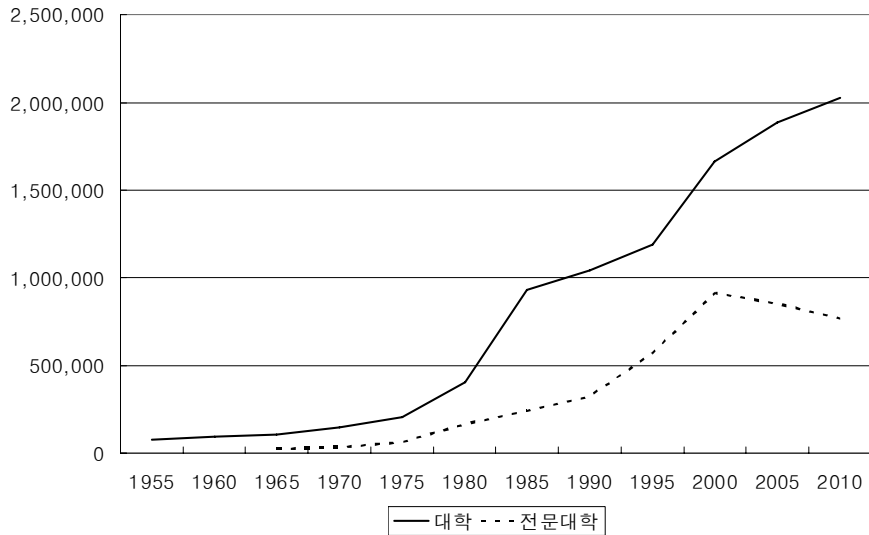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월보」, 각 연도.

전문대학의 학생 수는 1965년에 23,159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에는 767,087명으로 30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여학생 수의 비율은 1965년 29.4%이던 것이 2010년에는 39.7%로 증가한다. 국공립학교 학생의 비율은 1965년 20.3%에서 2.8%로 대폭 줄어들었고, 사립대학의 학생 수 비율은 79.7%에서 97.2%로 증가한다.

전문대학의 경우 학교 수와 학생 수를 통해 볼 때 사립학교의 비율이 97.2%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에 비해 사립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생 수 변화 추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학생 수 추이(1955~201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월보」, 각 연도.

4년제 대학은 1970년대 중반부터 학생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 졸업정원제 실시 이후에 급속하게 증가하고, 1997년 이후 대학설립준칙주의 실시 이후에 급속히 증가한다.

반면에 전문대학은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오히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 팽창에서 특징적인 현상은 높은 사립학교 의존도와 정부의 고등교육 정원 정책에 의해 고등교육 인구의 변화가 시기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표 3-5〉 한국과 미국의 고등교육 설립주체별 취학률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대학	전문대학	계	대학	전문대학	계	
1965	국공립	1.4	0.2	1.6	24.5	8.7	33.2
	사립	4.2	1.0	5.2	15.2	1.1	16.3
	계	5.6	1.2	-	39.7	9.8	-
2005	국공립	15.3	1.4	16.7	41.3	37.3	78.6
	사립	55.8	31.2	85.0	25.1	1.8	26.9
	계	71.1	32.6	-	66.4	39.1	-

자료: 이종재 외(2009), 한국교육 60년, p.62 재인용

한국과 미국의 고등교육의 사립학교 의존도의 변화를 보면, 1965년 한국은 국공립 학교의 취학률이 1.6%, 사립학교의 취학률이 5.2%로 사립학교가 약 3.3배 정도 높았으나, 2005년에는 국공립학교 취학률이 16.7%, 사립학교 취학률이 85.0%로 약 5.1배로 증가한다.

반면에 다른 OECD국가에 비해 고등교육의 사립학교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경우는 1965년에 국공립학교의 취학률이 33.2%, 사립학교

취학률이 16.3%로 국공립학교가 두 배 정도 높던 것이 2005년에는 국공립학교 취학률이 78.6%, 사립학교 취학률이 26.9%로 국공립학교 취학률이 약 3배 정도로 늘어난다.

한국에서 고등교육 팽창 과정에서 사립학교에 의존하는 팽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의 사립학교는 학교운영비의 대부분을 학생의 등록금에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고등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였음을 의미한다.

결국 한국의 고등교육 팽창은 교육 수요자가 기꺼이 높은 수준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려는 의지 속에서 가능했다.

한국 고등교육 팽창의 또 다른 특징은 정부의 대학정원 정책에 의해 고등교육 팽창 속도가 조절되었다는 점이다.

베이비붐에 의한 인구의 증가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빠른 팽창은 고등교육에 대한 초과 수요로 나타난다. 즉, 학령인구의 증가가 멈추지 않는 상태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항상 공급을 초과하게 된다.

더구나 사립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고등교육 인구를 조절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는 고등교육 정원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통해 고등교육 인구를 조절하려고 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1990년대 말까지 대학정원을 법령으로 정하여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는 외국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림 3-2]에서 보면 4년제 대학은 1980년대 초와 1990년대 후반에 급격하게 팽창하고, 전문대학은 1990년 초에 급격하게 팽창한다.

1980년대 초에 정부는 졸업정원제로 대학 정원을 늘렸으며, 1990년대 후반에 설립준칙주의를 통해 대학의 정원을 자율화했다. 또한 1990년대 초중반에는 4년제 대학 정원을 억제하고, 전문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볼 때, 한국의 고등교육 팽창은 일차적으로 베이비붐에 의한 인구증가와 이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늘어난 초등과 중등교육의 높은 취학률에 의해 고등교육 취학이 가능한 인구가 증가한다. 풍부한 고등교육 진학 수요와 이를 공교육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정부의 취약한 교육재정 구조는 고등교육에 대한 사립학교 의존도를 높였고, 사립학교도 취약한 재정구조로 인해 대부분의 비용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적절한 고등교육 인구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정원정책을 통해 고등교육 인구를 조절하게 된다.

2. 고등교육 정원 정책의 변화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학교팽창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베이비붐에 의한 인구증가이다. 1953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인구가 이후의 풍부한 교육수요층을 형성한다.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학령인구에 해당하는 5~9세 인구가 1955년 137만 명이던 것이 1966년에는 222만 명으로 85만 명이 증가한다.

학교의 시설이나 자원은 단시간에 증가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베이비붐에 의한 학령인구의 증가는 풍부한 교육 수요층을 형성하고, 이후로 치열한 입시경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더구나 취학률의 향상은 이러한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한국의 교육팽창은 교육수요가 충분한 상태에서 공급측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의 미비한 자원으로 인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부제나 3부제 수업을 통해 취학인구를 극대화하였으며, 중등교육의 경우에는 유상교육정책을 기반으로 사립학교를 육성하여 교육수요를 감당하였다.

정부의 공급 정책은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가능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했던 반면에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광복이후 한국의 고등교육 정원 정책을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1) 자유방임기(1945~1960) 2) 1차 정원억제기(1961~1972) 3) 부분적 정원확대기(1973~1980) 4) 정원확대기(1981~1984) 5) 2차 정원억제기(1985~1997) 6) 설립준칙주의기(1998~2004) 7) 대학구조개혁기(2005~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⁸⁾.

가. 자유방임기(1945~1960)

광복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이념의 정립과 이를 기반으로 각종 교육제도를 정비한다. 고등교육은 미국의 주립대학 모형을 기반으로 국립대학을 설립하고, 사립대학은 설립에 특별한 조건을 두지 않았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전쟁의 복구와 함께 향후 고등교육의 근간이 되

8) 고등교육 팽창의 시기구분은 1993년 이전은 김영화(1993)의 구분을 따랐으며, 1993년 이후의 구분은 정부의 정원정책을 분석하여, 설립준칙주의와 대학구조개혁기로 구분하였다.

는 대학설치기준령(1955)을 제정하여,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령을 마련하였다.

이 시기에는 특별한 정원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속도로 고등교육이 양적 팽창을 하는 반면에 고등교육의 질적인 수준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 1차 정원억제기(1961~1972)

5·16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진다. 이전까지 자유방임적으로 운영되던 고등교육 정책은 정부가 인력수급을 바탕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 고등교육 정원은 두 측면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4년제 대학 정원의 억제와 2년제 초급대학의 증설 및 교육대학의 설립, 실업전문학교의 설립 등을 통한 산업인력 양성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1966년 대학학생정원령을 제정하여 정부가 대학의 정원을 정하여 수요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고등교육 학생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4.4%에 그쳐, 자유방임기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 18.6%에 비추어 볼 때 정원의 증가가 크게 둔화하였으나, 당초 정원을 축소시키려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여전히 증가를 계속하여 정부의 정책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김영화, 1993).

다. 부분적 정원 확대기(1973~1980)

이 시기는 정부가 본격적으로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던 시기이다. 따라서 인력수급의 관점에서 고급 기술인력의 공급이 필요하던 시기로 정부는 1960년대의 대학정원 억제 정책에서 과학 기술 분야의 기술 인력의 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이 시기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대학에 입학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학생 수 자체의 증가에 비해 대학정원의 증가가 미치지 못하여, 대학입학 경쟁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난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대학정원령을 통해 4년제 대학의 입학 정원을 통제하면서, 동시에 실업전문학교와 초급대학을 정비하여 전문대학을 설립한다.

이 시기의 고등교육 정책은 인력수급에 기초하여 4년제 대학 정원의 적정성을 유지하면서 전문대학과 방송통신대학교 등을 통해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꾀하였다.

이 시기에 4년제 대학의 학생 수는 연평균 12.4%의 속도로, 전문대학의 학생 수는 연평균 19.3%의 속도로 증가하여 4년제 대학의 팽창이 비교적 완만하였던 반면 전문대학의 팽창은 매우 급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김영화, 1993).

라. 정원확대기(1981~1984)

5.16 군사정부 기간 동안의 고등교육 정책은 4년제 대학정원의 억제와 2년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베이비

봄에 의해 촉발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고등교육의 공급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고, 이로 인해 과열 입시경쟁과 사교육, 재수생 문제, 사학의 입학부정, 정원 외 입학생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제5공화국은 고등교육정책의 일대 혁신을 기한다. 그동안 대학의 입학정원을 통제하던 정책에서 ‘졸업정원제’를 실시하여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려운’ 유럽식의 대학운영체제를 도입한다.

이 조치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대학입학정원의 확대를 통해 고등교육 인구의 급격한 성장을 나타냈으며, 고등교육이 대중화의 시발점이 된다.

졸업정원제는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학의 정원만 확대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정원이 다시 조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에 전체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는 연평균 14.4%의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이 중 4년제 대학 학생 수는 연평균 17.5%의 속도로 증가한 반면 전문대학의 학생 수 증가율은 연평균 4.9%에 그쳐 이 시기의 고등교육 팽창은 4년제 대학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김영화, 1993).

마. 2차 정원 억제기(1985~1997)

원래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시도되었던 대학졸업정원제의 실패는 대학정원만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부터 대학정원의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이 시기에 나타난 특징은 대학 정원의 전반적인 증가를 억제하면서

도 이공계의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이공계 정원은 증가시키는 정책을 수행하고, 대학진학 수요를 증견기술인력에 대한 공급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의 정원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4년제 대학의 학생 수 증가율은 연평균 4.4%로 낮은 반면, 전문대학 학생 수 증가율은 연평균 16.5%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바. 설립준칙주의(1998~2004)

1996년 교육개혁위원회의 5·31교육개혁안을 바탕으로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를 모토로 고등교육의 개혁을 추진한다. 고등교육 개혁의 방향은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로 요약될 수 있다.

고등교육정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하여, 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다양화하고, 대학정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통제 하에 있던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면서 대학원 대학의 설립과 전문대학의 4년제 대학으로의 전환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 동안 고등교육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2차 베이비붐에 의해 촉발된 수요를 모두 충당하게 되었고, 이 후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구조조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4년제 대학의 학생 수 증가율은 연평균 4.1%였고, 전문대학의 학생 수 증가율은 연평균 2.0%였다.

사. 대학구조개혁기(2004~현재)

설립준칙주의 시행을 통해 대학이 확대되고, 대학정원이 증가하면서 2차 베이비붐 이후에 양산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게 된다. 2차 베이비붐 이후의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하게 되고, 항상 초과 수요를 나타내던 고등교육의 공급이 공급초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게 됨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많은 대학이 설립준칙주의 기간 동안에 다양한 학과를 증설하여 학생들을 모집함으로써 ‘백화점식 학과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대학별 고등교육의 특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지경에 이른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의 특성화로 요약되는 대학구조개혁이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과 통폐합, 학교 통폐합, 부실 학교 퇴출 등의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4년제 대학 학생 수는 연평균 1.8%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전문대학의 학생 수는 연평균 2.0% 감소하였다.

〈표 3-6〉 정부의 대학정원 정책의 변화

구분	시기	주요정책
자유방입기	1945~1960	자율적 대학설립, 대학의 난립
1차 정원억제기	1961~1972	대학정원에 대한 통제, 정원 외 입학허용
부분적 정원확대기	1973~1980	4년제 증가 둔화, 전문대학 증가
정원확대기	1981~1984	졸업정원제에 의한 4년제 급속 증가
2차 정원억제기	1985~1997	이공계 및 전문대학 중심의 증가
설립준칙주의기	1998~2004	전문대학 4년제 전환, 대학정원자율조정
대학구조개혁기	2005~현재	학령인구 감소, 대학구조조정

제3절 고등교육팽창요인의 시계열분석

1. 연구모형

기존의 학교 팽창에 대한 이론들은 주로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 구조적 요인이 학교 팽창을 이끈다고 보는 구조적 요인에 우위를 두는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나 의도로 보는 개인의 행위에 우위를 두는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적 요인에 설명적 우위를 두는 관점으로는 기술 기능이론과 계급통제론, 세계체제이론 등을 들 수 있으며, 개인의 행위에 설명적 우위를 두는 이론으로는 인간자본론과 지위경쟁이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은 구조와 행위 가운데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다른 쪽을 설명하려는 방식으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학교팽창과 같은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기술 기능이론이나 계급통제론, 세계체제이론 등과 같이 구조적 요인을 학교 팽창의 주도적 요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학교 팽창과정에서 제도적 행위자와 개인행위자 사이의 대립과 타협의 결과 나타나는 의사 결정의 내용을 포함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한국의 중등교육 팽창과정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중등교육의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정책은 사학의 설립과 운영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으며, 1960년대 초기의 산업화과정에서 국가부담의 중등교육이 어려운 시점에서 중등교육 단계에서 사학의 확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등교육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김기석, 1989). 구조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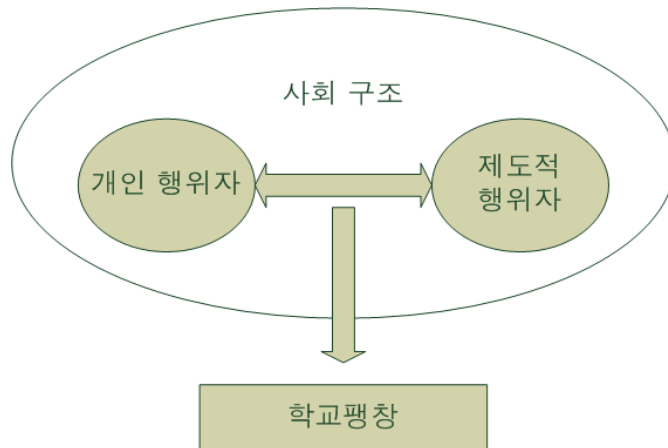
으로만 학교 팽창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면, 교육의 수요자로서의 학생 또는 학부모의 교육요구와 이에 대한 공급자로서의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개인의 교육을 이후의 수입으로 회수되는 투자로 보는 인간자본론이나 행위자의 의도와 행위에 설명의 초점을 맞춘 지위경쟁이론은 그 사회의 구조적 요인의 영향력을 간과하기 쉽다. 인간자본론에 의하면 교육은 추후의 노동력의 질을 결정하며, 이는 곧 노동생산성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교육의 정도, 즉, 학력은 고용의 중요한 척도가 되므로 개인은 향후 수입으로 회수하게 될 것을 예상하여 교육에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 방식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실업자 집단의 존재를 설명하기 어렵다. 지위경쟁이론은 인간자본론의 설명 방식이 갖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면서, 교육의 팽창을 향후 보다 나은 지위를 획득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학력을 둘러싼 무한 경쟁으로 본다. 신분제가 철폐된 이후에 사회의 지위획득 과정에서 학력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보다 나은 위치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 간의 학력획득을 위한 무한 경쟁이 벌어지며, 이러한 경쟁이 학교 교육 수준을 높이게 된다. 하지만 지위 경쟁을 학력상승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회 구조적 조건의 영향력이 과소평가된다. 특정한 지위를 위해 지위 경쟁을 유발시킨 직업구조의 변화나 계급구조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어렵게 됨으로써 학교팽창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경쟁 현상만이 부각된다.

고등교육팽창 현상을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는 미리 주어져 있는 것으로

로 가정할 수 있다. 즉, 학교교육에 대한 수요는 더 나은 교육을 받으려는 욕구(내재적 동기)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신분 상승을 이루려는 욕구(외재적 동기)이며, 이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이다. 실제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교육팽창으로 실현되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제약하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구조적 요인이 고등교육 팽창을 결정하는 방식은 행위자 사이의 경쟁과 선택에 의한다.

[그림 3-3] 학교팽창의 이론적 모형



이 모형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사회구조적 요인을 대표하는 변수와 제도적 행위자와 개인적 행위자를 대표하는 변수를 선정하고, 이 변수가 실제 팽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회귀분석의 기본 모형은 Rubinson and Ralph(1984)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미국의 연간 시계열 자료의 분석

을 통해 검증된 것이다. 이 모형은 종속변인으로 취학률을 사용하지 않고 취학생 수를 사용한다. 따라서 종속변인에 대한 조직적 요인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몇 가지 통제변인을 사용한다.

$$\text{LN}(\text{HIG}_t) = a + B_1 \text{SEC}_t + B_2 (\text{HIG}/\text{SEC})_{t-1} + B_3 \text{UNEMP}_{t-1} + e$$

SEC : 중등학교 취학생 수
 HIG : 고등교육기관 취학생 수
 UNEMP : 실업률

적령기 인구효과로서 고등학교 취학생 수를 통제변인으로 사용하고, 바닥과 천정효과에 대한 통제변인으로 고등학교 취학생 수에 대한 중등학교 취학생 수의 비율을 사용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대안을 통제하기 위해 실업률을 사용한다.

이 기본 모형은 세계 각국의 교육팽창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사용되었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최충욱에 의해 중등교육 팽창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사용되었다. 최충욱은 이 모형에서 실업률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취학생 수와 초등학교 취학생 수에 대한 중등학교 취학생 수만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는 변형된 기본모형을 제시하였다. 실업률을 통제변인에서 제외한 것은 통계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실업률의 통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의 결과를 받아들여, 변형된 기본모형을 통해 고등교육의 팽창을 설명하고자 한다.

$$(식1) \quad LN(UNI_t) = a + B_1 \text{HIG}_t + B_2 (UNI/\text{HIG})_{t-1} + B_3 T_{t-1} (\text{독립변인}) + e$$

$$(식2) \quad LN(\text{COL}_t) = a + B_4 \text{HIG}_t + B_5 (\text{COL}/\text{HIG})_{t-1} + B_6 T_{t-1} (\text{독립변인}) + e$$

UNI : 4년제 대학 취학생 수

COL : 전문대학 취학생 수

HIG : 고등학교 취학생 수

T : 이론변수

(식1)은 4년제 대학의 팽창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식2)는 전문대학의 팽창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분리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이 학문연구와 직업인력 양성으로 차이가 나고, 실제로 시기별로 팽창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4년제 대학의 팽창을 검증하는 (식1)에서는 종속변수로 로그화된 4년제 대학 학생 수를 사용한다. 4년제 대학 학생 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나타나는 인구의 자연증가와 바닥-천정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식1)에서 HIG_t 는 고등학교 졸업생 수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 현상을 통제하는 고등학교 학생 수이며, $(UNI/\text{HIG})_{t-1}$ 는 바닥-천정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전년도의 고등학교 학생 수 대비 4년제 대학 학생 수의 비율이다.

전문대학의 팽창을 검증하는 (식2)도 4년제 대학의 팽창을 설명하는 (식1)과 마찬가지로 인구의 자연증가와 바닥-천정 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식2)에서 HIG_t 는 고등학교 졸업생 수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 현상을 통제하는 고등학교 학생 수 변인이며, $(\text{COL}/\text{HIG})_{t-1}$ 는 바닥-천정효과를 통제하는 전년도의 고등학교 학생 수 대비 전문대학 학생 수 비율이다. (식1)과 (식2)에서 T는 이론적 변인으로 학교 팽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설명 요인을 지칭하는 변인들이다.

2. 변인 및 가설

가. 종속변인

종속변인으로는 로그화된 취학생 수를 사용한다. 4년제 대학 학생 수와 전문대학 학생 수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며, 분석의 시기는 1962년부터 2010년까지이다.

일반적으로 학교팽창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단위 학교의 취학률과 취학생 수이다. 취학률을 사용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기술적(descriptive) 분석을 통해 취학률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학교팽창의 규모와 정도를 설명한다. 취학생 수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취학생 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취학생 수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할 경우, 자연적인 인구의 증가를 통제하기 위하여 통제변인이 필요하며, 취학가능 인구수를 통제변인으로 사용한다.

나. 통제변인

자연적인 인구증가와 취학률이 아주 낮은 시기나 아주 높은 시기에 발생하는 바닥-천정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통제변인을 사용한다. 자연적 인구 증가에 대한 통제 변인으로는 고등학교 취학생 수를 사용하고, 바닥-천정 효과의 통제변인으로는 고등학교 취학생 수 대비 4년제 대학 학생 수와 전문대학 학생 수를 사용한다. 바닥-천정 효과에

대한 통제변인은 직전연도($t-1$)의 자료를 사용한다.

다. 사회구조적 요인

경제 사회적 구조 변화를 대표하는 변인으로는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산업별 인구구성비, 직업별 인구 구성비를 사용하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졸업자의 취업률과 학력별 임금격차를 사용한다.

가설 1.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검증

산업구조의 변화를 지시하는 변인으로는 산업별 인구구조의 비율을 사용한다. 산업별 인구구조는 산업별 분류에 따라 취업인구 중에서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을 변인으로 사용한다.

가설 2. 직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검증

직업구조의 변화를 지시하는 변인으로는 직업별 인구구조의 비율을 사용한다. 직업별 인구구조는 직업별 분류에 따라 취업인구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 사무직 종사자, 판매직 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노무직 종사자의 비율을 변인으로 사용한다.

가설 3.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검증

노동시장의 변화를 지시하는 변인으로는 직업별 취업률과 학력별 임금 격차를 사용한다. 학력별 임금격차가 학교팽창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졸대비 전문대 졸업자의 임금격차와 고졸대비 4년

제 대학 졸업자의 임금격차를 사용한다. 임금자료는 1971년에서 1989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한다.

가설 4. 경제의 양적 성장에 대한 검증

경제성장 변인으로는 로그화된 1인당 GNP를 사용한다.

라. 제도적 행위자 요인

교육팽창에 대한 제도적 행위자로는 정부의 교육 정책을 사용한다. 사회 구조적 요인과 같은 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행위자의 교육에 대한 요구는 주로 정부의 교육 정책을 통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 정책이 학교 팽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시기별 고등교육정원정책, 사립학교 학생 수 비중, 정부의 교육재정 중 고등교육비 비중을 사용한다.

가설 5. 고등교육정원정책에 대한 검증

가장 중요한 제도적 행위자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은 고등교육 정원에 대한 정책으로 나타난다. <표 3-6>의 각 시기별 고등교육 정원 정책 가운데 1962년부터 2010년까지에 해당하는 정원 정책을 1차 정원억제기(1961~1972), 부분적 정원확대기(1973~1980), 정원확대기(1981~1984), 2차 정원억제기(1985~1997), 설립준칙주의기(1998~2004), 대학구조개혁기(2005~2010)로 구분한다. 1차 정원 억제기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사용한다.

가설 6. 사립학교 학생 수 비중에 대한 검증

사립학교에 대한 의존도는 한국 학교팽창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정부의 열악한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학교팽창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던 요인은 사립학교가 고등교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학생 수 비중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전체 학생 수 중 사립학교 취학생 수의 비중을 사용한다.

가설 7. 교육재정 중 고등교육 재정 비중에 대한 검증

정부의 교육재정 정책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정부의 교육재정 가운데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교육비의 비중을 사용하였다. 교육재정과 관련된 자료는 1967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한다.

마. 개인적 행위자 요인

개인적 행위자의 행위는 학교 팽창과정에 개인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흔히 ‘교육열’로 표현되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하에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행위자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표출되는 방식이 교육에 대한 투자에 있다고 보고, 가정의 교육에 대한 투자 정도를 변인으로 사용한다. 또한 가정의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가정의 생활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가정의 생활조건을 지시하는 변인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가설 8. 교육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검증

가정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시하는 변인으로 가구당 교육비 규모와 소비지출비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사용한다. 가구당 교육비 규모와 소비지출비 중 교육비 비중은 1963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한다.

가설 9. 생활조건 개선의 검증

가정의 생활 여건을 지시하는 변인으로는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를 사용한다.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을 나타낸다.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1963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명변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7〉 설명 변수 목록

요인	구분	변수	변수 설명
사회 구조적 요인	산업구조변화	산업별 취업자 수 비중	제1, 2, 3차 산업 취업자 비중
	직업구조변화	직업별 취업자 수 비중	전문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농수산직, 노무직 취업자 비중
	노동시장변화	직업별 취업률	생산직, 사무직 취업자 비중
		학력별 임금격차	고졸대비 4년제 및 전문대 임금 비중
	경제성장	1인당 GDP	로그화된 1인당 GDP
제도적 행위자 요인	교육정책	고등교육정원 정책	1차정원억제기, 부분적정원확대기, 정원확대기, 2차정원억제기, 설립준칙주의기, 대학구조개혁기
	사학 의존도	사립학교 학생 수 비중	사립학교의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학생 수 비중
	교육재정	고등교육 재정 비중	정부의 교육재정 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 비중
개인적 행위자 요인	교육투자	가구당 교육비 규모	가구당 교육비
		가구당 교육비 비중	가구당 소비지출비 중 교육비 비중
	투자여건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	월평균 가구당 소비지출비

3. 분석결과

Rubinson and Ralph에 의해 구안된 학교팽창 모형에 기반하여, 4년제 대학 취학생 수와 전문대학 취학생 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고등학교 학생 수는 인구의 자연증가에 대한 통제변수로, 고등학교 학생 수 대비 4년제 대학 학생 수와 전문대학 학생 수 비중은 바다 천정 효과를 통제하는 변수로 하여 기본모형을 구안하였다.

다음은 기본 모형의 검증 결과이다.

〈표 3-8〉 고등교육팽창 기본모형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		DW 계수	Roh	설명량 (R ²)
	고등학교 학생 수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 고등학생 수 비율			
4년제 대학	.835**	.257**	1.05	.772	.941
전문대학	.812**	.154*	.80	.753	.920

주: * p<.05, **p<.01

기본모형의 분석결과는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통제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DW계수가 자기상관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어진 기본 모형에 대하여, 가설에 따라 설명변수를 교대로 투입하여 관련변인의 효과를 검증한다⁹⁾. 또한 설명변수는 1년의 시차(t-1)를 두고 투입하였다.¹⁰⁾

9) 설명변수를 함께 투입할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설명변수를 교대로 투입하였다.

10) 설명변수의 지연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고, 기존의 연구(최충욱, 1987)에서도 지연효과를 1년(t-1)으로 상정하여, 이 연구에서도 지연효과를 1년(t-1)으로 하였다.

고등교육 팽창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9〉 고등교육 팽창에 대한 시계열 분석 결과

구분	독립변수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산업구조 변화	제1차 산업 비율	-.011	-.021
	제2차 산업 비율	.110	.114*
	제3차 산업 비율	.117*	.017
직업구조 변화	전문직 비율	.134*	.095
	사무직 비율	.182**	.062
	판매직 비율	.095	.133*
	서비스직 비율	.146**	.177**
	노무직 비율	.012	.159*
직업별 취업률	사무직 취업률	.133**	.089*
	생산직 취업률	.029	.098*
임금격차	고졸 대비 임금격차	.107*	.071
경제성장	1인당 GDP	.353***	.415***
정원정책	부분적 정원확대기	.072	.089
	정원확대기	.253***	.170*
	2차 정원억제기	.260***	.269**
	설립준칙주의기	.371***	.258***
	대학구조개혁기	.390***	.250***
사학의존도	사립학교 학생 수 비중	.151*	.192**
교육재정	고등교육 재정 비중	.028	.012
교육투자	가구당 교육비 규모	.098*	.162*
	가구당 교육비 비중	.016	.067*
투자여건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	.296**	.364**

주: * p<.10, **p<.05, ***p<.01

먼저 사회구조적 요인이 고등교육 팽창이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구조의 변화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팽창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팽창에는 제3차 산업 인구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으며, 전문대학의 팽창에는 제2차 산업 인구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직업구조의 변화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팽창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팽창에는 사무직, 서비스직, 전문직의 인구증가가 영향을 미쳤고, 전문대학의 팽창에는 서비스직, 노무직, 판매직의 인구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직업별 취업률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팽창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4년제 대학의 팽창에는 사무직 취업률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고, 전문대학의 팽창에는 사무직과 생산직 취업률의 증가가 모두 영향을 미쳤다.

넷째, 고졸대비 임금격차는 4년제 대학의 팽창에만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경제성장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팽창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구조가 제1차 산업에서 제2차 산업과 제3차 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른 직업구조의 변화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팽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취업조건의 변화와 학력별 임금격차는 전문대학보다는 4년제 대학의 팽창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으로 제도적 행위자 요인이 고등교육 팽창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학정원정책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팽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대학정원정책은 4년제 대학의 팽창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정부가 대학정원을 억제하던 시기에도 4년제 대학은 계속적으로 팽창을 했다. 대학정원정책의 전문대학 팽창에 대한 효과는 4년제 대학에 비해 약하게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은 팽창의 속도에는 차이가 있어도 항상 이전 시기보다 학생 수가 정원정책의 내용과 관계없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전문대학은 2차 정원 억제기에 최고조에 달했으며, 그 이후로는 학생 수의 증가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사립학교 학생 수 비중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학생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립학교 학생 수 비중은 4년제 대학의 증가보다 전문대학의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정부의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팽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고등교육 팽창과 관련하여, 제도적 행위자로 작용하는 정부의 정원정책과 사립학교에 대한 의존도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생 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러나 정부가 의도적으로 대학의 정원을 억제하는 정책을 수행했던 시기에도 학생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정부 정책의 의도와는 다르게 학생 수의 증가가 나타났다. 또한 사립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고등교육 팽창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개인 행위자 요인이 고등교육 팽창에 미친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당 교육비의 증가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팽창에 모

두 약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구당 교육비의 증가는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의 팽창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둘째, 가구당 교육비 비중의 증가는 전문대학의 팽창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셋째, 월평균 소지지출 규모의 증가는 4년제 대학의 팽창과 전문대학의 팽창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년제 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의 팽창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 행위자가 고등교육 팽창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에 대한 투자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를 실제로 교육비 지출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다. 개인 행위자 요인의 영향이 4년제 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요구가 실현되는 교육투자의 효과가 전문대학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제4절 소결

한국의 학교팽창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4년제 대학은 1960년에 52개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에는 179개로 4배 가까이 증가하고, 학생 수도 1960년에 92,930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에는 2,028,841명으로 20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보다 더 빠른 팽창양상을 보인다. 1965년에 48개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에는 158개로 4배 가까이 증가하고, 학생 수는 1965년에 23,157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에는 913,273명으로 40배 이상 증가하였다.

고등교육 팽창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립학교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학생 수에서 전문대학의 사학비중이 79.7%에서 2010년 97.2%로 증가하고, 4년제 대학의 사학비중은 1965년 75%에서 2010년 95.8%로 증가한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팽창에 사학이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팽창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팽창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의 효과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팽창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제성장은 전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교육에 대한 수요를 실제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경제 성장을 통해 대학교육비에 대한 부담능력이 늘어나고, 이는 실제 고등교육 진학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둘째,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는 약하지만 고등교육의 팽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4년제 대학의 팽창에는 제3차 산업과 전문직 및 사무직의 비중이 영향을 미치고, 전문대학의 팽창에는 제2차 산업과 서비스직 및 노무직의 비중이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고등교육정원 정책은 1차 정원억제기(1962~1972)에 비하여 부분적 정원확대기(1973~1980)를 제외하고 일관되게 고등교육 팽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대학졸업정원제가 실시된 정원확대기와 설립준칙주의가 실시된 1998년 이후에는 4년제 대학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2005년 이후에 대학구조개혁을 정책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전문

대학은 설립준칙주의가 시행된 이후의 정점을 맞고, 그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넷째, 사립학교에 대한 의존도는 고등교육 팽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0년 현재 사립학교 학생 수 비율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95%를 넘어서고 있어, 사학의 설립과 운영이 고등교육 팽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고등교육 팽창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보다 수요자의 등록금 등에 의존하여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다섯째, 교육투자 요인 가운데 가구당 연간 교육비는 고등교육 진학률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구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고, 고등교육에 대해 투자할 의향이 생김으로써 실제 고등교육에 대한 진학률이 증가한다. 다만 정부의 교육예산 가운데 고등교육 예산의 비중이 고등교육 팽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고등교육의 팽창에 정부의 공적인 교육투자보다 개인의 사적인 교육투자에 의해 고등교육이 팽창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팽창 현상을 단순화시켜 보면, 경제성장에 따라 산업 및 직업구조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잠재되어 있던 교육 수요가 실제 고등교육의 팽창으로 실현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고등교육 정원 정책을 통해 수요를 조정하려고 하지만, 팽창의 속도를 조절하는 정도의 효과만이 나타난다. 취약한 정부의 교육재정은 고등교육 팽창과정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의존도를 키우게 된다.

196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고등교육의 팽창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 베이비붐과 2차 베이비붐에 의해 교육에 대한 수요가 풍부했다. 유교문화권이 갖는 교육에 대한 욕구와 단기간에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는 베이비붐 현상은 교육에 대한 수요가 항상 공급을 뛰어넘게 만들며, 지위경쟁에서 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개인간의 경쟁을 격화시킨다. 교육에 대한 이러한 풍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대기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중반이후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 재수생 문제 등은 지위경쟁을 위한 고등교육의 수요가 표현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둘째,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제적 성장은 고등교육에 대한 대기적인 수요가 직접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이러한 소득을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고등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공적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고등교육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함으로써 고등교육이 팽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특히 이런 현상은 고등교육의 과도한 사립학교 비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노동시장의 일자리와 임금구조의 변화는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더 강화한다. 아주 강한 영향은 아니지만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한 사무직과 전문직 일자리의 생성은 고등교육 인구가 과잉 노동력으로 남지 않게 하고, 지속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유인가로 작용한다. 만일 대졸자의 실업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실제로 고등교육에 대한 유인도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넷째, 정책적 요인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고등교육 비중의 확대이다. 한국은 발전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외국에 비해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안에 교육이 급속도로 팽창하였다. 특히 고등교육의 팽창의 이면에는 95% 이상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사립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등록금에 의존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결국 고등교육에 대한 부담은 개인이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급속한 인구증가에 의한 경쟁의 가속화와 교육을 통한 지위 경쟁, 그리고 사립학교 중심의 고등교육체제는 개인이 고등교육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부담함으로써 가능했다.

다섯째, 대학정원정책의 변화이다. 1980년의 대학졸업정원제의 시행과 1997년의 대학설립준칙주의의 시행은 항상 공급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거의 해소하면서 고등교육 인구를 급속도로 확장하였다. 오히려 2007년 이후에는 고등교육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 4 장

고학력화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

제1절 고학력화의 진전과
인적자본추계

제2절 고학력화의 경제성장 기여

제3절 고학력화의 부정적 영향

제4절 소결

제4장 | 고학력화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

김안국

고학력화의 경제적 성과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고학력화의 직접적 경제적 영향으로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들 수 있다. 그러한 인적자본의 축적은 경제성장에 직결된다. 또한 고학력화는 간접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노동력 구성의 고도화로 첨단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고학력화를 바탕으로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를 특정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 고학력화로 인해 R&D 투자가 효율화되어 생산함수를 상방 이동시켜 산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기술변화가 빠른 시기에는 고학력화가 기업이나 사회의 훈련비용을 절감하는 원천이 된다.

그러나 고학력화의 경제적 성과의 측정은 그리 쉽지는 않다. 물론 직접적인 인적자본 축적이나 그를 통한 경제성장은 이제까지 많이 측정되어 왔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한 간접적인 고학력화의 영향은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측정이 가능한 고학력화의 직접적 영향만을 다루고자 하며,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로 돌리고자 한다.

제1절 고학력화의 진전과 인적자본 추계

1. 연구 자료

인적자본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학교등록률을 활용하는 방법, 인적자본의 투자비용을 누적 합계하는 방법, 평균 교육연수를 이용하는 방법, 노동소득을 이용하는 방법이 쓰이고 있다. 본고는 평균교육연수와 노동소득을 이용하여 인적자본을 측정하고 추계할 것이다.

이는 경제를 구성하는 노동자 각각이 자신이 이수한 교육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노동생산성을 가진다고 가정하고, 경제 전체의 취업자별, 교육수준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각 개별구성요소의 평균임금을 가중치로 인적자본수준을 측정하고 그 투입을 계산하는 것이다.

인적자본추계에 사용한 자료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이다. 이종화·김선빈(1995)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같이 이용하였지만, 본고에서는 몇 가지 이유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만을 이용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인적자본추계에서는 성별, 교육수준별, 산업별로 구분한 개별구성요소가 갖는 전체임금총액 대비 임금총액 비중이 중요한데, 각 개별구성요소를 구성할 때 표본의 수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가 심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두 자료를 개별구성요소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 또 하나의 이유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가 비교적 시계열이 완비되어 자료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며, 1980년부터의 시계열을 확보할 수 있어 졸업정원제 이후의 변화를 포

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자가 확보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83년부터 시계열이 확보된다. 물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는 상용직 대상의 조사로 종사상 지위 변수가 없는 단점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장점이 그 단점을 충분히 보상하고 남는다고 판단된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의 검토 중에 학력 변수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1980~2001년 자료는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 이상으로 5개 범주로 구분되었지만, 2002~2009년 자료는 중졸 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으로 5개의 범주로 구분되어, 초졸과 중졸의 경우 학력별 시계열이 끊어지게 된다.¹¹⁾

업종의 변수는 표준산업분류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업종이 두 자리수(중분류)로 제시되어 대분류로 환원하였다. 그런데 표준산업분류는 <부록 1>과 같이 1975년, 1984년, 1991년, 1998년, 2000년, 2009년 개정이 이루어져 뒷 시기에 올수록 새로운 산업분류가 추가되고 있어 시계열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1975년의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1(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2(광업), 3(제조업), 4(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5(건설업), 6(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7(운수, 창고 및 통신업), 8(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9(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통일하였다. 이 작업 중 2009년의 경우 표준산업분류 개정을 하면서 통신업이 7번에서 8번으로 이동을 하였는데, 이를 다시 7번으로 위치시켰다.

11)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학력 변수의 추출에 문제가 있다. 이 자료에서 1999년까지는 초, 중, 고, 초대, 대의 5개 구분을 하고 있고, 2000년 이후 자료부터는 초, 중, 고, 초대, 대, 대학원의 6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런데 1999년 이하의 자료에서는 수학 상태가 졸업이 아닌 경우는 자신이 응답한 교육정도 바로 아래의 학력을 최종학력으로 하게 되는데, 교육정도가 대학원 중퇴인 경우 대졸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 구분이 없어 고졸로 추출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통계청에 이 부분을 문의하였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업종변수의 조사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1980~1983년, 1999년 이후는 1(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이 조사되어 있는데, 1984~1998년 사이에는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이 조사되어 있지 않다(<부록 2> 참조). 이 업종이 조사되지 않은 15년간의 자료는 농업부문의 개별구성요소가 없는 상태로 인적자본이 추계되었다. 그렇지만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근로자 비중이 최대 0.28%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적자본추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는 1998년까지 10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하다가 1999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에는 1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하고 있어, 표본 추출의 상이함에 따른 시계열의 단절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표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부록 2>와 같이 표본사업체의 숫자 변동폭이 크다. 실제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만을 가지고 인적자본추계를 하면, 1998년에서 1999년으로 가면서 노동의 질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10인 이상 사업체 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조사로 바뀌면서 영세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 보인다.

2. 인적자본 추계를 위한 모형

인적자본의 추계는 Gollop and Jorgenson(1980), Jorgenson, Gollop and Fraumeni(1987)의 방법을 따라 총노동투입지수를 추정하여 이를 노동의 양적지수와 질적지수로 구분한다. 본고는 이종화·김선빈(1995)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인적자본을 추계한다.¹²⁾

12) 한국 인적자본추계에 관한 연구는 이들의 연구가 유일하다.

먼저 총노동투입지수(aggregate labor input index)는 경제전체 취업자들이 제공하는 노동투입량의 변화를 지수화한 것이다. 총노동투입(L)은 이를 구성하는 개별구성요소의 노동투입(L_l)들 사이의 일정한 대체탄력성을 가정하는 Translog 함수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Delta \ln L = \sum_l \overline{v_{Ll}} \Delta \ln L_l, \quad l = 1, 2, \dots, 180$$

여기서 $\Delta \ln L = \ln L(T) - \ln L(T-1)$

$$\overline{v_{Ll}} = \frac{1}{2} [v_{Ll}(T) + v_{Ll}(T-1)]$$

$$v_{Ll} = \frac{P_{Ll} L_l}{\sum_l P_{Ll} L_l} \quad \text{여기서 } P_{Ll} \text{은 } l \text{ 번째 개별구성요소의 임금}$$

즉, 총노동투입 변화율은 개별구성요소의 노동투입의 변화율을 가중평균한 것이며, 그 가중치(v_{Ll})은 경제전체의 노동소득에서 각 구성요소의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는 생산에서 노동력 구성요소들 간의 대체로 인해 발생하는 취업자의 구성비율 변화와 더불어 인적자본의 측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가 된다. 이 방법은 노동자의 임금이 생산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력의 개별구성요소들의 노동투입은 이들의 노동시간에 단위노동시간의 질을 나타내는 지수를 곱한 것이 된다.

$L_l = Q_{Ll} \cdot H_l$, $l = 1, 2, \dots, 180$. 여기서 H_l 은 l 번째 개별구성요소의 월평균노동시간

여기서 개별구성요소들의 단위노동시간이 갖는 노동의 질을 나타내는 지수인 Q_L 은 언제 어디서나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즉, 노동의 시간당 임금은 노동과 결합하는 기타 생산요소, 기술의 발전에 의해 변화하지만 주어진 학력별, 성별, 산업별 특성하에서 노동 한 시간에 내재된 본질적인 노동의 질 자체는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 (Gollop and Jorgenson, 1980 참조)이다.¹³⁾

위의 두식을 이용하면 총노동투입의 변화율은 개별구성요소들의 노동시간 변화율의 Translog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Delta \ln L &= \sum_l \overline{v_{Ll}} \Delta \ln L_l \\ &= \sum_l \overline{v_{Ll}} \Delta \ln H_l\end{aligned}$$

총노동투입은 경제전체 노동의 질(Q_L)과 경제전체의 총노동시간(H)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총노동의 질을 나타내는 질적지수는 다음과 같다.

$$Q_L = L/H \quad \text{단, } H = \sum_l H_l$$

개별노동투입의 질(Q_{Ll})과는 달리 Q_L 은 서로 다른 개별노동투입들 간의 대체관계, 예를 들어 경제 전체의 취업자 중에서 Q_{Ll} 이 낮은 국졸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Q_{Ll} 이 높은 고졸노동자의 비중의 증가

13) 이 가정은 개별구성요소별 노동력의 집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단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Mulligan & Sala-i-Martin(1995)).

등을 통하여 총노동의 질적인 변화를 반영하도록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위의 식으로부터 총노동의 질적변화를 나타내는 총노동투입의 질적지수의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Delta Q_L &= \Delta \ln L - \Delta \ln H \\ &= \sum_l \overline{v_{Ll}} \Delta \ln L_l - \Delta \ln H\end{aligned}$$

노동의 질을 나타내는 질적지수는 기준연도 Q_L 을 1로 놓고 위의 식으로부터 구한 연도별 증가율을 이용하여 각 연도의 지수를 구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총노동의 질적인 변화를 인적자본의 축적으로 정의한다.

다음으로 노동투입의 부분지수(partial index of labor input)를 보자. 총노동투입을 구성하는 각 개별구성요소들 간의 대체로 인한 구성비율의 변화가 총노동투입과 총노동의 질적인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지수화하기 위해 노동투입의 부분지수의 개념이 도입된다.

먼저 노동투입의 일차부분지수(first-order partial index of the volume of labor input)는 경제 전체의 취업자를 네 가지 특성에 의해 분류하였을 때 어느 한가지의 특성만을 고려한 개별구성요소 간의 대체로 인해 발생하는 총노동투입의 변화를 나타낸다. 교육수준의 변화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Delta \ln L_e &= \sum_e \bar{v}_e \Delta \ln H_e \\ &= \sum_e \bar{v}_e \Delta \ln \left(\sum_i \sum_s \sum_c H_{isec} \right)\end{aligned}$$

$$\text{여기서 } \bar{v}_e = \frac{1}{2} [v_e(T) + v_e(T-1)]$$

$$v_e = \sum_i \sum_s \sum_c v_{isec}$$

교육수준의 변화에 따른 노동투입의 변화율은 각 교육수준별로 합계한 개별구성요소의 노동시간의 변화율을 전체 노동소득 중에서 각 교육수준별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v_e)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한 값이다. 즉, 교육수준의 변화에 따른 노동투입의 일차부분지수는 한 교육수준 내에서 성별, 산업별 구성의 변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육수준의 변화가 경제 전체의 노동투입에 미치는 영향만을 포착하는 지수이다.

교육수준에 대한 노동투입의 일차부분지수(L_e)는 기준연도의 L_e 를 1로 놓고 위의 식으로부터 구한 연도별 증가율을 이용하여 각 연도의 L_e 를 구한다.

노동의 질적 변화를 요인별로 분석하기 위해 총노동의 질적지수에 대응하는 노동투입의 일차질적부분지수(first-order partial index of the quality of labor input)의 개념을 도입한다. 이는 어느 한가지의 특성, 예컨대 교육수준의 변화만을 고려한 개별구성요소의 대체관계에 의한 노동의 질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각 연도의 교육수준의 변화로 인한 노동투입의 일차질적부분지수는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Q_e = L_e / H$$

3. 한국의 인적자본 추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가지고 한국의 인적자본을 추계하였다. 인적자본의 추계를 위한 각 셀은 성별(2)×산업별(9)×교육수준별(5)의 90개이다. 2002년 이후는 초졸이 중졸 이하에 포함되었고, 대학원 이상이 새로 포함되어 교육수준의 5개 범주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2001년에서 2002년의 변화를 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 2002년의 증가율은 계산하지 않았다.

위 모형의 식에서 ΔQ_L 이 표의 증가율 값이다. 1981년부터 2009년까지 노동의 질을 감안한 인적자본의 증가율을 추정하는 것이 <표 4-1>이다. 전산업을 보았을 때 한국의 인적자본수준의 연도별 증가율은 편차가 있어 크게 증가할 때는 약 3% 정도이고, 감소하는¹⁴⁾ 연도도 있지만 평균하여 약 1.1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가 1983년부터 1998년까지 농림수산업을 제외하고 조사되었기 때문에 시계열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산업을 추정하였을 때도 결과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는데, 연평균 증가율이 약 0.02%p 더 높아질 따름이다.

인적자본의 증가율을 10년 단위로 묶어 각각의 평균 증가율을 계산한 결과가 흥미롭다. 1980년대 인적자본의 증가율은 1.51%, 1990년대 인적자본의 증가율은 1.02%, 2000년대의 인적자본 증가율은 0.95%로

14) 1999년의 감소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가 1998년까지 10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하다가 1999년에 5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하게 된 것과 관련된다고 추론된다. 본고의 인적자본추계가 임금을 가지고 인적자본의 질을 보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5-9인 사업장의 조사는 보다 저임금을 주는 업체를 포함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인적자본 추계에 음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08년에는 1인 이상 사업체의 조사로 바뀌었는데, 이 또한 인적자본추계에 음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인적자본의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표 4-1〉 인적자본 증가율 추이(1981~2009)

연도	전산업	농림수산업제외
1981	0.71	0.73
1982	2.98	2.97
1983	1.97	1.99
1984	0.76	0.51
1985	1.54	1.54
1986	2.57	2.57
1987	-0.06	-0.06
1988	1.36	1.36
1989	1.94	1.94
1990	1.34	1.34
1980년대 평균	1.51	1.49
1991	1.82	1.82
1992	3.06	3.06
1993	0.25	0.25
1994	0.35	0.35
1995	1.14	1.14
1996	1.62	1.62
1997	0.98	0.98
1998	2.35	2.35
1999	-0.75	-0.04
2000	-0.64	-0.65
1990년대 평균	1.02	1.09
2001	0.81	0.81
2003	0.24	0.23
2004	0.41	0.41
2005	1.86	1.87
2006	0.98	0.99
2007	0.83	0.83
2008	0.43	0.43
2009	2.02	2.02
2000년대 평균	0.95	0.95
전년도 평균	1.17	1.19

자료: 고용노동부(1980~2009),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다음으로 노동투입의 부분지수에 따른 인적자본증가율을 보았다. 교육수준별, 성별, 업종별의 각 부분의 변화가 총노동의 질적인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본 것이 <표 4-2>이다.

각 부분지수에 따른 인적자본의 증가율을 보면 교육의 변화에 따른 인적자본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의 변화에 따른 인적자본 증가율은 연평균 1.24%로 전체의 인적자본증가율보다 더 크며, 업종별 변화나 성별 변화에 따른 인적자본의 증가율 0.4%, 0.2%보다 월등하게 크다.

교육 변화에 따른 인적자본의 증가율은 그렇지만 1980년대에 1.51%로 가장 높았고, 1990년대와 2000년대는 1.05%로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성별이나 업종의 변화에 따른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증가율을 높이는 데 이전보다도 교육 부문이 더 많이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이종화·김선빈(1995)에서 교육 변화에 따른 인적자본 증가율이 1963년에서 1993년까지 연평균 1.17%였던 것과 유사하며, 결국 인적자본축적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것은 교육임을 알 수 있다.

업종별 변화에 따른 인적자본의 증가율은 1980년대로부터 약 10년 동안 0.11%p씩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산업의 구성이 1980년대 이후는 어느 정도 고도화되어 성장 산업 중심의 업종별 변화가 가져오는 인적자본 축적의 영향이 점차로 작아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별 변화에 따른 인적자본 증가율은 1980년대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0.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가지고 인적자본을 추계한 이종화·김선빈(1995)의 연구결과에서 성별

변화에 따른 인적자본 증가율이 음의 값을 가졌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사용한 자료에 남녀별 취업자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라 보인다. 즉, 비정규직이나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는 저임금 여성 취업자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상용직을 대상으로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에서는 여성들의 상대적 임금이 과히 낮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성별 변화에 따른 인적자본 증가율의 연대별 감소는 특히 주목된다. 1980년대에 거의 업종별 변화와 비슷한 정도로 인적자본 축적에 기여 하였던 성별 변화는 1990년대에는 절반 이하로 크게 축소되었고, 2000년대에는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노동시장과 관련된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가 1999년부터 10인 조사에서 5인 조사로 바뀌는데, 이에 1999년 이후는 영세기업이 많이 표본에 포함되었고, 영세기업에서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여성의 임금이 작기 때문이라고 추론하는 정도이다.

〈표 4-2〉 부문별 투입 변화에 따른 인적자본 증가율(1981~2009)

연도	전체	교육	성별	업종
1981	0.71	0.32	0.18	0.45
1982	2.98	3.13	1.20	0.70
1983	1.97	1.64	0.31	1.50
1984	0.76	0.79	0.30	0.24
1985	1.54	1.17	1.10	0.61
1986	2.57	2.58	0.52	0.47
1987	-0.06	1.03	-0.70	-0.64

<표 계속>

연도	전체	교육	성별	업종
1988	1.36	1.77	0.57	0.02
1989	1.94	1.39	0.95	0.91
1990	1.34	1.24	0.40	0.70
1980년대 평균	1.51	1.51	0.48	0.50
1991	1.82	1.92	0.27	0.89
1992	3.06	2.50	0.80	1.49
1993	0.25	-0.32	0.97	-0.12
1994	0.35	0.13	0.32	0.37
1995	1.14	1.31	0.01	0.32
1996	1.62	1.41	0.42	0.58
1997	0.98	0.90	0.22	0.43
1998	2.35	2.21	0.19	0.87
1999	-0.75	0.70	-1.19	-0.72
2000	-0.64	-0.24	-0.16	-0.21
1990년대 평균	1.02	1.05	0.18	0.39
2001	0.81	1.06	0.06	0.00
2003	0.32	0.52	-0.16	0.24
2004	0.34	0.59	-0.04	0.18
2005	1.81	1.96	0.00	0.00
2006	1.20	1.04	-0.14	0.13
2007	0.82	0.68	-0.16	0.21
2008	0.34	0.64	0.03	-0.08
2009	1.75	1.90	-0.27	1.55
2000년대 평균	0.92	1.05	-0.09	0.28
전년도 평균	1.17	1.24	0.21	0.40

자료: 고용노동부(1980~2009),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이상의 인적자본 추계의 결과는 분석대상 시기가 통상적으로 대졸자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여서 흥미롭다. 1981년 졸업정원제하 그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1980년대 후반, 1995년의 대학설립준

칙주의 등으로 대학졸업자의 증가 및 노동시장 진입이 본격화되었던 2000년대에 인적자본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대학졸업자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인적자본 추계로 본 인적자본 증가율은 큰 폭으로 늘었어야 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본고의 인적자본 추계가 임금으로 조정이 된 질적인적자본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졸의 공급 증가와 그에 따른 대학투자 수익률의 저하와 관련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고등교육이 팽창하였지만, 산업수요에 기반하지 않은 채 대학졸업자가 급증하여 대졸 청년층의 과잉공급이 야기되었고, 그에 따라 대졸자의 교육투자 수익률이 낮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고학력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고등교육투자의 사적수익률은 떨어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보기 위해 시계열이 구축되는 나라에 한정하여 고등교육투자 사적수익률의 추이를 본 것이 <표 4-3>이다. 한눈으로 보아도 각 나라에서 고등교육의 투자수익률이 떨어지는 추세가 나타나는 것이 관찰된다. 캐나다, 스위스를 제외하면 OECD 국가들에서 고등교육투자의 사적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음이 관찰된다. 특히 2003~2004년 사이에는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수익률의 하락이 고등교육 이수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인지는 여타 변수들을 통제해 보아야 하지만, 일단 고학력화의 진전과 함께 투자수익률의 저하가 관찰되는 것은 분명하다.

〈표 4-3〉 OECD국가의 고등교육 사적수익률 추이(1999~2004)

	1999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Australia	m	6.6	m	m	m
Belgium	m	m	7.1	13	12.6
Canada	8.75	m	m	m	9.3
Denmark	12	6.4	4.1	8.2	4.3
Finland	m	14.7	15.6	16.3	10
France	11.95	m	7.8	m	7.9
Germany	8.65	m	m	m	6.4
Hungary	m	15.6	m	18.8	16.8
Korea	m	m	m	13.6	10.1
Japan	7.1	m	m	m	m
Netherlands	12.15	m	6.7	m	m
New Zealand	m	m	m	11.1	10.2
Norway	m	m	11.7	13.9	8.1
Spain	m	8.9	m	m	8.2
Sweden	11.1	8.1	7.9	8.6	4.6
Switzerland	m	8.8	m	9.9	10.3
United Kingdom	16.25	12.5	m	18.2	14.4
United States	14.8	9.5	11.0	13.7	9.7

자료: OECD(2002~2008). 「Education at a Glance」.

한국의 경우 대학투자수익률의 변화를 보면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져 왔든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장기간의 각급 학교의 투자수익률을 추정한 정진화(1996)에 의하면 고졸 대비 대학의 투자수익률은 1980년에 20%에서 1994년에는 14%로 떨어지고 있다.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과잉교육의 대학투자수익률을 추정한 김홍균·김지혜(2008)의 연구는 최대 -1%의 음의 투자수익률을 추정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교육투자수익률을 연구한 논문들을 찾아서 시계열적인 대학투자수익률의 흐름을 본 것이 <표 4-4>이다. 대략

1980년대의 투자수익률이 대략 8~16% 사이에 위치하였다면, 1990년대는 5~9% 사이, 2000년대에는 2~9%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연구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와 추정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추세적으로 대학투자수익률이 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4-4〉 한국의 대학교육 투자수익률

저자	연도	제목	자료	구분	개인투자수익률(%)	
					남자	여자
박세일	1982	한국 교육투자수익률 분석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종별 임금조사	대학	12.1	8
				전문대	10.2	12.7
김영철 공은배	1983	교육의 경제발전 에 대한 기여	한국교육개발원 자료 임금구조 기본통계	대학	13	10
				전문대	12.9	13.3
공은배 강태중 한유경	1985	교육투자규모와 수익률	경제활동인구조사	대학	14.8	11.6
				전문대	14.1	16.2
공은배 백성준	1994	한국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임금구조기본통계	대학	6.9	7
				전문대	5.1	9.4
금재호	2004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차별	경제활동인구조사 1993년~2000년	전학년	5.3	3.7
신경수 최두식	2006	교육투자의 평균수익률 분석	임금구조기본통계 (1995년~2002년)	대학	3.08	3.89
				전문대	1.83	2.31
한성신 조인숙	2007	한국의 교육투자수익률 및 학위효과: 남녀 비교	Klips 4차 (2001년)	전학년	5.2	4.2
백일우 임정준	2008	도구변수를 이용한 여성고등교육의 투자수익률 분석	Klips 8차 (2005년)	전학년	7.9	9.70
이희숙	2008	대학특성 및 전공계열에 따른 고등교육 투자 수익률 분석 연구	Klips 1~8년차 자료	대학	서울소재 대학> 지방 국립> 지방사립	
이정미 외	2009	내부수익률법에 의한 대학교육 투자수익률 분석	2008년 경향:부가조사	대학	6.65	7.38
신동균	2010	교육 투자수익률 분석	Klips 1~10년차 자료	전학년	8.65	

제2절 고학력화의 경제성장 기여

고학력화의 경제성장 기여는 성장회계모형을 활용한다. 성장회계모형은 생산(혹은 소득)의 성장률과 각 생산 요소 성장률 사이의 관계식을 도출하는 것이다. 고학력화의 경제성장 기여를 보기 위해서는 Cobb-Douglas의 생산함수에 Solow의 성장모형을 접합시켜, 물적자본·노동투입과 함께 인적자본지수를 넣어 회귀분석하면 된다.

인적자본의 경제성장 기여 추정을 위해서 본고에서는 김진영(2001, 2003)의 모형에 의존하였다. 기본 모형으로 단순 Cobb-Douglas 함수의 추정을 보자.

$$(1) Y = AK^{\alpha}L^{\beta}$$

로그를 취하여 추정식을 만들면

$$(2) \log Y = \log A + \alpha \log K + \beta \log L + \epsilon$$

위 식에는 단순노동만 고려되어 있다. 이에 인적자본을 고려한 생산함수를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

$$(3) Y = AK^{\alpha}L^{\beta}H^{\gamma}$$

이 식에 로그를 취하여 추정식을 만들면 다음과 같이 된다.

$$(4) \log Y = \log A + \alpha \log K + \beta \log L + \gamma \log H + \epsilon$$

위 식은 인적자본 스톡이 교육연수와 선형의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나 Mincer의 임금방정식 등에서는 교육연수와 임금에 선형관계가 아닌 지수적 관계 성립을 보이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에 인적자본이 노동자에게 체화되어 있다고 보고, 노동과 통합된 것으로 보아, 인적자본을 노동자의 수와 그 평균교육연수의 함수로 규정하고, 생산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5) Y = AK^\alpha H^\beta, \quad \text{여기서 } H = e^{\phi(S)} L$$

S는 평균교육연수, $\phi(S)$ 는 S만큼 교육을 받은 노동자가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 생산성이 향상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민서 방정식을 받아들이고 가장 간단한 형태를 생각하면 $\phi(S) = \rho S$ 라는 식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ρ 는 1년의 교육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도가 된다. 이는 노동경제학에서 흔히 쓰이는 교육의 투자수익률을 거시 생산함수에 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식에 로그를 취하여 추정식을 만들면 다음과 같이 된다.

$$(6) \log Y = \log A + \alpha \log K + \beta(\log L + \rho S) + \epsilon$$

김진영(2001, 2004)은 성장회계 모형을 신고전파의 성장모형과 내생적 성장이론의 성장모형으로 구성하여 실증분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업종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신고전파 성장모형 추정에 필요한

기술변화율, 감가상각률, 저축률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추정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각국별 경제성장을 다루는 내생적 성장이론의 성장모형 역시 각 업종별 산출의 변화의 차이를 내생적 성장이론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정하지 않았다.

성장회계모형의 분석은 통상적으로 각국별 경제 성장이 그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한국에서의 고학력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업종별 분석을 수행한다. 즉, 각 업종별로 학력 분포의 변화에 따라 그것이 업종의 매출액 등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업종별 분석을 위해 가능한 자료로 본고는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는 업종별로 종사자수, 급여액, 생산액, 출하액, 유형자산연말잔액 등 정보가 있어, 성장회계모형을 추정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이 조사는 2007년까지는 5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하다가 2008년 이후에는 10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하여 두 기간의 시계열 연결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2007년에는 큰 폭의 산업분류 변화가 있어 본고에서는 자료의 시계열이 갖추어지는 범위인 1982년부터 2006년까지의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기간 동안에 소분류를 기준으로 표준산업분류의 업종 변화를 일치시켜 자료로 활용하였다.

「광업제조업조사」 자료에는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인 인적자본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인적자본에 대한 정보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에서 가져왔다. 인적자본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학력 정보를 사용하였고, 인적자본추계를 통한 질적 수준의 정보도 활용하였다. 그런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의 산업분류는 중분류밖에 정보가 없

어 광업, 제조업조사 자료와 중분류 업종을 기준으로 합체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산업 소분류를 사용하는 성장회계모형의 추정에서 중분류 수준의 학력변수가 소분류에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한계가 남아 있게 되었다.

식 (6)의 추정결과가 <표 4-5>이다. 조사된 자료의 업종구분의 세분화에 따라 1982년부터 1992년은 샘플 수는 29~32개¹⁵⁾, 1993년부터 1997년은 샘플 수 66개, 1998년부터 2006년에는 샘플 수가 72~76개로 차이가 난다.

조정된 R^2 의 값이 대부분 0.86이 넘어, 성장회계모형이 잘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자본의 계수값은 1980년대 전반에 0.85정도로 높다가 후반에는 떨어져서 1990년대 중반에 0.51까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증가하여 2000대 중반 0.75까지 상승하고 있다. 노동의 계수값은 1980년대 상승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 대체로 값이 증가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성장에 기여하는 몫이 자본과 노동이 대체적으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¹⁶⁾

인적자본을 주요하게 결정하는 교육연수 변수는 일정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지만, 산업생산에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0.22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김진영(2001, 2003)의 연구결과보다는 조금 적지만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한 차이는 김진영의 연구가 국가별 분석이었고, 본고는 업종별 분석을 하였으며, 그것도

15) 원래 「광업제조업조사」에는 중분류업종으로 1990~1992년은 66개의 업종이 구분되어 있지만,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에는 이 3개년 역시 32개의 업종 구분으로 되어 있어 모형 추정에 32개 이하의 관측치만을 사용하게 되었다.

16) 동일한 모형을 1960년에서 1990년까지 96개국의 자료로 회귀추정한 김진영(2003, p.121) 결과는 자본의 성장기여가 늘고 있으며, 노동의 성장기여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모든 업종이 아니라, 그 대상이 제조업에 한정되어 대학중심의 교육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개연성 때문으로 추론된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1990년대 교육연수의 성장 기여가 상대적으로 1980년대와 2000년대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연수의 성장 기여가 1991년에 음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표 4-5〉 성장회계모형 추정(OLS) (1982~2006)

연도	자본	노동	교육연수	OBS_n	Adj R-Sq
1982	0.83962***	0.37262**	0.1492	32	0.8597
1983	0.86419***	0.38772**	0.16688	32	0.8943
1984	0.86268***	0.39073**	0.12122	32	0.8857
1985	0.87038***	0.39533**	0.12992	32	0.9047
1986	0.83318***	0.41639**	0.14974	32	0.907
1987	0.77813***	0.4495**	0.20334*	32	0.9067
1988	0.73553***	0.44716**	0.21869**	32	0.9186
1989	0.77024***	0.37082**	0.21047**	32	0.9247
1990	0.82255***	0.10787	0.01248	29	0.9214
1991	0.65587***	0.511***	-0.1125*	29	0.9524
1992	0.71384***	0.40853**	-0.05439	30	0.946
1993	0.52494***	0.63505***	0.10904*	66	0.8963
1994	0.51795***	0.64699***	0.10605**	66	0.9005
1995	0.51047***	0.62268***	0.13512**	66	0.8915
1996	0.53147***	0.54618***	0.13098**	66	0.8938
1997	0.52521***	0.55765***	0.16414**	66	0.8934
1998	0.5889***	0.42205***	0.15184**	72	0.8936
1999	0.61192***	0.39440***	0.14871**	72	0.9066
2000	0.62646***	0.40157***	0.18347**	72	0.9097
2001	0.61784***	0.42703***	0.17414**	72	0.9171
2002	0.60705***	0.44282***	0.17835***	74	0.915
2003	0.73792***	-0.00637	0.05253	76	0.9268
2004	0.72795***	0.28033**	0.16408**	75	0.9118
2005	0.75057***	0.25668**	0.21458***	76	0.9268
2006	0.71689***	0.32343***	0.16944***	76	0.9156

주: * p < .10 ** p < .05 *** p < .01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연도.

이상은 각 연도를 회귀분석한 것으로 각 시대별 흐름을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각 업종은 관측되지 않지만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구축한 자료가 산업 소분류별로 패널자료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산업 소분류의 개수가 일치하는 1982~1992년, 1993~1997년, 1998~2006년의 세 패널자료로 패널회귀추정을 해 보았다. 패널회귀 추정은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이루어져, 업종에 고유한 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식(6)을 패널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가 <표 4-6>이다. 자본의 성장 기여는 앞의 단순회귀분석의 결과와 유사하게 1980년대 많았다가 1990년대 중반에 줄고, 2000년대 다시 높아졌다. 노동의 기여는 1980년대보다 1990년대 중반에 조금 늘어났다가 2000년대는 유의하지 않게 되어 단순회귀분석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교육연수는 위의 단순회귀분석과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1980년대에는 유의하지 않다가, 1990년대 중반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고, 2000년대에는 성장에 대한 기여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는 정권택 외(2003)에서도 1990년대 전반보다 후반에 인적자본 기여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패널고정효과모형의 추정의 결과는 최근에 들어서 단순노동의 성장에 대한 기여는 없으며, 기술이 자본에 체화되어서 자본의 성장 기여가 더욱 많아지거나, 교육의 중요성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6〉 성장회계모형 추정(Panel fixed effect model)

	1982-1992	1993-1997	1998-2006
자본	0.8471***	0.6860***	0.9177***
노동	0.2078***	0.2607***	-0.1103
교육연수	-0.0717	0.2898***	0.1670***
샘플 수	344	330	664
Adj-R	0.9037	0.8769	0.8939

주: * p < .10 ** p < .05 *** p < .01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연도.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한국에서 고등교육의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한국의 경제에 그다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그만큼 고등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변화가 급속한 시대에 고등교육의 중요성은 학습하는 능력을 높이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이에 고등교육의 팽창은 우리의 경제 발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3절 고학력화의 부정적 영향

1. 고등교육의 팽창과 대졸자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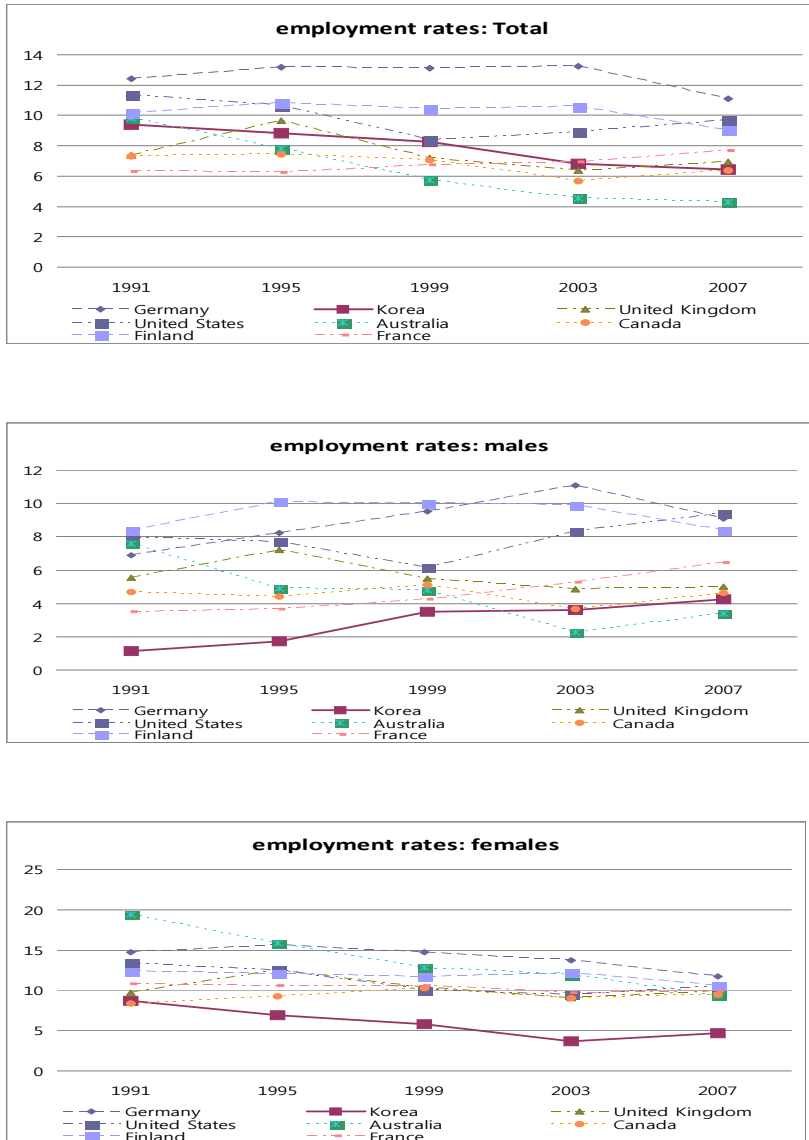
고등교육의 팽창은 고등교육 이수자의 증가를 가져오며, 노동시장에 고등교육 이수자의 공급을 늘릴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정이 변하지 않는 한 고등교육 이수자들의 고용률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이후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학력화가 진전되었기 때문에 고등교육졸업자의 고용률은 저하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졸자의 고용률과 고졸자의 고용률의 격차는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에 OECD 주요국의 1991년에서 2007년까지의 대졸자 고용률과 고졸자 고용률의 차이의 추이를 연도별로 보면 [그림 4-1]와 같다.

예상한대로 대졸자 고용률과 고졸자 고용률의 격차는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줄어들고 있다. 이 시기에 급격하게 대학 진학자수가 증가한 한국의 경우도 대졸자 고용률과 고졸자 고용률의 차이는 여타 나라에 비해 큰 폭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나라에서 대학 진학의 증가는 주로 여성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므로 대졸자의 고용율과 고졸자 고용률의 차이도 남녀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4-1]에서 보이듯이 남성의 경우 대졸자와 고졸자 고용률의 차이는 일정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는 대졸자와 고졸자 고용률의 차이가 시간이 지속될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호주와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감소 폭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1] 대졸과 고졸의 고용률 차이의 추이(전체/남성/여성)(1991~2007)



자료: OECD(2008). 「Education at a Glance」.

이상에서 고학력화의 진행은 전체적으로 대졸자의 고용률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학력화가 특히 더 많이 진행된 여성에게서 대졸자 고용률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대졸자의 증가가 전반적 산업수요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의미하여, 이에 고학력화가 진행되면서 대졸자 고용률의 저하 이외에 하향취업 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김안국 외(2010)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시계열로 활용하여 대졸 청년의 과잉공급은 1994년부터 시작되었고, 취업자 기준으로는 2009년에 대졸 청년의 10%가 과잉공급이며, 경제활동인구 기준으로는 2008년에 대졸 청년 남성은 약 30%, 대졸 청년 여성은 약 40% 정도가 과잉공급되고 있음을 추정하였다.

그러한 과잉공급은 하향취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기존의 설문조사자료를 근거로 한 여러 연구도 대략 13%와 43%사이의 하향취업비율을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근에 올수록 하향취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들마다 편차가 있지만, 2000대의 초반에는 약 20%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면 2000년대 후반에는 약 40% 가까이 하향취업이 많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7〉 기존 연구에 나타난 대졸 청년의 하향취업

논문제목	이름	게재연도	학회	분류기준	하향취업률
한국 일궁합 실패와 노동이동(1)	어수봉	1994	노동경제논집		35.0%
하향취업 실패 및 과잉교육 노동자의 특성	김기현	2003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적	19.8%
				객관적	29.0%
청년층의 하향취업 원인과 노동시장 성과	박성재 반정호	2007	사회보장연구	청년층	24.2%
				대학생	24.0%

<표 계속>

논문제목	이름	게재연도	학회	분류기준	하향취업률
대졸청년층 하향취업의 결정요인	신선미 손유미	2008	직업능력 개발연구		42.7%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하향취업 형태	이찬영	2008	직업능력 개발연구	2000년 정규직	18.4%
				2000년 비정규직	30.0%
				2005년 정규직	13.1%
				2005년 비정규직	34.8%
하향취업의 지속성: 청년층의 하향취업 경험이 비하향 취업 으로의 이행에 미치는 효과분석	김준영 윤정혜	2010	산업노동연구	최빈도 기준	39.2%
				평균교육 연수기준	20.4%
대졸청년층 하향취업자의 하향취업 상태변화요인	신선미 민무숙	2010	직업능력 개발연구	2006년	24.7%
				2007년	22.8%
				2008년	19.0%
대졸청년층의 하향취업: 연령집단 및 하향 취업 측정방법에 따른 비교	황남희 정주연	2011	정책분석 평가학회보	주관적	42.0%
				객관적	23.0%

2. 고등교육의 팽창과 사교육

교육서비스업 중에서 고등교육기관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통계청 KOSIS의 「서비스업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1996년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을 기준으로 한 정보는 1996년과 2005년밖에는 없지만 두 시점 간의 증감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사업체수의 증가율보다는 종사자수의 증가율이 배 이상 높았다. 이는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의 대형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형태로 보면 회사법인과 비법인단체의 증가율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회사법인의 교육서비스업에서의 증가는 결국 교육서비스업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반교습학원에서의 회사법인의 증가폭은 17~23배 정도로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사업체 증가율이나 종사자수 증가율에서 교육서비스 전체보다 각각 32.3%p, 16%p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초등교육기관과 중등교육기관과 비교하여도 사업체수의 증가율은 각각 22%p, 32%p, 종사자수의 증가율은 15%p, 42%p로 크게 높다. 이는 한국 전체의 교육이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팽창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기타교육기관 중에 일반교습학원의 팽창이 두드러진다. 일반교습학원은 1996년에서 2005년 사이 사업체수로는 97%, 종사자수로는 161%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일반교습학원 내에서 일반 입시 학원이 2005년 기준으로 사업체수로는 일반교습학원의 약 3/4, 종사자수로는 약 절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일반교습학원의 증가는 대학 입학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96년 이후는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로 대학의 정원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정책 이후라는 점이 이상의 일반교습학원 증가와 일치하기 때문에 고등교육 팽창과 관련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자료의 한계상 고등교육의 팽창과 사교육비 증가의 인과관계 추정되기 어렵지만, 고등교육의 팽창은 사교육의 지속적 확대를 야기하였

을 가능성이 있다. 제7장의 분석에도 나타나지만, 고등교육의 확대와 함께 상위 서열의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고, 동시에 우수한 학생들의 특정계열 학과 집중 현상을 보여(김안나·김병식, 2004) 더 많은 학생이 상위 서열의 대학 및 특정 학과를 가고자 하였기 때문에 사교육이 더 넓고 깊게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표 4-8〉 고등교육 서비스의 팽창

산업별	조직형태별	1996년		2005년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사업체 수 (개)	증가율 (%)	종사자 수 (명)	증가율 (%)
교육 서비스업	계	99,342	802,808	120,721	21.5	1,189,784	48.2
	개인사업체	82,273	247,032	94,023	14.3	317,756	28.6
	회사법인	509	9,781	3,725	631.8	92,982	850.6
	회사이외의법인	16,115	543,262	19,536	21.2	753,524	38.7
	비법인단체	445	2,733	3,437	672.4	25,522	833.8
초중등 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15,093	211,917	19,862	31.6	317,607	49.9
	중등교육기관	4,624	228,179	5,138	11.1	278,543	22.1
고등 교육기관	계	756	112,034	1,162	53.7	184,024	64.3
	개인사업체	2		0	-100.0	0	
	회사법인	0	0	0		0	
	회사이외의법인	748	111,981	1,162	55.3	184,024	64.3
	비법인단체	6	36	0	-100.0	0	-100.0
기타 교육기관	계	78,602	243,879	94,375	20.1	399,244	63.7
	개인사업체	77,402	218,655	88,687	14.6	279,344	27.8
	회사법인	496	9,695	3,714	648.8	92,872	857.9
	회사이외의법인	568	14,557	1,398	146.1	24,201	66.2
	비법인단체	136	972	576	323.5	2,827	190.8

<표 계속>

산업별	조직형태별	1996년		2005년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사업체 수 (개)	증가율 (%)	종사자 수 (명)	증가율 (%)
일반 교습 학원	계	20,960	97,883	41,214	96.6	255,063	160.6
	개인사업체	20,753	94,032	38,018	83.2	172,440	83.4
	회사법인	158	3,224	2,940	1760.8	80,051	2383.0
	회사이외의법인	40	505	126	215.0	2,056	307.1
	비법인단체	9	122	130	1344.4	447	266.4
일반 입시 학원	전국			29,145		130,369	
	개인사업체			28,647		121,213	
	회사법인			354		8,438	
	회사이외의법인			43		352	
	비법인단체			101		366	

주: 기타교육기관에는 사무관련 교육기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교습학원, 그 밖의 교육기관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서비스 조사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장기적으로 사교육비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¹⁷⁾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만을 보면 2010년 현재 약 20조 9000억 원으로 GDP의 1.8%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OECD 국가들의 경우 2007년 GDP 대비 교육비지출액이 평균 5.3%이고, 이 해 한국의 GDP 대비 교육비 지출액은 7%이다(OECD, 2010). 따라서 교육비 지출의 거의 1/3 정도가 사교육비라는 것이다.¹⁸⁾

물론 2007년 이후 사교육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체되고 2010년에는 약간 줄었지만, EBS 교재를 시험에 출제한다는 입시 정

17) 고등교육을 확대시킨 이유 중의 하나에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을 줄이자는 의도가 있었지만, 사교육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교육 팽창이 사교육의 증가와 함께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8) 이와 함께 <부록 4>에서도 제시하였지만 한국의 경우 민간의 교육비 지출 부담이 2007년 현재 81.6%이기 때문에 교육비 지출이 민간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책의 영향에 비하여 미미한 감소폭이라 볼 수 있다.

물론 2007년 이후 사교육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체되고 2010년에는 약간 줄었지만, EBS 교재를 시험에 출제한다는 입시정책의 영향에 비하여 미미한 감소폭이라 볼 수 있다.

〈표 4-9〉 사교육비의 변화 추이(2003~2010)

(단위: 십억원)

	2003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국내총생산	767,113.7	97,5013	102,645.2	106,503.7	117,280.3
사교육비	13,648.5	20,040	20,909.5	21,625.9	20,871.8
비중(%)	1.8	2.1	2.0	2.0	1.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3), 나머지 연도는 통계청 국민계정과 사교육비 조사

이러한 사교육은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지하경제를 비대화하여 교육재정 투자를 왜곡시킬 수 있다(유한구 외, 2010). 이러한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비는 <표 4-10>에서 나타나듯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폭도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의 교육비 규모가 2003년에서 2010년 사이 약 58.7% 증가하였는데, 이 중 정규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56.5% 증가한데 비해 학생학원교육에 들어간 비용은 58.3%나 증가하여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에 진입하기 위한 사교육이 동시에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규교육 중 고등교육에 들어간 비용이 2003년에서 2010년 사이 94.3%로 늘어난 것은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금 팽창과

관련이 있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으며, 미국 대학에서 장학금 수혜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한국대학교육연구소, 2011). 그렇다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85%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고등교육비의 증가는 가계에 커다란 짐이 아닐 수 없다.

〈표 4-10〉 사교육비 변화의 추이(2003~2010)

(단위: 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03~2010년 증가율 (%)
교육	187,298	202,236	211,837	222,341	240,661	271,122	289,820	296,801	58.46
정규교육	68,213	73,263	72,588	78,969	85,502	91,068	101,794	106,738	56.48
초등교육	16,791	13,483	14,672	14,730	13,255	16,256	17,483	17,592	4.77
중등교육	17,180	14,883	13,600	16,399	20,187	22,809	22,880	22,627	31.71
고등교육	34,242	44,898	44,315	47,841	52,060	52,003	61,430	66,519	94.26
학원 및 보습교육	113,358	122,433	130,953	136,169	146,129	170,095	177,187	176,490	55.69
학생학원 교육	105,499	114,146	121,990	128,371	137,043	160,344	167,517	166,959	58.26
성인학원 교육	7,859	8,287	8,963	7,798	9,086	9,750	9,669	9,531	21.27
기타교육	5,727	6,539	8,295	7,203	9,031	9,960	10,839	13,574	137.02

주: 학원 및 보습교육 안에 학생학원교육과 성인학원교육이 포함됨.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국가통계포털, 각 연도.

사교육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만 보더라도 사교육비는 전혀 줄지 않고 있다. 2007년 1인당 월평균 22만원의 사교육비가 2010년에는 24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학입학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반교과사교육비 역시 17.8만원에서 19.5만원으로 늘고 있으며,

대학입학을 눈앞에 둔 일반고의 경우에는 27만원 정도로 높다. 과외 등 지하경제의 성격이 있는 사교육비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사교육비는 그 최소한의 수치로 파악해야 한다.

〈표 4-11〉 학생 1인당 사교육비의 추이(2007~2010)

(단위: 만원)

	2007		2008		2009		2010	
	사교육비	일반교과 사교육	사교육비	일반교과 사교육	사교육비	일반교과 사교육	사교육비	일반교과 사교육
평균	22.2	17.8	23.3	18.8	24.2	19.7	24	19.5
초등학교	22.7	16	24.2	17.4	24.5	17.6	24.5	17.5
중학교	23.4	21.9	24.1	22.6	26	24.3	25.5	23.8
고등학교	19.7	17	20.6	17.6	21.7	18.5	21.8	18.4
일반고	24	21.2	24.9	21.7	26.9	23.5	26.5	22.9
전문고	6.7	4	6.9	4.2	6	3.1	6.7	3.9

자료: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국가통계포털, 각 연도.

원래 전통적인 의미의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하여 발생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사교육은 공교육과 대체적 혹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즉, 사교육이 팽창하면서 공교육은 붕괴되는 것이다. 그나마 사교육의 실제적 학습효과가 정말 있는 것인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사교육이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거의 없다.

〈표 4-12〉 기존 연구에 나타난 사교육의 효과

저자	연도	논문제목	출처	사교육 효과
김양분 김미숙	2002	입시학원의 교육실태분석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학교교육보다 학원교육이 학교성적 향상에 도움을 줌
김미란	2005	교육생산함수 추정	제1차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	과외시간이 길수록 학업향상
Kang	2005	The more the better? The effect of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 on academic performance	제1차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	사교육 지출이 수능성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안줌
이명현 김진영	2005	사교육이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에 관한 연구	제1차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	수학에는 긍정적 영어에는 통계적 무의미 국어에는 오히려 부정적
반상진 외	2005	과외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제1차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	일반계 고등학생 과외가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
김태일	2005	고등학교 때 사교육이 대학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분석	교육학 연구 제43권, 제3호	고등학교 때 사교육 대학학업 성취도를 낮춤
최형재	2007	사교육의 대학 진학에 대한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사교육 지출이 늘어난다고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님
박현정 이준호	2009	주요 교육 정책 성과 분석 제4장 사교육 수요 및 사교육 효과분석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전체적으로 수리영역과 외국어영역에 효과있음 그러나 공부를 잘 할수록 사교육효과 존재하지 않음

사교육비의 지출은 국민경제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특히 사교육 시장은 부유층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사교육비 지출이 직접적으로 국내소비를 증가시키거나 생산적인 부문에 유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GDP의 1%가 사교육비로 지출될 경우 소비자 물가는 0.45% 상승하는 반면 민간투자와 소비는 각각 0.23%,

0.33% 위축되어 결국 GDP가 0.32% 감소하게 된다는 추정결과를 보이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1997).

사교육비 지출은 지하경제를 온양한다. 공식적으로 조사된 사교육 종사자 중 개인과외 전문강사가 21만 명이나 되지만(유한구, 2009), 여기에 수능시험은 물론 논술이나 예체능을 위한 고액 과외 등은 조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사교육의 고액과외는 음성 수입을 양성하고, 이들의 고소비를 부추기며 탈세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사교육은 주로 재력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회가 불평등하여 문제가 된다. 학부모들의 재정능력이 클수록 사교육 기회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 2009년 고소득층(월 700만원 이상)과 저소득층(월 100만원 이하)의 사교육비 지출 차이는 거의 8배이다(조상식, 2010). 이러한 통계도 은밀한 고액과외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사교육 교육기회의 편차는 더 클 것이다. 2000년대에 이르러 우리 사회에서 학교교육이 계층재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적지 않은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교육 기회의 편차 확대와 관련이 있다.

3. 교육서비스업의 팽창 및 질적 저하

고학력화가 진행되고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진행되면 교육서비스 산업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교육서비스업의 양적, 질적 변화를 보기 위해 통계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산업분류별 통계자료를 표로 만든 것이 <표 4-13>이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전체 근로자수에서 차지하는 교육서비스업 종사 근로자의 비중으로 보았을 때 교육서

비스업은 1993년에 2.86%의 비중에서 2008년 5.45%의 비중까지 확장되다가 2009년에 이르러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¹⁹⁾ 교육서비스의 양적 성장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3〉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수의 증가 추이(1993~2009)

	전산업	교육서비스업	비율(%)
1993년	4,913,862	140,693	2.86
1994년	4,923,705	138,170	2.81
1995년	5,219,747	159,477	3.06
1996년	5,301,550	169,974	3.21
1997년	5,249,178	177,877	3.39
1998년	4,729,350	191,946	4.06
1999년	5,469,934	257,023	4.70
2000년	5,735,072	285,486	4.98
2001년	6,150,915	295,943	4.81
2002년	6,437,680	327,886	5.09
2003년	6,379,547	330,095	5.17
2004년	6,450,563	324,476	5.03
2005년	6,584,715	339,525	5.16
2006년	6,750,196	360,561	5.34
2007년	6,929,525	362,878	5.24
2008년	7,240,948	394,397	5.45
2009년	7,377,241	336,544	4.5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교육서비스업의 양적 증가가 반드시 질적인 증가와 같이 간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의 임금수준과 전체 산업을 비교

19)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나타난 취업자 통계로 보면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은 1993년 4.96%, 2009년 7.79%로 <표 4-13>의 통계치보다 훨씬 많다(부록 3 참조).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는 자영업과 무급가족종사자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된다.

해 볼 필요가 있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체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1990년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간특별급여액을 보면 2007년 이후는 전체 산업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14〉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의 평균임금 추이(1993~2009)

	월급여총액 (원)			연간특별급여액 (원)		
	전산업	교육서비스업	%	전산업	교육서비스업	%
1993	757,007	1,151,038	152.05	2,394,282	3,574,839	149.31
1994	827,625	1,242,102	150.08	2,641,318	4,233,480	160.28
1995	927,891	1,334,427	143.81	3,217,254	5,346,398	166.18
1996	1,049,895	1,498,877	142.76	3,625,836	6,448,455	177.85
1997	1,131,621	1,550,785	137.04	4,105,512	7,304,725	177.92
1998	1,148,122	1,645,924	143.36	4,152,159	7,753,588	186.74
1999	1,210,838	1,585,912	130.98	3,408,920	6,518,129	191.21
2000	1,313,910	1,566,200	119.20	3,952,258	5,434,866	137.51
2001	1,393,059	1,680,896	120.66	4,263,195	5,491,151	128.80
2002	1,532,750	1,753,537	114.40	4,171,662	4,809,417	115.29
2003	1,651,100	1,894,857	114.76	4,641,526	5,588,953	120.41
2004	1,750,421	1,987,230	113.53	5,098,039	6,400,797	125.55
2005	1,887,507	2,130,897	112.89	5,340,730	6,926,231	129.69
2006	2,014,265	2,325,596	115.46	5,540,260	7,003,429	126.41
2007	2,127,430	2,519,578	118.43	5,395,680	4,276,750	79.26
2008	2,258,684	2,632,810	116.56	5,561,367	3,664,416	65.89
2009	2,270,303	2,707,307	119.25	5,280,702	3,293,676	62.37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이를 종합해 보면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의 임금수준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

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서비스업의 질적 수준 저하와 고등교육 팽창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분석이 더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그렇지만 교육서비스업의 질적 수준 저하가 과도한 대학팽창의 시기인 199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서비스는 장래의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교육서비스 산업의 질적인 저하는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제4절 소결

본 장은 한국 사회의 고학력화가 인적자본을 증가시켰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는가를 실증분석해 보았다. 아울러, 고학력화와 함께 나타난 부정적 결과들을 대졸자 고용률의 저하, 사교육 증가, 교육서비스 산업의 질적 저하 등의 지표로 살펴보았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로, 이종화·김선빈(1995)의 방법에 따라서 1980년부터의 인적자본을 추계해 보았다. 인적자본 추계는 평균교육연수를 노동소득을 이용해 다시 계산한 지표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경제 전체 취업자들이 제공하는 (질이 포함된) 노동투입량의 변화를 추정하는 총노동투입지수와 총노동투입을 구성하는 각 개별 구성요소간의 대체로 인한 구성 비율의 변화가 총노동투입과 총노동의 질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노동투입의 부분지수를 계산하였다. 예컨대 교육수준의 변화에 따른 노동투입의 일차부분지수는 한

교육수준 내에서 성별, 산업별 구성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오직 교육수준의 변화가 경제 전체의 노동투입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는 지수가 된다.

인적자본 추계의 결과 한국 인적자본의 연도별 증가율은 평균 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증가율을 10년 단위로 묶어 평균을 내어보면 1980년대 인적자본 증가율은 1.51%, 1990년대 인적자본 증가율은 1.02%, 2000년대 인적자본 증가율은 0.95%로 인적자본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투입의 부분지수의 추계를 보면 교육의 변화에 따른 인적자본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교육의 변화에 따른 인적자본 증가율은 연평균 1.24%로 업종별 변화나 성별 변화에 따른 인적자본의 증가율 0.4%나 0.2%보다 월등하게 크다. 교육의 변화에 따른 인적자본 증가율은 1980년대에 1.51%로 가장 높았고,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1.05%로 줄어들었다.

인적자본 추계의 결과가 대졸자가 크게 늘어났던 시기에 인적자본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어 인상적이다. 즉, 1981년의 졸업정원제와 그 졸업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5년의 대학설립준칙주의로 대학졸업자가 증가하고 노동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는 2000년대에 인적자본의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본 증가율의 저하는 고학력화의 진전과 함께 나타나는 고등교육의 투자수익률의 저하와도 관련된다.

고학력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광업제조업조사」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가지고 성장회계모형을 추정해 보았다. 성장회계모형은 김진영(2003)의 모형을 활용하였는데, 국가별

성장의 추이를 본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본고에서는 업종별로 인적자본의 변화가 업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성장회계모형 추정은 OLS와 패널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의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추정의 결과 인적자본을 결정하는 교육연수는 산업생산에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0.22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연수는 1980년대에는 유의하지 않다가 1990년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성장에 대한 기여가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장회계모형의 결과는 최근에 들어서서 단순노동의 성장에 대한 기여는 없어졌으며, 기술이 자본에 체화되어 자본의 성장 기여가 많아지거나, 교육의 중요성이 지속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고학력화는 고등교육이수자의 고용률을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대졸자와 고졸자의 고용률의 차이가 시간이 지속될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그러한 감소폭이 특히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고등교육이수자의 고용률 저하는 하향취업으로 나타났고, 2000년대 후반에는 대졸자의 하향취업은 40%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고등교육의 팽창과 교육서비스업의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종사자수로 보았을 때 교육서비스업은 1993년 2.86%의 비중에서 2008년 5.45%의 비중으로 확장되다가 2009년에 이르러 다소 둔화되었다. 그러나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의 임금수준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교육서비스업의 질적 수준의 저하를 보이고 있으며, 그것이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나온 199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지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서비스업 중에서도 입시와 관련된 학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996년에서 2005년 사이 일반교습학원의 사업체수 증가는 17배, 종사자수 증가는 24배로 폭발적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교육비도 2010년 GDP의 1.8%로 크며, 여러 가지 사교육 대책이 있었지만 줄지 않고 있다. 사교육은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도 민간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며, 지하경제를 온양한다. 그리고 사교육은 부모의 재력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고등교육 팽창과 함께 2003년에서 2010년 사이 고등교육 비용이 94.3%나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고학력화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고등교육 팽창으로 인한 고학력화는 인적자본의 증가와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 다만 2000년대 이후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 축적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기여도도 정체 내지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된다.

고등교육의 팽창과 관련하여 사교육도 팽창하였다. 고등교육의 팽창이 사교육 팽창의 원인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 고등교육 팽창의 시기에 교육서비스업과 사교육도 동시에 같이 팽창하였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지만 교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며, 사교육의 국민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부정적 요소들이 크기 때문에 사교육 감축을 위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

제 5 장

고학력화와 경제적 보상: 임금 및 자산분포 추이

제1절 서 론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분석내용

제3절 분석방법

제4절 분석결과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제5장 | 고학력화와 경제적 보상: 임금 및 자산분포 추이

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1절 서론

고학력화에 관한 논의는 한 사회의 교육 기회구조가 확장되고 있는가, 혹은 축소되고 있는가의 문제로부터 그러한 경향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왔다. 학교교육의 팽창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산업화였다. 특히 기술적 기능이론(technical function theory) 입장은 산업화에 의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습득 요구가 학교 교육에 반영되고, 학교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학교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의 수와 직업구조상 요구되는 인력의 수, 곧 교육 공급과 수요 간의 불일치 현상이 보편화되고 오히려 과잉공급에 따른 청년층 실업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동시에 고학력화가 반드시 교육기회의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기술적 기능이론과는 달리 고학력화의 이유를 사회 구성원들의 요

구에 기초한 현상으로 바라보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Collins(1979)의 지위경쟁이론(status competition theory)으로 대변되는 이 입장은 단지 산업화와 같은 사회적 수요에 따라서 교육공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성원들의 의지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 요인들이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교육 제도화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 외에도 최근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교육열’에 관한 논의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한 사회의 역사적 경험이나 문화 구조가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김신일, 1988).

이처럼 고학력화의 원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설명이 존재하지만 교육수준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보상의 차이가 고등교육 진학에 대한 가장 큰 동기부여로 작용해 왔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임금을 중심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경제적 보상의 차이에 주목해 왔다. 이에 대해서는 학력 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것이 대부분(박세일, 1983; 유경준, 1998; 박성준, 2000, 최강식·정진호, 2003)인데, 최강식·정진호(2003)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이하 임금조사)』를 이용하여 교육투자 수익률이 1990년도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나 그 이후 대졸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졸자의 상대적 임금수준이 4%정도 높아졌고 이는 대졸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증가가 공급증가보다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교육수준에 따라 경제적 보상 혹은 불평등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기존처럼 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자산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소득에 따른 경제적 격차 이상으로 자산에 따른 경제적 격차가 더

크고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이상봉, 2010).

이 장에서는 대학 진학이 가져다 준 경제적 보상을 임금과 자산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난 1980년부터 현재까지 어떤 양상과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분석내용

1. 이론적 배경

한 사회의 교육 기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 즉, 기술적 기능이론은 교육체제가 경제 및 직업세계에 의해 조건화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가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가치와 태도를 개인에게 길러줌으로써 개인들이 직업세계에 나가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되고, 직업세계는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한 사회의 유지 존속에 기여한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 체제와 경제 및 노동시장과는 서로 상응하며 전자의 형성 및 변화는 후자의 형성 및 변화에 기능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Parsons, 1959).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산업화에 따른 교육 기회의 확대는 바로 이러한 시각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육의 경제결정론에 동의하면서도 학교교육의 기능성에 대한 기술적 기능이론에 반대하는 입장들이 존재한다. Bowles &

Gintis(1976)로 대변되는 대응이론가들은 많은 사람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계층상승을 이루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는 학교 내의 사회관계와 경제구조의 사회관계 간의 일치를 통해서 경제적 생산관계를 재생산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Bourdieu & Passeron(1977)도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의 개념에 기초하여 ‘교육체계’를 매개로 사회적 계급관계가 어떻게 세대 간에 재생산되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전산업 사회가 물질적 재산의 직접적인 세습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면,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문화자본에의 투자와 직접적인 전수를 통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1980년대에 들어 상부구조의 교육과 하부구조의 경제 간 모순, 교육의 상대적 자율성과 변화 가능성, 정치, 문화, 종교 등 경제 외적 측면의 교육결정력 등을 강조하는 입장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양자의 경제결정론적 시각의 한계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Collins(1979)는 산업화와 같은 경제적 변화보다는 개인들과 집단들 간의 지위경쟁이 학교교육의 변화 양상에 핵심적인 동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개인과 각종 지위 집단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위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경쟁의 결과로 학력사회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경제결정론적 시각에 대해 비판적인 또 다른 견해는 정치적 요인이 학교 교육의 제도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입장이다. Ramirez, et al.(1987)은 근대적 국민 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각 국가가 국민적 일체성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학교교육을 중요한 제도적 기구로 활용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즉, 학교교육의 팽창은 국민국가 형성과 국가 권

력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학교교육을 강조하고 확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Hoselitz(1965)도 아직 본격적인 선진경제에 진입하지 못한 후발 경제(lately developed economy)의 특징인 협소한 취업부문(employment sector)과 상대적으로 덜 분화된 산업과 직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팽창으로 인한 고학력층의 과다한 공급은 기술기능주의에서 주장하는 대로 산업·직업구조의 선진화에 따른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며 이러한 공급과잉은 사회계층의 정치적 수요(political demand)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의 팽창과 제도화에 미치는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러한 견해는 교육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정치·경제적 요인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지만, 각 사회의 특수성을 설명할 때,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그것의 의식적, 제도적 구성체인 문화가 사회 성원들의 행동과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을 표출시키며, 이것이 그것을 생성시킨 사회구조를 부분적으로 재규정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서 한국사회의 ‘교육열’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최영표 외, 1989).

이처럼 교육기회의 변화, 그 양상으로서 고학력화는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수준에서 보면 대학 진학의 확대는 교육수준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보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곧 대학을 졸업하면 더 많은 수입이 보장되며 사회적인 명예나 위세가 높아지고 본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는 점에서 학력을 높이려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주로 임금으로 대변되는 경제적 보상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의 학력 간 임금격차를 분석한 박세일(1983)은 학력 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이는 고학력자의 공급 증가와 가계소득의 분배 개선, 학력 수준에 따른 차별 감소 등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학력 간 임금격차의 감소는 다시 증가하는 양상으로 바뀌었으며 고학력화 경향 역시 더 빠르게 이루어져 왔다. 이와 관련 최강식·정진호(2003)는 임금조사를 이용하여 교육투자 수익률이 1983년 이후 94년까지 9%로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나 그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노동공급과 노동수요를 분해하여 1983년에서 1993년 사이 대졸자의 임금수준이 고졸자에 비해 약 33.3% 낮아졌지만, 이는 주로 대졸자의 노동공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1993년에서 2000년 사이 대졸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졸자의 상대적 임금수준이 4%정도 높아졌음을 보이고 이를 대졸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증가가 공급증가보다 많아졌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수요변화를 산업 간 혹은 산업 내 수요변화로 분해하여 1983년에서 1993년 사이 노동수요 변화 중에서 14.7%만이 산업 간 변화이며, 1993년에서 2000년 사이 노동수요의 변화 중에서 5%만이 산업 간 변화이어서 산업 내에서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 증가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 증가의 원인과 관련하여 최강식·김안국(2008)은 최근의 기술진보가 상대적으로 고학력 노동자에게 더 유리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숙련편향적인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에 따라 고학력 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임금격차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강식·정진화(2010)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이하 KLIPS)」를 이용하여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진보의 소득증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임금노동에 대해서 고학력자에게 그 효과가 집중된 반면, 자영업주인 경우 모든 학력계층에서 기술진보에 따른 소득증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수정(2008)은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85~2005년 기간 동안 고졸자의 경제적 지위가 크게 하락하고 빈곤위험이 증가하였고 고학력화는 저학력 집단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중등학력의 저학력화를 초래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고은미(2011)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산업과 기업규모를 통제한 상태에서 다른 4년제 대학 출신자에 비해 상위 10위권 대학 졸업생의 상대임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대졸자 및 고졸자 간 임금격차의 상승은 명문대 임금프리미엄의 증가가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임금을 통해 학력 간 경제적 보상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다른 한편 자산을 통해 교육수준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소득 이외에 부동산소득 등 금융소득이 개인의 경제적 부를 늘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02년 대비 2007년의 소득 불평등 변화를 소득원천별로 분석한 결과, 소득 분배가 악화되면서 노동소득의 상대적 기여도가 줄어들고, 부동산 소득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봉, 2010).

2. 분석내용 및 분석자료

이 연구는 교육수준에 따른 경제적 보상의 양상과 변화 추이를 임금과 자산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학력 간 임금 격차는 임금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부터 2009년까지 경제적 보상의 추이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대상 연령은 15~64세이며 분석 대상 산업은 상용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체로 제한하였다. 이는 1980년대 자료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시계열 비교를 고려한 것이다. 학력 간 임금격차는 임금조사 자료의 학력별 월평균 임금으로만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학력 이외에 연령이나 경력, 기업규모, 지역, 성별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Mincer(1974) 등의 임금함수식을 이용하여 학력 간 임금 격차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동시에 고졸과 대졸 이상의 임금분포 전체를 고려하는 상대적 분포 방법을 이용하여 집단 간 상대적 분포의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김영미(2009)는 임금조사를 이용하여 상대적 분포 방법(relative distribution method)을 활용해 성별 임금격차를 살펴보고 있는데, 상대적 분포란 두 집단 간의 분포상의 차이를 비율(ratio)로 표시하여 소득의 각 수준마다 비교집단과 기준집단의 차이를 비율로 표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학력 간 상대적 분포란 대졸 이상의 10분위 각 구간별 고졸 소득자 비율의 분포를 의미한다. 학력 간 상대적 분포에 관한 분석은 자산에 대해서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경제적 보상의 두 번째 측면으로 학력별 자산 격차로 「한

국노동패널자료(KLIPS)」 자료를 이용하여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산 분석은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등을 통해 분석할 수 있으나 시계열 추이에 제한적인 문제점과 자산 관련 항목 부재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이상봉, 2010). 그리고 KLIPS 1차년도인 1998년 자료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자산 관련 항목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제3절 분석방법

학력 간 임금 격차에 대한 분석은 OLS 회귀분석을 사용하고자 하며 자산에 대한 분석은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학력 간 임금 격차의 분석 단위는 개인이며 자산에 대한 분석은 가구(교육수준 등 가구주 기준)가 분석 단위이다.

종속변수는 임금의 경우 2005년 물가지수로 표준화한 후 월평균 임금에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자산은 마찬가지로 2005년 물가지수로 표준화한 후 조사당시 부동산 시가총액으로 측정한 비금융 자산과 은행예금, 주식, 저축성 보험 등의 금융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값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교육수준이며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등으로 구분하며 범주형 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교육투자수익률의 계산을 위해 임금함수에 교육연수를 투입하였으며 투자수익률 계수는 임금함수에서 추정된 교육연수의 계수값을 활용한다.

통계변수로 활용될 독립변수들은 각 보상 영역별로 선행 연구들에

서 주된 영향 요인으로 고려된 변수들을 추가하고자 한다. 임금모형의 통제변수들은 종사상 규모, 성별, 연령, 연령제곱, 경력 및 정상노동일 수, 노동시간 등과 같이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변수 등이 해당된다. 종사상 규모는 10명 이상 29명 미만이 준거범주(reference group)로 사용되었으며, 30명에서 100명 미만, 10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등으로 구분하였다. 경력은 1년 미만이 준거범주이며 1에서 3년 미만, 3~5년, 6~9년, 10년 이상 등으로 구분하였다.

자산 모형의 통제변수들은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연령제곱, 가구주의 직업, 거주지역, 가구소득 및 조사연도 등으로 구성된다. 가구주의 직업은 Ganzeboom 등(1989)이 제시한 직업의 사회경제지수(socio-economic index)로 측정하였다. 거주지역은 도 지역을 준거범주로 광역시 여부로 측정하였다. 가구소득은 당해연도가 아닌 전연도의 가구소득으로 2005년 물가지수로 표준화하였으며 로그변환값을 사용하였다.

제4절 분석결과

1. 교육수준별 임금 분포 추이

여기에서는 임금조사를 이용하여 학력 간 임금격차의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시계열 비교를 위해 상용노동자 10인 이상으로 조사한 1980년부터 1995년까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1996년부터 상용노동자 5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08년부터 「고용형

태별근로실태조사』로 통합되었고 조사대상도 임시, 일용을 포함하여 임금노동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표 5-1〉 학력별 임금격차 추이

	고졸임금(B)	대졸 이상(A)	임금격차(A-B)
2009	100	155.09	55.09
2008	100	157.33	57.33
2007	100	158.12	58.12
2006	100	153.54	53.54
2005	100	156.67	56.67
2004	100	154.47	54.47
2003	100	152.59	52.59
2002	100	149.72	49.72
2001	100	151.58	51.58
2000	100	150.42	50.42
1999	100	151.17	51.17
1998	100	148.90	48.90
1997	100	145.42	45.42
1996	100	147.22	47.22
1995	100	146.95	46.95
1994	100	148.38	48.38
1993	100	153.25	53.25
1992	100	164.87	64.87
1991	100	168.28	68.28
1990	100	174.87	74.87
1989	100	182.45	82.45
1988	100	190.48	90.48
1987	100	208.48	108.48
1986	100	208.43	108.43
1985	100	213.09	113.09

<표 계속>

	고졸임금(B)	대졸 이상(A)	임금격차(A-B)
1984	100	213.48	113.48
1983	100	214.27	114.27
1982	100	213.11	113.11
1981	100	216.27	116.27
1980	100	220.68	120.68

주: 월평균 임금 기준이며 2005년 물가지수로 표준화하였고 대졸 이상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을 의미하며 시계열 비교를 위해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노동자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1980~2007),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2009).

<표 5-1>은 임금조사를 이용하여 고졸 평균임금을 100으로 할 때 대졸 이상(전문대 제외) 간 임금격차를 1980년부터 2007년까지 살펴본 결과이다. 고졸과 대졸 이상 간 임금격차는 지난 30년간 1980년 120.7에서 2009년 55.1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추세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고졸과 대졸 이상 간 임금격차의 감소경향은 1980년부터 거의 20년간 지속되어왔으나 1998년 이후 다시 증가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998년 고졸과 대졸 이상 간 임금격차는 48.9였으나 2007년 최대 58.1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2000년대 이후 학력 간 임금격차가 증가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2000년 이후 확대되고 있는 고학력화 경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표 5-2〉 대졸 이상 대비 고졸 임금의 상대적 분포 변화(1980~2009)

(단위: %)

	1980	1990	1997	2002	2009
1분위	72.6	54.6	40.5	31.9	31.0
2분위	7.5	12.4	12.2	15.9	17.4
3분위	5.7	8.2	10.8	12.7	11.7
4분위	4.6	7.1	9.3	11.1	10.5
5분위	3.3	5.7	7.5	9.0	8.4
6분위	2.4	4.6	5.9	6.6	7.3
7분위	1.7	3.5	6.2	4.9	5.6
8분위	1.0	2.1	3.8	3.9	4.4
9분위	0.8	1.2	2.5	2.8	2.4
10분위	0.4	0.5	1.3	1.2	1.3

이처럼 학력 간의 소득을 비교할 때 평균과 같이 모수화된 수치의 차이만을 비교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전체 소득분포상의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졸과 대졸 이상 간의 상대적 소득분포와 그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대졸 이상 월평균 임금의 10분위 각 구간별로 고졸 소득자 비율의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5-2>는 대졸 이상 대비 고졸 임금의 상대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고졸자들이 대졸 이상의 하위임금구간에 과다 분포되어 있고 상위임금 구간에는 과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 고졸자들의 경우 72.6%가 대졸 이상의 최하위 10% 구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대졸 이상의 최상위 10% 구간의 임금을 받는 고졸자들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극단적 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데 1997년에는 대졸 이상의 최하위 10%의 임금을 받는 고졸 노동자는 40.5%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감소경향이 둔화되거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졸 이상의 최하위 10%의 임금을 받는 고졸 노동자는 2002년 31.9%에서 2009년 31.0%로 거의 줄지 않았고 2분위의 임금을 받는 고졸 노동자는 15.9%에서 17.4%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대졸 이상의 최상위 10%의 임금을 받는 고졸 노동자들의 추세도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1997년 1.3%에서 2009년 1.3%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고졸과 대졸 이상 간 소득 격차 추세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 분포에 있어서 최근까지도 대졸 이상 최하위 10% 임금에 대해 고졸자가 3배 이상 많다는 점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표 5-3〉 300인 이상 기업 학력별 신규채용 추이(2002~2009)

(단위: %)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총합
2009	3.7	23.2	21.5	51.6	100
2008	3.4	27.7	21.8	47.0	100
2007	3.2	31.2	21.7	44.0	100
2006	6.1	32.8	19.1	42.0	100
2005	7.3	36.6	16.9	39.2	100
2004	7.5	42.0	18.5	32.1	100
2003	9.5	38.0	15.4	37.1	100
2002	8.9	39.7	13.5	37.9	100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1980~2007),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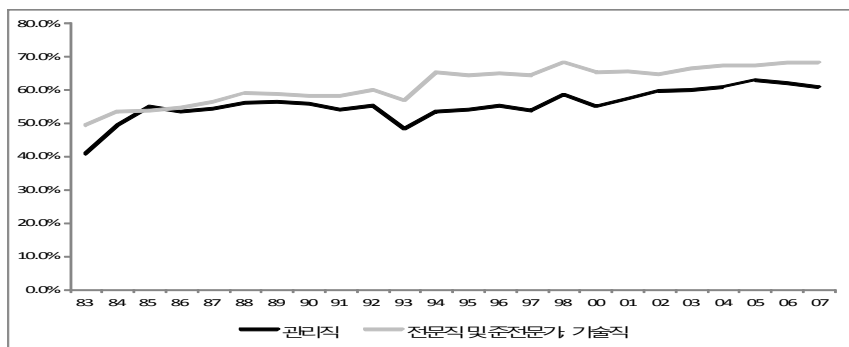
2000년 이후 대졸과 고졸 간 임금격차와 관련 몇 가지 원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표 4-3>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학력별 신규채

용 추이를 임금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02년부터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임금조사에서 입사 연월에 관한 정보를 이때부터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신규채용인원 중 고졸 비중은 2004년 42.0%까지 증가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9년 23.2%로 절반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대학 진학 증가로 고졸자의 노동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고졸자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으며 대졸 이상과 고졸 간의 임금 격차 확대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림 5-1] 관리직 및 전문직의 대졸이상 비율(1983~2007)

(단위:%)



자료: 통계청(1983~2007).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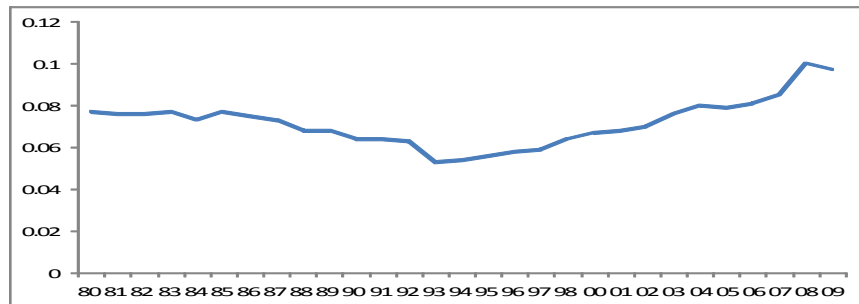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5-1]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해당하는 관리직 및 전문직의 대졸 이상 비중의 시계열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고등교육의 확대라는 측면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각각 관리

직의 경우 대졸 이상의 비중은 1983년 40.8%에서 2007년 60.9%까지 확대되었다. 전문가 및 준전문가, 기술직의 경우에도 대졸 이상의 비중이 49.5%에서 68.4%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졸자 공급의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고졸자들의 괜찮은 일자리 진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임금함수 추정을 통해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를 분해할 필요가 있다. <표 5-3>부터 <표 5-5>는 임금함수로 추정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연수의 회귀계수는 추가적인 1년의 교육투자에 따른 수익률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2] 교육투자수익률의 변화(1980~2009)



주: 투자수익률 계수는 임금함수에서 추정된 교육연수의 회귀계수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1980~2007),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2009).

[그림 5-2]는 교육투자수익률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교육투자 수익률은 1980년 약 8%에서 1993년 약 5%로 하락하였으나 199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 1980년 수준인 8%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10%까지 확대되었다.

〈표 5-4〉 학력별 임금격차 추정 결과(1980~1989)

	1980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교육연수	.077(.000)***	.076(.000)***	.076(.000)***	.077(.000)***	.073(.000)***
종사상 규모					
30~100명	.014(.000)***	.056(.000)***	.052(.000)***	.047(.000)***	.032(.000)***
100~299명	.080(.000)***	.078(.000)***	.091(.000)***	.094(.000)***	.075(.000)***
300~499명	.069(.000)***	.095(.000)***	.137(.000)***	.120(.000)***	.105(.000)***
500명 이상	.070(.000)***	.084(.000)***	.130(.000)***	.120(.000)***	.106(.000)***
성별	.354(.000)***	.318(.000)***	.321(.000)***	.321(.000)***	.312(.000)***
연령	.050(.000)***	.050(.000)***	.048(.000)***	.046(.000)***	.047(.000)***
연령(제곱)	-.001(.000)***	-.001(.000)***	-.001(.000)***	.000(.000)***	-.001(.000)***
경력					
1~3년	.109(.000)***	.127(.000)***	.104(.000)***	.116(.000)***	.102(.000)***
3~5년	.213(.000)***	.233(.000)***	.206(.000)***	.213(.000)***	.197(.000)***
6~9년	.335(.000)***	.365(.000)***	.346(.000)***	.342(.000)***	.329(.000)***
10년 이상	.476(.000)***	.527(.000)***	.522(.000)***	.529(.000)***	.526(.000)***
정상노동일수	.006(.000)***	.004(.000)***	.003(.000)***	.007(.000)***	.006(.000)***
노동시간	.001(.000)***	.001(.000)***	.001(.000)***	.001(.000)***	.001(.000)***
절편	10.566(.000)***	10.594(.000)***	10.640(.000)***	10.687(.000)***	10.804(.000)***
R제곱	.652	.651	.650	.651	.652
조정된 R제곱	.652	.651	.650	.651	.652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교육연수	.077(.000)***	.075(.000)***	.073(.000)***	.068(.000)***	.068(.000)***
종사상 규모					
30~100명	.042(.000)***	.048(.000)***	.049(.000)***	.069(.000)***	.050(.000)***
10~299명	.078(.000)***	.088(.000)***	.099(.000)***	.136(.000)***	.122(.000)***
300~499명	.102(.000)***	.103(.000)***	.123(.000)***	.164(.000)***	.160(.000)***
500명 이상	.092(.000)***	.118(.000)***	.132(.000)***	.210(.000)***	.234(.000)***
성별	.306(.000)***	.299(.000)***	.294(.000)***	.299(.000)***	.288(.000)***
연령	.046(.000)***	.045(.000)***	.039(.000)***	.037(.000)***	.035(.000)***
연령(제곱)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경력					
1~3년	.101(.000)***	.097(.000)***	.094(.000)***	.082(.000)***	.076(.000)***
3~5년	.191(.000)***	.185(.000)***	.177(.000)***	.174(.000)***	.146(.000)***
6~9년	.325(.000)***	.329(.000)***	.321(.000)***	.307(.000)***	.278(.000)***
10년 이상	.518(.000)***	.510(.000)***	.510(.000)***	.509(.000)***	.480(.000)***
정상노동일수	.006(.000)***	.010(.000)***	.016(.000)***	.015(.000)***	.010(.000)***
노동시간	.001(.000)***	.000(.000)***	.000(.000)***	.001(.000)***	.001(.000)***
절편	10.818(.000)***	10.926(.000)***	10.914(.000)***	10.995(.000)***	11.212(.000)***
R제곱	.653	.650	.651	.640	.607
조정된 R제곱	.653	.650	.651	.640	.607

* p < .10 ** p < .05 *** p < .01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1980~2007),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2009).

주: 연도별 자료에 가중치(probability weights) 사용하여 분석

〈표 5-5〉 학력별 임금격차 추정 결과(1990~1999)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교육연수	.064(.000)***	.064(.000)***	.063(.000)***	.053(.000)***	.054(.000)***
종사상 규모					
30~100명	.043(.000)***	.009(.000)***	.021(.000)***	.000(.516)	-.015(.000)***
100~299명	.073(.000)***	.026(.000)***	.032(.000)***	.026(.000)***	.014(.000)***
300~499명	.124(.000)***	.070(.000)***	.028(.000)***	.039(.000)***	.022(.000)***
500명 이상	.190(.000)***	.127(.000)***	.078(.000)***	.072(.000)***	.076(.000)***
성별	.291(.000)***	.276(.000)***	.275(.000)***	.302(.000)***	.284(.000)***
연령	.036(.000)***	.035(.000)***	.031(.000)***	.036(.000)***	.033(.000)***
연령(제곱)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경력					
1~3년	.085(.000)***	.079(.000)***	.071(.000)***	.082(.000)***	.061(.000)***
3~5년	.163(.000)***	.145(.000)***	.142(.000)***	.168(.000)***	.139(.000)***
6~9년	.280(.000)***	.260(.000)***	.253(.000)***	.267(.000)***	.246(.000)***
10년 이상	.476(.000)***	.468(.000)***	.458(.000)***	.460(.000)***	.437(.000)***
정상노동일수	.010(.000)***	.013(.000)***	.016(.000)***	.017(.000)***	.014(.000)***
노동시간	.001(.000)***	.001(.000)***	.001(.000)***	.001(.000)***	.001(.000)***
절편	11.412(.000)***	11.411(.000)***	11.559(.000)***	11.543(.000)***	11.677(.000)***
R제곱	.610	.590	.646	.585	.565
조정된 R제곱	.610	.590	.646	.585	.565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교육연수	.056(.000)***	.058(.000)***	.059(.000)***	.064(.000)***	.064(.000)***
종사상 규모					
30~100명	-.013(.000)***	-.005(.000)***	-.018(.000)***	-.010(.000)***	.024(.000)***
100~299명	.018(.000)***	.000(.415)	-.004(.000)***	.010(.000)***	.060(.000)***
300~499명	.058(.000)***	.057(.000)***	.034(.000)***	.064(.000)***	.087(.000)***
500명 이상	.085(.000)***	.093(.000)***	.089(.000)***	.120(.000)***	.150(.000)***
성별	.268(.000)***	.249(.000)***	.248(.000)***	.238(.000)***	.236(.000)***
연령	.036(.000)***	.036(.000)***	.033(.000)***	.039(.000)***	.039(.000)***
연령(제곱)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경력					
1~3년	.057(.000)***	.066(.000)***	.067(.000)***	.050(.000)***	.083(.000)***
3~5년	.133(.000)***	.132(.000)***	.134(.000)***	.113(.000)***	.157(.000)***
6~9년	.243(.000)***	.242(.000)***	.247(.000)***	.218(.000)***	.260(.000)***
10년 이상	.417(.000)***	.432(.000)***	.435(.000)***	.399(.000)***	.440(.000)***
정상노동일수	.014(.000)***	.009(.000)***	.010(.000)***	.017(.000)***	.016(.000)***
노동시간	.001(.000)***	.001(.000)***	.001(.000)***	.000(.000)***	.001(.000)***
절편	11.734(.000)***	12.008(.000)***	12.055(.000)***	11.633(.000)***	11.623(.000)***
R제곱	.559	.525	.512	.508	.498
조정된 R제곱	.559	.525	.512	.508	.498

* p < .10 ** p < .05 *** p < .01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1980~2007),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2009).
 주: 연도별 자료에 가중치(probability weights) 사용하여 분석

〈표 5-6〉 학력별 임금격차 추정 결과(2000~2009)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교육연수	.067(.000)***	.068(.000)***	.070(.000)***	.076(.000)***	.080(.000)***
종사상 규모					
30~100명	.030(.000)***	.045(.000)***	.049(.000)***	.017(.000)***	.012(.000)***
100~299명	.079(.000)***	.092(.000)***	.067(.000)***	.055(.000)***	.054(.000)***
300~499명	.135(.000)***	.130(.000)***	.119(.000)***	.096(.000)***	.102(.000)***
500명 이상	.162(.000)***	.197(.000)***	.147(.000)***	.125(.000)***	.146(.000)***
성별	.231(.000)***	.221(.000)***	.256(.000)***	.240(.000)***	.237(.000)***
연령	.039(.000)***	.038(.000)***	.045(.000)***	.045(.000)***	.043(.000)***
연령(제곱)	.000(.000)***	.000(.000)***	-.001(.000)***	-.001(.000)***	-.001(.000)***
경력					
1~3년	.076(.000)***	.071(.000)***	.074(.000)***	.067(.000)***	.079(.000)***
3~5년	.161(.000)***	.159(.000)***	.159(.000)***	.154(.000)***	.171(.000)***
6~9년	.256(.000)***	.246(.000)***	.247(.000)***	.252(.000)***	.288(.000)***
10년 이상	.439(.000)***	.437(.000)***	.429(.000)***	.448(.000)***	.484(.000)***
정상노동일수	.019(.000)***	.014(.000)***	.007(.000)***	.007(.000)***	.010(.000)***
노동시간	.001(.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절편	11.589(.000)***	11.837(.000)***	11.912(.000)***	4.960(.000)***	4.806(.000)***
R제곱	.489	.476	.469	.469	.479
조정된 R제곱	.489	.476	.469	.469	.479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교육연수	.079(.000)***	.081(.000)***	.085(.000)***	.100(.000)***	.097(.000)***
종사상 규모					
30~100명	.022(.000)***	.022(.000)***	.049(.000)***	.031(.000)***	.051(.000)***
100~299명	.035(.000)***	.026(.000)***	.050(.000)***	.054(.000)***	.092(.000)***
300~499명	.091(.000)***	.072(.000)***	.082(.000)***	.098(.000)***	.117(.000)***
500명 이상	.144(.000)***	.180(.000)***	.229(.000)***	.202(.000)***	.221(.000)***
성별	.229(.000)***	.222(.000)***	.208(.000)***	.116(.000)***	.139(.000)***
연령	.043(.000)***	.046(.000)***	.047(.000)***	.052(.000)***	.051(.000)***
연령(제곱)	.000(.000)***	-.001(.000)***	-.001(.000)***	-.001(.000)***	-.001(.000)***
경력					
1~3년	.076(.000)***	.071(.000)***	.071(.000)***	.063(.000)***	.078(.000)***
3~5년	.158(.000)***	.153(.000)***	.153(.000)***	.135(.000)***	.142(.000)***
6~9년	.268(.000)***	.264(.000)***	.264(.000)***	.239(.000)***	.240(.000)***
10년 이상	.462(.000)***	.472(.000)***	.487(.000)***	.461(.000)***	.473(.000)***
정상노동일수	.008(.000)***	.003(.000)***	.000(.000)***	-.019(.000)***	-.007(.000)***
노동시간	.000(.000)***	.000(.000)***	.001(.000)***	.002(.000)***	.002(.000)***
절편	4.951(.000)***	5.013(.000)***	4.937(.000)***	4.756(.000)***	4.428(.000)***
R제곱	.449	.461	.457	.420	.412
조정된 R제곱	.449	.461	.457	.420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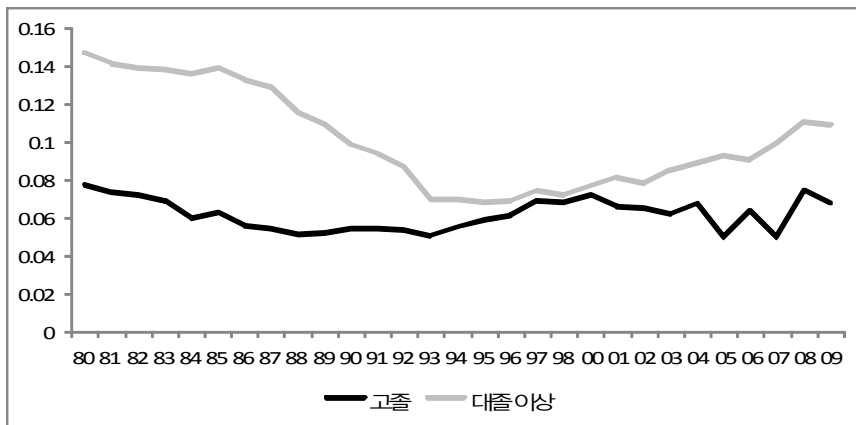
* p < .10 ** p < .05 *** p < .01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1980~2007),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2009).

주: 연도별 자료에 가중치(probability weights) 사용하여 분석

<표 5-6>부터 <표 5-8>은 동일한 임금함수에서 교육수준 대신 중졸 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 이상으로 교육수준을 구분한 후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투입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각 교육수준별 더미변수의 회귀계수 값에 각 교육수준별 교육연수(고졸은 3년, 대졸 이상은 4년)로 나누어 주면 학력 간 투자수익률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5-3] 고졸 및 대졸이상 간 투자수익률의 변화(1980~2009)



주: 투자수익률 계수는 임금함수에서 추정된 교육연수의 회귀계수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1980~2007),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2009).

[그림 5-3]은 고졸자와 대졸 이상 간 교육투자수익률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80년 고졸자의 투자수익률은 약 8%인데 반해 대졸 이상은 약 15%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1997년 고졸자와 대졸 이상의 투자수익률은 약 7%로 차이가 없어졌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어 2009년 전자는 약 7%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후자는 약 11%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5-7〉 교육수준 범주별 임금격차 추정 결과(1980~1989)

	1980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학력					
고졸	.234(.000)***	.230(.000)***	.218(.000)***	.209(.000)***	.181(.000)***
전문대졸	.526(.000)***	.504(.000)***	.479(.000)***	.458(.000)***	.404(.000)***
대졸이상	.822(.000)***	.790(.000)***	.775(.000)***	.764(.000)***	.725(.000)***
종사상 규모					
30~100명	.006(.000)***	.041(.000)***	.044(.000)***	.035(.000)***	.015(.000)***
100~299명	.076(.000)***	.065(.000)***	.085(.000)***	.081(.000)***	.061(.000)***
300~499명	.076(.000)***	.094(.000)***	.134(.000)***	.113(.000)***	.091(.000)***
500명 이상	.081(.000)***	.090(.000)***	.135(.000)***	.118(.000)***	.099(.000)***
성별					
연령	.381(.000)***	.343(.000)***	.350(.000)***	.346(.000)***	.332(.000)***
연령(제공)	.046(.000)***	.046(.000)***	.043(.000)***	.040(.000)***	.042(.000)***
연령	.000(.000)***	-.001(.000)***	.000(.000)***	.000(.000)***	.000(.000)***
경력					
1~3년	.113(.000)***	.127(.000)***	.108(.000)***	.120(.000)***	.105(.000)***
3~5년	.219(.000)***	.237(.000)***	.216(.000)***	.222(.000)***	.206(.000)***
6~9년	.346(.000)***	.374(.000)***	.359(.000)***	.357(.000)***	.345(.000)***
10년 이상	.477(.000)***	.535(.000)***	.534(.000)***	.547(.000)***	.546(.000)***
정상노동일수	.005(.000)***	.002(.000)***	.001(.000)***	.004(.000)***	.004(.000)***
노동시간	.001(.000)***	.001(.000)***	.001(.000)***	.001(.000)***	.001(.000)***
절편	11.262(.000)***	11.305(.000)***	11.398(.000)***	11.474(.000)***	11.559(.000)***
R제곱	.673	.668	.666	.668	.669
조정된 R제곱	.673	.668	.666	.668	.669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학력					
고졸	.189(.000)***	.169(.000)***	.165(.000)***	.154(.000)***	.157(.000)***
전문대졸	.411(.000)***	.374(.000)***	.343(.000)***	.317(.000)***	.307(.000)***
대졸이상	.747(.000)***	.703(.000)***	.683(.000)***	.616(.000)***	.595(.000)***
종사상 규모					
30~100명	.028(.000)***	.035(.000)***	.034(.000)***	.060(.000)***	.041(.000)***
100~299명	.067(.000)***	.080(.000)***	.089(.000)***	.129(.000)***	.115(.000)***
300~499명	.090(.000)***	.097(.000)***	.111(.000)***	.156(.000)***	.153(.000)***
500명 이상	.085(.000)***	.114(.000)***	.124(.000)***	.204(.000)***	.226(.000)***
성별					
연령	.329(.000)***	.323(.000)***	.318(.000)***	.316(.000)***	.306(.000)***
연령(제공)	.040(.000)***	.037(.000)***	.032(.000)***	.031(.000)***	.029(.000)***
연령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경력					
1~3년	.106(.000)***	.100(.000)***	.100(.000)***	.086(.000)***	.083(.000)***
3~5년	.202(.000)***	.196(.000)***	.190(.000)***	.183(.000)***	.163(.000)***
6~9년	.343(.000)***	.347(.000)***	.341(.000)***	.323(.000)***	.299(.000)***
10년 이상	.545(.000)***	.538(.000)***	.540(.000)***	.534(.000)***	.511(.000)***
정상노동일수	.005(.000)***	.009(.000)***	.014(.000)***	.014(.000)***	.009(.000)***
노동시간	.001(.000)***	.000(.000)***	.001(.000)***	.001(.000)***	.001(.000)***
절편	11.609(.000)***	11.705(.000)***	11.715(.000)***	11.721(.000)***	11.942(.000)***
R제곱	.670	.666	.667	.654	.618
조정된 R제곱	.670	.666	.667	.654	.618

* p < .10 ** p < .05 *** p < .01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1980~2007),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2009).

〈표 5-8〉 교육수준 범주별 임금격차 추정 결과(1990~1999)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학력					
고졸	.163(.000)***	.164(.000)***	.161(.000)***	.152(.000)***	.166(.000)***
전문대졸	.296(.000)***	.302(.000)***	.305(.000)***	.248(.000)***	.265(.000)***
대졸이상	.557(.000)***	.539(.000)***	.510(.000)***	.432(.000)***	.446(.000)***
중사상 규모					
30~100명	.033(.000)***	.004(.000)***	.014(.000)***	-.006(.000)***	-.020(.000)***
100~299명	.063(.000)***	.019(.000)***	.020(.000)***	.019(.000)***	.009(.000)***
300~499명	.115(.000)***	.063(.000)***	.018(.000)***	.031(.000)***	.015(.000)***
500명 이상	.179(.000)***	.116(.000)***	.066(.000)***	.064(.000)***	.067(.000)***
성별	.306(.000)***	.288(.000)***	.287(.000)***	.313(.000)***	.294(.000)***
연령	.030(.000)***	.029(.000)***	.025(.000)***	.032(.000)***	.030(.000)***
연령(제공)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경력					
1~3년	.089(.000)***	.083(.000)***	.074(.000)***	.083(.000)***	.064(.000)***
3~5년	.175(.000)***	.159(.000)***	.154(.000)***	.174(.000)***	.145(.000)***
6~9년	.297(.000)***	.278(.000)***	.274(.000)***	.278(.000)***	.258(.000)***
10년 이상	.504(.000)***	.495(.000)***	.492(.000)***	.481(.000)***	.459(.000)***
정상노동일수	.009(.000)***	.012(.000)***	.014(.000)***	.015(.000)***	.013(.000)***
노동시간	.001(.000)***	.001(.000)***	.001(.000)***	.001(.000)***	.001(.000)***
절편	12.091(.000)***	12.089(.000)***	12.255(.000)***	12.098(.000)***	12.222(.000)***
R제곱	.619	.600	.653	.587	.567
조정된 R제곱	.619	.600	.653	.587	.567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학력					
고졸	.178(.000)***	.184(.000)***	.186(.000)***	.208(.000)***	.205(.000)***
전문대졸	.281(.000)***	.284(.000)***	.287(.000)***	.313(.000)***	.286(.000)***
대졸이상	.453(.000)***	.462(.000)***	.468(.000)***	.506(.000)***	.496(.000)***
중사상 규모					
30~100명	-.020(.000)***	-.008(.000)***	-.023(.000)***	-.015(.000)***	.034(.000)***
100~299명	.011(.000)***	-.004(.000)***	-.011(.000)***	.005(.000)***	.070(.000)***
300~499명	.049(.000)***	.051(.000)***	.026(.000)***	.058(.000)***	.096(.000)***
500명 이상	.075(.000)***	.086(.000)***	.079(.000)***	.112(.000)***	.159(.000)***
성별	.278(.000)***	.259(.000)***	.257(.000)***	.246(.000)***	.245(.000)***
연령	.034(.000)***	.035(.000)***	.032(.000)***	.038(.000)***	.037(.000)***
연령(제공)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경력					
1~3년	.060(.000)***	.070(.000)***	.069(.000)***	.052(.000)***	.082(.000)***
3~5년	.139(.000)***	.136(.000)***	.138(.000)***	.116(.000)***	.156(.000)***
6~9년	.252(.000)***	.249(.000)***	.252(.000)***	.222(.000)***	.257(.000)***
10년 이상	.436(.000)***	.448(.000)***	.449(.000)***	.412(.000)***	.440(.000)***
정상노동일수	.013(.000)***	.008(.000)***	.010(.000)***	.017(.000)***	.016(.000)***
노동시간	.001(.000)***	.001(.000)***	.001(.000)***	.001(.000)***	.001(.000)***
절편	12.274(.000)***	12.544(.000)***	12.600(.000)***	12.225(.000)***	12.164(.000)***
R제곱	.561	.527	.514	.509	.500
조정된 R제곱	.561	.527	.514	.509	.500

* p < .10 ** p < .05 *** p < .01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1980~2007),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2009).

〈표 5-9〉 교육수준 범주별 임금격차 추정 결과(2000~2009)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학력					
고졸	.217(.000)***	.198(.000)***	.197(.000)***	.187(.000)***	.204(.000)***
전문대졸	.324(.000)***	.315(.000)***	.282(.000)***	.297(.000)***	.323(.000)***
대졸이상	.525(.000)***	.524(.000)***	.510(.000)***	.529(.000)***	.562(.000)***
종사상 규모					
30~100명	.027(.000)***	.040(.000)***	.048(.000)***	.015(.000)***	.011(.000)***
100~299명	.075(.000)***	.086(.000)***	.068(.000)***	.056(.000)***	.056(.000)***
300~499명	.129(.000)***	.122(.000)***	.122(.000)***	.100(.000)***	.105(.000)***
500명 이상	.154(.000)***	.190(.000)***	.151(.000)***	.127(.000)***	.151(.000)***
성별	.236(.000)***	.226(.000)***	.257(.000)***	.242(.000)***	.239(.000)***
연령(제공)	.038(.000)***	.036(.000)***	.044(.000)***	.044(.000)***	.043(.000)***
연령	.000(.000)***	.000(.000)***	-.001(.000)***	-.001(.000)***	.000(.000)***
경력					
1~3년	.078(.000)***	.073(.000)***	.075(.000)***	.068(.000)***	.080(.000)***
3~5년	.162(.000)***	.162(.000)***	.160(.000)***	.156(.000)***	.172(.000)***
6~9년	.257(.000)***	.250(.000)***	.248(.000)***	.253(.000)***	.289(.000)***
10년 이상	.446(.000)***	.448(.000)***	.431(.000)***	.452(.000)***	.486(.000)***
정상노동일수	.019(.000)***	.014(.000)***	.007(.000)***	.007(.000)***	.011(.000)***
노동시간	.001(.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절편	12.181(.000)***	12.463(.000)***	12.590(.000)***	5.704(.000)***	5.576(.000)***
R제곱	.492	.481	.467	.464	.475
조정된 R제곱	.492	.481	.467	.464	.474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학력					
고졸	.150(.000)***	.192(.000)***	.151(.000)***	.225(.000)***	.203(.000)***
전문대졸	.276(.000)***	.314(.000)***	.296(.000)***	.383(.000)***	.369(.000)***
대졸이상	.523(.000)***	.555(.000)***	.547(.000)***	.669(.000)***	.641(.000)***
종사상 규모					
30~100명	.021(.000)***	.022(.000)***	.048(.000)***	.032(.000)***	.052(.000)***
100~299명	.035(.000)***	.028(.000)***	.052(.000)***	.057(.000)***	.095(.000)***
300~499명	.091(.000)***	.074(.000)***	.088(.000)***	.105(.000)***	.125(.000)***
500명 이상	.147(.000)***	.184(.000)***	.235(.000)***	.212(.000)***	.231(.000)***
성별	.231(.000)***	.223(.000)***	.210(.000)***	.120(.000)***	.141(.000)***
연령(제공)	.042(.000)***	.046(.000)***	.047(.000)***	.053(.000)***	.053(.000)***
연령	-.001(.000)***	-.001(.000)***	-.001(.000)***	-.001(.000)***	-.001(.000)***
경력					
1~3년	.076(.000)***	.072(.000)***	.071(.000)***	.062(.000)***	.078(.000)***
3~5년	.158(.000)***	.154(.000)***	.154(.000)***	.135(.000)***	.143(.000)***
6~9년	.269(.000)***	.265(.000)***	.265(.000)***	.241(.000)***	.242(.000)***
10년 이상	.465(.000)***	.474(.000)***	.491(.000)***	.465(.000)***	.475(.000)***
정상노동일수	.008(.000)***	.004(.000)***	.001(.000)***	-.019(.000)***	-.007(.000)***
노동시간	.000(.000)***	.000(.000)***	.000(.000)***	.002(.000)***	.002(.000)***
절편	5.762(.000)***	5.805(.000)***	5.790(.000)***	5.714(.000)***	5.350(.000)***
R제곱	.447	.457	.453	.412	.405
조정된 R제곱	.447	.457	.453	.412	.405

* p < .10 ** p < .05 *** p < .01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1980~2007),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2009).

이러한 결과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고졸자와 대졸 이상 간의 소득 격차가 2000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경향성이 매우 뚜렷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으며 고학력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예견하게 해준다.

2. 교육수준별 자산 분포 추이

여기에서는 KLIPS를 이용하여 학력 간 자산격차의 추세를 살펴보고 살펴보고자 한다. <표 5-8>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고졸 가구주와 대졸 이상 가구주의 자산격차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임금격차의 추세와는 달리 일관된 추세를 보여 주지 않고 있다.

〈표 5-10〉 학력별 순자산 격차 추이(1999~2008)

(가구주 기준)

	고졸(B)	대졸 이상(A)	순자산격차(A-B)
2008	100	229.33	129.33
2007	100	267.90	167.90
2006	100	191.76	91.76
2005	100	191.97	91.97
2004	100	239.26	139.26
2003	100	309.72	209.72
2002	100	145.73	45.73
2001	100	103.64	3.64
2000	100	116.45	16.45
1999	100	194.74	9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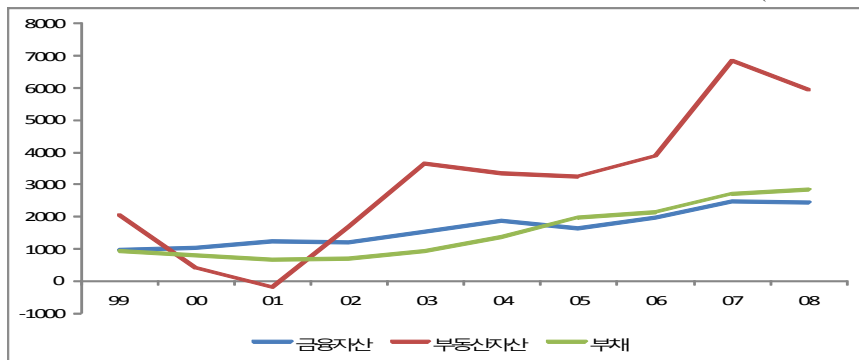
주: 자산격차는 고졸 가구주의 순자산(=자산 - 부채)을 100으로 할 때 대졸 이상 가구주의 순자산의 차이이며 횡단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

자료: 한국노동연구원(1999~2008), 「한국노동패널조사」.

1999년에서 2001년까지 고졸과 대졸 이상 간 자산격차는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2003년까지 크게 증가하였고 다시 2006년까지 감소하다가 2007년 증가, 2008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4] 자산유형별 고졸 및 대졸이상 간 격차(1999~2008)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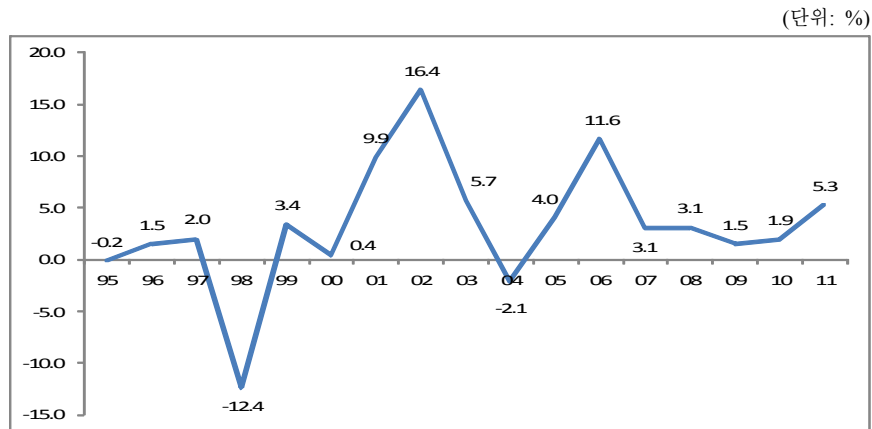


주: 2005년 물가지수를 이용해 표준화한 값이며 횡단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
 자료: 한국노동연구원(1999~2008). 「한국노동패널조사」.

이처럼 고졸과 대졸 이상 간 자산격차의 연간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자산 유형별로 연간 변동 추세를 분리하여 살펴보았는데 [그림 4-4]는 자산 유형별 고졸과 대졸 이상 간 실제 자산 및 부채액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임금 격차와는 달리 자산 격차의 극심한 연간 변동은 주로 부동산 자산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02년 이후 고졸과 대졸 이상 간 자산 격차의 확대는 주로 부동산 자산의 변동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금융자산과 부채는 소폭이긴 하지만 그 격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부동산 자산에 따른 격차는 매년 크게 바뀌었고 금융자산 격차는 증가하고 있으며 자산의 크기만큼 부채

의 크기도 고졸보다는 대졸 이상 집단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5-5] 부동산 가격 추세(1995~2011)



주: 전년말 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1995~2011).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 자산 격차의 추세와 관련하여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어떤 변동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통해 전년도 말 대비 당해연도 증감률로 부동산 가격 추세를 살펴보면, 고졸 및 대졸 이상 간 부동산 자산 격차가 증가한 2002년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전년대비 16.4%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및 대졸 이상 간 부동산 자산격차는 2004년 말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의 부동산 가격은 전년대비 -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부동산 자산 격차가 증가한 2006년의 경우도 부동산 가격이 11.6%p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고졸과 대졸 이상 간 부동산 자산 격차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표 5-11〉 대졸 이상 대비 고졸 순자산의 상대적 분포 변화(1999~2008)

(단위: %)

	1999	2002	2004	2006	2008
1분위	2.47	2.98	6.67	5.81	6.40
2분위	6.22	8.17	11.70	12.08	10.07
3분위	18.84	21.28	19.56	19.13	17.51
4분위	2.71	2.19	1.48	1.67	1.11
5분위	24.70	22.43	20.25	19.56	22.11
6분위	18.96	17.52	13.65	12.43	12.63
7분위	10.60	8.94	9.39	9.79	9.10
8분위	10.10	10.28	9.51	10.01	9.29
9분위	3.67	6.64	5.41	5.55	6.17
10분위	1.72	2.37	2.37	3.96	5.60

주: 제시한 값은 각 비교년도별로 대졸 순자산의 10분위를 구하고 각 분위 구간별 고졸 순자산 비율을 구한 값임. 5분위의 경우 가장 많은 사례수를 보여주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0인 값이 포함되어 높게, 4분위는 낮게 나타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1999~2008). 「한국노동패널조사」.

이번에는 자산 격차의 상대적 분포를 살펴보면 <표 5-9>는 대졸 이상 대비 고졸 순자산의 상대적 분포의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임금으로 본 소득의 상대적 분포와는 판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경우 고졸 가구주는 대졸 이상의 하위 30%에서 60% 사이에 몰려 있으며 상위 20%와 하위 10%에는 그 비중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추세를 보면, 최하위(1분위) 10%와 최상위(10분위) 10%의 비중이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최근에는 고졸과 대졸이상 간 분포 양상이 점차 유사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표 5-12〉 학력별 순자산 격차에 관한 분위귀분석 결과(가구주 기준)

교육수준 (기준=중졸이하)	2분위(7=0.2)		4분위(7=0.4)		6분위(7=0.6)		8분위(7=0.8)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고졸	-0.0003	(.0006)	0.0155	(.0057)	**	0.1486	(.0208)	***	0.6154	(.0613)	***
전문대졸	0.0011	(.0010)	0.0460	(.0178)	***	0.2834	(.044)	***	0.9570	(.1534)	***
대학이상	0.0086	(.0011)	0.0923	(.0095)	***	0.3510	(.0316)	***	0.9759	(.0955)	***
가구주 연령	-0.0009	(.0001)	-0.0040	(.0012)	***	-0.0105	(.0063)	***	-0.0883	(.0209)	***
가구주 연령제곱	0.0000	(.0000)	0.0001	(.0000)	***	0.0003	(.0001)	***	0.0017	(.0002)	***
가구주 직업지위	0.0000	(.0000)	0.0000	(.0001)		0.0005	(.0006)		-0.0022	(.0014)	
지역(기준=도)	-0.0035	(.0005)	-0.0554	(.0044)	***	-0.2625	(.0214)	***	-0.7702	(.0657)	***
가구소득(log변환)	0.0000	(.0000)	0.0001	(.0000)	***	0.0002	(.0000)	***	0.0005	(.0000)	***
연도(기준=1999)											
2001년	-0.0049	(.0009)	-0.0870	(.0191)	***	-0.2980	(.0743)	***	-0.4277	(.1941)	*
2002년	-0.0055	(.0009)	-0.0982	(.0232)	***	-0.3898	(.0808)	***	-0.9554	(.1640)	***
2003년	-0.0079	(.0011)	-0.1140	(.0212)	***	-0.4947	(.0965)	***	-0.9084	(.1367)	***
2004년	-0.0117	(.0016)	-0.1571	(.0198)	***	-0.6328	(.0741)	***	-1.3196	(.1647)	***
2005년	-0.0125	(.0017)	-0.1809	(.0214)	***	-0.7423	(.0777)	***	-1.7080	(.1512)	***
2006년	-0.0115	(.0015)	-0.1732	(.0202)	***	-0.7486	(.0751)	***	-1.7187	(.1562)	***
2007년	-0.0134	(.0019)	-0.1964	(.0222)	***	-0.7891	(.0804)	***	-1.9040	(.1679)	***
2008년	-0.0133	(.0019)	-0.1934	(.0186)	***	-0.7875	(.0818)	***	-1.9927	(.1884)	***
2009년	-0.0157	(.0024)	-0.2156	(.0218)	***	-0.8724	(.0706)	***	-2.0814	(.1685)	***
상수	0.0165	(.0034)	0.1266	(.0299)	***	0.5231	(.1387)	***	2.6046	(.4392)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1999-2008). 「한국노동패널조사」.

마지막으로 학력별 순자산 격차에 관한 분위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5-10>은 순자산 분포를 20%($\tau=0.2$), 40%($\tau=0.4$), 60%($\tau=0.6$), 80%($\tau=0.8$)로 점차 높여가면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순자산의 하위 20%인 경우에 중졸 이하 대비 고졸, 전문대졸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대졸 이상의 경우에만 순자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의 40%와 60%, 80%인 경우에는 중졸 이하보다 순자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자산이 상위그룹으로 올라갈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력별 순자산의 격차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유의미하며 순자산의 큰 집단일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이 절에서는 고학력화와 관련하여 소득과 자산을 통해 고졸자와 대졸 이상 간의 격차가 존재하는지, 경제적 보상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졸과 대졸 이상 간의 소득격차는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투자수익률은 1993년 약 5%까지 하락하였다가 2003년에 1980년대 수준이 약 8%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10%까지 확대되었다. 고졸과 대졸 이상의 투자수익률을 비교해 본 결과, 1980년 투자수익률은 고졸과 대졸 이상 간 약 7%p의 차이를 보

여주었다가 1997년 차이가 없어졌으나 다시 증가하여 2009년 약 4%p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으로 살펴본 고졸과 대졸 이상의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간 추세에 있어서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주로 부동산 자산의 변동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순자산에 대한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학력별 순자산의 격차는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순자산의 큰 집단일수록 두 집단 간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종합적으로 경제적 보상에 있어서 소득이든 자산이든 학력 간 격차가 뚜렷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으며 소득에 있어서 2000년 이후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자산의 경우 부동산 자산의 변동에 따라 자산 격차의 추세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 격차는 고학력화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역으로 고학력자 가진 높은 수준의 자원과 정보네트워크가 부동산 투자를 통한 경제적 보상 확대를 가져왔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경제적 보상이 고학력화의 원인인지 여부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동시에 2000년 이전의 상황은 경제적 보상이 고학력화의 원인인가에 관해 회의적인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최근 경제적 보상의 확대는 고학력화 현상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동시에 고졸과 대졸 이상 간 임금 및 자산 격차가 확대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의 고학력화 추세가 지속될 개연성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제 6 장

고학력화와 사회적 자본

제1절 서론

제2절 교육과 사회적 자본

제3절 고학력화가 사회적 자본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

제4절 결론 및 논의

제6장 | 고학력화와 사회적 자본

최지희

제1절 서론

교육이 개인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증가시켜 개인이 받는 경제적 보상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기본적인 주장으로 교육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는 신고전파 노동경제학의 주요 연구주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세계 각국에서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이같은 고학력화가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회의론이 일기 시작했으며 이와 함께 교육의 성과를 경제적 측면에서 비경제적인 측면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OECD, 2007; OECD 2010).

비경제적 성과를 포함하여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개별 연구자들 뿐 만 아니라 최근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의 주요 관심 영역으로서 정부 정책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측정, 평가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확대와 함께 교육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OECD는 최근 매

년 발행하는 교육지표집(Education at a Glance)에 교육의 사회적 성과(social outcomes of learning) 영역을 상설 지표영역에 포함시키는 등 OECD 회원국에서의 교육의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모니터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OECD, 2010; OECD, 2011).

한편,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개인과 국가의 경제적 수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경제적 발전과 함께 과연 사회가 바람직한 시민사회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긍정적 측면에서 개인 간의 접촉과 시민참여와 사회참여를 증가시켜 사회의 응집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장되어져 왔다(Coleman, 1988; Putnam, 1993).

이 장에서는 고학력화의 사회적 성과에 대해 개인과 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통한 지식과 경험의 축적, 즉 고학력화가 개인과 사회의 사회적 자본 및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고학력화의 사회적 성과와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²⁰⁾ 개인의 고학력화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2007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자료와 유럽의 2008~2009 「유럽사회조사(ESS)」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또한,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가 사회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2008~2009 ESS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초로 국가별 집계데이터(aggregate data)를 구축하고, 이 집계데이터에 기초하여 국가별 고학력화 수준과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20) 사회적 자본에는 여러 차원이 있으며 이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에는 개인에게는 이득을 주나 전체 사회에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제2절 교육과 사회적 자본

1. 교육의 성과와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인적자본과 함께 현대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중요하며 또한 서구 경제발전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서구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의 감소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개인 수준과 국가 수준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과연 사회적 자본의 감소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OECD 국가들의 교육규모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형식 및 비형식 교육에 투입되는 재정과 노력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연 교육에 대한 이같은 엄청난 투자에 대비하여 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정부 및 정책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응답 중 하나가 교육의 성과는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은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고 개인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반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 연구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비판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한 OECD 연구는 교육의 성과를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하는 입장의 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교육의 성과를 경제사회적 성과로 확대하는 견해는 첫째, 교육

의 투입 측면뿐만 아니라 성과 측면을 좀 더 강조한다는 점, 둘째,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을 개선해 나갈 근거를 제시해 준다는 점, 다음으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상호 의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 즉,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 등이다(OECD, 2007).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영역들을 중심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OECD가 2007년 발간한 사회적 성과 주제 보고서인 『사회적 성과의 이해(Understanding Social Outcomes of Learning)』에서 논의된 사회적 성과 변수들을 중심으로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논의 측정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사회적 성과 변수들은 각국의 교육정책 수립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사회적 자본 및 성과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영역들 중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영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사회적 성과에 관한 이론적 개괄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각국의 사회정책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보건과 건강, 시민 및 사회적 참여의 영역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시민 사회 참여(Civic and Social Engagement: CSE)는 다음에서 제시할 사회적 자본의 여러 특성과 영역들 중 시민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공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영역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다음에서 언급되겠지만, 사회적 자본은 광의의 개념에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 및 유럽 선진국들의 투표율 감소 현상 등은 이같은 긍정적 측면의 사회적 자본

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사회적 자본의 감소가 교육수준의 향상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사회적 자본의 이론과 개념

가. 사회적 자본 개념의 발전

사회적 자본은 현대 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데 중요하며 또한 민주자본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알려져 왔다. 사회적 자본은 계몽주의 시대 이후 ‘법’과 ‘합리성’이라는 형식적 제도에 의존해 온 ‘현대 사회’의 문화적 요소의 중요한 일부로서 중요시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자본 형성 정책은 종종 공공 정책에서 신경제 개혁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이 다른 점은 경제적 자본과 같이 인위적으로 공공 정책을 통해 쉽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에 들어서서 사회적 자본의 대한 관심의 증가는 현대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화되어가는 신뢰 및 사회적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에 대해 중요성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자본 이론은 고전 사회학 이론의 중심 이슈인 ‘신뢰’라는 문제를 유형의 자산과 대비되는 무형의 자산 개념과 결합시키면서 학문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획득하게 되었다.

사회적 자본의 기본 개념은 신고전과 경제학의 개념들에 인간 및 사회라는 주제가 침투하면서 출현하게 되었다. 먼저 1961년, 1963년 미국의 경제학자 Schultz, Becker 등이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인적자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Bourdieu 역시 비슷한 시기에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Bourdieu는 문화적 자본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다 1983년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Bourdieu의 문화적 자본-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Marx-Weber의 이론체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Coleman의 인적자본-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신고전파의 한계효용이론을 인간관계와 사회제도에 적용시킨 신희용주의(neo-utilitarianism), 신제도주의(neo-institutionalism)이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Putnam은 Coleman의 사회적 자본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Rousseau-Tocqueville의 공화-자유주의적 시민사회론을 가미하여 사회적 자본 개념을 정치문화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Bourdieu(1986)와 Coleman(1988)에 의해 사회학적으로 체계화된 이후 Putnam(1993), Fukuyama(1995)등에 의해 확장·응용되면서 정치, 경제, 경영학 분야 등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Bourdieu와 Coleman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구축하였고, Putnam은 이를 정치, 문화 분야로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

나. 사회적 자본의 주요 이론 고찰

사회적 자본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설명과 접근방법은 이론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데에도 다양한 정의와 해석이 존재한다. 사회적 자본은 바로 이같은 다양성으로 인해 연구자가 보다 폭넓게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현상이 여러 용도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함

에 따라 다원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초기의 사회적 자본 개념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 자본이 공공의 이익 또는 개인의 이득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Putnam(2000)은 사회적 자본이 사회와 국가 내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관계를 촉진함으로써 범죄와 같은 현대사회의 사회적 역기능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사회적 관계로부터 유추된 개인적 이득에 초점을 두는 입장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참여하는 개인에게 정보와 기술, 그리고 더 큰 권력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개인은 습득한 사회적 자본을 자신 속한 조직 전체의 이익보다 개인적 성취와 같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Bourdieu는 『자본의 형태』에서 자본을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세 가지로 분류하고 사회적 자본을 ‘면식 또는 상호 인정으로 형성된 제도화된 관계에서 비롯된 지속성이 있는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실제 또는 잠재적 자원들의 총집합’으로 정의하였다. Bourdieu의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다분히 수단적인 것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취득하는 개인의 이득과 자원의 획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 사회관계 형성에 강조점을 두었다.

한편 Coleman(1988)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관계, 쌍무성, 신뢰,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의해 만들어진 개인 또는 집단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자본은 긍정적이고 부정적 행동을 모두 야기할 가능성을 지닌 중립적 자원이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그 사회에 득이 되는가는 전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달려 있다.

Putnam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이러한 연결망으로부터 서로에 이득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연결망의 성향을 포함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집합적 가치를 지칭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민주주의를 수립하고 유지해 나가는 데 핵심적 요소가 된다. Putnam은 『Bowling Alone』에서, ‘1세기 전 Henry Beecher가 더 자주 피크닉을 가야 한다’고 말한 것이 옳았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자본이 사라져가고 있는 미국에서 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Putnam은 이 저서에서 사회적 자본의 ‘응집(bonding)’과 사회적 자본의 ‘연결(bridging)’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회적 자본의 응집은 동질적 특성을 가진 집단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가치관을 지칭하며, 사회적 자본의 연결은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집단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성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을 지칭한다. 그 예로서 범죄 집단은 사회적 자본의 ‘응집’을 형성하지만, 합창단이나 볼링 클럽과 같은 자발적 단체들은 사회적 자본의 교류를 통해 ‘연결’을 형성하게 된다. 사회적 자본의 교류는 사회와 정부, 개인, 그리고 지역사회에 많은 이득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자본과 경제발전』에서 Fukuyama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전형적인 정의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사회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의 협력을 촉진하는 구성원 간에 공유된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 국가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 전제조건임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법규범과 기본적 정치적 제도가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강력한 사회자본이 강한 민주주의와 높은 경제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Fukuyama에 의하

면 가족주의 또는 연고주의는 가족 구성원의 입장을 우선순위에 두는 이중적 가치체계(double standards)로 인해 심각한 신뢰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강력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려면 사회적 자본을 연결시키려는 노력(bridging social capital)'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서로 다른 경계를 넘어서 신뢰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촉진시켜 조직의 중요한 기본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Fukuyama는 사회적 자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긍정적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 교육의 사회적 성과의 주요 영역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의 여러 개념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의 특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긍정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자본은 인적자본과 함께 현대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중요한 도구이며 또한 서구 경제발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OECD 여러 국가에서는 주요 사회적 자본의 감소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서 OECD 여러 국가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1960년 이래 OECD 16개 회원국의 유권자 투표율은 평균 13.2% 하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attenberg, 2002). 투표율 감소도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스위스의 경우 지난 40여 년간 투표율이 무려 34%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독일은 12%P, 그

리고 스웨덴은 1.5%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투표 참여 영역에서의 사회적 자본 감소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결과에 상대적 일관성은 적으나 시민참여에서도 유사한 하향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Putnam, 2000; Hall, 1999). 그러나 데이터의 제약과 한계로 이 연구결과들에 대한 체계적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OECD가 최근 발표한 ‘사회적 성과의 이해’ 보고서에서 제시된 주요 사회적 자본 및 복지 변수들을 기초로 최근에 가용한 국내 및 유럽 사회조사 자료들을 활용하여 교육과 고학력화가 사회적 자본 및 주요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OECD, 2007).

가. 교육과 시민사회 참여

‘교육’은 학력(educational attainment)을 포함하여, 교육의 내용, 커리큘럼 등 여러 방식의 조작적 정의가 가능하다. 또한 ‘교육’의 범위에 대해서도 형식, 비형식, 무형식 학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의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의 사회적 성과에서 ‘교육’의 어떠한 측면이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의 여러 측면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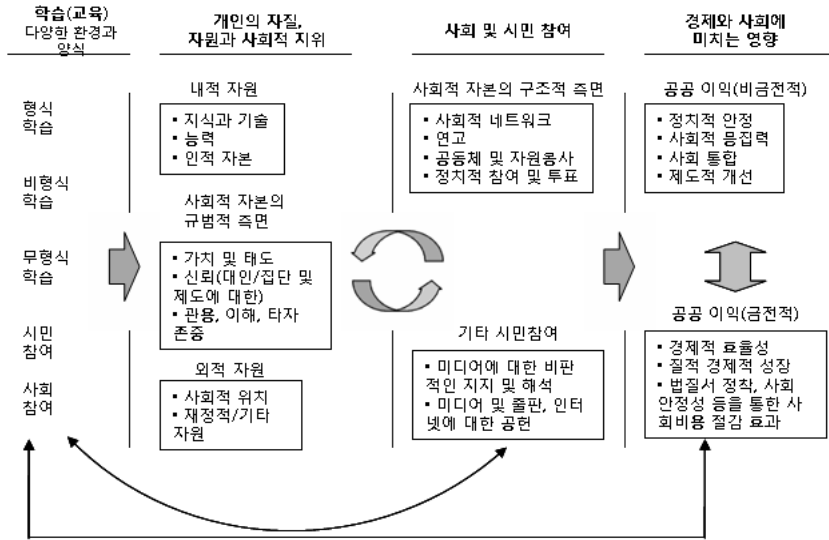
교육이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범위도 매우 포괄적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여러 영역 중 OECD ‘사회적 성과의 이해’를 통해 제시된 ‘시민 사회 참여’를 중심으로 교육의 사회적 자

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시민 참여 영역은 사회적 자본 중 사회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 참여는 개인의 시민과 사회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적인 측면과 태도적인 측면을 동시에 포함하는 포괄적인 영역이다. 사회적 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표참여율 등은 최근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주요 변수라 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서구사회에서 투표참여율의 감소는 자칫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소리를 낳고 있다. 특히 전반적 교육수준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투표율이 감소하고 있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층의 학력이 중고령층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투표율이 중고령층에 비해 낮은 점 등은 교육과 시민사회 참여 간의 관계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게 한다.

[그림 6-1]은 교육이 시민사회 참여를 촉진시켜 경제사회적 효과를 산출해 내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OECD, 2007).

[그림 6-1] 교육이 시민사회 참여(CSE)에 미치는 영향



자료: OECD(2007), 『Understanding Social Outcomes of Learning』, p71에서 재정리.

이 그림을 보면 먼저 교육에는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학습이 포함되며, 형식, 비형식, 무형식 등 여러 형태의 교육 외에 시민 참여 또는 사회 참여와 같이 학습의 내용적 요소들까지를 포함한다. 교육(학습)이 시민사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먼저 학습은 개인의 내적자원(지식, 능력 및 기술)과 외적자원(사회적 위치)뿐만 아니라, 가치관 및 태도, 이해, 그리고 관용 등 개인의 규범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이같은 내적, 외적 자원의 변화와 규범적 측면의 변화는 사회적 네트워크 및 투표 및 정치 참여 등 사회시민 참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같은 사회시민 참여는 정치적 안정, 사회적 응집력 등으로 연결되면서 경제와 사회의 금전적 비금전적 성과를 창출하게 된다.

즉, 이 그림에 의하면 교육은 개인의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사회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쳐 실제적으로 사회시민 참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시민사회 참여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과 사회의 응집력을 높여 경제적 효율성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이 시민사회 참여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 영역으로 교육과 시민사회 참여의 관계를 측정하는 것은 교육의 사회적 성과 측정에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나. 교육과 복지(well-be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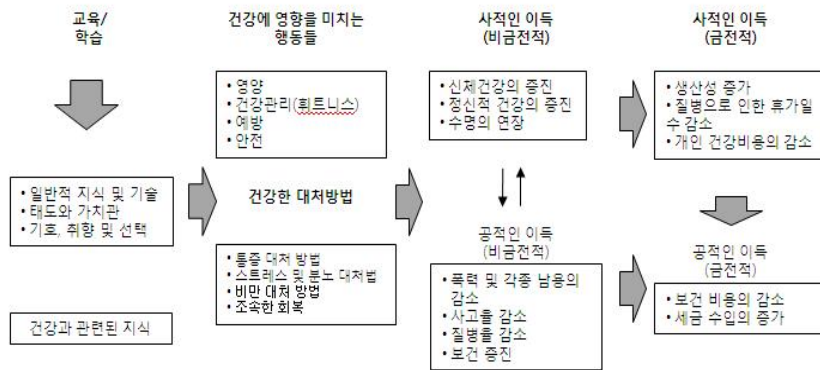
최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이 개인과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개인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건강을 들 수 있는데,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건강’의 개념도 단순히 ‘병이 없는’ 것에서 좀 더 활력적으로 삶은 영위할 수 있는 신체 및 정신적 상태로서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이같이 좀 더 광범위하게 건강을 정의할 때, 개인이 가진 지식과 생활습관 및 태도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도래에 따라 국민들의 정부의 보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OECD 국가들의 보건에 대한 재정 지출은 최근 10년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선진국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위험 요소로 밝혀진 운동부족, 비만, 마약, 음주, 흡연, 영양 불균형 등 요소들은 모두 행동 및 습관과 관련

이 있는 항목들로서 주목이 된다.

[그림 6-2]는 교육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먼저 교육을 통해 지식, 태도 및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 같은 변화는 영양섭취, 건강관리, 질병의 예방 등 질병의 예방과 실제 질병이 걸렸을 때의 대처방법에 영향을 준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교육은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건강 증가는 개인에게 금전적 그리고 비금전적 이득을 줌과 동시에 사회 전체의 보건비용 감소, 생산성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개인의 건강과 복지는 교육의 주요한 사회적 성과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그림 6-2] 교육이 건강(health)에 미치는 영향



자료: OECD(2007), 『Understanding Social Outcomes of Learning』, p.100에서 재정리.

또한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개인 복지의 또 하나의 주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전반적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경제적 부와 보상보다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행복과 삶에 대한 만족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삶

의 만족도는 중요한 사회적 지표로서 교육수준의 향상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어느 정도 증가시키려는가는 주요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교육은 개인이 지닌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교육수준의 증가와 함께 삶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진다면 교육수준의 증가는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교육수준별 삶의 만족도는 2010년도 OECD 『교육지표집(Education at a Glance)』의 사회적 성과 지표 중의 하나로 수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건강과 함께 삶의 만족도를 교육의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복지 지표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3절 고학력화가 사회적 자본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

이 절에서는 앞에서의 논의 결과에 기초하여 시민사회 참여와 건강 등을 중심으로 고학력화가 사회적 자본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데이터 및 측정

가. 고학력화의 사회적 성과 측정

‘고학력화’는 개인 측면에서의 고학력화와 사회 전체 측면에서의 고학력화 즉,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며, 이론적 선행 연구들에

서는 각각의 측면에서의 고학력화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을 예시해주고 있다(OECD, 2007).

이때 개인 수준의 고학력화의 측정은 개인의 교육수준을 통해 측정 가능하다. 개인 수준에서의 고학력화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7」 자료와 유럽 2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 2008~2009」 자료를 활용하였다. 개인의 고학력화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데에 한국과 유럽의 자료를 따로 분석한 이유는 한국과 유럽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기에 KGSS와 ESS 데이터의 변인별 척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 유럽의 자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문화적 차이 등의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이점도 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데이터 분석결과와 유럽 데이터 분석결과를 따로 제시하고 이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한국과 유럽에서의 개인의 고학력화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한편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학력수준의 변화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국가별로 교육수준 변화에 대한 시계열 자료가 필요한데 국내 자료의 사회적 자본의 시계열 자료를 형성할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2008~2009 「유럽사회조사(ESS)」데이터의 국가별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국가별 학력수준(초대졸 이상 학력자의 국가별 비중)과 국가별 사회적 자본의 수준에 관한 집계 데이터(aggregate data)를 구축하여 이 집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별 학력수준의 변화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²¹⁾

21) 「한국종합사회조사」는 2003년부터 매해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년도별 가용한 사회적 자

〈표 6-1〉 ‘고학력화와 사회적 성과’ 측정에 사용될 주요 변수들

영역	변수	주요 내용(측정)
사회적 자본의 주요영역	신뢰	대인관계에서의 신뢰
	정치적 관심	정치에 대한 전반적 관심
	투표 참여	최근의 주요 선거에 대한 투표 참여여부
	사회봉사 활동	자원 봉사 등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
	사회적 네트워크	친구, 친척, 동료등과의 사회적 접촉 빈도
사회 복지 (well-being)	건강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삶의 만족도	현재의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 정도

나. 데이터 소개

1)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본 연구에서 개인의 고학력화와 사회적 성과에 관한 한국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2007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는 성균관대학교 리서치 서베이 센터(SRC)가 200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전국표본조사로 기본모형은 시카고대학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의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GSS)」이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시행되는 GSS 조사의 공동 모듈을 일부 수용함과 동시에 한국사회의 특수성도 고려하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 변인이 서로 다르나 2007년 자료가 유럽 ESS와 비교할 만한 대부분의 변수를 가지고 있음. 「유럽사회조사(ESS)」의 경우 2003~2003년부터 격년으로 자료가 수집되며 매해 동일한 사회적 자본 변수의 분석이 가능함. ESS를 활용한 집계 데이터 구축 방식에 대해서는 후술된 ‘ESS 집계데이터 구축’ 부분 참조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는 2003년 이래 매해 여러 가지 주제들을 순환해가면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매해 포함되는 주제들 달라 연도별 사회적 자본 변수의 비교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복지 분석변인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유럽 데이터와 비교 가능한 2007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7은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07년 6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다단계 지역확률표본추출(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여 표집된 가구 내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2007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전체 응답자수는 1,431명으로 이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7』의 주요 조사내용을 보면 신뢰, 정치태도, 정당지지, 투표, 선거, 정치참여 등 사회적 자본에 관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밖에 자본주의, 대기업, 재벌, 노동조합, 종교, 종교활동, 계층, 계층의식, 가족, 직업, 가계수입, 교육, 가계, 자유시간, 여가활동, 운동, 스트레스, 만족도, 일상생활, 문화예술, 대중문화, 음악회, 영화관람, 문화활동, 동호회, 문화참여, 스포츠, 단체참여 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에 사용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7』의 주요 문항 및 기초통계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2> 분석에 사용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주요문항 소개

변인	문항	응답
연령	연령(문38) : 18~64세	
성별	성별(문38)	1. 남자 2. 여자
학력	최종학력(문40)	0. 무학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전문대학(2,3년제) 5. 대학교(4년제) 6. 대학원(석사과정) 7. 대학원(박사과정) 8. 서당, 한학
소득	월평균 근로소득(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포함 세전소득)(문44): 0~3000만원	
신뢰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문67)	1. 항상 신뢰할 수 있다 2.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3. 대체로 조심해야 한다 4. 항상 조심해야 한다 8. 모르겠다
정치적 관심	귀하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문68)	1. 매우 관심이 있다 2. 다소 관심이 있다 3. 별로 관심이 없다 4. 전혀 관심이 없다 8. 모르겠다
투표참여	귀하는 작년(2006년) 5월 31일에 있었던 지방자치선거 때 투표하셨습니다습니까?(문10)	1. 투표했다 2. 투표하지않았다 8. 모르겠다 9. 투표권없었음
사회 봉사활동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다음의 각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셨습니다습니까?(문66)	1.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 한 달에 한 번 이상 3. 일년에 몇 번 4. 일 년에 한 두 번 5.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표 계속>

변인	문항	응답
사회적 네트워크 (2008)	평일 하루 평균 모두 몇 명의 사람들과 전화, 우편, 인터넷을 통해 연락을 하거나 직접 만나십니까 (가족, 친척은 제외)?(문115)	1. 전혀없음 2. 1~4명 3. 5~9명 4. 10~19명 5. 20~49명 6. 50~99명 7. 100명 이상 8. 모르겠다
건강	전반적으로,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문71)	1. 매우 좋다 2. 다소 좋다 3.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4. 다소 나쁘다 5. 매우 나쁘다 8. 모르겠다
삶의 만족도	현재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귀하는 다음의 각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 혹은 불만족스러우십니까?(문73)	1. 매우 만족스럽다 2. 다소 만족스럽다 3.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4. 다소 불만족스럽다 5. 매우 불만족스럽다 9. 비해당

〈표 6-3〉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결과

변인	응답결과	빈도(%)	비고*
성별	남자	571(46.9)	
	여자	646(53.1)	
연령	15~24세	147(12.1)	39.32(11.622)
	25~34세	293(24.1)	
	35~44세	373(30.6)	
	45~54세	258(21.2)	
	55~64세	146(21.2)	
	65세이상		
소득	100만원 미만	150(19.8)	225.78(208.854)
	100~200만원 미만	214(28.3)	
	200~400만원 미만	287(38.0)	
	400만원 이상	105(13.9)	

<표 계속>

변인	응답결과	빈도(%)	비고*
학력	중졸 이하	165(13.9)	
	고졸 이하	529(44.4)	
	초대졸 이상	497(41.7)	
신뢰	항상 조심해야 함	116(9.6)	2.40(.693)
	대체로 조심해야 함	523(43.1)	
	대체로 신뢰함	546(45.0)	
	항상 신뢰함	29(2.4)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207(17.1)	2.22(.767)
	별로 관심 없음	577(47.5)	
	다소 관심 있음	385(31.7)	
	매우 관심 있음	45(3.7)	
투표참여	비참여	402(34.7)	
	참여	755(65.3)	
사회봉사활동	비참여	891(73.3)	
	참여	325(26.7)	
사회적 네트워크	5명 이하	750(49.9)	
	5명 이상	753(50.1)	
건강	매우 나쁨	27(2.2)	3.59(1.020)
	다소 나쁨	174(14.3)	
	보통	300(24.7)	
	다소 좋음	484(39.8)	
	매우 좋음	230(18.9)	
만족도	매우 불만족	38(3.1)	3.46(.904)
	다소 불만족	150(12.3)	
	보통	327(26.9)	
	다소 만족	620(50.9)	
	매우 만족	82(6.7)	

주: 비고는 해당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괄호안)를 제시

〈표 6-4〉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학력수준별 사회적 성과 비교

	투표 참여		사회 봉사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정치적 관심	건강	만족도	
	비참여	참여	비참여	참여	5명 이하	5명 이상					
전체(N)	1131		1190		1187		1188	1189	1189	1191	
학력	중졸 이하	43 (26.7)	118 (73.3)	135 (82.3)	29 (17.7)	77 (47.0)	87 (53.0)	2.19 (.729)	2.10 (.793)	3.01 (1.132)	3.16 (1.018)
	고졸 이하	190 (39.7)	228 (60.3)	392 (74.1)	137 (25.9)	264 (50.1)	263 (49.9)	2.35 (.708)	2.20 (.762)	3.63 (.996)	3.43 (.914)
	초대졸 이상	161 (32.7)	331 (67.3)	342 (68.8)	155 (31.2)	251 (50.6)	245 (49.4)	2.54 (.637)	2.29 (.760)	3.77 (.914)	3.60 (.815)

주: 1. 투표참여, 사회봉사, 사회적 네트워크: 빈도(%)
 2. 신뢰, 정치적 관심, 건강, 만족도: 평균(표준편차)

2)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

본 연구에서 개인의 고학력화와 사회적 성과간의 관계의 해외사례를 조사 비교하기 위한 자료로서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 2008~2009」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유럽사회조사(ESS)」는 유럽의 가치관 및 제도, 태도, 신념 및 다양한 인구의 행동패턴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사회의 기초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2002년부터 시작하여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 2008~2009」는 영국 시티대학(UK, City university)의 비교사회조사센터(Centre for Comparative Social Surveys)에서 EU 회원국 및 협력국 29개국의 15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에서 29개국으로부터 수거된 총 설문지는 56,752개이며, 참여국은 벨기에, 불가리아, 스위스, 사이프러스,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

스, 영국, 그리스, 크로아티아,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이다.

분석에 사용된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 2008~2009」설문지는 약 1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 및 공적인 신뢰, 정치적 관심 및 참여, 정부 및 효능, 정치적·도덕적·사회적 가치, 사회적 배제, 미디어 사용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 변수들의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이 밖에 국가, 민족과 종교, 건강과 안전, 가치관 등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에 사용된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 2008~2009」주요 문항 및 기초통계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5〉 유럽사회조사(ESS) 2008~2009 사회적 성과 변수 문항들

변인	문항	응답
연령	연령(문19)	15세 이상
성별	성별(문110)	1. 남자 2. 여자
학력	최종학력(문F6)	0. 무학 1~2. 중학교 이하 3~4. 고등학교 이하 5~6. 대학교 이상 8. 잘모르겠음
소득	세후 가계소득(문F32)	1~10 중 십분위 수로 조사 (상대적 소득 선택)
신뢰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문A8)	0~10 중 십분위 수로 조사 (0:신뢰할 수 없음~10:신뢰함) 88. 잘 모르겠음
정치적 관심	귀하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문B1)	1. 매우 관심이 있다 2. 다소 관심이 있다 3. 별로 관심이 없다 4. 전혀 관심이 없다 8. 모르겠음

<표 계속>

변인	문항	응답
투표참여	귀하는 지난 선거에 투표하셨습니다? (문B11)	1. 투표했다 2. 투표하지 않았다 3. 투표권 없었음 8. 모르겠음
사회봉사 활동	지난 한 달 동안, 귀하는 돈을 받거나 혹은 무료로 봉사를 한 적 있습니까?(문E49)	1. 돈을 받고 1회 2. 무료로 2회 3. 유료 또는 무료로 3회 4. 전혀 하지 않음 8. 모르겠음
사회적 네트워크	귀하는 얼마나 자주 친구, 친척, 동료들과 만나십니까?(문C2)	1. 전혀 없음 2. 한 달에 1회 이하 3. 한 달에 한 번 4. 한 달에 여러 번 5. 일주일에 한 번 6. 일주일에 여러 번 7. 매일 8. 모르겠음
건강	전반적으로,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문C15)	1. 매우 좋다 2. 다소 좋다 3.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4. 다소 나쁘다 5. 매우 나쁘다 8. 모르겠음
삶의 만족도	현재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귀하는 다음의 각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스러우십니까?(문B24)	0~10 중 십분위 수로 조사 (0:매우 불만족~10:매우 만족) 88 모르겠음

〈표 6-6〉 유럽사회조사(ESS)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결과

변인	응답결과	빈도(%)	비고
성별	남자	25,697(45.5)	
	여자	30,830(54.5)	
연령	15~24세	7,168(12.7)	47.54(18.504)
	25~34세	9,051(16.0)	
	35~44세	9,702(17.2)	
	45~54세	9,605(17.0)	
	55~64세	9,054(16.0)	
	65세 이상	11,964(21.2)	
소득	1~10 상대적 소득		5.26(2.777)
학력	중졸 이하	18,681(33.1)	
	고졸 이하	21,065(37.3)	
	대졸 이상	16,673(29.6)	

<표 계속>

변인	응답결과	빈도(%)	비고
신뢰	0=신뢰할 수 없음 ~10=신뢰함		4.71(2.575)
정치적 관심	전혀 관심 없음 별로 관심 없음 다소 관심 있음 매우 관심 있음	11,177(19.8) 19,478(34.6) 19,945(35.4) 5,750(10.2)	2.36(.912)
투표참여	비참여 참여	11,682(22.4) 40,437(77.6)	
사회봉사활동	비참여 참여	49,875(88.6) 6,396(11.4)	
사회적 네트워크	일주일에 한 번 이하 일주일에 여러번	22,299(39.8) 33,795(60.2)	
건강	매우 나쁨 다소 나쁨 보통 다소 좋음 매우 좋음	979(1.7) 4,613(8.2) 15,806(28.0) 22,873(40.5) 12,196(21.6)	3.72(.949)
만족도	0=매우 불만족 ~10=매우 만족		6.56(2.439)

주: 비고는 해당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괄호안)를 제시

3) 유럽사회조사(ESS) 집계 데이터(aggregate data)

개인의 고학력화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와 유럽사회조사의 개인조사(mirco) 데이터를 활용한 반면, 사회의 고학력화 단계와 사회의 사회적 자본 및 복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분석한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 2008~2009」 데이터를 기초로 29개 국가의 국가별 집계데이터를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국가별 경제수준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해당국 해당년도의 국가별 1인당 GDP를 외생변수로 사용하였다. 각 변수별 집계 데이터 구축방식은 아래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7〉 유럽사회조사(ESS) 2008~2009 집계데이터 구축 방법 및 변수설명

변인	변수설명	평균 (표준편차)	비고
학력	국가별 최종학력 대졸이상의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계산	27.14% (11.67)	외생 변수
1인당 GDP	국가별 1인당 GDP 수준(달러)	29039.63 (19362.32)	국가별 ESS활용
신뢰	국가별 0(신뢰할 수 없음)~10(항상 신뢰함) 십분위 수로 조사되었으며, 평균값으로 계산됨	4.75(1.064)	국가별 ESS활용
정치적 관심	국가별 1(전혀 관심이 없다)~4(매우 관심이 있다)로 역코딩 되었으며, 평균값으로 계산	2.37(.24)	국가별 ESS활용
투표참여	국가별 투표참여자의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계산됨	72.52% (8.80)	국가별 ESS활용
사회봉사	국가별 사회봉사참여자의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계산됨	11.79% (8.79)	국가별 ESS활용
사회적 네트워크	국가별 주1회 이상 사회적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계산됨	59.83% (12.96)	국가별 ESS활용
건강	국가별 1(매우 나쁨)~4(매우 좋음)로 역코딩 되었으며, 평균값으로 계산됨	3.73(.32)	국가별 ESS활용
삶의 만족도	국가별 0(매우 불만족)~10(매우 만족) 십분위 수로 조사되었으며, 평균값으로 계산됨	6.60(1.08)	국가별 ESS활용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국가의 고학력화 수준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변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측정하려면 국가별 시계열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현재 국제 및 국내의 가용한 사회조사 데이터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횡단조사인 유럽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학력화와 사회적 자본 수준의 변화와의 한계를 측정하였다. 시계열 조사 자료 대신 횡단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고학력화 수준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측정의 한계는 고학력화 수준 외에 국가별 문화적 및 경제발전 단계상의 국가별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EU회원국이 27개국에 이르

고 있으며, 회원국 간의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나 이러한 회원국 간의 차이는 마지막에 논의될 것이다.

2. 상관분석 결과

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7) 분석 결과

〈표 6-8〉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7 상관분석 결과

	최종 학력	연령	소득	신뢰	정치적 관심	투표 참여	봉사 활동	사회 네트워크	건강
연령	-.296**								
소득	.290**	.033							
신뢰	.182**	-.073*	.103**						
정치적 관심	.085**	.084**	.220**	.113**					
투표참여	-.007	.257**	.091*	.053	.171**				
사회 봉사활동	.099**	.025	.097**	.150**	.127**	.137**			
사회 네트워크	-.021	.010	.053	.011	-.033	-.013	.026		
건강	.216**	-.232**	.141**	.168**	.059*	.023	.078**	.030	
만족도	.160**	-.091**	.094**	.150**	.071*	.044	.107**	.031	.308**

주: 1. **p<0.01, *p<0.05

2. 신뢰: 1=항상 조심해야함, 4=항상 신뢰함
 정치적 관심: 1=전혀 관심 없음, 4=매우 관심 있음
 건강: 1=매우 나쁨, 5=매우 좋음
 삶의 만족도: 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으로 역코딩
3. 학력: 1=중학교이하, 2=고등학교이하, 3=초대졸이상,
 투표참여: 0=비참여, 1=참여
 사회봉사활동: 0=비참여, 1=참여
 사회적 네트워크: 0=5명 이하, 1=5명이상으로 리코딩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7」 데이터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연령은 학력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평균학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학력과 소득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져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학력과 사회적 자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전체적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학력과 투표참여, 그리고 학력과 사회적 네트워크 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과 투표참여 간의 상관관계는 부적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학력과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부적 상관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은 사회적 자본 변수들 중 정치적 관심 및 신뢰 변수와 상대적으로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유럽사회조사(ESS) Micro 데이터 분석결과

〈표 6-9〉 유럽사회조사(ESS) 2008~2009 상관분석 결과

	학력	연령	소득	신뢰	정치적 관심	투표 참여	봉사 활동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
연령	-.154**								
근로소득	.059**	-.017* *							
신뢰	.154**	-.014**	.101**						
정치적 관심	.261**	.120**	.071**	.143**					
투표참여	-.019**	.003	-.003	-.010*	-.015**				

<표 계속>

	학력	연령	소득	신뢰	정치적 관심	투표 참여	봉사 활동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
봉사활동	.104**	-.007	.063**	.122**	.131**	-.008			
사회적 네트워크	.020**	-.180**	.031**	.109**	.011*	-.008	.089**		
건강	.180**	-.435**	.077**	.174**	.036**	-.023**	.072**	.172**	
만족도	.104**	-.099**	.106**	.302**	.082**	-.004	.109**	.167**	.355**

주: 1. **p<0.01, *p<0.05

- 신뢰: 0=신뢰할 수 없음~10=항상 신뢰함,
삶의 만족도: 0=매우불만족~10=매우만족으로 십분위 수로 조사됨
- 정치적 관심: 1=전혀 관심 없음, 4=매우 관심 있음
건강: 1=매우 나쁨, 5=매우 좋음으로 역코딩
- 학력: 1=중학교 이하, 2=고등학교 이하, 3=대졸 이상,
투표참여: 0=비참여, 1=참여, 사회봉사활동: 0=비참여, 1=참여
사회 네트워크: 0=일주일에 한 번 이하, 1=일주일에 여러 번으로 재코딩

한편 「유럽사회조사(ESS)」 마이크로 데이터(micro data) 상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학력과 연령은 역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유럽국가들 역시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학력이 높은 성향을 보여주나, 상관관계가 한국만큼 높지 않아 연령에 따른 학력의 감소가 한국보다 완만함을 보여준다. 유럽사회조사의 소득 변수는 한국종합사회조사와 달리 상대적 소득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 소득이 약간씩이나마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유럽사회조사 분석 결과에서도 학력과 사회적 자본 변수들 간의 관계는 대체로 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학력과 투표참여 간에는 부적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학력과 사회적 네트워크 간의 관계는 수치는 낮으나 정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유럽사회조사(ESS) 집계 데이터(aggregate data) 분석결과

〈표 6-10〉 유럽사회조사(ESS) 2008~2009 집계 데이터 상관분석 결과

	학력	1인당 GDP	신뢰	정치적 관심	투표 참여	사회 봉사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
1인당 GDP	.329							
신뢰	.460*	.807**						
정치적 관심	.586**	.590**	.631**					
투표참여	.255	.240	.191	.301				
사회봉사	.324	.773**	.752**	.737**	.265			
사회적 네트워크	.192	.647**	.581**	.275	.119	.553**		
건강	.132	.741**	.525**	.308	.374*	.397**	.417	
삶의 만족도	.152	.808**	.821**	.472**	.209	.652***	.569**	.717**

주: 1. **p<0.01, *p<0.05
 2. 학력: 대졸자이상 비율을 100%로 환산,
 투표참여: 투표 참여자 비율을 100%로 환산,
 사회봉사: 사회봉사 참여자 비율을 100%로 환산,
 사회적 네트워크: 주1회 이상 참여자 비율을 100%로 환산
 3. 신뢰: 0=신뢰할 수 없음~10=항상 신뢰함 평균
 삶의 만족도: 0=매우 불만족~10=매우 만족 평균
 4. 1인당 GDP: 1인당GDP 평균
 정치적 관심: 1=전혀 관심 없음, 4=매우 관심 있음 평균
 건강: 1=매우 나쁨, 5=매우 좋음 평균

『유럽사회조사(ESS) 2008~2009』를 기초로 구축한 유럽 29개국의 집계데이터(aggregate data) 상관 분석결과에 의하면 국가별 고학력화 수준은 국가별 1인당 GNP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별 고학력화 수준과 주요 사회적 자본 지표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국가별 고학력화 수준은 정치적 관심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신뢰, 사회봉사, 투표 순으로 나타나며, 국가별 고학력화가 진행될수록 전반적 투표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국가별 고학력화 정도와 사회적 자본 간의 상관관계는 신뢰와 사회적 자본 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회귀분석 결과

가. 개인의 고학력화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에서 개인의 고학력화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표 6-11〉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회귀분석 변수 설명

변인	변수설명	평균(기초통계)
성별	더미변수(0=남자, 1=여자)	남자 46.9% 여자 53.1%
연령	연속변수(연령범위: 15~64세)	39.32세(11.622)
소득	연속변수(소득범위: 0~3000만원)	225.78만원 (208.854)
학력	더미변수(기준: 0=고졸이하)	중졸이하 13.9% 고졸이하 44.4% 초대졸이상 41.7%
신뢰	역코딩(1=항상 조심해야 함~4=항상 신뢰함)	2.40(.693)
정치적 관심	역코딩(1=전혀 관심 없음~4.매우 관심 있음)	2.22(.767)
투표참여	리코딩(0=비참여, 1=참여)	비참여 34.7% 참여 65.3%
사회봉사활동	리코딩(0=비참여, 1=참여)	비참여 73.3% 참여 26.7%

<표 계속>

변인	변수설명	평균(기초통계)
사회적 네트워크	리코딩(0=5명 이하, 1=5명 이상)	5명 이하 49.9% 5명 이상 50.1%
건강	역코딩(1=매우 나쁨~5.매우 좋음)	3.59(1.020)
만족도	역코딩(1=매우불만족~5.매우만족)	3.46(.904)

이 장 끝에 제시된 <표 6-13>에는 「한국사회종합조사(KGSS) 2007」 데이터의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성별은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신뢰, 정치적 관심, 투표참여 등의 사회적 자본 변수와 건강 측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사회봉사활동 참여는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삶의 만족도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높으나 유의도는 낮게 나타난다.

연령은 정치적 관심과 투표참여, 그리고 건강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적 관심과 투표참여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며, 건강과 사회적 만족도 등 복지 지표는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한편 연령이 신뢰, 사회봉사활동 참여, 사회적 네트워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의 소득수준은 사회적 자본 변수들 중 정치적 관심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사회적 자본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한편 소득은 건강과 삶의 만족도 등 복지와 관련된 변수들에 정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종합사회조사에 의하면 개인의 학력수준이 사회적 자본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은 영역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한국종합사회

조사 회귀분석에 사용된 학력변수들은 학력을 중졸이하, 고졸, 대졸로 나누는 더미변수들로서 개인의 학력수준에 따른 학력집단비교에 주요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신뢰수준과 정치적 관심, 사회봉사활동 참여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중 신뢰만이 학력수준 증가에 따른 사회적 자본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적 관심의 경우 고졸자와 대졸 이상 고학력자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과 복지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도 건강과 만족도는 학력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 유의도에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밖에 투표참여율과 사회적 네트워크(접촉 빈도)는 학력수준의 증가와 비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럽에서 개인의 고학력화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표 6-12> 유럽사회조사(ESS) 마이크로 데이터 회귀분석 변수설명

변인	변수설명	평균(기초통계)
성별	더미변수(0=남자, 1=여자)	남자 45.5% 여자 54.5%
연령	연속변수(연령범위: 15세 이상)	47.54세(18.504)
소득	1~10 십분위 수로 조사(상대적 소득)	5.26(2.777)
학력	더미변수(기준: 0=고졸이하)	중졸이하 33.1% 고졸이하 37.3% 대졸이상 29.6%
신뢰	0~10 십분위 수로 조사(0=신뢰할 수 없음~10=신뢰함)	4.71(2.575)
정치적 관심	역코딩(1=전혀 관심 없음~4.매우 관심 있음)	2.36(.912)

<표 계속>

변인	변수설명	평균(기초통계)
투표참여	리코딩(0=비참여, 1=참여)	비참여 22.4% 참여 77.6%
사회봉사 활동	리코딩(0=비참여, 1=참여)	비참여 88.6% 참여 11.4%
사회적 네트워크	리코딩(0=일주일에 한 번 이하, 1=일주일에 여러번)	한번이하 39.8% 여러번 60.2%
건강	역코딩(1=매우 나쁨~5.매우 좋음)	3.72(.949)
만족도	0~10 십분위 수로 조사(0=매우불만족~10=매우만족)	6.56(2.439)

이 장 끝에 제시된 <표 6-14>에는 EU 2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럽사회조사(ESS) 2008~2009』데이터의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유럽사회조사에서 성별은 사회적 자본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신뢰, 정치적 관심, 사회봉사, 사회적 네트워크, 주관적 건강, 만족도 측면에서 모두 더 높게 나타나며 이 결과들은 동시에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난다. 이 분석결과에서 사회적 자본 변수들 중 유일하게 투표참여만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통계적 유의도는 낮다.

신뢰, 정치적 관심, 사회봉사 활동참여는 연령과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투표참여도 연령과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 한편 사회적 네트워크 참여, 주관적 건강, 그리고 만족도는 연령과 함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유럽사회조사에서 분석에 사용된 소득변수는 개인의 상대적 소득수준 변수인데, 분석결과에 의하면 개인의 상대적 소득수준은 분석에 사용된 모든 사회적 자본 변수들과 복지변수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결과는 투표참여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럽사회조사 분석에서도 학력은 중졸이하, 고졸, 대졸집단의 더미변수로 나뉘어 학력집단 간 사회적 자본과 복지수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한국종합사회조사와는 달리 신뢰, 정치적 관심, 사회적 봉사활동 등 대부분의 사회적 자본 지표영역에서 학력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자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결과의 통계적 유의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높아질수록 복지변수들인 건강과 삶의 만족도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모델의 통계적 유의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투표참여와 사회적 네트워크 참여는 학력수준의 증가와 비례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종합사회조사 분석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사회의 고학력화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고학력화와 사회의 고학력화가 사회적 자본과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사회조사 2008~2009」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 data)를 기초로 하여 이 조사에 참여한 29개 EU 회원국 및 EU 협력국가들의 국가별 고학력화 수준과 국가별 1인당 GDP 수준, 그리고 국가별 사회적 자본 및 복지 수준 변수들을 측정하여 유럽사회조사 집계데이터(aggregate data)를 완성하였다.

<표 6-15>에 제시된 ESS 집계(aggregate) 데이터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가별 1인당 GDP 통제 전 국가별 고학력화 수준은 신뢰, 정치적 관심, 사회봉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국가별 1인당 GDP 통제 후에는 고학력화가 사회봉사활동을 제외한 신뢰와 정치적 관심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국가별 고학력화 수준은 투표참여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과 만족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결과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한편 국가별 소득수준은 모든 사회적 자본 변수들과 복지 변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투표참여를 제외한 모든 종속변수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종합적 논의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과 EU의 사회적 자본 데이터 분석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 수준에서 한국의 종합사회조사(KGSS)와 유럽사회조사(ESS)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의 비교가 가능하다. 먼저 한국과 유럽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신뢰수준, 정치적 관심, 사회봉사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삶의 만족도도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한국과 유럽에서 성별의 영향이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즉, 한국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투표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유럽사회조사 결과에서는 통계적 유의도는 낮으나 여성이 남성보다 투표율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나며, 사회적 네트워크 참여는 한국 자료에서는 통계적 유의도는 높지 않아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유럽조사 결과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네트워크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한편 연령은 한국과 유럽 모두에서 신뢰, 정치적 관심, 투표참여, 사회봉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한국과 유럽 모두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중 투표 참여와 연령의 관계는 한국의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사회봉사의 경우는 유럽조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한편 연령과 사회적 네트워크 참여간의 관계는 유럽에서는 부정적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한국에서는 정적으로 나타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다음으로 소득과 사회적 성과 변수들과의 관계는 한국과 유럽조사 결과가 서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국과 유럽에서 소득은 사회적 자본과 복지 변수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유럽조사의 경우 소득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통계적 유의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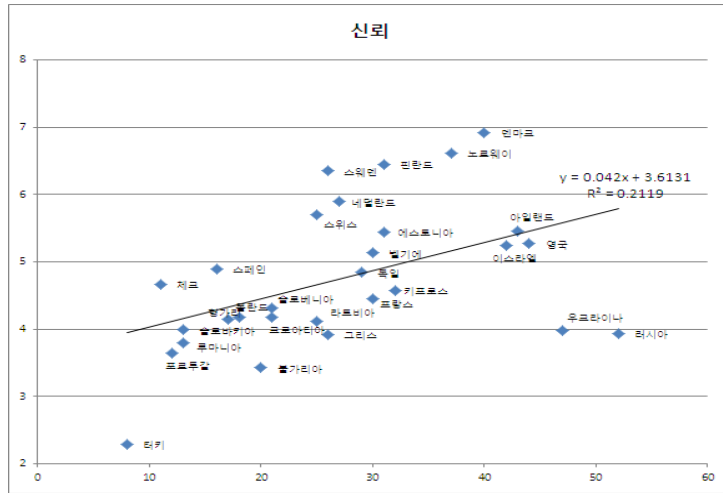
개인의 학력수준의 영향은 한국과 유럽의 조사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먼저 개인의 고학력화는 한국과 유럽조사 모두 신뢰, 정치적 관심, 사회봉사활동, 건강, 그리고 만족도 영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한국 조사의 경우 신뢰의 미치는 영향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유럽조사의 경우 5개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한국과 유럽조사 모두에서 개인의 고학력화는 투표참여 및 사회적 네트워크

참여와 선형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럽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micro data)를 토대로 구축한 집계데이터의 회귀분석결과는 사회(국가) 전체의 고학력화 수준이 사회의 전반적 사회적 자본 및 복지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준다. 유럽사회조사 집계데이터 분석결과에 의하면, 신뢰와 정치적 관심 두 변수만이 사회 전반적 고학력화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 수준이 투표참여, 사회봉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 만족도 등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고학력화가 이들 변수들에 부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고학력화가 사회적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 1인당 소득수준을 통제하기 전에는 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제 후에는 부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들 국가별 소득수준과 고학력화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통제할 경우 고학력화 자체가 이들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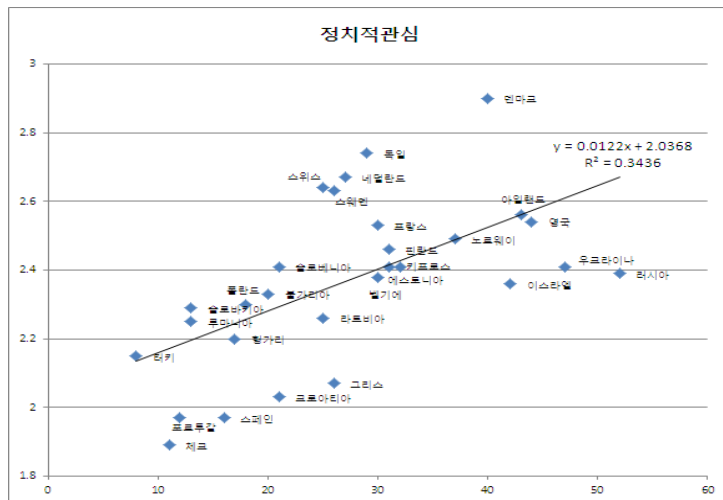
유럽사회조사(ESS)에 근거한 국가별 고학력화 수준의 회귀분석 결과는 국가들의 고학력화 수준과 사회적 자본 및 복지 수준 간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면, 국가별 문화적 다양성 및 발전단계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별 고학력화 수준과 사회적 자본 및 복지 수준 간의 관계를 산포도(scatter plot) 그림을 통해 제시해 보았다([그림 6-3]~[그림 6-9] 참조).

[그림 6-3] 학력과 신뢰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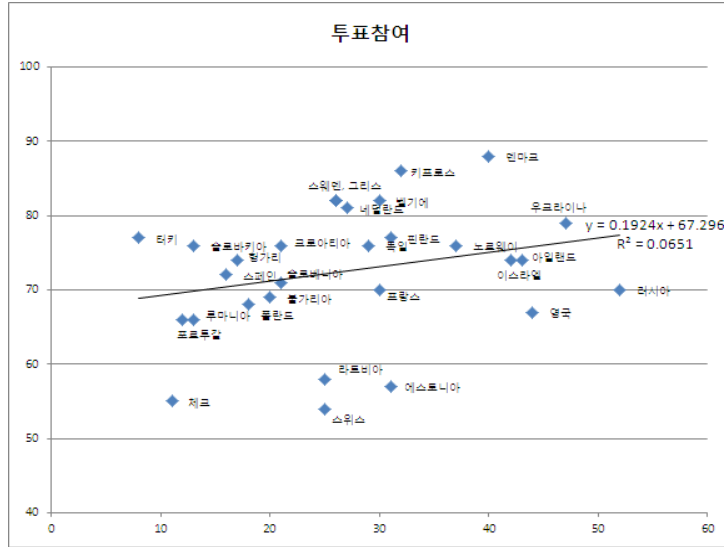


주: 분석대상은 EU 29 회원국 및 협력국(벨기에, 불가리아, 스위스, 키프로스,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크로아티아,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터키, 우크라이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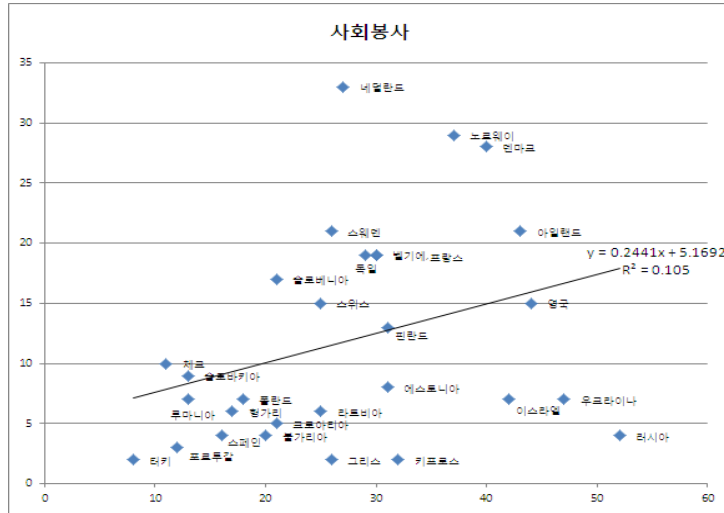
[그림 6-4] 학력과 정치적 관심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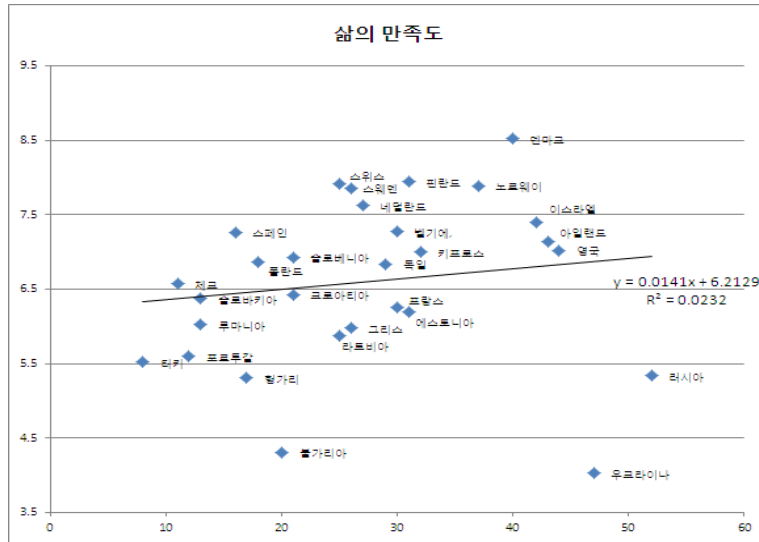
[그림 6-5] 학력과 투표참여와의 관계



[그림 6-6] 학력과 사회봉사와의 관계



[그림 6-9] 학력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이 그림들에 제시된 개별 국가의 고학력화 정도와 사회적 자본 지표의 수준 및 복지 지표 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1차 방정식 모델에 기초하여 볼 때 고학력화 정도에 비해 신뢰 수준이 높은 국가 들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며, 불가리아, 러시아 등은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 나타난다.

정치적 관심의 경우 고학력화에 비해 국민의 정치적 관심 수준이 높은 나라는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등이며, 고학력화에 비해 국민의 정치적 관심이 낮은 나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스, 스페인, 체코 등을 들 수 있다.

고학력화는 투표참여와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며, 고학력화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국가들은 스위스, 영국, 체코, 러시아 등으로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투표참여가 높은 나라들은 스웨덴, 덴마크, 터키 등으로 나타난다.

이 밖에 그림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력과 국가별 고학력화 수준과 사회봉사,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 등의 관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은 학력수준에 비해 사회봉사 수준이 높으며, 이스라엘, 그리스, 터키, 러시아 등은 학력수준에 비해 사회봉사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강한 나라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외에 포르투갈, 스페인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이전 공산권 국가들의 경우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매우 낮은 것을 나타낸다. 독일도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학력별 건강과 만족도에 대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된다. 이전 공산권 국가들의 경우 모델선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건강과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으면서, 동시에 고학력화 수준에 비해 주관적 건강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6-13〉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회귀분석 결과

변수	신뢰		정치적 관심		투표 참여		사회봉사활동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		만족도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상수	2.272***	0.000	1.817***	0.000	0.073	0.392	0.230***	0.003	0.371***	0.000	4.126***	0.000	3.615**	0.000
성별 (남자=0)	-0.112**	0.033	-0.176***	0.003	-0.083**	0.020	-0.061*	0.075	0.015	0.694	-0.234***	0.001	0.098	0.157
연령	0.002	0.427	0.009***	0.005	0.014***	0.000	0.001	0.556	0.003	0.169	-0.012***	0.001	-0.008**	0.018
소득	0.000	0.609	0.001***	0.000	0.000	0.412	0.000	0.218	0.000	0.104	0.000**	0.031	0.000*	0.061
중졸 이하	-0.193**	0.026	-0.184*	0.060	0.004	0.944	-0.083	0.146	0.027	0.675	-0.321***	0.008	-0.159	0.163
대졸 이상	0.231***	0.000	0.087	0.168	0.101***	0.009	0.053	0.150	-0.017	0.682	0.083	0.283	0.174**	0.018
R ²	0.056		0.076		0.096		0.021		0.009		0.078		0.045	
N	1191		1191		1191		1191		1191		1191		1191	

주: ***p<0.01, **p<0.05, *p<0.10

〈표 6-14〉 유럽사회조사(ESS) 회귀분석 결과

변수	신뢰		정치적 관심		투표참여		사회봉사활동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		만족도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β	p-value
상수	4.287***	0.000	2.053***	0.000	0.776***	0.000	0.095***	0.000	0.810***	0.000	4.612***	0.000	6.697***	0.000
성별 (남자=0)	-0.114***	0.000	-0.267***	0.000	0.007	0.101	-0.026***	0.000	-0.019***	0.000	-0.118***	0.000	-0.067***	0.005
연령	0.004***	0.000	0.008***	0.000	0.000	0.686	0.000**	0.011	-0.005***	0.000	-0.020***	0.000	-0.008***	0.000
소득	0.086***	0.000	0.018***	0.000	0.000	0.643	0.007***	0.000	0.005***	0.000	0.021***	0.000	0.087***	0.000
증출 이하	-0.455***	0.000	-0.323***	0.000	0.022***	0.000	-0.039***	0.000	0.029***	0.000	-0.111***	0.000	-0.246***	0.000
대졸 이상	0.556***	0.000	0.333***	0.000	0.002	0.690	0.044***	0.000	0.026***	0.000	0.144***	0.000	0.201***	0.000
R ²	0.034		0.120		0.001		0.015		0.035		0.186		0.022	
N	56419		56419		56419		56419		56419		56419		56419	

주: ***p<0.01, **p<0.05, *p<0.10

〈표 6-15〉 유럽사회조사(ESS) 2008~2009 집계 데이터 회귀분석 결과

변수	신뢰			정치적 관심			투표참여			사회봉사활동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상수	3.613*** (0.000)	3.465*** (0.000)	3.040*** (0.000)	2.037*** (0.000)	2.153*** (0.000)	1.958*** (0.000)	67.296*** (0.000)	69.355*** (0.000)	66.170*** (0.000)	5.169 (0.212)	1.605 (0.411)	0.353 (0.903)
학력	0.042** (0.012)		0.020* (0.069)	0.012** (0.010)		0.009*** (0.005)	0.192 (0.182)		0.149 (0.327)	0.244* (0.086)		0.059 (0.558)
1인당 GDP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5)		0.000 (0.210)	0.000 (0.386)		0.000*** (0.000)	0.000*** (0.000)
R ²	0.212	0.651	0.693	0.344	0.348	0.520	0.065	0.057	0.092	0.105	0.598	0.603
N	29			29			29			29		

변수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			만족도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상수	54.045*** (0.000)	47.244*** (0.000)	47.818*** (0.000)	3.633*** (0.000)	3.372*** (0.000)	3.447*** (0.000)	6.213*** (0.000)	5.285*** (0.000)	5.538*** (0.000)
학력	0.213 (0.319)		-0.027 (0.880)	0.004 (0.496)		-0.004 (0.365)	0.014 (0.431)		-0.012 (0.294)
1인당 GDP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R ²	0.037	0.419	0.420	0.017	0.550	0.564	0.023	0.654	0.668
N	29			29			29		

주: ***p<0.01, **p<0.05, *p<0.1

제4절 결론 및 논의

1. 요약

본 장에서는 교육의 성과를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시켜 사회적 자본과 복지를 중심으로 개인과 사회의 고학력화의 사회적 성과를 살펴보았다. 교육과 사회적 자본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들에서 주장되고 일부 경험적 연구들도 이루어졌으나 교육의 어떠한 측면들이 사회적 자본의 여러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했던 실정이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개인의 그리고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 현상은 고학력의 성과 측정에서 기존의 경제 영역에서 벗어나 사회적 영역까지 분석의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 타당성과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의 분석결과들을 통해, 개인의 고학력화와 사회의 고학력화는 주요 사회적 자본 변수와 복지 변수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한국종합사회조사와 유럽사회조사 결과 분석에 의하면 개인의 고학력화는 한국 자료와 유럽 자료 분석 결과 모두에서 투표 참여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제외한 사회적 자본 변수와 복지 변수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만 각 결과의 통계적 유의도는 한국의 경우 개인의 고학력화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는 한편, 유럽조사에는 신뢰, 정치적 관심, 사회봉사참여, 건강, 그리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한국에서 개인의 고학력화의 사회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제한

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비해서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의 사회적 성과를 분석한 ESS 집계데이터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회의 고학력화는 신뢰와 정치적 관심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투표참여와, 사회봉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사회적 네트워크나, 건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부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같은 결과는 개인 수준의 고학력화와 사회 수준의 고학력화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개인 수준에서 유럽에서는 개인의 고학력화가 신뢰, 정치적 관심, 사회봉사참여, 건강,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한국에서 개인의 고학력화는 개인의 신뢰수준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정치적 관심, 사회봉사, 건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중졸이하, 고졸, 대졸 이상 세 집단 중 일부 집단의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과 유럽 조사 모두에서 개인의 학력수준 상승이 투표 참여 및 사회적 네트워크와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고학력화의 성과의 한계를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전반의 고학력화 수준이 사회적 자본 및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앞에서 살펴본 개인의 고학력화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와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유럽사회조사(ESS)의 개인 수준의 데이터 분석에서는 고학력화가 사회봉사, 건강,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ESS 집계데이터 분석에서 사회 전반의 고학력

화는 사회 전반의 사회봉사, 건강, 만족도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ESS 개인데이터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집계데이터 분석에서도 사회의 고학력화는 투표참여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논의

이상의 결과는 개인 수준에서 고학력화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줌과 동시에, 사회전반의 고학력화가 사회의 사회적 자본 형성 및 복지 측면에서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주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본다. 즉, 개인 수준에서의 고학력화는 제한된 변수들에 대해서만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개인 수준의 고학력화가 개인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의 고학력화 수준이 사회의 사회적 자본 및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고학력화가 신뢰, 정치적 관심, 사회봉사, 건강,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는 이 중 신뢰와 정치적 관심 측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고학력화와 사회전반의 고학력화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보여준다.

개인의 고학력화 수준에서도 유럽 국가들의 데이터 분석결과가 한국의 분석결과와 결과의 방향은 같으나, 각 모델별로 통계적 유의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개인의 고학력화가 사회적 자본에 미

치는 영향의 측정결과도 분석 국가의 문화적 차이와 국가별 발전 수준 등에 따라 차이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학력화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가 개인과 사회전체 등 분석수준에 따라 다른 점,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변수에 따라 다른 점은 교육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과 전체 사회,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영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해 준다. 이같은 결과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결과의 주요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 수준의 고학력화와 사회 수준의 고학력화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은 고학력화의 사회적 성과가 개인보다 사회 전반 수준에서 제한적임을 알려준다. 이는 최근에 한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 등 세계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 현상에 비추어 볼 때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다. 2절의 교육과 사회적 자본에 관한 논의의 [그림 6-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 수준 뿐 아니라 교육의 내용과 밀접한 영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양 뿐 아니라 교육의 질과 내용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사회 전반의 교육의 양적 증가만으로 사회적 자본이 높아지는 것이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는 투표율 감소의 경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교육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려는 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우려했던 대로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가 사회 전체의 사회적 자본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

는 현재의 교육의 초점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단순한 교육의 양이 아니라 교육의 내용과 질을 포함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고학력화에 따른 교육의 질과 내용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가 국가별 경제수준을 통제할 경우 건강과 삶의 만족도 등 개인이 느끼는 복지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 또한 현재의 교육의 사회적 성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그림 6-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건전한 생활습관과 건강에 대한 지식 등 사회 전반의 건강에 대한 지식과 관련이 있다고 볼 때, 전반적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없이 지식의 양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개인이 복지수준이 높아지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유럽 국가의 자료 분석에서 개인의 고학력화가 사회적 자본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개인의 고학력화의 사회적 성과에 문화적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개인의 고학력화가 신뢰에 대해서만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유럽 조사에서는 신뢰 뿐 아니라, 정치적 관심, 사회봉사, 건강, 만족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개인의 고학력화가 한국에서는 상호 신뢰를 높여주는 반면 상대적으로 정치적 관심이나 사회봉사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한국 교육의 문화적 특성의 영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서양의 교육의 초점이 사회 참여와 사회 봉사 등 시민교육에 보다 중점을 두는 반면, 한국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지식의 축적에 영향을 둔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위에서 언급한 교육의

내용과 질의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6장 연구결과를 받아들이는 데에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논하는 데 고학력화 현상에 초점을 두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 학습의 내용과 형식은 매우 다양하며 고학력화는 제도권 내의 형식적 학습의 양에 기초하여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려는 시도이므로 매우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의 양과 교육의 질 중에서 어떠한 것이 교육의 사회적 성과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향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자료와 측정의 한계이다. 고학력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작적 정의가 가능하며, 보다 이상적으로는 교육연수 등을 고학력화의 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개인의 경우 중졸이하, 고교, 대졸 이상의 학교교육 단계를 사용하였으며, 사회 전체의 경우 대졸자의 비중을 고학력화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측정방법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비교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서는 다양한 수준과 서로 다른 문화권의 고학력화가 사회적 성과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 제시함으로써 최근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의 고학력화 현상의 사회적 성과를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제 7 장

고학력화와 대학서열화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고학력화와 서열화에 관한
선행 논의

제3절 한국 대학의 서열화

제4절 결론 및 논의

제7장 | 고학력화와 대학서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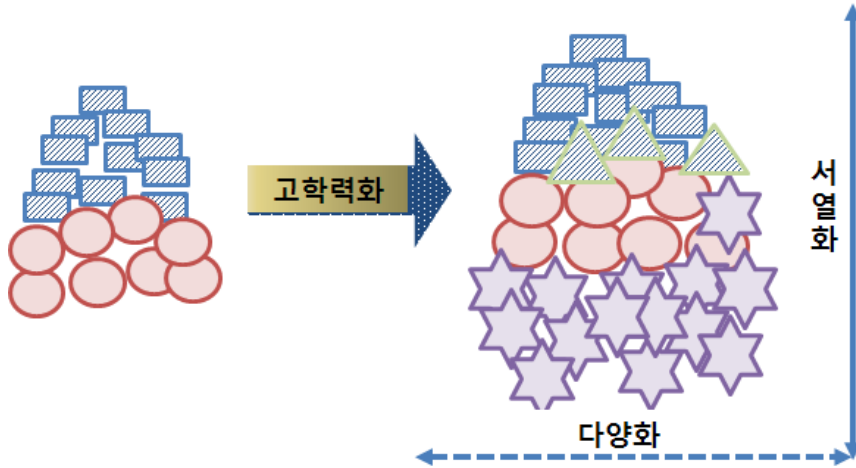
임 언

제1절 문제의 제기

고학력화의 과정에서 다양한 고등교육 기관이 등장하고, 이러한 기관들은 수직적으로 분화하여 서열을 형성하였다. 선진국에서 고등교육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연구 중심의 대학들보다 한 단계 낮은 제2군의 대학들이 새로 생기고, 이러한 대학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였다. 고등교육의 확대가 고등교육 기관의 분화를 초래하지만, 역으로 고등교육 기관의 분화와 다양화로 인하여 고등교육의 확장이 가속화된다고(Brown, 2001).

우리의 고등교육 확산 과정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도 더욱 세밀한 서열화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고등교육의 급속한 확대 과정에서 기관별로 기능이 분화되기보다는 대부분 연구 중심 대학 중심으로 규모를 확대해왔고, 학생선발 기준이 획일화되는 가운데 대학을 서열화시켰다는 것이다(김안나, 2003).

[그림 7-1] 고학력화, 서열화와 다양화



우리의 대학 서열화 현상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대학의 서열화가 대학생들의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뿐 만이 아니라 초중등교육에서의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비 증가의 주원인이 되고, 입시경쟁의 고통을 악화시키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입장이 있다(조상식, 2010; 김상봉, 2008; 이정규, 2003; 김경근, 1999). 반면, 대학 간 서열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대학 발전에 기여하므로 대학의 자율권 확대를 통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이주호 외, 2003). 또한 김진영(2006)은 대학 간 서열이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와 공급자인 대학의 행위 결과로 빚어진 균형 상태로 보고 있다. 즉,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애임금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며, 공급자인 대학이 존립을 위하여 우수학생을 유치하고자 경쟁한 결과라는 것이다. 일종의 합리적 행위의 결과로서 서열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 차이는 직간접적으로 서로 다른 이론에 맞닿아 있다.

기능주의 입장에서는 고등교육의 분화와 다양화를 효율성의 증대로 보지만, 사회적 통제 이론가들은 고등교육의 분화가 엘리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해석한다(Shavit, Arum, & Gamoran, 2007). 한편 학력주의 이론(Collins, 1979)에서 볼 때, 학력의 중요성은 기술이나 효율성에 관한 것이기 보다는 문화적인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 지식 자체보다는 학위가 더 큰 의미가 있다. 학력 위계의 정점이 확대됨에 따라서 고학력화가 초래되었으며, 그 결과 고학력화가 진행되기 이전의 차별적 지위를 지켜나가기 위한 추가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열화가 고학력화 과정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서열화의 정도와 양상은 학생 선발 기준의 다양성,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차이 등이 작용하여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상대적으로 서열이 명확한 국가에 속하는데, 이러한 선명한 서열화를 우리 사회의 특성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는 서열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달라진다. 서열화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재의 서열화 정도를 적절한 것으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나친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가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될 것이다.

한국 대학의 서열화 상황을 김진영(2006)과 오호영·김승보·정재호(2006)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의 입학생 수능점수를 이용하여 밝힌 바 있다. 상위권 내에서 서열의 변동이 없으며, 고착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착화가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된 고학력화 과정에서 더욱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검토한 시기인 2003년 이후 고학력화는 더욱 진행되었

으며, 특히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확연하게 상승하는 가운데, 대학의 서열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대학의 서열은 입학생의 수능성적으로 측정하며, 1994년에서 2009년에 이르는 대학 입학생 수능성적분포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서열화’라는 용어는 대학 교육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무리 없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문헌 및 논의에서는 서열화(ranking)보다는 계층화(stratification) 혹은 위계적 계층화(hierarchical stratification)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이다. 서열화는 한국적 상황에서 매우 독특하게 나타나는 계층화의 한 양상이라 볼 수 있다. Duncan(1968)은 ‘계층화를 개인의 출생 시의 불평등 위계 속의 지위가 생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 특히 세대를 넘어서 유지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Grodsky & Jackson, 2009). 이를 대학의 서열화라는 맥락으로 적용하자면, 서열화는 특정 시기에 정해진 대학의 상대적 위치가 상당한 기간 유지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는 서열이라는 용어보다는 계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므로 부분적으로 계층과 서열을 혼용한다.

제2절 고학력화와 서열화에 관한 선행 논의

1. 고등교육의 다양화와 계층화에 관한 관점

고학력화 과정에서 새로운 교육기관이 생겨나자 이전의 고등교육 체제에서는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없었던,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는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권의 확대, 기회의 균등을 가져왔지만,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이 2류의 고등교육 기관에 한정하여 진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Ayalon, Grodsky, Gamoran, & Yogev, 2008). Ambler & Neathery(1999)가 프랑스, 스웨덴, 영국, 독일의 대학 입학생의 계층별 분포를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에서의 불평등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덜 고상한’트랙에 등록한 학생의 비율로 보면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층이 월등히 높은 현상이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기관의 종류와 전공의 다양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그렇게 형성된 기관들 간에는 계층이 형성된다. 상호 연계되어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 중에서 어느 것에 더 주목하는가는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다르다. 기능주의의 입장에서는 주로 다양화에 따르는 순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는 달리 교육의 팽창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관 간 계층화에 더 주목하는 입장이 있다.

고등교육 기관의 팽창에 대한 기능주의적 해석은 다양화와 효율성에 초점을 둔다. 고등교육 팽창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대학에서 외면하던 섹터의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고등교육 기관들이 생성되고 이 기관들은 다양한 출신 배경(인종, 성별, 연령 등의 측면에서)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고등교육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Braubacher & Rudy, 1999).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고등교육의 확대에 따라서 고등교육 기관들은 교육 목적, 관리 방식, 프로그램의 유형 면에서 수평적으로 분화되고, 이들은 각기 다른 고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새롭

게 나타난 고등교육 기관의 교육 목적과 학생 특징이 다양하지만, 이러한 다양성이 반드시 학문적 능력의 차이를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양화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보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위계화는 다양화 과정에서 나타는 부산물이라는 것이다(Ayalon, et al, 2008).

다양화의 순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기능주의적 입장과는 달리, 고등교육의 팽창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관 간 계층화에 더 주목하는 입장에서 보면 고등교육의 확대는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확대에 따른 기관 간 경쟁의 결과이며, 고등교육기관의 위계적 계층화는 이러한 경쟁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이다(Heren, 1990; Dougherty, 1994). 학문적으로 위세가 높은 대학일수록 입학 조건이 까다롭고, 학업능력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선별 조건이 까다로운 기관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의 사회적 계층과 학업 목적이 고등교육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입학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고등교육 팽창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화와 계층화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고등교육 팽창 후에 편입되는 제2군의 학교들(second tier)의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온다. 기능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새롭게 추가되는 학교를 통하여 기존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던 집단들이 고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특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고, 계층화 관점에서 보면 고등교육 확대 과정에서 새로이 포함된 교육기관들에 기득권층, 특히 다소 능력이 떨어지는 기득권층의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입장은 최대 관리 불평등(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MMI)가설로 일컬어졌다.

최대 관리 불평등(MMI) 가설은 Raftery & Hout(1993)가 아일랜드가 1967년도의 교육개혁에 의하여 중등단계 교육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을 바탕으로 수립한 가설이다. 교육확대를 통하여 계층 간 간극이 없어지지 않으며, 단지 대폭적인 확대를 통하여 덜 선별적으로 변하면서 계층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는 것이다.

MMI 가설의 한계는 이 모델이 교육에서의 트랙킹과 다양한 질적 분화를 간과했다는 점이다(Lucas, 2001). 교육 기회의 확대의 결과, 교육적 선택이 단순히 진학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트랙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로 바뀌게 되고, 교육연한이라는 양적 교육 성취에서의 불평등이 질적 분화로 대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더 선별적이며, 위신이 높은 트랙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불평등으로 대치된다고 본다(Shavit, et al, 2007).

2. 고학력화와 서열화에 대한 학력주의의 관점

Collins(1979)로부터 비롯된 학력주의(credentialism)에서는 교육은 사회적 특권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본다. 이 관점에서 보면 교육자격이라는 문화자본의 습득(Bourdieu & Passeron, 1977)을 위한 집단 간 경쟁의 산물로서 고학력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고학력화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보는 인적자본론과는 다른 관점이다.

Brown(2001)에 따르면 Max Weber에 기원을 두고 있는 학력주의 이론은 인간자본론이나 구조주의 이론의 대안적 관점이다. 고학력화

를 문화에 바탕을 둔 특정 직업과 조직에 대한 위계화된 진입 장벽의 확대로 보는 Weber의 관점에서 보면 학력은 본질적으로 능력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구성물로서 노동시장에서의 기술적 요구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 학력은 특정 직업이나 조직에 입문하는데 학위 소지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 정당화이며, 개인의 능력이나 기술 숙련이라는 이데올로기 저변에 깔려있는 문화적 지배를 은폐하는 대중적 믿음에 기초하여 직업적 독점이 유지되어 왔다.

Collins가 보기에 지난 100년간 교육의 확대가 일어났지만 계층 이동의 기회는 실질적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기간 중에 많은 사회 집단들의 교육적 성취가 증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낮은 사회 계층 사람들의 교육적 성취가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의 교육적 성취는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Brown, 2001).

Bourdieu의 문화자본의 사회적 재생산 이론에 의하면, 새로운 사회적 집단들이 고등교육에 진입함에 따라서 사회적 특권층들은 이전에 대학 학위를 통하여 보장되었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투자한다(Bourdieu & Boltan, 1973). 이 이론에 따르면, 대학 학위가 포화되어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면, 자신의 특권을 재생산하기 위하여 교육 자본에 의존했던 집단들은 추가로 대학원 학위를 위하여 투자한다(Bourdieu, 1984). 고학력화를 통하여 학력의 패스트푸드화, 표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관료적이며, 전문적인 직업군에서의 특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문화와 확대가 이루어진다. 석사, 박사, 박사 후 과정의 증가가 이를 나타낸다.

경제학에서의 신호이론과 선별이론에서는 학위는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보유한 역량에 대한 신호이며, 학위가 선별의 기준이 된다는 것

이다. 이 두 이론은 모두 고용주가 근로자의 미래 업무 수행능력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불확실성에 기반하고 있다. 적절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이 불분명할 경우, 학위 취득자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방어적 학위취득을 하게 된다(Spence, 1974). 그러나 방어적 학위취득의 경우, 전문자격을 강조하는 직업이 늘어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반면, Collins는 특정 직업의 독점적 지위는 기본적으로 문화자본의 축적과 사회적 배제를 통하여 형성되었고, 능력주의에 기초한 경쟁에 있지 않다는 점을 역사적 분석을 통하여 이론을 정교화하였다.

3. 외국의 고학력화 과정에서의 서열화

Shavit, Arum, & Gamoran는 국제 비교를 통하여 교육팽창에 따른 대학의 다양화와 계층화 유형을 분류하였다. 고등교육이 팽창함에 따라서 고등교육 기관 서열화 과정에서 질적 차이가 더 중요해진다는 가설(Lucas, 2001; Shavit, et al, 2007)을 바탕으로 국가별 사례를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학력화 과정에서 제2군의 대학들이 생기면서 제1군 대학에 대한 접근의 기회에서 계급 간 차이가 더 확대된다.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국가들에서 고등교육의 확대와 계층화 과정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한국, 일본, 대만은 미국 모형을 따라서 사립과 국립, 연구중심대학과 전문대학간의 차이가 함께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편 영국과 호주에서는 이전의 폴리텍을 대학으로 전환하면서 고등교육 기관들 간에 위신 차이를 두었다. 호주가 대표적으로 이에 속한다. 반면, 단일 체제를 유지해온 유럽도 고등교

육 확대 과정에서 BA와 MA로 구분하면서 BA쪽 진학을 확대를 꾀했다(Shavit, et al, 2007).

Ambler & Neathery(1999)는 프랑스, 스웨덴, 영국, 독일, 미국의 대학 입학생의 계층별 분포를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분석하였다. 이 나라들에서 드러난 고학력화와 계층화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에서는 교육의 공급과 대중의 교육 수요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바칼로레아를 통과한 학생의 비율이 1986년의 31%에서 1945년에 63%로 두 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고등교육 과정은 뚜렷하게 분절화된 체제로서 다섯 가지 유형의 교육과정이 있다. 고등기술자과정(STS)과 그랑제콜 준비과정(CPGE), 단기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기술대학(IUT), 엔지니어링과 경영대학이 주를 이루는 그랑제콜, 여타의 학문과 법학과와 의예과가 있는 대학으로 분화하였다. 고학력화 과정에서 고등교육 이수율에서 계급 격차가 완화되는 듯 보이지만, 학력에 미치는 계급의 효과는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예컨대 육체노동자 자녀의 경우 의과대나 약학대에 진학하는 비율은 7%에 불과하고, 경쟁률이 치열한 그랑제콜 준비과정(CPGE)에 진학하는 비율은 7%미만으로 조사되었다(1995년 기준). 반면에 졸업 후 상류층 진입이 가능한 그랑제콜에 입학한 학생의 부모 직업 지위를 살펴보면, 중간직 이상의 부모를 둔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다. 예컨대, 프랑스 유일의 고위관료 양성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립행정학교(ENA)의 경우, 1990년대 초 부모의 직업 지위가 중간층이거나 하층인 학생의 비율이 6%에 불과하였다. 프랑스 전체 사회에서 직업 지위가 중간층이거나 하층에 해당하는 인구가 당시 68%였음을 감안할 때, 확인한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Ambler & Neathery, 1999).

스웨덴의 경우, 교육 기회의 평등을 무엇보다 강조하며 1960~1970년 일련의 교육개혁을 단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등록률이 증가했다. 이러한 등록률의 증가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제고한다는 것을 얼마간 입증했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 전체 재학생의 부모의 직업 위세를 분석한 1994년도 연구결과를 보면, 21세 재학생 기준으로 부모가 전문직, 관리직인 학생의 비율이 1984년에 37%에서 1992년에 48%로 증가했다. 반면에 비숙련 육체노동자 자녀의 비율은 같은 해 6%에서 9%로 증가한 것에 그쳤다. 이러한 격차는 고등교육기관을 지위(*prestige*)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스웨덴의 경우도 프랑스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육체노동자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계급 간 격차가 감소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들 자녀의 대다수가 ‘덜 고상한’ 학교와 전공을 선택한다는 것이다(Ambler & Neathery, 1999).

영국에서는 1960년대 앤더슨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전액 국비로 대학학비를 충당하였다. 1965년에는 ‘이분화’ 정책 도입을 통해 대학과 기술대학(*new polytechnics*)이 분화하고, 여기에 계속 교육을 제공하는 지역대학(*area college*)이라는 제3영역이 있었다. 영국의 경우, 대학의 양적 증가가 비교적 천천히 이루어졌고, 또한 대학 입학 조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여타의 고등교육기관(비대학 영역)이 상대적으로 급증하여 대학이 흡수하지 못한 교육 수요를 흡수하였다. 1985~1987년도 아버지의 직업별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서비스계급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진학과 육체노동자계급 자녀의 진학률의 상대적 비율이 30년간 감소했다. 즉, 두 계급 간 차

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등교육기관 중 대학 진학률을 보면 1956~1965년 출생 집단 가운데 육체노동자의 2%만이 대학에 진학한 반면에 서비스계급 자녀의 대학 진학률은 17%로 나타났다. 따라서 육체노동자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는 지역대학이나 기술대학과 같은 비대학 영역에 한정되어, 영국 역시 계급 간 차이는 거의 변하지 않고 온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Ambler & Neathery, 1999).

독일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이 이분화되어 있고, 계급이 학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지는 않는다. 1916~1965년에 출생한 집단을 10개의 동일 연령 집단으로 구분한 연구에서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업과 학력)와 학력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반면에 최근의 성인 인구 관련 데이터(1980년에서 1991년까지 수집)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독일에서도 세계대전 이후 계급 간 교육 불평등 문제가 약화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공무원 자녀 : 블루칼라 노동자 자녀의 고등교육 입학률 승산비가 1987년 6.6에서 1993년에 4.3으로 감소한 결과도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통일 전 서독의 경우, 다른 유럽 지역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계급의 자녀들은 선호도와 위세가 비교적 낮은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진학 시 *arbitur*(프랑스의 바칼로레아와 같은 대학입학시험)가 필요한 대학보다는 *Fachhochschulen*(영국의 폴리테크닉과 유사)에 진학하였다. 대학 내에서도 사회과학 계열에는 아버지가 노동자인 자녀와 전문직인 자녀 비율이 15:22임에 반해, 의대의 경우 7:45로 조사되었다(Ambler & Neathery, 1999).

요컨대, 단순히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계급 간 교육 격차를 감

소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 효과를 연장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유럽의 경우도 고등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미국 모델과 유사해지고 있다. 즉, 예술, 신문방송, 체육, 사회복지, 각종 기술훈련과 같이 이전에는 고등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한 응용 분야가 고등교육 과정에 새로이 편입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화는 고등교육 과정 내에서 새로운 위계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위계구조를 형성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입학 가능성(진입장벽), 교육훈련 기간, 직업적 보상, 비용 등이 작용한다(Ambler & Neathery, 1999).

4. 한국 대학의 서열화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

한국 대학의 서열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은 주로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대학 서열의 고착화 상태를 드러내고, 대학 서열과 관련된 변인을 확인하는 연구들이다. 김안나(2003)는 1994~2001 수능시험 점수 분포와 변화 추이를 대학의 특성별로 분석하여, 서울의 국립대학을 정점으로 수도권과 지방대학,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설립역사가 오래된 대학과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에 신설된 대학 등 대학의 특성에 따라 서열화 되어있는 위계구조를 확인하였다.

김진영(2003)은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대학 서열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대학의 서열변화는 주로 중위권 이하 대학에서 이루어졌으며, 상위 30% 이상에서는 거의 서열 변동 없이 고착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오호영 외(2006)는 1994년, 1997년, 1999년, 2000년, 2003년 대학 서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0.9이상으로 서열에 변화

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학 서열과 각 전공 내 대학 서열 간에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인문, 사회, 공학, 자연계열은 상관성이 높은 반면, 의학계열은 대학서열과 전공 내 서열이 가장 낮음을 보여주었다.

대학의 서열화와 관련된 요인에 대해서 이두휴와 고희일(2003)은 기회와 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간 발전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 대학의 위계적 서열화가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주호 외 (2003)는 학생 1인당 운영 지출비, 교원확보율, 교수 논문수, 대학원생수가 서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김진영(2006)은 교수의 연구수준, 지방대 여부, 학생 수가 대학 서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장수명(2006)은 서열이 유지되는 현상의 원인을 대학 서열에 따른 경제적 수익 차이에 있다고 보았다. 대학입학성적 서열에 따른 차이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며, 그중 상위 50개 명문대학에 프리미엄이 집중되고 있음을 밝혔다. 김희삼·이삼호(2008) 또한 개인 수능성적을 통제한 후에도 서열에 따른 임금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와 별도로 대학 서열화가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와 연계하는 논의가 있었다. 학력(學歷, 또는 學力)과 구별되는 학벌은 제도화된 교육기관의 출신학교에 따라 이루어진 파벌(이정규, 2003)이며, 그로 인하여 초중등학교에서의 무한경쟁과 사교육의 확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가 김경근(1999), 이정규(2003), 김상봉(2008)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역사학자 김경근(1999)은 대학서열이 학벌문제라는 문제 제기를 선명하게 하고, 대학평준화를 통한 서열타파를 제안하였다. 이정규(2003)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역사

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학벌의식을 검토했다. 김상봉(2008)은 학벌 문제가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연적 현상이나 부수적 현상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본질적 형성원리로부터 비롯된 현상임을 다양한 방식으로 밝히고자 했다. 특히 학벌을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작동하게 하는 중심기제로 보고 학벌차별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근거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학벌이 공교육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전인교육을 불가능하게 하며, 획일적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의 주된 원인이라 보고, 대학평준화를 핵심으로 하는 변화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3절 한국 대학의 서열화

1. 분석 자료의 특성

이 절에서는 4년제 대학에서의 서열의 형성과 유지 양상을 대학별 입학생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파악하였다.

1994년도부터 2003년도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진학사 수능자료²²⁾를 사용했으며, 2005년부터 2009년도 자료는 진학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본 연구를 위하여 새롭게 생성하였다. 진학사에서 제공하는 전공별 평균은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발표한 평균 점수와, 자체 모의 지원 최종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자료이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22) 이 자료는 이병희 외(2004, 노동시장과 교육), 장수명(2006, 대학서열의 경제적 수익 분석)에 사용된 자료와 동일함. 진학사에서 자체 제작하여 제공한 전공별 평균 백분위자료임.

대학에서 전공별 평균 점수를 발표하지 않으므로, 진학사에서 자체 추정된 점수가 대부분이다. 1994년~2003년 데이터와 2005년~2009년도²³⁾ 데이터는 수능 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중요한 차이가 있다. 2003년도까지는 총점 원점수를 바탕으로 백분위를 계산하였으나, 2005년 이후는 학교와 전공에 따라서 반영하는 과목 수가 다르고, 원점수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활용하여 전공별 평균을 계산하였다²⁴⁾. 이와 같이 생성한 전공별 백분위 평균점수를 연도별, 각 학과별 인원 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학교별 수능 백분위를 계산하였다.

이 자료는 민간에서 추정된 자료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2005년 이후의 자료에서 과목별 백분위의 평균값을 계산할 때 학교별 전공별로 반영하는 과목의 수가 다르고, 표준점수와 백분위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평균 점수의 의미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 입시전형 방법이 다양화되고, 정시의 비율이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2005년과 2006년은 과목별 난이도 조정에 실패하여 선택과목 간 유불리가 커서 ‘로또 수능’이라는 평가가 있었던 시기이므로 자료 해석에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23) 2004년의 경우는 표준점수에 따른 조건표가 급간별로 제시되어 전환할 경우, 다른 연도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제외하였다. 또한 2008년은 등급정보만 있어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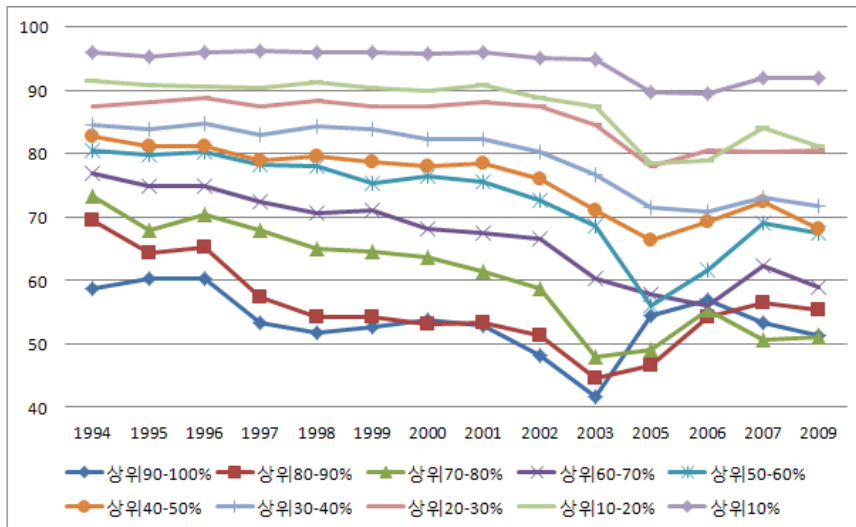
24) 표준점수만 있고 백분위데이터가 없는 학교의 경우, 표준점수를 백분위데이터로 환산하였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사탐과 과탐 점수가 표준점수로 제시되었으나, 표준점수에 상응하는 백분위 조건표가 없어서 백분위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중하위권에서는 사탐과 과탐의 점수가 충실히 반영되었다. 수리영역은 수리 가형과 수리 나형의 점수를 복수로 가지고 있는 학과는 백분위점수 평균데이터를 계산하였다.

2. 서열의 추세

가. 10분위 수능 평균의 추세

1994년에서 2009년 기간 동안 전체 대학의 서열이 유지되는 현상을 살펴보고자 1994년 대학별 평균 수능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각 대학을 10구간으로 쪼개어 집단별 평균 수능 백분위 점수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1994년도 서열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 설립된 대학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림 7-2] 대학 입학생 수능 성적 서열의 유지 양상



주: 1994 입학생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10개 구간으로 구분

그래프를 보면 2003년까지 모든 순위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유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과 2006년은 입시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동이 극심한 시기였기 때문에 약간의 순위 변동이 있었다. 하지만 2007년과 2009년으로 가면서 다시 서열이 자리를 잡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수능 점수의 서열상관을 살펴보면, 대체로 상관계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초기 1994년도 서열은 2003년도 까지도 매우 높은 양상을 보이고, 2005년 이후로 다소 약화되고 있다. 기준을 2000년도로 옮겨서 다시 보면 2009년도까지의 상관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서열의 변화가 소폭으로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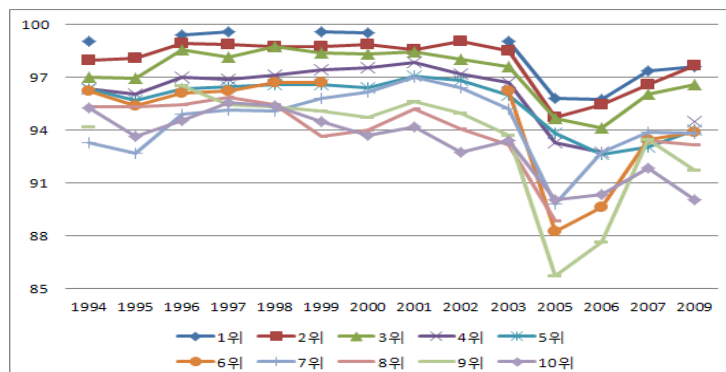
〈표 7-1〉 연도별 대학 수능 점수 평균 서열 상관계수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5	06	07	09
94	1	.94	.94	.94	.93	.90	.90	.90	.88	.90	.81	.77	.79	.82
95	.94	1	.96	.95	.95	.92	.94	.94	.92	.92	.89	.81	.85	.87
96	.94	.96	1	.96	.96	.92	.93	.92	.92	.94	.89	.85	.85	.89
97	.94	.95	.96	1	.96	.93	.96	.95	.92	.93	.89	.86	.89	.90
98	.93	.95	.96	.96	1	.95	.98	.97	.94	.95	.90	.87	.89	.90
99	.90	.92	.92	.93	.95	1	.96	.97	.94	.95	.90	.87	.89	.87
00	.90	.94	.93	.96	.98	.96	1	.99	.97	.96	.91	.88	.91	.92
01	.90	.94	.92	.95	.97	.97	.99	1	.97	.97	.91	.89	.93	.93
02	.88	.92	.92	.92	.94	.94	.97	.97	1	.96	.91	.90	.93	.93
03	.90	.92	.94	.93	.95	.95	.96	.97	.96	1	.90	.91	.96	.93
05	.81	.89	.89	.89	.90	.90	.91	.91	.91	.90	1	.92	.90	.94
06	.77	.81	.85	.86	.87	.87	.88	.89	.90	.91	.92	1	.97	.90
07	.79	.85	.85	.89	.89	.89	.91	.93	.93	.96	.90	.97	1	.93
09	.82	.87	.89	.90	.90	.87	.92	.93	.93	.93	.94	.90	.93	1

나. 상위권 대학의 서열

서열이 상대적으로 공고한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그 서열의 유지 정도를 보고자 1994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능백분위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종합대학의 백분위 변화를 살펴보았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2005년과 2006년의 혼란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순위가 유지되는 양상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순위 변화가 두드러진 대학은 전체 순위 7위인 대학이다. 이 대학은 1994년도에 10위였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7년에는 4위, 2005년에는 9개교 중(1개교는 자료가 없어서 누락됨.) 동물 5위를 유지하였다. 나머지 대학의 경우 순위가 1순위 정도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순위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상위권, 1위, 2위, 3위 대학들은 단 한 번도 순위의 변화가 없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7-3] 상위 10개 종합대학 수능 백분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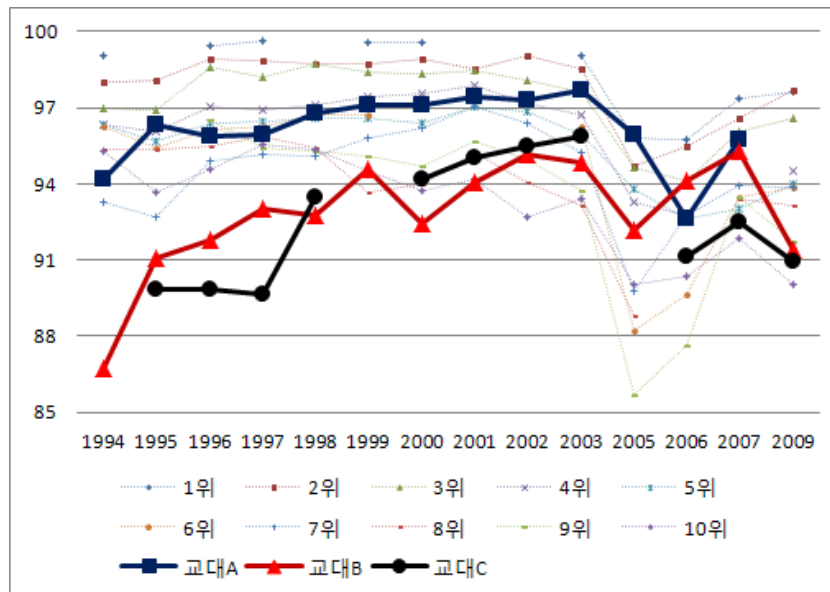


주: 순위는 전체 연도 평균으로 계산. 1위 대학의 2005년도 자료는 전공평균점수가 아니라 지원가능점수임.

종합대학이 아니면서도 상위권에 속한 대학들이 있으므로 이들의 서열분포를 종합대학의 백분위 점수 분포를 배경으로 표시한 것이 [그림 7-4]와 [그림 7-5]이다.

교육대학의 경우, 10위권 밖의 서열에서 IMF 경제 위기 이후 교직의 상대적 선호도가 상승하면서 1999년부터 종합대학 10위권 점수 분포대 안으로 들어왔다. 2003년의 경우 교대A는 서열 3위, 2005년에는 1위까지 올라갔으며, 2007년도까지 높은 서열을 유지했으나, 2009년에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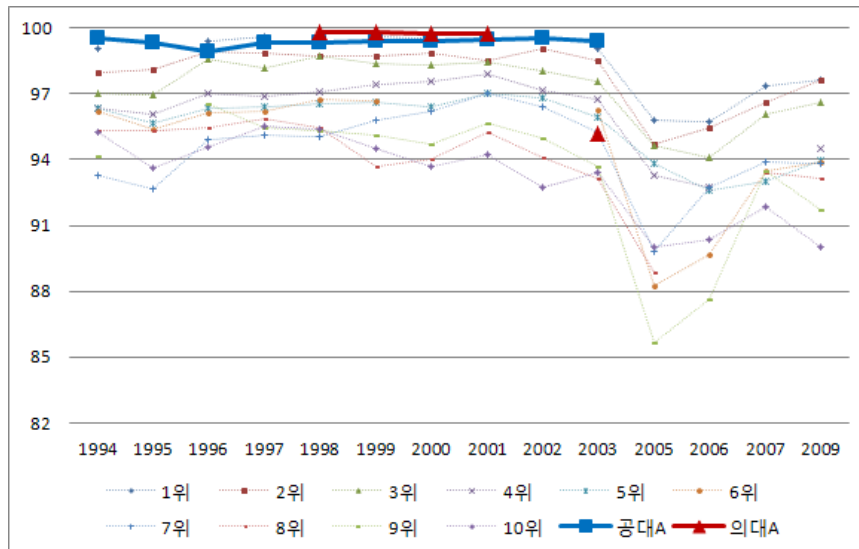
[그림 7-4] 교육대학 수능 백분위 평균(상위 10개 종합대학과 비교)



[그림 7-5]는 이공계 단과대학과 의학대학의 백분위 평균 분포이다. 이들 대학도 모두 10위권 종합대학의 점수 분포대 안에 들어온다. 다

만, A 의대의 경우 간호학과가 신설되면서 학교평군이 하락하였다.

[그림 7-5] 의학 및 공학 대학 수능 백분위 평균(상위 10개 종합대학과 비교)



수능점수의 변화과정을 교육과정의 시기에 따라서 구분하여 평균해보면 그림과 같다. 1994년부터 2009년까지는 5차, 6차,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었던 시기이며 각 시기별 수능 백분위 평균을 제시한 것이 [그림 7-6]이다. 제5차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입시가 적용되던 시기의 순위를 기준으로 변화를 보면, 5위까지는 순위와 간격이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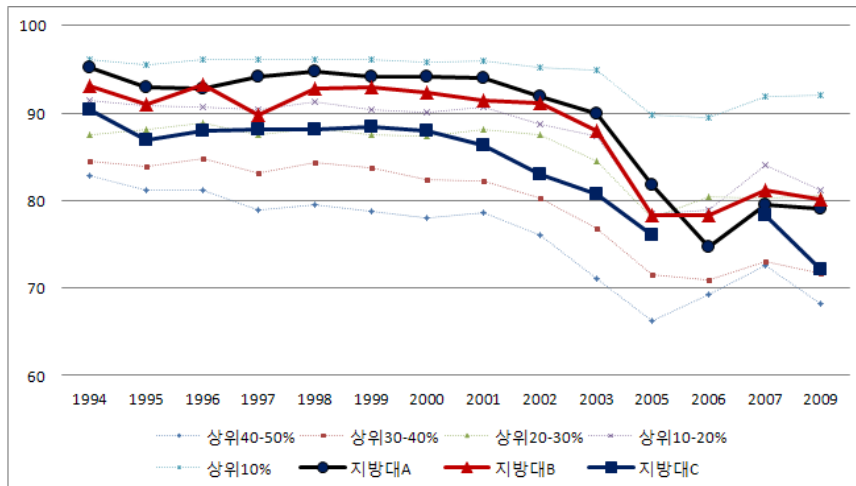
[그림 7-6]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 서열 변화



다. 지방대 서열의 하락

상위권에서의 서열의 변화가 거의 없는 가운데, 지방대는 서열의 하락이 확연하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지방 국립대의 수능 백분위 평균을 10분위로 계산한 수능 평균값과 비교한 것이 [그림 7-7]이다. 2003년의 경우, 지방대A는 상위 10% 대학의 평균에 해당했으나, 그 이후로 그 평균 밑으로 유지하다가 2006년 이후로는 상위 20% 대학들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방대도 최근에 들어와 상대적으로 서열이 더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7-7] 지방대의 수능 백분위 평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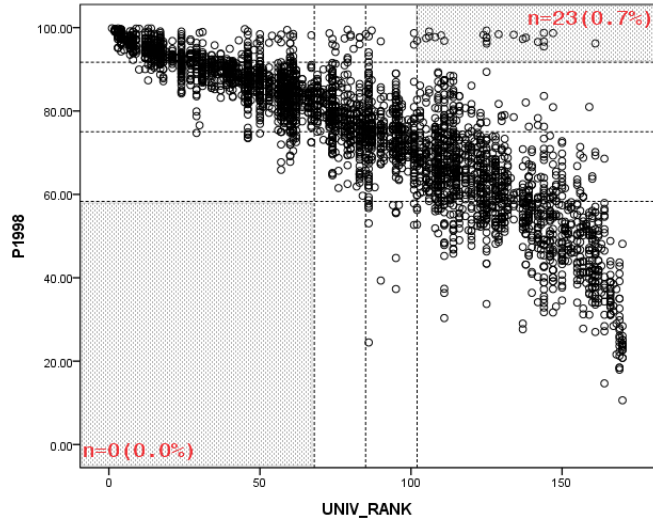


라. 대학서열과 전공 서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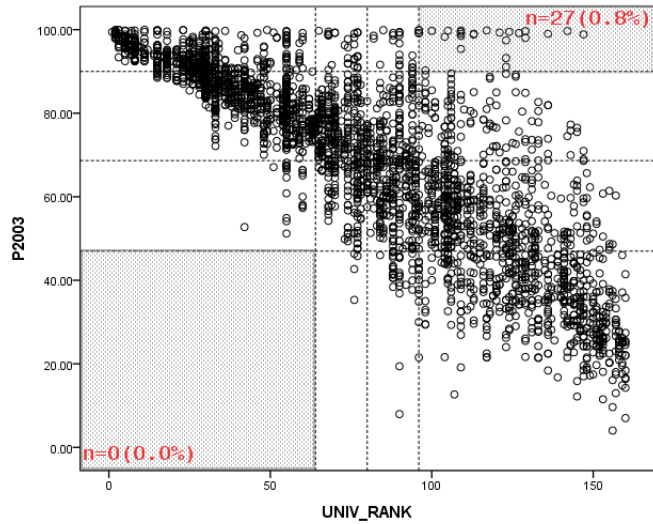
대학서열에 따라서 전공별 백분위 평균의 편차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공별 평균백분위수능점수의 분포를 표시하였다. 2006년과 2009년에는 이전보다 결측치가 많아 사례수가 적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학교 내 전공 간 점수 편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대학서열에 비하여 전공서열이 확연히 높거나 낮은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7-8]은 대학 서열별 전공별 수능 평균의 산포도이다. 평균으로부터 1표준편차에 해당하는 지점과 서열 중앙치로부터 10%에 해당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었을 때, 이상단과 좌하단에 해당하는 구간에 주목하여 빈도와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 지점은 전공 백분위와 학교 서열 간의 격차가 매우 심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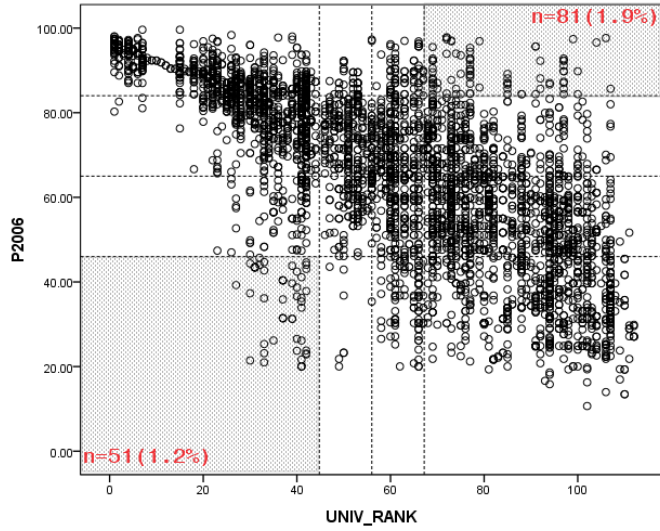
[그림 7-8] 대학순위별 전공별 수능 평균 분포(199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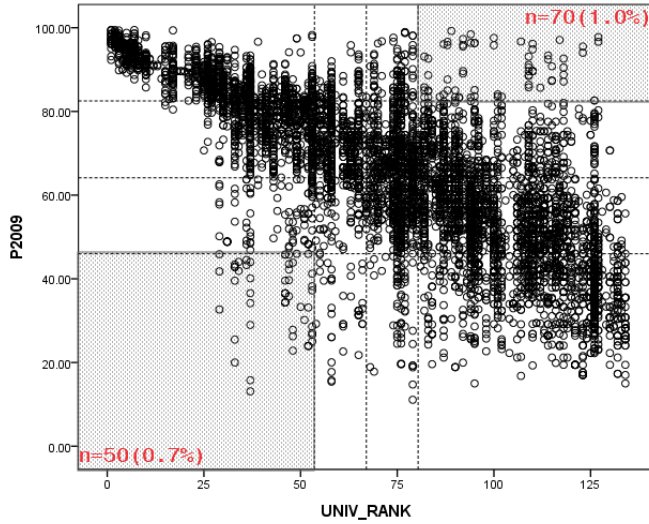
[그림 7-9] 대학순위별 전공별 수능 평균 분포(2003년)



[그림 7-10] 대학순위별 전공별 수능 평균 분포(2006년)



[그림 7-11] 대학순위별 전공별 수능 평균 분포(2009년)



1998년과 2003년은 전공서열이 대학 서열에 비하여 확연히 낮은 경우가 전혀 없는 반면, 2006년은 51개 전공(전체 1.2%)이 2009년은 50개교(0.7%)가 대학 서열에 비하여 전공 서열이 확연히 낮았다.

전공 서열이 대학 서열에 비하여 확연히 높은 경우는 1998년과 2003년에도 각각 23개(0.7%), 27개(0.8%)였다. 2006년도는 81개(1.9%), 2009년도는 70개(1.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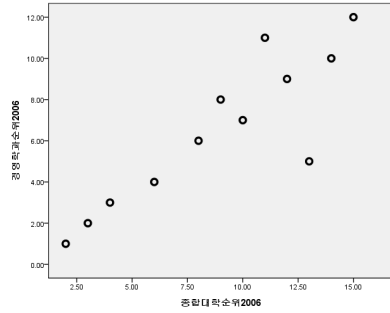
대학서열은 낮지만 전공 백분위가 상위를 차지하는 경우는 지방에 위치한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등이 대표적이다. 2003년은 6차 교육과정으로 전공이 아니라 계열, 학부 단위로 주로 선발하였다. 여전히 의대 계열 전공들이 눈에 띄는 가운데, 약학 전공, 수의예 전공, 교육학과의 선전이 눈에 띈다. 반면에 랭킹에 비해 전공점수가 떨어지는 경우는 예술계와 농업과 관련된 분야이다.

2006년에 들어서 대학서열에 비해 강세를 보인 전공이 더 다양해졌다. 기존에 강세를 보인 의대 계열(수의예과 및 약학 포함) 전공 및 사범대 학과 외에도 중위권 대학들의 특정 전공의 강세가 눈에 띈다. 한편 학교 랭킹에 비해 전공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는 주로 예체능계열 학과들인데, 이것은 이 대학들에서 새로운 전공들을 추가하면서 생긴 현상이거나 단순히 그 전까지 데이터에는 예체능 계열 전공들이 결측치가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2009년에도 초상위권 전공에는 여전히 의예과 계열이 상당수이며, 교육계열의 학과가 상위권에 포함된 경우는 2006년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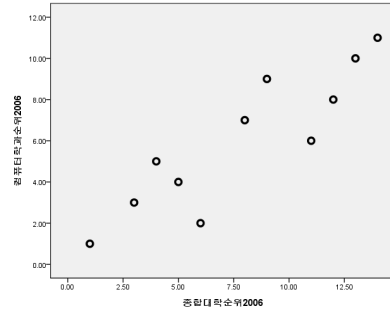
2006년, 2007년, 2009년도 경영학과와 컴퓨터 학과의 해당 년도의 전공별 순위와 대학의 순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2007년도와 2009년도는 .9이상이며, 수능 점수의 난이도 조절이 어려웠던 2006년

도의 경우도 .88와 .89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7-12] 경영학과와 컴퓨터 공학과 대학별 순위(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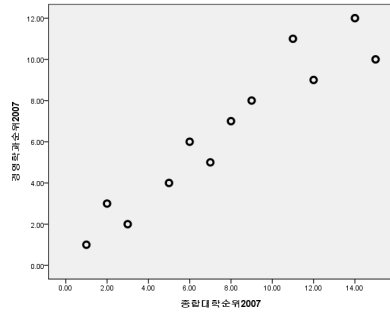


$r = .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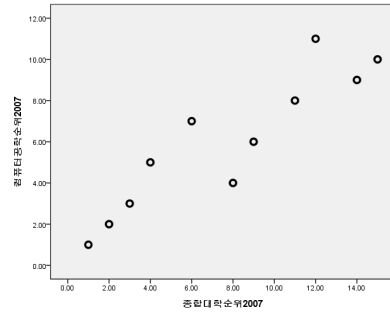


$r = .893$

[그림 7-13] 경영학과와 컴퓨터 공학과 대학별 순위(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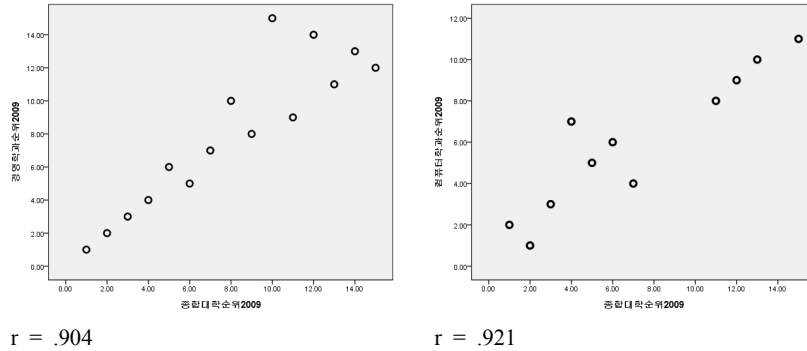


$r = .953$



$r = .911$

[그림 7-14] 경영학과와 컴퓨터 공학과 대학별 순위(2009년)



이상과 같이 장기적으로 대학 전체로 볼 때, 대학의 서열과 독립적으로 높거나 낮은 전공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상위권 대학의 전형적인 학과들의 경우, 대학의 서열과의 상관성이 여전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고학력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서열화 상황과 그것의 추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4년부터 2009년까지의 대학별 수능 점수자료를 분석하여 서열의 형성, 유지,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4년 대학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10분위로 대학을 구분하고, 그 대학군들의 평균 점수를 2009년까지 살펴보았을 때, 거의 순위

변동이 없었다. 2005년과 2006년은 입시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동이 극심한 시기(소위 말하는 로또 수능 시기)였기 때문에 약간의 순위 변동이 있었으나 2007년과 2009년으로 가면서 다시 서열이 자리를 잡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도별 수능 점수의 서열상관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1994년부터 2003년 기간, 2000년도에서 2009년도까지의 상관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서열의 변화가 소폭으로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최상위권 종합대학의 서열이 매우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위권 종합대학 10개교의 서열을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단 1개교가 상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위 10위권 대학의 서열이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지방 명문대학의 서열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위권에서의 서열 변화가 거의 없는 가운데, 지방대는 서열의 하락이 확연하게 나타났다. 2003년의 경우, 지방대 A는 상위 10% 대학의 평균에 해당했으나, 그 이후로 그 평균 밑으로 유지하다가 2006년 이후로는 상위 20% 대학들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서열과 무관하게 전공 백분위 평균이 높거나 낮은 경우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의학, 한의학, 약학, 사범 계열은 대학서열이 낮더라도 전공 평균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

다섯째, 대학 내에서 전공 평균 점수의 편차가 커지는 경향 속에서도 상위권 대학의 일부 학과에서는 대학 서열과 전공 서열이 공고한 것을 재확인하였다. 경영대학과 산업공학과를 기준으로 상위권 대학을 살펴보면, 대학과 전공의 서열이 거의 변화 없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에서 제시된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할 때, 한국 대학의 고학력화가 진행되어온 최근 약 20여 년 동안 대학 서열화가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²⁵⁾. 엄밀히 말하면, 고학력화 이전에도 서열은 존재했다. 하지만 고학력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열의 폭이 커졌으며, 상위권 내에서의 서열이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서열화가 진행, 유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고학력화와 서열화에 대한 실증적 인과관계를 입증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고학력화와 대학서열화 간에 직간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학력화가 상대적으로 서서히 진행된 선진 국가들에서 고학력화 과정에서 고등교육 기관 및 전공의 다양화와 함께 계층적 분화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은 흐름에 있다. 소수의 학문 중심의 대학이 대중들에게 확대되면서, 다양한 수준의 대학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제2등급, 제3등급의 대학들에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자녀들이 입학해왔다는 것이다 (Ayalon et al, 2008).

한국에서는 특유의 교육열과 설립준칙주의, 직업계열 학생들의 대학 입학 지원 등으로 대변되는 교육정책으로 고학력화가 단기간에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은 대학졸업 학위 획득을 위한 질적 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의 확대는 학위가 나타내는 능력 수준의 폭을 확대하고, 그 결과 노동시장 및 사회에서의 대학 학위 자체가 갖는 신호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대학

25) 기존의 서열과 관련된 연구들이 2003년까지의 수능 자료를 분석한 것인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5, 2006, 2007, 2009년도 수능 자료를 추가하여 분석했으며, 최근에도 서열은 온존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단, 최근에 이르러 수시전형의 비율이 확대되고, 수시에서는 수능보다 내신과 논술의 비중이 큰 경향을 감안할 때, 여기에 제시된 서열 자료가 전체 입학생의 서열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내에서의 위계적 서열화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위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며, 그것이 특정집단이 갖는 문화자본의 증표라는 학력주의의 관점에서 고학력화의 진행은 필연적으로 새로 추가된 대학 기관 내에서의 서열과 계층화가 일어난다고 본다. 즉, 고등교육의 보편화과정인 고학력화 과정에서 사회적 성공 및 선별적 지위로 연결하는 새로운 상징들이 정교하게 세분화된다는 것이다.

서열이 공고하게 유지되는 것에는 대학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가 대학을 통하여 제공하는 교육과 이를 통하여 얻는 역량 때문만이 아니라, 학위 자체가 갖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고학력화 과정에서 그에 맞게 대학 학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보상의 총량이 함께 확대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한된 가치들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선별 기제가 요청된다. 따라서 고학력화 과정에서 서열화도 함께 진행되게 된다. 서열화는 고학력화 이전의 대학 졸업자들이 가졌던 사회적 경제적 보상의 총량의 증가와 고학력 학위의 증가율 간의 격차가 클수록 더 분명해진다.

장수명(2006)은 서열이 유지되는 현상의 원인을 대학 서열에 따른 경제적 수익 차이에 있다고 보았다. 상위 명문대학에 프리미엄이 집중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김희삼·이삼호(2008) 또한 개인 수능성적을 통제한 후에도 서열에 따른 임금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인과 관계의 방향을 밝혀주지는 못한다. 즉, 임금 프리미엄과 패널티는 서열화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서열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외에 서열화에 작동하는 기제에 대한 세밀한 검토

가 요청된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대학서열화 현상을 인적자본론이나 학력주의와 같은 기존 이론의 시각에서 해석해 내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고학력화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오류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국 대학의 서열화 현상이 다른 나라에서 나타난 양상과 유사한 패턴이 있지만, 우리의 경우 계층화를 넘어서 촘촘하고 공고한 서열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서열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가? 서열을 문제시하는 정도는 시각에 따른 차이가 크지만, 지나친 서열화로 인한 문제점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현재의 우리 대학의 서열화 현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정규, 2003; 장수명, 2006; 조상식, 2010). 특히 학벌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에서 보면 서열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확산하는 기제가 되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김경근, 1999; 김상명, 2008).

대학의 서열화는 교육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열화의 심화는 초중고에서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하는 원인이다. 대학의 서열화가 사교육 문제를 심화하는 원인이라는 진단 아래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대학입시제도가 변화해 왔다. 내신을 강조하고,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전형기준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수능점수를 기준으로 대학이 서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간 서열은 현재까지 공고하며, 상위 서열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은 여전한 상태이다. 서열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차이를 고려할 때, 우수한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하여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시장성과가 큰 대학이나 계열에 진학하기 위한 투자이며, 대학이나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서열이 높은 대학과 전공에 진학하려는 것은 매우 엄중한 고수의 내기 시험이라는 것이다(장수명, 2006).

또한 대학생들은 대학 학위로 대변되는 상징의 의미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가시적인 스펙을 쌓기 위한 무한 경쟁을 하게 된다. 대학의 서열화는 현재 하위권 대학에서의 높은 미충원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수준의 대학 서열구조 속에서 대학입학 이후에도 대입시험을 다시 보거나 편입학 등을 통해 상위 서열의 대학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위권 대학이 확보하고 있는 서열의 정당성에 대하여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다. 김승현(2011)은 최근의 대학교육에 대한 질적 분석 자료를 종합할 때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정량 지표와 최근의 대학교육에 대한 질적 분석 자료를 종합할 때 기존에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학서열과 실제 교육 여건 및 대학교육의 질은 극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의 교육성과가 대학 서열의 변화에 주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김희삼·이삼호, 2008).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교육과 관련한 대학의 기능은 부가가치의 창출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을 가려내기(sorting)에 가까웠다는 것이다(김진영, 2011).

서열이 고학력화와 함께 진행된 측면도 있지만, 우리 사회 특유의 학벌주의가 추가로 작용하여, 세계에 유례가 없는 촘촘하고 공고한 서열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서열이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사회전반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초중등학교 교육에서의 과도한 경쟁,

전인교육의 포기, 소수 상위 서열을 제외한 대학의 부실화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다. 서열의 공고한 유지 과정에는 기존에 획득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집단적인 암묵적 움직임, 특정 집단이 소유한 문화자본의 보존과 확대를 위한 노력들이 작동하여 공정한 게임이 어렵다는 점에서 서열화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서열의 고착화 과정에서 상위 서열에 대한 접근권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제한된다는 점은 서열화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강화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 성취와 출신 배경의 구조적 관련성은 고학력화 과정에서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김영화 외, 1997; 김경근·변수용, 2007).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전에 비하여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학력화와 서열화의 문제가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서열화를 해체 혹은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김상명(2008)과 김경근(1999)은 독일과 프랑스의 모델을 따라서 국립대학 중심의 평준화를 통하여 대학 서열을 타파하고, 지역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제안은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한 대안이다. 한편 장수명(2006)은 대학 전반의 품질 제고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동일한 역량을 갖춘 학생이 명문대학을 다닌 경우와 지방대학을 다닌 경우의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그 이유가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육여건이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우리 사회에서도 좋은 교수, 엄격한 학사관리, 편리한 시설 확보를 통한 고등교육 기관의 품질을 제

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대학의 교육적 성과가 서열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질 제고만으로는 서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글로벌 수준의 고등교육 수월성과 대학의 특성화, 지역 균형 발전,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질 제고,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및 사교육 완화를 위하여 서열이 현재와 같이 고착화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대학 간의 부당한 차이를 없애면서도 특성화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체제에서의 수월성을 유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과감한 사회적 결단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대학 간 서열의 유지양상과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추적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 변화되었고, 향후 새롭게 전개될 대학입시제도가 이와 같은 서열을 해체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입학사정관제 등으로 대변되는 대학 입학전형 기준의 다양화가 수능성적으로 대변되는 서열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는지 대학입학수능점수가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한 또 다른 서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8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논점들
제2절 정책적 함의

제8장 | 결 론

김안국

제1절 요약 및 논점들

본고는 고등교육의 팽창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하여 시론적 기초연구를 수행한 것이며, 분석 대상 및 자료 사용의 측면에서 새롭거나, 선행 연구보다 진일보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초 연구로서 향후의 연구 주제를 탐색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에 각 장별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남아있는 논점들과 향후의 연구 과제를 짚어 보기로 한다.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중이 증가한 나라중의 하나이다. 연령별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으로 보았을 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은 45~54세의 그것보다 훨씬 높다. 고등교육 이수는 청년세대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직업계고와 여성에게서 고등교육 이수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추후 이러한 한국 고학력화의 특색과 그와 관련되는 사회적 성과를 살펴보고, 외국의 고학력화와 사회적 성과 부분과 비교분석하는 것은 주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고등교육이 팽창하면서 사회는 점차 고학력화되고 있고, Trow(1977)의 이념형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진학률 50% 이상인 대중교육의 보편화시대를 1995년에 달성하였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팽창의 원인을 경제성장과 교육투자,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사립학교와 정원정책 등의 요인으로 살펴보면, 이들 변인들이 모두 고등교육의 팽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가와 교육투자 증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와 고학력자 위주의 직종구조 변화, 학력 간 임금격차 등은 고등교육의 팽창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사립학교 위주의 고등교육기관 증가와 대학 정원 정책 역시 고등교육의 팽창에 정의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고등교육 팽창은 강한 교육열과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경제성장, 산업구조의 변화와 학력 간 임금격차의 유인, 사립학교 중심으로 고등교육기관 공급의 용이함과 정원 확대 정책에 의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개인이 고등교육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식으로 고등교육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특히 고등교육보편화 시기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내세워 학비 부담을 개인들에게 맡기는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서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확대는 소득수준에 따른 고등교육기회 불균등을 야기할 수 있다. 고등교육의 시장화와 개인 부담이 과연 타당한가, 국가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는 고등교육 연구의 지속적 소재일 뿐만 아니라 시장과 공동체(정부규제)에 대한 정책적 입장 선택에서 기본적 주제가 될 것이다.

고등교육 보편화라는 고학력의 사회가 전개되면, 그러한 고학력화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고학력화는 사회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지만, 범위를 좁혀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교육적 측면에서 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고등교육팽창은 한국의 산업에 고학력자를 공급하여 인적자본의 수준을 올릴 수 있다. 1980년부터 2009년까지 노동의 질을 감안한 인적자본을 추계한 결과 1980년대의 인적자본 증가율은 연평균 1.51%, 1990년대의 1.02%, 2000년대의 0.95%로 인적자본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여타 요인을 제외하고 교육의 변화 만에 따른 인적자본의 증가율은 1980년대에 연평균 1.51%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연평균 1.05%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인적자본 증가율의 추세적 감소가 1980년대 이후의 고등교육의 팽창시기와 맞물려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대학진학률의 급속한 증가 추세와 인적자본 증가율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어, 고등교육팽창이 인적자본축적으로 귀결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고등교육의 팽창이 산업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성장회계 모형으로 추정하면 인적자본을 결정하는 교육연수는 산업생산에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0.22 정도의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연수의 산업성장 기여는 1980년대는 유의하지 않다가 1990년대에 크게 나타났고, 2000년대에는 그 기여가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축적의 측면과 산업성장의 측면에서 고학력화는 일정하게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고등교육이수자의 고용률 저하와 하향취업이라

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팽창과 함께 진행되었던 사교육의 팽창, 교육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양적 팽창과는 달리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임금의 저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교육서비스의 질적 감소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보이고 있다.

대학교육의 경제적 성과와 관련하여 대학투자수익률과 하향취업에 대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학투자수익률에 대한 연구들은 고등교육의 성과 부분을 측정하는 것이며, 하향취업에 대한 연구들은 고등교육의 한계 부분을 측정하는 것인데, 이 둘은 종합적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교육의 팽창과 사교육 팽창의 관련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고등교육 산업의 시장화 및 그 성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학력 간 임금격차가 고등교육의 팽창의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고등교육팽창은 그와 관련한 경제적 보상의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고등교육팽창의 진전과 소득분포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학력 간 소득분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다.

한국에서 고졸자와 대졸이상자의 소득격차는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대졸자의 교육투자수익률은 1993년 약 5%까지 하락하였다가 2003년에 1980년대 수준인 약 8%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10%로 확대되었다. 고졸자와 대졸이상자의 교육투자수익률의 추이를 보면, 1980년 고졸자와 대졸이상자의 교육투자수익률은 약 7%p의 차이를 보였다가 줄어들어 1997년에는 차이가 없어졌지만, 다시 증가하여 2009년에는 약 4%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학 교육투자수익률의 변화 모습은 1980년대 이후 대졸자의 공급이 크게 늘어났지만 동시에 대졸자에 대한 산업 수요가 일정하게 증가하여

2000년대에는 대출자의 교육투자수익률이 1980년대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임금소득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면, 고졸자와 대졸이상자의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한 자산 격차는 연간 증감 폭도 컸는데, 이는 주로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의한 것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고졸자와 대졸이상자간의 부동산 자산 격차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측면에서 학력 간 격차가 뚜렷하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이다. 결국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며, 고학력자 내부에서도 소득편차가 심화되어 빈곤 자체가 증가할 개연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많아지면, 고등교육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소득분포가 전반적으로 상향이동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각 시기별 고등교육 정책이 소득계층별 고등교육 기회와 소득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하여 전반의 사회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기회의 확대로 이루어지는 고학력화가 개인과 사회의 사회적 자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가는 기존에 분석되지 않은 주제이다. 분석의 결과 한국에서 개인의 고학력화는 신뢰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유럽의 경우 개인의 고학력화는 신뢰, 정치적 관심, 사회봉사, 건강, 삶의 만족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과 유럽 모두에서 개인의 고학력화는 투표참여 및 사회적 네트워크 참여와 선형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경우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는 신뢰와 정치적 관심에만 통계

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가 투표참여, 사회봉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 만족도 등에서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고학력화의 진전이 개인에게서도 투표참여나 사회적 네트워크 참여에 정의 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점, 사회 전체의 고학력화가 신뢰와 정치적 관심에 그치고 여타 사회적 자본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거나 혹은 건강 및 만족도에 음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한국에서 개인들이 고학력화되어도 신뢰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고학력의 사회적 성과가 별로 크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고학력화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적 자본의 증진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은 교육을 통해, 특히 고등교육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려는 낙관적인 정책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경우 고학력의 진전이 거의 사회적 자본의 신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의 전반적인 교육이 사회적 자본의 신장은 물론 제대로 된 교육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사회전체가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기회가 확산되면서 대학생이 늘게 되면, 고등교육기관들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먼저 여러 가지 특수한 수요를 반영하여 고등교육기관들의 분화 및 전문화가 나타나고 고등교육기관들이 다양하게 된다. 이전에는 고등교육이 아니었던 예술, 신문방송, 체육, 사회복지, 각종 기술 훈련 등이 고등교육과정에 편입되어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기관들이 다양해진다.

이와는 다르게 고등교육 수요확대에 따라 많은 사회집단들의 교육적 성취가 증대되지만 낮은 사회계층의 교육적 성취가 증대되는 것이상으로 높은 사회계층의 교육성취가 증가하며, 이는 고등교육기관의 위계적 계층화, 즉, 서열화로 나타나게 된다. 한국의 경우 고등교육이 팽창하는 가운데 수능점수로 측정되는 대학의 서열의 폭이 커졌으며, 특히 상위권 대학의 서열은 변함이 없이 공고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대학졸업의 학위 취득의 질적 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에 대학학위가 나타내는 능력의 신호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노동시장에서 대학의 위계적 서열이 주된 신호 기능을 해오면서 서열화는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학서열과 실제 대학교육의 질 및 교육 여건은 거의 연관성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²⁶⁾ 높은 서열에 있는 대학들이 수능점수로 측정된 질 좋은 학생들을 데려다가 그냥 졸업시키는 역할 정도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한국 교육의 제반 문제(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전인교육의 상실, 대학교육기관의 획일화)와 관련이 있다. 대학서열의 공고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세밀하게 추적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6) 전재식 외(2011)에 의하면 수능점수를 통제할 경우 상위 서열대학의 임금프리미엄은 대부분 사라진다. 이는 상위 서열대학의 교육의 질이 임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상위 서열 대학의 교육이 서열 하위 대학과 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외국의 경우 교육의 질이 우수할수록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실증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Card and Krueger(1996)을 참조할 수 있다.

제2절 정책적 함의

교육열이 높고 교육 경쟁이 심한 우리 사회에서 고등교육 정책의 수립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게다가 교육서비스는 흔히 ‘값’이 아니라 ‘을’이 권위를 지니는 특징을 지닌다. 즉, 교수나 교사들로부터 고객들은 돈을 내고 야단을 맞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즉, 학생들이 인질(hostage)이 되는 것이 교육서비스이다(홍훈, 2008). 고등교육은 특히 이러한 성격이 강하여 사회전체적으로도 고등교육 정책의 개혁은 쉽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서 고등교육은 지속적으로 팽창해 왔고,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어 왔다.

이제 한국은 고등교육보편화의 시기로 접어들었고, 이에 고등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적인 것으로 변하였다. 이런 사회에서 대학을 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정신적 혹은 특성적 결함의 지표로 간주되어 버린다. 이제 고졸 청년들은 거의 취약 계층화하고 있으며, 계층 고착화의 현실에서 가난의 대물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사회의 극빈층을 형성할 것이다. 고등교육 보편화의 시기에 역설적으로 고졸 청년들에 대한 정책의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고등교육이 팽창하였지만 그것이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고등교육의 공공재적 성격이 무색해졌다. Arrow(1993)가 관찰한 바와 같이 자본시장의 불완전성과 정보비대칭성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의 정당한 근거가 된다. 이에 사립대학 위주로 고등교육 체제를 발전시켜온 영국도 고등교육 재정의 대부분을 국가에 의존하는 준공립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나민주·장수명, 2009). 사립의 고등교육 시

시스템은 그 접근성, 질, 평등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Tilak, 2004).

그렇지만 한국에서의 고등교육 정책은 5·31 개혁 이후 시장만능주의적 교육개혁, 즉, 관치철폐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에 사립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고등교육비용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고등교육의 기회마저 불균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장학정책과 학자금 대출 정책으로 고등교육 투자를 위한 신용경색을 막고는 있지만,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이 높고 상환조건이 까다로워 청년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장학금을 늘리며,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과 조건을 낮출 필요가 있다.²⁷⁾ 아울러 대학에 대한 공인회계감사제도를 통해 방만한 대학경영을 시정하도록 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등록금을 대폭 낮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팽창으로 고등교육기관이 다양화되었지만 한국에서는 고졸 직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유형이 변하지 않았으며, 모든 대학이 종합대학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여 고등교육기관 내에 다양한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대학 교육이 특성에 맞게 분화되어 다양하게 전문화된 교육기관이 수립되도록 정책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술변화가 극심한 환경 하에서 숙련 향상 및 직업능력의 개발을 위해 원활하게 노동시장에서 학교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고등교육기관 학생 중 26세 이상의 비중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

27) 현재 대출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70점(100점 만점) 이상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를 하여 성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적 조건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학자금 대출에 대한 국제적 보고서는 높은 이자율에 의한 높은 채무불이행률을 경고하고 있다(World Bank, 2002).

에 노동시장 진입 후에 다시 고등교육을 받는 것이 쉽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직업계고 졸업생 대상의 ‘선취업후 진학제도’²⁸⁾를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졸업 학위 취득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면 웬만하면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²⁹⁾ 이는 대학 학위 자체가 갖는 능력 신호의 기능을 사라지게 하고 대학서열화를 강화하였다. 대학서열화의 공고한 구조는 대학교육 자체가 노동시장에서 별 의미가 없게 되는 현실로 나타났다. 이에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는 일정한 수준이 되어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각 대학교육의 질이 노동시장 혹은 기업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그리하여 좋은 대학으로 평판이 나는 구조를 형성하도록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심리적 비용을 높여서 고등교육 선택을 감소시키는 수단이 된다. 대학교육에 대해서 정보공시제, 인증평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재정지원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재정지원은 대학이나 사업단위가 아니라 개인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의 고학력화와 사회전반의 고학력화가 사회 전체의 사회적 자본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는 교육의 초점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국은 개인의 고학력화도 개인의 사회

28)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취업한 상태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고졸자직업훈련할당 의무제와 계약학과제(근로자 부담 50%, 기업부담 50%), 재직근로자를 위한 정원의 특별 전형 도입 등의 패키지를 의미한다.

29) 일찍이 Lazear(1977)가 고등교육의 경우 소비재로서의 효용보다는 심리적 스트레스인 비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소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교육수준보다도 더 낮은 단계에서 교육을 종료한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진단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적 자본의 제고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제2의 경쟁력인 사회적 자본의 구축이 고학력화의 진전에도 미미하게 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일찍이 Dore가 지적한 학력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선별 지향의 학습과 평가, 그에 따른 능력개발의 미흡과 인격형성 왜곡의 문제가 한국의 교육에서 특히 심하여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얼핏 보아도 서양에서 교육의 초점이 사회참여와 사회봉사 등 시민교육에 두어지는데 비해 한국의 교육은 오로지 지식의 축적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 입시 정책 및 중등교육을 근본적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평가를 위한 공부가 아닌 ‘참다운 학업성취’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반 학교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이종재, 2010). 또한 이른바 ‘공교육의 붕괴’로 나타나는 학교교육에서의 인격형성 역할의 방기를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과제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교육개혁의 목표이기 때문에 사회 각 주체들이 중장기의 계획과 실행 로드맵을 세워 차분하게 개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SUMMARY

**The Socio-economic Effects Related Higher Education
Expansion in Korea**

Ahn Kook Kim, Eon Lim,
Jihee Choi, Hangu Ryu,
and Kihun Kim

This study is an academic research on the socio-economic effects related higher education expansion in Korea. Korean society has witnessed the rapid expansion in higher education after 1980's. This study focuses on economic, social, and educational effects of higher education expansion.

Major conten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Korea has experienced the most rapid expansion in higher education in the world after 1990s. The recipients of higher education are increasing more in younger generations, especially among women and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According to Trow(1977)'s ideal type, Korea society has already entered the higher education universe era.

The rapid high education expansion in Korea is caused by several factors. First of all, Koreans have got a lot of heart in education. The enthusiasms for education are always high, so people are usually

desperate to get more education. In addition to this passion for educatio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gives people enough wealth affording to get more and higher educations. And the differential of earnings between high school graduate and university graduate has been large enough to seduce student to get the more educations. Still more, the higher education institutes are usually private schools, so the universities have been supplied very easily in the society. The government also gave up its regulation to the number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in 1995. All these factors have caused Korean society to become the higher education universe society in a brief period.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has brought many effects on Korean society. This study has focused only on the three aspects, economic, social, and educational effects.

In terms of economic effect,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has raised the level of human capital stock. This study calculates the human capital stock from 1980 to 2009, and the results is that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s of human capital stock were 1.51% for 1980's, 1.02% for 1990's, and 0.95% for 2000's. This decreasing growth rate of human capital stock comes from the higher education's rapid expansion in 1990's and 2000's. Confined in educational change,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people's educational attainments are 1.51% for 1980's, 1.05% for 1990's and 2000's. Despite of the rapid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in 1990's and 2000's, the human capital accumulation's speed didn't fall down in 1990's and 2000's. This fact means that some parts of rapid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have brought about accumulating the human capital.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has contribute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By estimating of growth account model, this study reveals that the school years which represent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stock affect the industrial growth with 0.1 ~ 0.22 coefficient. The coefficients of the variable of school years don't have significance in 1980's, but they are big figures in 1990's and they decrease a little in 2000's.

But higher education's expansion has resulted in the low employment rate of university graduates in recent years. Some university graduates have got reluctantly the jobs which are available for high school graduates. Another bad effect of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is the growing of the private educations not school based. And the employee's wages in the education industry are persistently decreasing, it means that the quality of education service has been falling down.

In Korea, the earnings differentials between high school graduates and university graduates made the people ardent to get higher education. The wage differentials between high school graduates and university graduates are growing in 2000's. The private rate of return of university education decreased to 5% in 1993, increased to 8% in

2003, and reached 10% in 2010. This raising private rate of return of university education in recent years means that the demand for university graduates from the industries is persistently increasing in recent years.

In terms of asset earnings rather than wages, the differentials of asset wealth between high school graduates and university graduates are larger than the differentials of wages. These asset wealth differentials have been affected by the changes of real estate prices, and the prices of real estate go rising up then the differentials have been enlarged much more. The more higher education expands, the larger variation gets appearing in the income distribute. These facts tell us that in Korea, the educational payment differential is clear and definite, so we expect the student will choose more higher education.

The higher education is expected to affect the social capital of individual and society's. This thesis has not been dealt with until now. This study analy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igher education expansion and the social capital accumulation, like trust, voting, political concerns, social networks, social services, health, and satisfaction of life. The analysis results say that in Korea, individual achievement of higher education has correlation with only trust, but in Europe, individual achievement of higher education correlated with trust, political concerns, social service, health, and satisfaction of life. Individual higher education does not correlate with voting and social

network in both Korea and Europe.

Social achieving of higher education has significant relation with trust and political concerns in Europe, but does not related with the other social capital like voting, social service, social network, health, and satisfaction of life in Europe.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in society does not contribute fully to accumulate the social capital in Europe. In Korea,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in society doesn't have any relation with social capital, so Korean get only trust with achieving higher education as an individual. These results mean that higher education goes not necessarily with higher social capital. Especially in Korea, higher education has some problem as well a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education. Therefore first priority in education policy in Korea has to be the redemption of normal education.

As the number of university student is increasing, the type of institute for higher education has been diversified. Some higher education institutes have been specialized to distinct purposes,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es are diversified into many styles. Art, broadcasting, athlete, social welfare, and some kinds of technological training come into the higher education curriculum, then the programs and institutes for higher education have been plentiful and diverse.

As higher educations expand, the most people get generally the higher education. But the high class people has achieved much more

higher education than the low class has, hence the hierarchy of institutes for higher education has been created and structured firmly. In Korea, while higher education expands, the hierarchy which is measured by 'study ability examination score' has not been changed, but rather strengthen more firmly.

In Korea, university students get diploma very easily without difficulties, and the quality of education in university could not be guaranteed. So the university diploma cannot work as a signal of ability in the labor market. The university hierarchy, university ranking or branding is the only signal used in the labor market, then the university ranking has been stabilized again. But the university ranking doesn't have anything to do with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it is a serious problem. It is important from what university they graduate, the high rank universities get the good student from the high school, then only give them diploma after four years. There are so many problems related with this, for example, excess competition, spreading private studies, the loss of education for the whole man, and the uniformity of higher education institutes.

In conclusion,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brought Korean society with good and bad effect. The good effects come from mainly economic point, like accumulating human capital and industry development. The bad effects are mainly social and educational aspects.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has not been raising the social capital, so civil society has not been growing as mature as

economic development level. The education itself has a hard time with many side effects followed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So the education reform policy is the most important and vital of the Korea's further development.

참고문헌

- 강무섭·김재원·민무숙(1984). 『고등교육정원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고은미(2011). 「1999~2008년 한국에서 대졸자 간 임금격차의 변화」, 『노동경제논집』, 제34권 제1호, 103~138쪽.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연도.
- 고용노동부(2008~2009).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 국민은행(1995~2011).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김경근(1999). 『대학서열깨기』, 개마고원.
- 김경근·변수용(2007).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대학진학 단계에서의 질적 차별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 제3차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기석(1989). 「유상중등교육의 팽창」, 김신일 외 편, 『한국교육의 현 단계』, 교육과학사.
- _____ (1994). 「중등교육팽창의 역사사회적 조건과 동인」, 『교육사회학탐구II』, 교육과학사.
- 김부태(1995). 『한국학력사회론』, 내일을 여는 책.
- 김상봉(2008). 『학벌사회』, 한길사.
- 김승현(2011). 「한국 4년제 대학의 대학교육 현황과 실태. 대학교육제체 개편 12차 연속토론회 자료집」,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 김수정(2008). 「“고학력화”는 빈곤을 감소시켰는가?: 1985~2006 도

- 시가계조사 분석』, 『한국사회정책』, 제13권 제2호, 251~287쪽.
- 김신일(1988).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 _____ (1989). 「고학력화 현상의 이해와 접근」,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연구토론회 『한국 고학력화 현상의 진단과 대책』 주제 발표집, 7~22쪽.
- 김안국 외(2010).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안나(2003). 「대학입학 수능 성적 분포의 변화추이를 통해 본 고등교육의 서열화 구조」, 『교육사회학연구』, 제13권 제3호, 89~108쪽.
- 김안나·이병식(2004). 한국 고등교육의 보편화에 따른 대학 재구조화의 현황과 정책 방향, 제31권 제2호, 415~440쪽.
- 김영미(2009). 「분포적 접근으로 본 한국 성별임금격차 변화, 1982~2004년」, 『경제와 사회』, 제84호, 206~359쪽.
- 김영봉·N. F. 맥긴 외(1985). 『한국의 교육과 경제발전』, 한국개발연구원.
- 김영화(1993). 『한국의 교육 불평등: 고등교육 팽창의 과정과 결과』, 교육과학사.
- _____ (1994). 「대학진학수요 결정요인의 시계열분석(1962~1992)」, 『한국교육학연구』, 제32권 제1호, 79~101쪽.
- 김영화·박용헌·한승희(1997). 『한국의 교육과 국가발전(1945~1995)』, 한국교육개발원.
- 김주섭(2005).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 분석」, 『노동정책연구』, 제5권 제2호, 1~29쪽.

- 김진영(2001). 「인적자본과 경제성장: 성장회계식과 성장모형에 대한 검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토의 자료, 2001-38.
- _____ (2003). 「국제자료를 통해본 인적자본과 경제성장: 내생적 성장이론에 대한 실증적 재검토」, 『무역학회지』, 제28권 제5호, 103~127쪽.
- _____ (2004). 「인적자본과 경제성장: 신고전학과 이론에 대한 실증적 재검토」. 『경제발전연구』 제19권 제1호, 33~49쪽.
- _____ (2006). 「수학능력 시험 실시 10년간 대학의 서열 변화」, 『공공경제』, 제11권, 제1호, 121~155쪽.
- _____ (2010). 「한국 고등교육 수준은 경제력에 상응하는가? : 국제대학순위에 대한 검토」, 한국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_____ (2011).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의 현황과 평가. 대학교육체제 개편 제 5차 토론회 자료집」, 사교육걱정없는세상, 11~25쪽.
- 김홍균·김지혜(2008). 「과잉교육의 투자수익률 추정」, 『재정학연구』, 제1권 제4호, 45~68쪽.
- 김희삼·이삼호(2008). 「고등교육의 서열과 노동시장 성과」, KDI정책포럼, 제196호, 한국개발연구원.
- 나민주·장수명 외(2009). 『국립대학 적정 재정지원 규모 산정 및 배분 방법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류한구(2002). 「중등교육팽창에 대한 실증적 연구 : 1952~1989 시계열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성준(2000). 「금융위기 이후 소득 불균등에 대한 연구」, 『노동경제론집』, 제23권 제2호, 61~80쪽.
- 박세일(1983). 「학력별 임금격차의 발생원인과 변화과정분석」, 『KDI

- 정책연구』, 제5권, 제3호, 19~53쪽
- _____(2001).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기본방향」, 『제7차 KRIVET HRD 정책 포럼 자료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천수(2005). 「청소년의 과잉학력 현상이 인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제3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1997). 『사교육비 지출의 국민경제적 효과』, Issue paper.
-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사회종합조사(KGSS)』, 각 연도.
- 손준중(1995). 「한국고등교육정원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역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위섭(1981). 「노동력의 질적수준향상과 경제성장」, 『조사월보』, 제35권 제12호, 4~26쪽.
- 오성철(1996). 「1930년대 한국초등교육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호영·김승보·정재호 (2006).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유경준(1998). 「임금소득불평등도의 분해 및 원인분석」, 『KDI 정책연구』, 제 20권 제3~4호, 223~260쪽.
- 유한구 외(2009). 『2008 사교육 공급자 실태조사 연구 I』, 교육과학기술부.
- 윤정일 외(1979). 『고등교육의 기회확대 및 질 관리』, 한국교육개발원.
- 이두휴·고형일 (2003). 「대학서열체계의 공고화와 지역 간 불균등발전」, 교육사회학연구, 제13권 제1호, 191~214쪽.

- 이상구(2010).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교육 정책의 방향과 전략」, 제7회 사회경제학회 연합학술대회, 『한국 교육의 정치경제학』 주제발표집.
- 이상봉(2010). 「부의 불평등 시각에서 바라본 연령 집단의 경제 불평등」, 『현상과 인식』, 제34권 제4호, 201~219쪽.
- 이상주(1979). 「한국교육사회학의 반성과 전망」, 『한국사회학』, 제13권 제1호, 151~159쪽.
- 이영기(1971). 「교육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측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이정규(2001). 「대학정원정책의 현황과 전망」. 아시아교육연구. 제2권 제2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_____ (2003). 『한국사회의 학력·학벌주의』, 집문당.
- 이종재(1989). 「고학력화 현상과 정책적 대응」,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연구토론회 『한국 고학력화 현상의 진단과 대책』, 주제발표집.
- _____ (2004). 『한국교육 60년 -성취와 과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_____ (2010). 「5·31 교육개혁의 역사적 함의와 향후 방향」, 5·31 교육개혁 평가 및 미래교육비전 심포지엄 자료집, 『대한민국 교육정책: 과거·현재·미래-5·31 교육개혁 평가와 미래교육의 비전·전망』, 종합토론문.
- 이중화·김선빈(1995). 「한국의 인적자본 추계:1963~1993」, 『국제경제연구』, 제1권 제2호, 33~64쪽.
- 이주호·김선웅·김승보(2003). 「한국대학의 서열과 경쟁」, 『경제학연구』, 제 51권 제2호, 5~36쪽.
- 이혜영(1992). 「대학입학정원 결정의 사회적 동인에 관한 연구」,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효수(1991). 『고학력화 현상과 고용』, 한국노동연구원.

장동현(1996). 「한국 중등교육 팽창의 사회적 동인에 관한 연구:1960~1970년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장석환(2007). 「문민정부 이후 대학 정원정책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교육행정학회.

장수명(2006). 「대학교육의 경제학」, 『노동정책연구』, 제2권 제1호 47~79쪽.

장하준(2010).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북오션.

전근하(2004). 「노동시장의 학력과잉과 고학력화 현상」,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한국의 고용구조』.

전재식(2011).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와 성과 I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권택 외(2003). 『휴먼캐피털과 성장잠재력』, 삼성경제연구소.

정진화(1996). 『고학력화와 인력정책의 방향』, 산업연구원.

조상식(2010). 「한국교육의 병리학 -교육철학적 접근」, 제7회 사회경제학회 연합학술대회, 『한국 교육의 정치경제학』 주제발표집.

차경수·정지웅(1975). 「사회학적으로 본 한국교육 30년」, 『한국사회학』, 제10권 제1호, 125~141쪽.

채창균·김안국·오호영(2005). 『대졸 청년층의 노동이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강식·김안국(2008). 『근로소득 불평등 심화의 분석 및 완화 방안: 인적자본기업패널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강식·정진화(2010). 「산업 간 기술격차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

- 향: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제33권 제2호, 135~164쪽.
- 최강식·정진호(2003). 「한국의 학력 간 임금격차 추세 및 요인분해」, 『국제경제연구』, 제9권 제3호, 183~208쪽.
- 최영표·이혜영·한만길(1989). 『고학력화 현상의 진단과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 통계청(2009). 『한국의 사회지표』.
- _____. 『광업제조업조사』, 각 연도.
-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2010). 『한국경제 60년사 V』,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 연도.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미친 등록금의 나라』, 개마고원.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 연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각 연도.
- 홍훈(2008). 「교육은 상품이 될 수 있는가?」, 『동향과 전망』, 제74권, 189~228쪽.
- 渡邊行郎(1982). 『교육경제학의 전개』, 이종재·이욱범 역, 교육과학사, 1995.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 Archer, M. S.(1984). *Social Origins of Educational Systems*, London: Sage.
- Ambler, J. S. & Neathery, J.(1999). “Education Policy & Equality: Some evidence from Europe”, *Social Science Quarterly*, Vol.80, No.3, pp. 437~456.
- Arrow, K.(1993). “Excellence and Equity in higher Education”, *Education Economics*, Vol.1, No1, pp. 5~12.
- Ayalon, H. & Yogev, A.(2006). “Stratification and Diversity in the Expanded System of Higher Education In Israel”. *Higher Education Policy*, Vol.19, Nov.2, pp. 187~203 .
- Ayalon, H., Grodsky, E., Gamoran, A., & Yogev, A.(2008). “Diversification and inequality in higher education: A comparison of Israel and the United States.” *Sociology of Education*, Nov.81, pp. 211~241.
- Bae, C. K.(1969). “Educational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in Korea,1957-1960”, A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of Human Resources.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Barro, Robert J.(1991). “Economic Growth in a Cross-Section of Countr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06, No.2, pp. 407~443.
- Barro, R. J. & Lee, J. W.(1993).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Educational Attain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32, pp. 363~394.
- Becker, Gary. S.(1996). *Accounting for Tastes. Part I: Personal*

- Capital; Part II: Social Capital*.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endix, R.(1964). *Nation-Building and Citizenship*, New York: Wiley.
- Bergheim, Stefan.(2005). “Global Growth Centres 2020”, *Deutsche Bank Research Current Issues*, March 23.
- Bourdieu, Pierre.(1972).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6). *The Forms of Capital*. Greenwood Press.
- Bourdieu, P. & Burton, B.(1973). *The Culture of Professionalism*, New York: W. W. Norton.
- Bourdieu, Pierre, & Passeron, Jean-Claude.(1977). *Reproduction in Education, Society, and Culture (Richard Nice trans.)*, CA: Sage.
- Bowles, S. & Gintis, H.(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New York: Basic.
- Braubacher, J. S. & Rudy, W.(1999). *Higher Education in Transition. A History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 Brown, D. K.(2001). The Social Sources of Educational Credentialism: Status cultures, labor markets, and organizations. *Sociology of Education*. pp. 16~34.

- Card, D. & Krueger, A.(1996). "Labor Market Effects of School Quality: Theory and Evidence". Gary Burtless.(Eds.), *Does Money Matter? The Link Between Schools, Student Achievement and Adult Success*, pp.97~140. Washington D.C.: Brooking Institution.
- Carnoy, M. & Levin, H.(1985). *Schooling and Work in the Democratic Society*, CA: Stanford Univ. Press.
- Coleman, Jame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Supplement*, Nov.94, pp. 95~120.
- Collins, Randall.(1979). *The Credential Society: An Historical Sociology of Education and Stratifi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Collins, S. & Bosworth, B.(1996). "Economic Growth in East Asia: Accumulation versus Assimilat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2, pp. 135~203.
- Dore, R.(1997). *The Diploma Disease: Education, Qualification and Development*. Institute for Education, University of London.
- Dougherty, K. J.(1994). *The Contradictory College: The Conflicting Origins, Impacts and Futures of Community College*, Albany: SUNY Press.
- Duncan, O. D.(1968).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In E. H. B. Sheldon & W. E. Moore (Eds.), *Indicators of Social Change: Concepts and Measurement* (pp. 675~719). NY:

- Rusell Sage Foundation.
- European Social Survey. Annual Data.
- Fields, G. S.(1995). “Educational Expansion and Labor Markets”,
in Carnoy, M.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conomics of Education*, Pergamon.
- Fägerlind, I., & Saha, L. J.(1989). *Educ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A comparative perspective*. Oxford: Pergamon Press.
- Ganzeboom, Harry B. G., De Graaf, P. M. & Treiman, Donald. J.(1989). “A Standard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s”, *Revised version of 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 Grodsky, E. & Jackson, E.(2009). Social stratification in higher education. *Teachers College Records*, Vol.111, Nov.10, pp. 2347~2384.
- Grossman, M.(2006). Education and non-market outcomes. pp.576~593 in Hanushek & Welch(Eds.),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Education*. Amsterdam: North Holland.
- Gollop, F. M. & Jorgenson, D. W.(1980). “US Productivity Growth by Industry, 1947~1973”, in J. Kendrick and B, Vaccara(Eds.), *New Developments in Productivity Measurement*",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nushek, E. & Kimko, D.(2000). “Schooling, Labor Force

Quality, and the Growth of N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90, pp. 1184~1208

Heren, J. C.(1990). ‘A pathway to attendance at elite colleges’, in P. W. Kingstin and L.S. Lewis(Eds.) *The High-Status Track: Studies of Elite Schools and Stratification*, Albany: SUNY Press. The Contradictory College: The Conflicting Origins, Impacts, and Futures of the Community College ,Kevin J. Dougherty.

Hoselitz, Bert., F.(1965). “Investment in Education and Its Political Impact”, pp. 541-565 in James S. Coleman(Ed.), *Educ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MD (2007~2010).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Lausanne: IMD.

Jorgenson, D. W., Gollop, F. M. & Fraumeni, B. F.(1987). *Productivity and U.S. Economic Growth*, MA: Harvard University Press.

Kendrick, J. W.(1976). *The Formation and Stocks of Total Capital*,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Lazear, E.(1977). “Education: Consumption or Produ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85, No.3, pp. 569~598.

Lee, K. M.(1990). “Industrialization and Educational Expansion in South Korea”, *The Sociology of Education*, Vol.1, No.1, pp. 169~194.

Lucas, S. R.(2001).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ducation

- Transitions, Track Mobility, and Social Background Effec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106, pp. 1642-1690.
- Meyer, J. W. et. al.(1977). “The World Educational Revolution 1950~1970”, *Sociology of Education*, Vol.50, pp. 242~258.
- Nahapiet, J. & Ghoshal, S.(1998).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3, Nov.2, pp. 242~266.
- Mankiw, N. G., Romer, D., & Weil, D.(1992). “A Contribution to the Empirics of Economic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07, No.2, pp. 407~437.
- Mincer, J.(1974). *Schooling, Experiences and Earnings*,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 Mulligan, Casey. B.,& Sala-i-Martin, Xavier(1995), “A Labor-Income Based Measure of the Value of Human Capital: Application to the States of the United States”, NBER Working Paper, No. 5018.
- OECD(1997~2010). *Education at a glance 2009: OECD Indicators*, OECD.
- _____(2007). *Understanding the Social Outcomes of Learning*, Directorate for Education, OECD.
- OECD & Human Resource Development Canada.(1998). *Literacy Skills for the Knowledge Society: Further Results from 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Paris and Ottawa, OECD.
- Parsons, T.(1959). “The School Class as a Social System: Some of

Its Functions in American Socie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29, Nov.4, pp. 297~318.

Pritchett, Lant.(2001), “Where has all the education gone?”,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15, No.3, pp. 367~391.

Psacharopoulos, George., & Ariagada, M.(1986), “The Educational Composition of Labor Force: An International Comparison”, *International Labor Review*, Vol.125, pp. 561~574.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Ramirez, F. O. & Boli, J.(1987). “The Political Construction of Mass Schooling”, *Sociology of Education*, Vol.60, pp. 2~17.

Ramirez, F. & Boli-Bennett, J.(1982). *Global Patterns of Educational Institutionalization*, Comparative Education, NY: Macmillan.

Raftery, A. E. & Hout, M.(1993). “Maximally Maintained Inequality: Expansion, Reform, and Opportunity in Irish Education”, *Sociology of Education*, No.66, pp. 41~62.

Rubinson, Richard., & Browne, Irene.(1994), “Education and the Economy”, in Smelser and Swedbery (Ed.), *The Handbook of Economic Sociology*,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ubinson, R. & Ralph, J.(1986).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Study of Educational Change*,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ical of Education*, Westport: Greenwood Press.

Shavit, Y., Arum, R., & Gamoran, A. (Eds.) (2007). *Stratification in Higher Education: A Comparative Study*,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Spence, Michael, A.(1974). *Market Signaling: Information Transfer in Hiring and Related Screening Procedu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Tilak, J.(2004). “Higher Educ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Market”, UNESCO Forum on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Knowledge.

Trow, M.(1977). “The Second Transformation of American Secondary Education,” in Karabel & Halsey (Eds.), *Power & Ideology in Educ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Wolf, Alison.(2002). *Does Education Matter?: Myth about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Penguin Books.

World Bank(2002). *Constructing Knowledge Societies: New Challenges for Tertiary Education*, World Bank.

Unesco(1999), *Statistical Yearbook*, Paris: Unesco.

Unesco Statistics, www.unesco.org.

부 록

1.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자료의
조사 기준 변화
2. 표준산업분류의 개정 추이
3. OECD 각국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
4. 취업자중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 추이

〈부록 1〉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자료의 조사 기준 변화

연도	규모	표본	산업종류
1980	10인 이상	3865개 표본 사업체	전산업
1981	〃	3866개 표본 사업체	〃
1982	〃	3867개 표본 사업체	〃
1983	〃	3868개 표본 사업체	농업,임업,수산업 제외
1984	〃	3300개 표본 사업체	〃
1985	〃	〃	〃
1986	〃	〃	〃
1987	〃	〃	〃
1988	10인 이상	3700개 표본 사업체	〃
1989	〃	〃	〃
1990	10인 이상	4100개 표본 사업체	〃
1991	〃	〃	〃
1992	〃	〃	〃
1993	10인 이상	2700개 표본 사업체	〃
1994	〃	〃	〃
1995	〃	〃	〃
1996	10인 이상	3400개 표본 사업체	〃
1997	〃	〃	〃
1998	〃	〃	〃
1999	5인이상	5500개 표본 사업체	전산업
2000	〃	5400개 표본 사업체	〃
2001	〃	〃	〃
2002	5인이상	6344개 표본 사업체	〃
2003	〃	〃	〃
2004	〃	〃	〃
2005	5인이상	6495개 표본 사업체	〃
2006	〃	〃	〃
2007	5인이상	6019개 표본 사업체	〃
2008	〃	30132개 표본 사업체	〃
2009	〃	29654개 표본 사업체	〃

〈부록 2〉 표준산업분류의 개정 추이

1975	1984	1991	1998	2000	2009
1.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1.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A.농업, 수렵업 및 임업 B.어업	A.농업, 수렵업 및 임업 B.어업	A.농업 및 임업 B.어업	A.농업, 임업 및 어업
2.광업	2.광업	C.광업	C.광업	C.광업	B.광업
3.제조업	3.제조업	D.제조업	D.제조업	D.제조업	C.제조업
4.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건설업	5.건설업	F.건설업	F.건설업	F.건설업	F.건설업
6.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6.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G.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G.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G.도매 및 소매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H.숙박 및 음식점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숙박 및 음식점업
7.운수, 창고 및 통신업	7.운수, 창고 및 통신업	I.운수, 창고 및 통신업	I.운수, 창고 및 통신업	I.운수업 J.통신업	H.운수업
		J.금융 및 보험업	J.금융 및 보험업	K.금융보험업	K.금융 및 보험업
8.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8.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L.부동산 및 임대업	L.부동산 및 임대업
		K.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K.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M.사업서비스업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J.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9.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L.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L.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M.교육서비스업	M.교육서비스업	O.교육서비스업	P.교육서비스업
		N.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N.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O.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O.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P.가사 서비스업	P.가사 서비스업	S.가사 서비스업	T.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Q.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Q.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T.국제 및 외국기관	U.국제 및 외국기관

〈부록 3〉 OECD 각국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공공/민간의 비중)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Australia	64.2	43.9	56.1	55.9	52.4	48.6	51.0	50.0	51.3	49.6	48.7	52.2	48.0	52.9	47.2	53.6	47.8	52.9	47.6	53.1	44.3	56.1	
Austria	97.6	2.4	98.9	1.1	98.7	1.3	96.7	10.9	94.6	10.0	91.6	13.8	92.7	8.9	93.7	8.3	92.9	9.4	84.5	24.4	85.4	22.7	
Belgium	m	m	m	m	m	m	85.2	19.3	84.1	20.0	86.0	18.2	86.7	18.0	90.4	14.2	90.6	14.0	90.6	13.5	90.3	13.8	
Canada	59.1	40.9	56.6	69.5	59.3	43.1	61.0	40.7	58.6	41.4	m	m	56.4	44.5	m	0.0	55.1	45.7	53.4	47.2	56.6	44.7	
Chile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14.4	89.6
Czech Republic	71.0	37.6	85.9	14.1	84.7	15.3	85.5	14.5	85.3	14.7	87.5	12.5	83.3	16.7	84.7	15.3	81.2	18.8	82.1	17.9	83.8	16.2	
Denmark	m	m	97.2	2.8	97.7	2.3	97.6	2.4	97.8	2.2	97.9	2.1	96.7	3.3	96.7	3.3	96.7	3.3	96.4	3.6	96.5	3.5	
Finland	m	m	m	m	97.4	2.6	97.2	2.8	96.5	3.5	96.3	3.7	96.4	3.6	96.3	3.7	96.1	3.9	95.5	4.5	95.7	4.3	
France	84.3	20.6	85.5	18.6	85.7	16.5	85.7	16.6	85.6	16.8	85.7	16.7	81.3	21.0	83.9	18.3	83.6	18.7	83.7	18.7	84.5	18.1	
Germany	92.7	7.3	92.1	7.9	91.5	8.7	91.8	8.2	91.3	8.7	91.6	8.4	87.1	12.9	86.4	13.6	85.3	14.7	85.0	15.0	84.7	15.3	
Greece	m	m	m	m	99.9	0.1	99.7	0.3	99.6	0.4	99.6	0.4	97.4	2.6	97.9	2.1	96.7	3.3	m	m	m	m	
Hungary	97.5	2.5	76.6	25.9	76.6	23.4	76.7	23.3	77.6	22.4	78.7	21.3	78.5	21.5	79.0	21.0	78.5	21.5	77.9	22.1	m	m	
Iceland	m	m	97.7	2.3	m	m	94.9	5.1	95.0	5.0	95.6	4.4	88.7	11.3	90.9	9.1	91.2	8.8	90.2	9.8	91.0	9.0	
Ireland	69.7	30.3	72.6	32.3	73.4	30.7	79.2	20.8	84.7	15.3	85.8	14.2	83.8	20.4	82.6	21.8	84.0	20.8	85.1	14.9	85.4	14.6	
Italy	82.8	17.3	74.7	31.7	80.3	25.9	77.5	28.6	77.8	26.2	78.6	25.6	72.1	32.4	69.4	35.2	69.6	35.0	73.0	32.0	69.9	35.8	
Japan	m	m	41.7	58.3	44.5	55.5	44.9	55.1	43.1	56.9	41.5	58.5	39.7	60.3	41.2	58.8	33.7	66.3	32.2	67.8	32.5	67.5	
Korea	m	m	16.7	84.0	20.7	80.7	23.3	77.8	15.9	84.1	14.9	85.3	23.2	77.6	21.0	79.3	24.3	76.0	23.1	78.9	20.7	81.6	
Luxemburg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exico	77.4	22.6	87.9	12.1	71.8	30.9	79.4	21.2	70.4	31.7	71.0	29.6	69.1	31.7	68.9	31.9	69.0	31.9	67.9	33.0	71.4	29.7	
Netherlands*	88.3	21.8	87.5	21.5	77.6	24.5	77.4	25.0	78.2	23.9	78.1	23.2	78.6	22.9	77.6	23.8	77.6	23.6	73.4	27.4	72.4	27.7	
New Zealand	m	m	m	m	m	m	m	m	m	m	62.5	37.5	61.5	38.5	60.8	39.2	59.7	40.3	63.0	37.0	65.7	34.3	
Norway	93.6	6.4	94.0	6.0	94.4	5.6	96.2	3.8	96.9	3.1	96.3	3.7	96.7	3.3	m	0.0	m	0.0	97.0	3.0	97.0	3.0	
Poland	m	m	m	m	82.8	17.2	m	m	m	m	69.7	30.3	69.0	31.0	72.9	0.0	74.0	26.0	70.4	29.6	71.5	28.5	
Portugal	96.5	3.5	92.3	7.7	92.9	7.1	92.5	7.5	92.3	7.7	91.3	8.7	91.5	8.5	86.0	14.0	68.1	31.9	66.7	33.3	70.0	30.0	
Slovakia	m	m	m	m	91.9	8.1	91.2	8.8	93.3	6.7	85.2	14.8	86.2	13.8	81.3	18.7	77.3	23.0	82.1	18.3	76.2	26.6	
Spain	74.4	27.6	72.1	31.8	74.2	29.0	74.4	28.1	75.5	27.5	76.3	25.8	76.9	25.1	75.9	26.0	77.9	23.9	78.2	23.6	79.0	22.8	
Sweden	m	m	89.3	10.7	88.4	11.6	88.1	11.9	87.7	12.3	90.0	10.0	89.0	11.0	88.4	11.6	88.2	11.8	89.1	10.9	89.3	10.7	
Switzerland	m	m	98.5	3.0	96.7	6.6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m	
Turkey	96.6	7.6	94.2	7.9	95.3	4.7	95.4	4.6	95.8	4.2	90.1	9.9	95.2	4.8	90.0	10.0	m	m	m	m	m	m	
United Kingdom	63.9	52.1	62.7	49.7	63.2	47.5	67.7	36.9	71.0	30.8	72.0	28.6	70.2	30.4	69.6	30.4	66.9	33.1	64.8	35.2	35.8	81.3	
United States	m	0.0	46.8	58.9	46.9	53.1	33.9	66.1	34.0	66.0	45.1	54.9	42.8	57.2	35.4	64.6	34.7	65.3	34.0	66.0	31.6	68.4	

〈부록 4〉 취업자중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 추이

연도	전산업	교육서비스업	비중(%)
1992	19,009	934	4.91
1993	19,234	954	4.96
1994	19,848	957	4.82
1995	20,414	1,028	5.04
1996	20,853	1,073	5.15
1997	21,214	1,119	5.27
1998	19,938	1,154	5.79
1999	20,291	1,137	5.60
2000	21,156	1,188	5.62
2001	21,572	1,236	5.73
2002	22,169	1,335	6.02
2003	22,139	1,484	6.70
2004	22,557	1,507	6.68
2005	22,856	1,568	6.86
2006	23,151	1,658	7.16
2007	23,433	1,687	7.20
2007	23,433	1,740	7.43
2008	23,577	1,784	7.57
2009	23,506	1,831	7.79
2010	23,829	1,799	7.55

고학력화의 사회경제적 성과와 한계

발행연월일	2011년 10월 29일 인쇄 2011년 10월 31일 발행
발행인	박영범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47길 46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화: (02)3485-5000, 5100 팩스: (02)3485-5200
등록일자	1998년 6월 11일
등록번호	제16-1681호
·I S B N	978-89-6355-221-7 93320
·인쇄처	에덴복지재단 (02)2271-3130